

26 독일통일 총서

사회계층 변동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26

독일통일 총서

사회계층 변동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 26

사회계층 변동 분야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전화 02)2272-0307

CONTENTS



I 통일 이후 독일의 사회계층 변동- 동독의 사회계층 변화를 중심으로

제1장 들어가며 14

제2장 사회변동, 사회계층의 의미 17

제1절 사회변동 17

제2절 사회계층 23

제3절 독일에서 사회계층의 논의 28

제3장 동독 사회계층의 변화 33

제1절 객관적 지표 33

1. 소득 33
2. 소비 39
3. 실업률 43

제2절 주관적 지표 46

1.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한 평가 46
2. 통일이 개인에게 이득이 되었는가? 47

3. 균등화에 대한 인식 53
4. 독일의 통일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55
5. 구동독 출신 주민의 진정한 통일에 대한 전망 56
6. 개인의 만족도 59
7. 주관적 계층 인식 65
제3절 엘리트의 변동 69
1. 통일 이전 동독 엘리트의 구성과 통일 후 엘리트 변동 69
2.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엘리트의 특징 74

제4장 통일 후 동독 사회계층 변동의 함의 76
제1절 객관적 지표와 관련된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그 원인 77
1. 의미 77
2. 원인 79
제2절 함의 87

제5장 주관적 지표와 관련된 함의 91

제6장 엘리트 변동의 함의 99

제7장 정부의 역할 106

제8장 결론 109

CONTENTS

Ⅱ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사회변동

들어가며 118

제1장 구동독지역 사회변동의 역사적 성격 128
- 제1절 사회주의 혁명과 새로운 엘리트의 형성 128
- 제2절 동독 사회의 분화 130
- 제3절 1990년 이후 구동독지역 사회계층의 분화 및 새로운 구성 131

제2장 사회변동의 세대적 측면 136
- 제1절 동독의 재건 세대 137
- 제2절 전환기 부모 세대와 탈경계적 세대 138
- 제3절 전환기 청소년 세대 141

제3장 정치 엘리트의 변동 148
- 제1절 변혁과 구체제의 엘리트들 150
- 제2절 개혁과도기 동독 구체제 엘리트의 잔류와 새로운 엘리트의 충원 152
- 제3절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 출신 신진 엘리트의 충원 157
- 제4절 서독 출신 엘리트의 충원 164
- 제5절 구체제 엘리트의 복귀? 169
- 제6절 신연방지역 출신이 신진 엘리트가 되는 경로 176
- 제7절 통일독일 대의제 엘리트 특성의 정착? 182

제4장 경제 엘리트의 변동 197
- 제1절 1989년 사회변혁 이전의 동독 경제 엘리트 200
- 제2절 경제적 체제 전환기와 경제 엘리트 205
- 제3절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경제 엘리트들의 커리어 214
- 제4절 통일 이후 20년–신연방지역의 경제 엘리트 218

Ⅲ 사회계층 변동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226

문서 요약 252

문서 요약(문서번호 1~159) 252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표 목차

표 1–1〉 사회변동에 있어 분석 수준 21

표 1–2〉 동독과 서독의 가처분 소득의 변화 34

표 1–3〉 1989년에서 2015년 가구당 내구 소비재의 변화 40

표 1–4〉 통일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48

표 1–5〉 2014년 기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60

표 1–6〉 연령별, 분야별 사람의 만족도 62

표 1–7〉 독일연방공화국의 분야별 엘리트 중 동독 출신의 비율(1991–2012/2013) 72

표 1–8〉 1991–2003년 통일비용 내역(연방건설교통부 발표 내역) 86

표 1–9〉 1999년과 2014년의 사회적 상승 기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 비교 103

표 2–1〉 연금수령자의 월 수령액 비교(2008) 122

표 2–2〉 주민 100,000명당 특허 등록수(2005) 123

표 2–3〉 비교 기간별 예나 의원 연구 사례 건수 149

CONTENTS

표 목차

표 2–4〉 시기 및 분야별 호네커–엘리트의 퇴직(절대 수치) 154

표 2–5〉 1990년 11월 과거 동독 엘리트 및 과도기 엘리트의 잔류(절대 수치) 158

표 2–6〉 신연방지역 출신 신진 엘리트의 동독 구체제 정당 활동 163

표 2–7〉 당원 중 지역 단위별 당 직책 수행 비율 163

표 2–8〉 통일독일 엘리트의 출신지역 비율(1995) 165

표 2–9〉 1995년 독일 엘리트 중 연방 및 연방주 활동 지역의 동서독지역 출신의 엘리트 비율(1995) 166

표 2–10〉 기간별 의원 엘리트의 대학 전공 분야별 비율 179

표 2–11〉 근로자 수와 업종을 기준으로 한 2004년 사회보험 의무가입 근로자(업종별 총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 198

표 2–12〉 동서독 경제 엘리트들의 경제계 고위직 임용 비율 199

표 2–13〉 기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직원 수 50–1,000명 규모의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대표의 출신 지역 분포도 199

표 2–14〉 독일 100대 기업의 이사회 대표들의 학위 유형 203

표 2–15〉 동독 경제 엘리트들의 직위별 대학 전공 분야 203

표 2–16〉 동독 변혁기 전후를 기준으로 조사된 제조업 분야의 기업 규모별 기업 및 직원 수 206

표 2–17〉 1990년 통일 후 약 10년간 과거 동독 콤비나트 엘리트들의 직위 209

표 2–18〉 1990년 통일 후 약 10년간 과거 동독 콤비나트 엘리트들의 전형적인 커리어 유형의 비율 209

표 2–19〉 1990년 통일 후 약 10년간 과거 동독 콤비나트 엘리트들의 관리 분야에 따른 휴직자 및 은퇴자 비율 210

표 2–20〉 구동독지역의 직원 수 50–1,000명의 제조업 기업 대표의 커리어 유형의 특징 215

표 2–21〉 1989년 이전부터 인사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경영 직책을 담당한 기업 대표의 비율 218

표 2–22〉 기업 대표에 의한 기업지분 소유 여부 218

표 2–23〉 기업 대표의 정보에 따른 기업 이전 계획 219

그림 목차

그림 1–1〉 다렌도르프가 제시한 1965년 서독의 계층 구조 30

그림 1–2〉 2009년 독일의 사회계층 31

그림 1–3〉 2014년 독일 각 주의 가처분 소득 35

그림 1–4〉 베를린을 제외한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노동자의 세전수입 비교(1991–2014) 36

그림 1–5〉 2015년 노동자 일인당 세전수입 37

그림 1–6〉 2015년 4분기 동서독지역 시간당 임금 38

그림 1–7〉 독일 연방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격차 38

그림 1–8〉 2014년 기준 개인 가구별 월 지출 내역 43

그림 1–9〉 동서독의 실업률 변화 44

그림 1–10〉 동서독의 지역별 실업률 45

그림 1–11〉 통일된 독일의 상황에 대한 평가 46

그림 1–12〉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 또는 손실이었나? 50

그림 1–13〉 성별, 주민수별, 직업별, 직업의 유무, 소득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인식 50

그림 1–14〉 40대 이상의 동독 출신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비율 52

그림 1–15〉 2002년 기준 통일 이후 얻은 것과 잃은 것 53

그림 1–16〉 당신의 삶에 있어 균등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54

그림 1–17〉 무엇이 성취되어야 진정한 독일통일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56

그림 1–18〉 2019년까지 독일 연방에서 생활 수준의 균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57

그림 1–19〉 2013년 기준 동독의 생활 수준이 서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58

그림 1–20〉 소득에 있어 서독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58

그림 1–21〉 삶의 만족도 60

그림 1–22〉 연령별 삶의 만족도(매우 만족과 만족으로만 답) 61

그림 1–23〉 분야별 만족도와 불만족도 63

그림 1–24〉 시대별 삶의 만족도 64

그림 1–25〉 동서독의 주관적 계층 인식의 변화 65

그림 1–26〉 동서독 주민들의 주관적 계층 인식의 변화(1992–2014) 67

CONTENTS

그림 1–27〉 주관적 계층 인식과 소득(2014) 68

그림 1–28〉 주관적 계층 인식과 학력 및 직업(2014) 68

그림 1–29〉 1989년부터 2015년 동서독 노동자 1인당 국내총생산(노동생산성 격차) 78

그림 1–30〉 독일 상위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 80

그림 1–31〉 2012년 기준 거래세 납부 경제단위당 평균 매출 80

그림 1–32〉 2012년 기준 국내 총생산에 연구개발 지출 81

그림 1–33〉 동서독 1인당 국내 총생산 추정 90

그림 1–34〉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자기인식 변화(1997–2014) 95

그림 1–35〉 인구통계학적 분류에 의한 자기인식(2014) 96

그림 1–36〉 통일된 지 25년 어떤 표현이 당신의 의견에 가장 부합하는가? 98

그림 1–37〉 1999년 기준 25–60세의 전년도와 비교한 사회적 상황과 동독시절과 비교한 사회적 상승 기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 102

그림 1–38〉 2014년 기준 25–60세의 사회적 상승 기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 103

그림 1–39〉 사회적 상승 기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시대적 흐름 104

그림 2–1〉 통일 이후 동독지역 주민들의 감정 변화 119

그림 2–2〉 동독지역 9개 도시의 인구 변화(1989–1999) 124

그림 2–3〉 동독의 출생자 수 126

그림 2–4〉 일반적 삶의 만족도–동독지역(1990–2006) 127

그림 2–5〉 동서독 엘리트 중 대학 졸업자들의 전공 분포(1995) 160

그림 2–6〉 신연방지역 출신 신진 엘리트들의 직위/직업(1988) 161

그림 2–7〉 연방정부와 주정부 장관의 출신 지역 비율 170

그림 2–8〉 1989년 이전 동독 구체제하에서 정당에 가입 혹은 정치적 관직/의원직을 수행한 의원 171

그림 2–9〉 1989년 이전 동독 구체제하에서 정치적 엘리트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의원의 수 172

그림 2–10〉 의원 중 과도개혁기 또는 동독 체제하에서 정치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 174

그림 2–11〉 정당별로 본 과도기 엘리트의 비율 175

그림 2–12〉 의원들의 평균 연령 177

그림 2–13〉 의원 중 대학 졸업자 비율(종합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 177
그림 2–14〉 첫 임기 이전에 정당 조직의 직위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의원의 비율 181
그림 2–15〉 첫 임기 이전에 기초자치단체 의원 또는 관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의원의 비율 181
그림 2–16〉 의원직이 하나의 직업이라는 데 동의한 의원의 비율 184
그림 2–17〉 의원직과 직업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원의 비율 184
그림 2–18〉 첫 임기 이전 정치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의원의 비율 185
그림 2–19〉 의원들의 정치적 계층 의식 186
그림 2–20〉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 빈도 187
그림 2–21〉 신연방지역과 서독지역 의원들의 상호 인식 차이 188
그림 2–22〉 연방의회 의원들의 '대표성'에 대한 인식 189
그림 2–23〉 주의회 의원들의 '대표성'에 대한 인식 190
그림 2–24〉 연방의회 의원들이 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과제의 순위 190
그림 2–25〉 주의회 의원들이 뽑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과제의 순위 191
그림 2–26〉 당의 노선에 대한 연방의회 의원들의 태도 192
그림 2–27〉 당의 노선에 대한 주의회 의원들의 태도 192
그림 2–28〉 연방의회 의원 중 당의 노선을 벗어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193
그림 2–29〉 주의회 의원 중 당의 노선에서 벗어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194
그림 2–30〉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195
그림 2–31〉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196
그림 2–32〉 동독 경제 엘리트의 사통당 가입률 204
그림 2–33〉 동독 경제 엘리트의 사회적 배경 205
그림 2–34〉 동독 경제 엘리트의 대학졸업자 비율 205
그림 2–35〉 직원 수 50–1,000명 제조업 분야 기업 대표들의 직업 변화 시작 연도 211
그림 2–36〉 2002년 기준 직위 유지 기간 211
그림 2–37〉 2002년 기준 신연방지역과 서독지역 기업 대표의 연령 분포도 217
그림 2–38〉 2010년 기준 신연방지역과 서독지역 기업 대표의 연령 분포도 217

독일통일 총서 26

사회계층 변동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 이후 독일의 사회계층 변동-
동독의 사회계층 변화를 중심으로

김 경 래
(국민대 정외과)



제1장

들어가며

2018년은 독일통일 과정에 있어 그 출발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며, 2019년은 통일된 지 30년이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산물로 인해 분단되었으나 1990년 통일된 독일은 여전히 분단으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이에 독일의 통일로부터 시사점을 찾고자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의 핵심은 무엇보다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된 이후 독일의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 대해 관점에 따라 상이한 평가가 제시되었다. 독일식의 흡수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흡수통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관점하에 진행되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통일 후 유럽의 병자로 치부되었던 독일이 세계적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엔진으로 칭송을 받는 과정에서 통일이 대한민국에도 대박이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독일의 통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로 통일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논의들도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논의 중 통일의 다른 대상이었던 동독 출신 주민들의 처지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논의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1989년 평화혁명을 통해 스스로 자신들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했던 동독의 주민들이 통일이라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거치면서 통일된 지 30년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는 무엇보다 통일된 독일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떠한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글은 통일된 지 30년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통일된 독일에서의 변화를 동독 출신 주민들의 사회적 계층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위해 본 글은 통일 이후 변화되는 독일의 상황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독 출신 주민들의 사회적 상황,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국내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즉 독일이 통일된 지 30여 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통일된 독일의 시민, 특히 동독 사람들의 객관적이며 주관적인 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는 무엇보다 통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즉 통일은 통합을 위한 출발점이다. 국내적으로 통일을 위한 독일, 특히 서독의 다양한 노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동서독의 통합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는 또한 통일 이후 동서독의 통합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어떠한 통일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독일, 특히 동독 사람들의 객관적, 주관적 상황에 관한 연구는 통일을 위한 노력과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에게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뜻밖의 사건으로 달성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우연한 기회가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진행된 데에는 동방정책 등을 비롯한 사전에 서독의 노력이 있었음은 당연하다. 지

금까지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연 독일처럼 그러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지만 그건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 앞으로도 계속 분단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그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은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뜻밖의 일이든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든 대비를 해야만 주체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어떠한 통일이어야 하는데 또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작업과 관련해 본 글은 기본적으로 통일 이후 동독을 중심으로 동독의 사회계층 변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본 글은 먼저 사회변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논의들과 관련해 사회계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2장에서 하고자 한다. 이는 무엇보다 통일이라는 급격한 사회변동이 구체적으로 동독 출신의 주민들에게 사회계층의 변동이라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회계층을 표현하는 객관적, 주관적 지표와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사회계층의 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객관적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표현하는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통일된 지 30년이 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동독 출신 주민들의 객관적 상황, 주관적 인식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장, 5장, 6장, 7장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객관적 상황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 주관적 인식에서의 특징과 문제점의 원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함의를 찾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또한 엘리트의 변동이 구동독 출신 주민들에게 주는 함의와 정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8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사회변동, 사회계층의 의미

제1절 사회변동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말했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즉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형태든 사회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이 상호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사회는 그것이 구성된 이후 계속해서 변화됐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명확하게 나타난다. 마르크스가 지적하는 원시공동체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 그리고 앨빈 토플러가 말하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는 바로 이러한 인간 사회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인류가 농업사회로, 증기기관의 발명과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사회로 변화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사회로 변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사회 변화는 기존 사회 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의 의식, 행위, 관계, 체계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치, 경제 체계 등이 새로운 체계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변동은 기존의 사회질서가 다른 새로운 질서로 변화되는 것으로 일정 기간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정치·경제·사회제도뿐만이 아니라 구성원의 가치관 등을 포함한 문화적 측면의 부분적, 전체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과 관련한 대표적인 견해로 탈코트 파슨즈(Talcott Parsons)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기능주의와 마르크스(Karl Marx)와 베버(Max Weber)로 대표되는 갈등론이 있다. 파슨즈(Parsons)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상호의존적인 부분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개별 체계들이 전체 사회의 질서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고 이해한다. 결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에서 변동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힘의 근원은 기본적으로 사회 체계 외부에 대한 적응, 내적 혁신의 결과에 있다는 것이 파슨즈(Parsons)의 관점이다. 따라서 사회변동은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완만하면서도 적응적인 것으로 전체 사회의 통합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바라본다.[1]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사회의 체계가 안정된 통합 체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의 핵심은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Karl Marx)가 제시하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의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갈등이 사회변동의 핵심요소라는 주장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막스 베버(Max Weber) 또한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단지 경제적 차원 이외의 요소, 즉 이념, 가치에 의한 갈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와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흔히 기술결정론 또는 경제결정론 그리고 문화결정론으로 대비된다. 즉 마르크스의 관점은 사회변동의 원인을 기술 또는 경제에서 찾고 있는데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종합인 생산양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법률, 정치적 구조 등 상부구조와 이에 맞는 사회적 의식이 생성되며 생산력

1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2004. 『사회과학의 이해』, p.178.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해 사회는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문화결정론은 문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의 기독교 윤리와 가치가 자본주의 정신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할 수 있었다는 베버의 주장이 대표적인 논의라 할 수 있다.

사회변동의 원인과 관련한 이러한 논의는 결국 파슨즈(Parsons)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외부에 의해 야기되는 힘에 대한 적응, 혁신에서 찾는 것이고 마르크스(Marx) 또는 베버(Weber)는 사회 내부의 갈등에서 변화의 원인을 찾고 있다.

변화의 방향과 관련해 진화론과 순환론이 서로 대척점에 있다. 기본적으로 진화론은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의 『종의 기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사회를 생물유기체와 같은 유기체로 이해하면서 생물학적 진화의 법칙을 사회에 적용하는 시도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변동은 곧 더 좋은 단계로 발전하는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콩트(Auguste Comte)가 지적하는 신학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실증적 단계로 발전하는 인간의 지적 발전 그리고 뒤르켐(Émile Durkheim)이 말하는 인간 사회가 기계적 연대에 기초한 단순사회에서 유기적 연대에 기초한 복합사회로 변화하였다는 지적은 모두 진화론적 관점으로 사회의 변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변동으로 인해 문명의 수준이 퇴보하거나 사라지는 예도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순환론은 사회변동이 꼭 진보의 방향이 아닌 퇴보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서구의 몰락』에서 슈펭글러(Oswald Spengler)는 여러 문명권의 역사 속에서 각 문명은 생성, 성장, 성숙, 몰락이라는 주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는 『역사의 연구』에서 한 사회가 내,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이며 적절한 응전을 하지 못할 때 몰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바로 사회변동에 있어 순환론의 견해를 대변하는 논의들이다.

이러한 사회변동의 원인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결국 모든 사회

는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변동에 대해 현실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은 한국 사회가 변화했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은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변화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출산, 육아 등에서 여성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차별받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변화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결국 사회변동에는 다양한 수준, 속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그 개념적 정의 또한 폭넓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변동은 사회의 다양한 수준들에 널리 존재하는 복잡한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 생활에 있어 개개인의 개별적인 것에서부터 전체적인 것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들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사회변동에 대한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사회변동을 고찰할 때 사회변동의 분석 단위, 요인, 방향, 결과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기하는 것으로 사회변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3] 예를 들면 가족 또는 공식 조직에서의 변화를 또는 지역사회, 사회계층 구조, 사회제도의 변화 등의 분석 단위가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변동에 대한 관심 분야 또는 대상에 따라 분석 단위가 결정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분석 단위 또는 수준을 정리한 것이다.

[2] R.H. 라우어 지음, 정근식·김해식 옮김. 2018.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변동의 유형·메카니즘·전략』, p.21. 파주: 한울아카데미.

[3] 김선웅. 2006. 『개념 중심의 사회학』, p.375. 파주: 한울아카데미.

표 1-1〉 사회변동에 있어 분석 수준

분석 수준	대표적 영역	대표적 연구 단위
전 세계적 수준	국제조직: 국제적 불평등	GNP, 무역에 관한 자료들, 정치적 동맹
문명	문명들의 순환적 생존과정 혹은 다른 유형의 변동들(예를 들면 진화적 혹은 변증법적)	예술적, 과학적 혁신들과 그 외 혁신들, 사회제도
문화	물질문화: 비물질문화	테크놀로지, 이데올로기, 가치
사회	계층 체계: 구조, 인구학, 범죄	소득, 권력, 권위, 역할, 이주율, 살인율
공동체	계층 체계: 구조, 인구학, 범죄	소득, 권력, 권위, 역할, 인구성장, 살인율
제도	경제, 정치, 종교, 결혼과 가족, 교육	가족소득, 투표유형, 교회참석, 이혼율,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조직	구조, 상호작용의 유형들, 권위구조, 생산성	역할, 각종 친목단체들, 관리/생산 비율, 노동자 일인당 산출량
상호작용	상호작용의 형태들, 커뮤니케이션	갈등이나 경쟁 또는 인접의 양, 상호작용에 빈번하게 참여하는 사람들과 뜸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개인	태도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신념, 열망

출처: R.H. 라우어 저, 정근식·김해식 옮김. p.22 재인용.

이 표에 있는 다양한 분석 수준을 중심으로 변화의 요인 그리고 방향성을 이해할 때 핵심적인 요소는 경제적, 특히 기술적 요인과 이념 또는 관념 그리고 정부와 엘리트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위의 표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은 결국 바로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요소, 즉 경제, 이념/관념, 정부의 역할, 엘리트의 역할에 의해 그 구체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첫째, 경제적 요소는 기술적인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는 무엇보다 지난 역사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지난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과학,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경제적 측면은 사회변동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속도와 다양한 분야에 변동을 일으켰다. 산업혁명 이후 사회의 변동은 산업구조, 경제제도, 정치제도, 교육제도, 종교제도, 가족제도 등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에

있어 변화를 야기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동은 ① 새로운 기술이 인간들의 일상생활에 응용됨으로써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다양성을 일으킨다. ② 자동화된 생산과정에 임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유형을 변화시키는 데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사회관계, 상호작용을 변화시킨다.[4]

둘째, 이념 또는 관념은 앞에서 언급한 마르크스(Marx)와 대비되는 베버(Weber)의 논의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사회변화를 물질적 요소에 초점을 둔 마르크스(Marx)와 달리 자본주의 사회의 도래를 물질적 측면이 아닌 기독교 윤리를 바탕으로 한 기업가 정신과 직업윤리에서 찾은 베버(Weber)를 생각할 수 있다. 이념 또는 관념은 사회변동과 관련한 변동의 방향, 비전을 정당화시키는 측면을 갖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이전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질서가 갖는 정당성을 확립시킨다. 또한, 사회적 유대감, 통합의 근거를 제공한다.[5]

셋째, 정부의 역할은 사회변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 조선 말 개화 시기 사회변동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정부에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부의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한 산업화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급격한 사회변동을 주도할 수도 있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지난 시기 박정희 정권에 의한 산업화정책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6]

넷째, 사회변동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행위자로 엘리트를 제외할 수 없다. 엘리트란 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자질을 갖고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사람을 의미한다. 사회변동에 있어 이들이 가진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플라

4 김선웅. 앞의 책, pp.400-401.

5 김선웅, 앞의 책, p.405.

6 R.H. 라우어 저, 정근식·김해식 옮김, 앞의 책, pp.285-292.

톤의 철인정치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엘리트의 권위가 추락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위기를 언급하는 만하임(Karl Mannheim), 인간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설명하면서 엘리트들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민을 통합시키는 적절한 대응을 제시해야 한다는 토인비,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슘페터(Schumpeter)의 논의들 모두 엘리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조선 말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변동이 엘리트들에 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예도 있다. 결국, 한 사회 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다양한 엘리트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행위 유형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어떤 경우든 사회변동에 있어 엘리트들은 중요한 존재라는 점이다.

사회변동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 변동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동이 진보 또는 퇴보로 연결될 것인지와 관련해 그 분석에 있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제2절 사회계층

사회변동과 관련해 사회계층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사회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인류에게 계층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계층 현상은 농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일반화되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중세 유럽의 봉건제에 기반을 둔 신분제도는 농업사회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계층 현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산업혁명을 계기로 야기된 사회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신분제 사회의 요소는 약화되었고 시장을 매개로 하는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계층은 사회변동으로 야기된 변

화된 사회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 주는 단면이자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앞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변동의 구체적 모습으로서 사회계층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불평등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계층 개념은 계급 개념과 그 유사성을 갖고 있다. 즉 한 사회가 불평등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분석하는 데 계층, 계급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계급 개념은 기본적으로 그 출발점을 마르크스(Marx)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 계급 개념은 19세기 마르크스(Marx)에 의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중심으로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되는 갈등적 관계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계층 개념은 1930년대 독일의 사회학자 테오도르 가이거(Theodor Geiger)가 마르크스주의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제시한 개념[7]으로 사회적 불평등 구조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 간에 부, 명망, 권력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비록 1930년대 마르크스주의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계층 개념이 형성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한 사회가 불평등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즉 사회의 구성원들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비슷한 재산 또는 소득, 비슷한 직업을 기준으로 다양한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하에 비슷한 계급 또는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따라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가정한다. 더불어 이러한 가정하에 이들은 서로 비슷한 생각, 세계관, 정서, 가치, 태도, 이데올로기 등을 갖고 있을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계급 그리고 계층 개념은 사람들을 비슷한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삶의 경험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개인

[7] Rainer Geissler. 2014, "Facetten der modernen Sozialstruktur," in. http://www.bpb.de/izpb/198045/facetten-der-modernen-sozialstruktur?p=all(검색일: 2018. 06.12).

적 특징, 즉 심리적 상황, 생각, 가치 지향, 필요, 이해, 심성, 생활양식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한다.[8] 즉 비슷한 생활조건 또는 외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은 비슷하게 자신의 계급, 계층에 맞는 정신상태와 생활방식을 형성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계급, 계층 개념에는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먼저 계급 개념은 사회 구성원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 경제적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르크스(Marx)가 제시하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한 자본가와 노동자로의 분류이다. 더불어 마르크스(Marx)의 계급 개념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 그리고 권력 관계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핵심은 계급의 구조와 더불어 갈등, 권력 관계의 원인 등을 사회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계층 개념에 기반을 둔 분석 또한 사회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의 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30년대 가이거(Geiger)가 마르크스(Marx)의 계급이론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당과의 공개적인 논의들 속에서 발전된 계층 개념은 마르크스(Marx)에게 있어 핵심적 요소인 경제적 측면 이외의 현대화된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특징들로 인해 계층, 계급 이 두 개념의 사용에 있어 서로 다른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9] 첫 번째 입장은 계층 개념을 상위에 두는 개념으로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불평등 구조를 포함하기 때문에 계급 현상도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계층, 계급 개념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돈, 명예, 권력 등의 사회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구조화될 때 계층이라는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계층 간에

[8] Rainer Geissler. 2014. Die Sozialstruktur Deutschlands. p.95. 7. Auflage. Wiesbaden: Springer VS.

[9] 홍두승·구해근. 2001. 『사회계층·계급론』. pp.28-32. 제2판. 서울: 다산출판사.

는 자연히 이해관계의 대립이 생길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은 계급과 계층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계층론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에 있어 야기되는 개인들 간의 차이에만 집중하고 있으므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의한 생산과정에서 생겨나는 근본적인 착취와 이로 인한 지배적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서 찾고 있는 마르크스(Marx)의 사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층 개념은 사회의 불평등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들의 행위, 태도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입장은 계급, 계층 개념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이 두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에 초점을 맞춘 절충적인 관점이다. 즉 사회 내에는 계급 개념에 초점을 맞춘 생산관계에 의한 물질적, 권력적 측면에 있어 이해관계의 갈등도 있지만 이 외에도 사회적 명예, 지위의 분배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계급, 계층 개념에 대한 이러한 입장과 관련해 오늘날 일반적으로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입장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근원적인 원인을 마르크스(Marx)가 지적하듯이 생산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 지위를 단순히 생산관계만이 아닌 사회 심리적 요소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날 계층 개념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비교적 동등한 수준의 희소자원을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다양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그리고 이 층 간의 위계서열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희소자원으로 재산, 소득, 직업, 학력, 생활양식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기반으로 소득, 직업, 고용형태 그리고 심리적 측면들을 고려하고 있다. 즉 사회계층을 고찰하는

데 있어 객관적, 주관적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객관적 방법으로는 직업, 소득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주관적인 방법으로는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이다.

이는 결국 사회계층에 대한 분석에 있어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마르크스(Marx)에 의해 분류의 기준이 되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분류를 하면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는 노동자 또는 자본가 중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베버(Weber)가 제시하는 개념 중 하나인 권위를 중심으로 계층을 분류한다면 그 측정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계층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위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기준, 즉 소득, 재산, 직업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접근이 타당성을 갖게 된다.

사회계층의 구분에 있어 주관적 측면은 문화적,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대표적인 논의의 하나로 부르디외(Bourdieu)를 생각할 수 있다. 그는 계층 구분에 있어 문화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문화적 성향인 아비투스(habitus)를 중심으로 계층을 구분하고 있다. 즉 각 계층의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계층이 갖고 있는 특유의 언어표현 방식, 사고방식, 교양, 취미, 문화적 소양을 갖게 되어 다른 계층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주관적 측면의 다른 측면인 심리적 측면은 개인의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한 개인의 가치관, 태도 및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개인이 많은 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의 계층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에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 측면의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바

로 자신의 사회계층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심리적 요소가 개인의 상대적 사회계층을 보여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스스로 '자신의 사회계층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 중요성을 반영해 주지'[10]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험에 근거해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11]라는 질문과 답변으로 확인된다.[12]

사회계층을 측정하는 데 있어 이러한 주관적 인식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에게 자신은 누구인지와 같은 질문은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상우는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우려와 달리 신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증명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문제는 이 둘, 즉 객관적 사회계층과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을 어떻게 관련짓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둘은 각기 다른 개념이 아니라 현재 사회구성원들이 가진 보편적 인식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즉 이 둘은 각기 서로 다른 영역을 표현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회계층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이 둘을 함께 측정하여 사용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13]

제3절 독일에서 사회계층의 논의

독일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계층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추적함에 있어 지표로서 물질적 생활수준, 직업, 인구구조, 엘리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일 이전인 1950, 1960년대 독일에서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

10 변상우. 2018. '사회계층에 대한 재조명-심리학에서 개념화 및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문화 및 사회문제』 24(1), p.113.

11 변상우. 위의 논문, p.113.

12 변상우, 위의 논문, pp.11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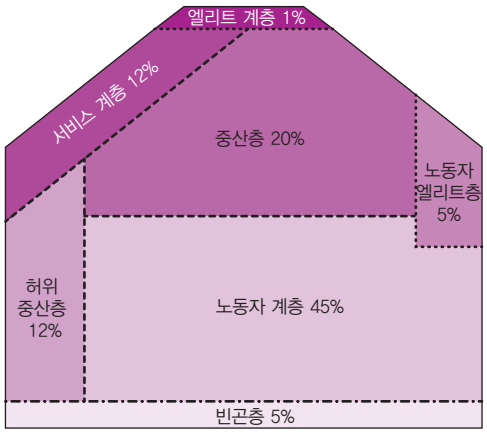
13 변상우, 위의 논문, p.113.

로 사회적 평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즉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바탕으로 집단적인 상승, 하락을 통한 계급, 계층의 해체를 바탕으로 한 사회 중산층으로의 평준화에 강조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해 독일의 사회학자인 랄프-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는 사회적 이동을 막는 지속적인 장애물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계층을 구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1-1 참조〉.

다렌도르프(Dahrendorf)의 이 모델은 사회계층을 집의 구조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사회의 계층을 7개, 즉 엘리트층(Eliten), 서비스층(Dienstklasse), 중산층(Mittelstand), 노동자엘리트층(Arbeiterelite), 허위중산층(Falscher Mittelstand), 노동자계층(Arbeiterschicht), 하위계층(Unterschicht)으로 분류하였다. 엘리트층은 사회의 계층 분류의 최상층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층과 부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층은 엘리트들의 관료 조력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산층은 학자 그리고 부분적으로 엘리트의 관료 조력자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엘리트층은 중산층과 노동자계층에 걸쳐 존재하는 노동자의 일부로 작업반장, 장인(Meist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위의 중산층 또한 중산층과 노동자계층에 걸쳐 존재하는데 일종의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종업원, 판매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허위의 중산층으로 일컫는 이유는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다르지 않지만, 자신들을 스스로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계층은 수공업자, 산업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계층에 있어 최하위, 즉 집의 구조와 비교함에 있어 지하에 속하는 하위계층은 저임금 노동자, 영구 실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 다렌도르프가 제시한 1965년 서독의 계층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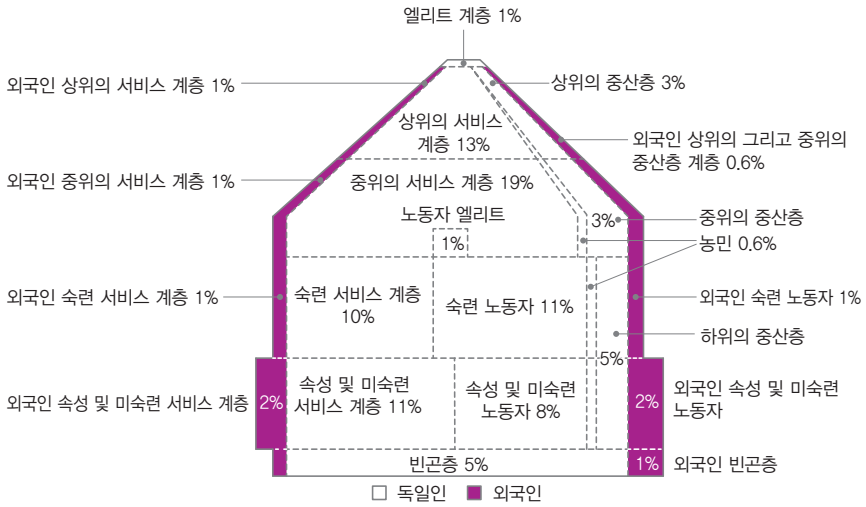


출처: Rainer Geißer, 앞의 책, p.100.

아래의 〈그림 1-2〉는 앞에서 설명한 다렌도르프(Dahrendorf)의 모델과 관련해 2009년 독일 사회의 계층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렌도르프(Dahrendorf)의 모델을 바탕으로 지난 50년간 독일 사회의 계층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증가가 나타나고 사회계층 또한 단순히 7개로 분류할 수 없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2009년 독일의 사회계층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엘리트(Eliten: 정치, 경제, 미디어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위의 서비스층(obere Dienstklasse: 학술적 교육을 받은 고위직 공무원, 대기업의 관리직), 상위의 중산층(obere Mittelstand: 변호사, 의사, 세무사, 건축가 그리고 종업원 10명 이상의 산업, 무역, 금융업의 대기업 또는 중간 규모의 기업가), 중위의 서비스층(mittlere Dienstklasse: 전문교육을 받은 컴퓨터공학자, 회계사, 교육자, 사회사업가, 임상의사 등), 중위의 중산층(Mittlerer Mittelstand: 수공업, 무역, 숙박업 등 비교적 높은 전문 직업교육을 받고 1명에서 9명까지의 종업원이 있는 중소자영업자), 노동자 엘리트층(Arbeiterelite: 장인), 하위의 중산층(unterer Mittelstand: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숙련 서비스업(gelernte Di-

enstleister: 사무실, 숙박업, 돌봄 서비스업 등), 전문노동자(Facharbeiter: 자격을 갖춘 수동 숙련 노동자 및 숙련된 수공업자, 전기 기술자, 기계공 등), 속성 그리고 미숙련 서비스 제공자(an- und ungelernte Dienstleister: 낮은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종으로 사무실에서 단순한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출납원, 사환, 운전사,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속성 그리고 미숙련 노동자(an- und ungelernte Arbeiter: 생산, 건설, 운송업에 종사하는 낮은 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하위계층(Unterschicht: 일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 실업자 등), 외국인(Auslaender)으로 분류된다.

그림 1-2〉 2009년 독일의 사회계층



출처: Rainer Geißer, 앞의 책, p.101.

2009년과 1960년대 서독의 사회계층에 있어 분류와 그 비율은 성립 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즉 사회적 노동분업, 생산방식 등의 변화로 단순하게 두 계층을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시기 독일 사회에서는 사회계층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은 명확하다.

위의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사회는 변동하고 그 변동하는 구



체적 양상을 사회계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통일 이후 독일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통일 이후 동독 출신 주민들의 양상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에 다음 장에서 통일 이후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사회계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3장

동독 사회계층의 변화

본 글은 통일 후 동독의 사회계층 변화를 고찰함에 있어 객관적 지표인 소득, 실업률, 소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관적 계층인식을 위해서는 통일된 독일의 상황에 대한 평가, 통일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기회균등,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의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계층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객관적, 주관적 계층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 동독 사람들의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제1절 객관적 지표

1. 소득

1990년 통일 이후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내에서 동서독 주민들 간의 평등한 생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구동독 출신 주민들에게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독일 연방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독일통일백서 2017』에 나온 아래의 동서독 가처분 소득의 변화는 이러한 변화, 발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통일 이후 1995년까지 구동독 출신 주민의 가치분 소득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구동독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거의 정체된 상황이다. 즉 1991년 동독의 서독에 대한 가처분 소득 비율은 60.6%였으나 1995년에는 79.5%로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비율의 증가는 거의 정체되어 있다.

표 1-2〉 동독과 서독의 가처분 소득의 변화

년도	서독(Euro)	동독(Euro)	동독과 서독의 비율(%)
1991	13,787.6	8,352.4	60.6
1995	15,316.5	12,174.6	79.5
2000	16,597.5	13,563.5	81.7
2005	18,546.0	15,099.6	81.4
2010	20,100.5	16,835.8	83.8
2011	20,719.3	17,264.3	83.3
2012	21,201.2	17,588.5	83.0
2013	21,447.8	17,853.7	83.2
2014	21,849.4	18,132.6	83.0
2015	22,312.1	18,602.7	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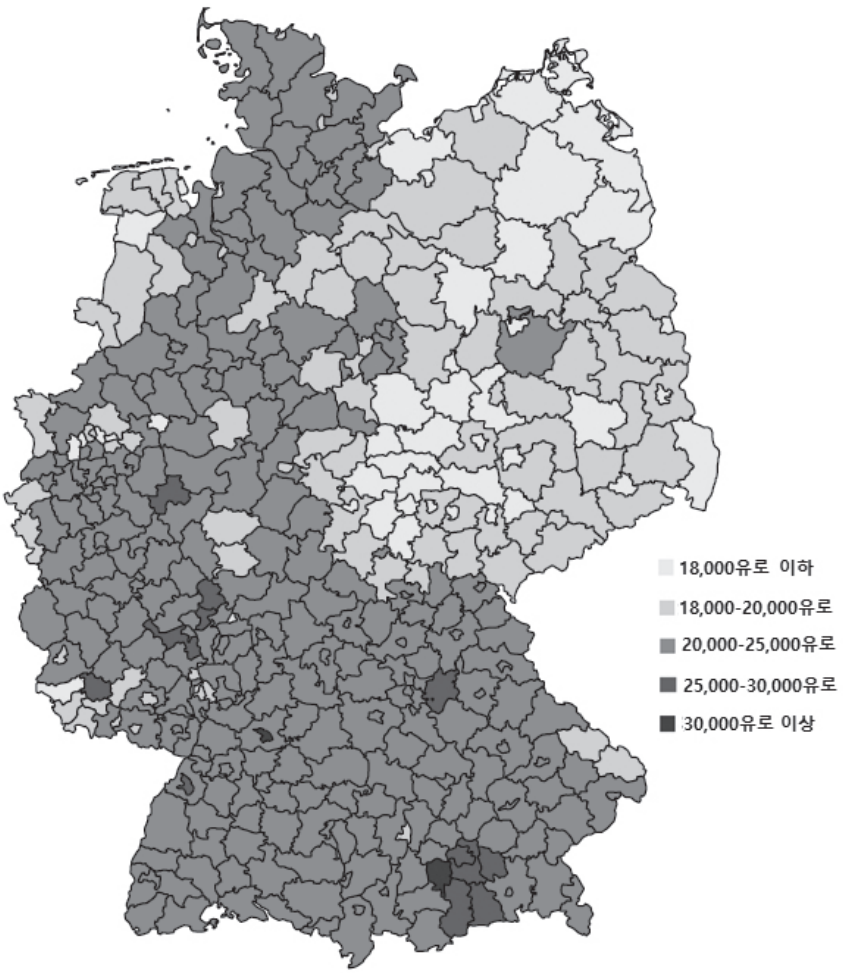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 2017.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p.102.

구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가처분 소득의 차이는 지역적인 차이에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구동독지역에서 가처분 소득이 최저인 주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로 16,647유로였고, 최고인 주는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로 17,899유로였다. 이러한 구동독지역과 대비되는 서독지역의 경우 최저인 자를란트(Saarland)주의 가처분소득은 19,337유로였고 최고인 바이에른(Bayern)주는 22,586유로였다.[14]

[14] Gunnar Winkler, 2017. “Friedliche Revolution und deutsche Vereinigung. 1989-2016. Positionen der Buergerinnen und Buerger.” p. 86. https://www.sfz-ev.de/index_htm_files/FR-V-16-E2.pdf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아래의 〈그림 1-3〉 2014년 독일 전체 지역별 가처분 소득의 차이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림 1-3〉 2014년 독일 각 주의 가처분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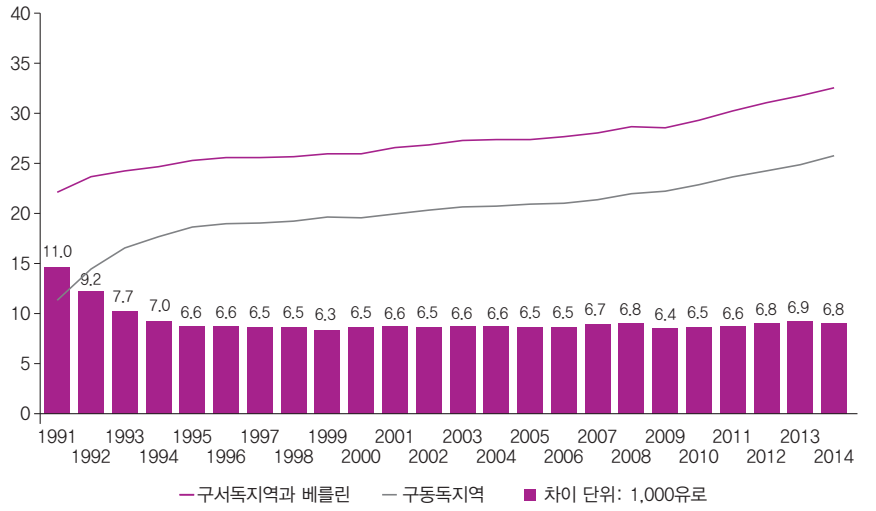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 2017.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7, p.11.

동서독지역 간의 이러한 가처분 소득에 있어 차이와 정체는 동서독의 세전수입에 있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베를린을 제외한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노동자의 세전수입 비교(1991-2014)

(단위: 1,000유로)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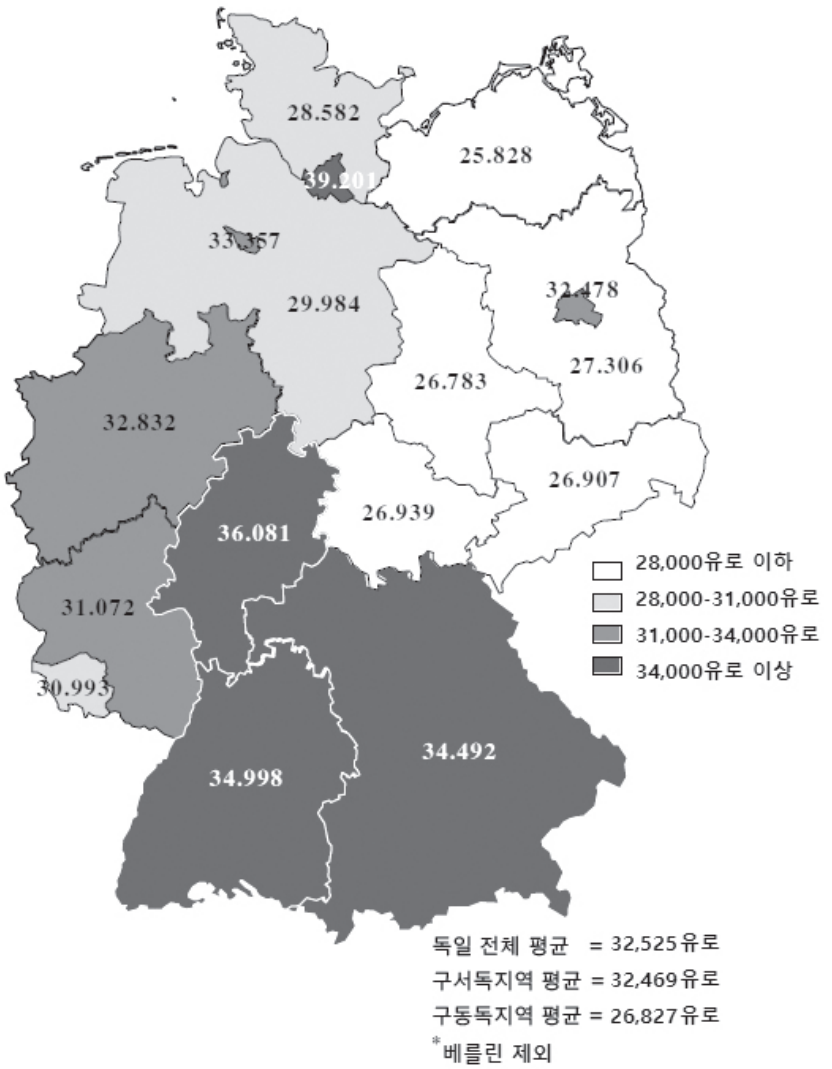
가처분 소득이 통일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이후 계속해서 정체되었듯이 세전급여 또한 거의 동일한 모습을 나타냄을 위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동서독의 세전수입 차이는 2015년 노동자 1인당 세전수입을 나타내는 아래의 〈그림 1-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2015년 독일 전체의 평균 세전임금은 32,525유로였다. 구서독지역의 경우 32,469유로인 반면 구동독지역은 26,827유로였다. 색이 진할수록 세전수입이 높은 곳을 의미하고 있는데 남북의 격차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 동서독 국경을 기준으로 격차가 더 크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격차는 다른 한편 시간당 임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은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시간당 임금 격차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임금 격차에 대해 구동독지역 중 구조적으로 가장 강한 지역이 이미 서독에서 가장 약한 지역에 도달했음을 지적하면서 최소한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격차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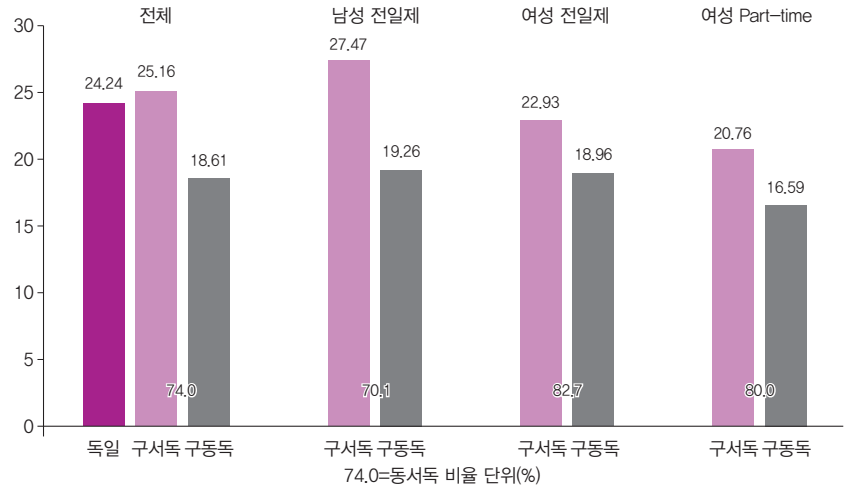
그림 1-5〉 2015년 노동자 일인당 세전수입



출처: Gunnar Winkler, 2017. p.87.

그림 1-6〉 2015년 4분기 동서독지역 시간당 임금

(단위: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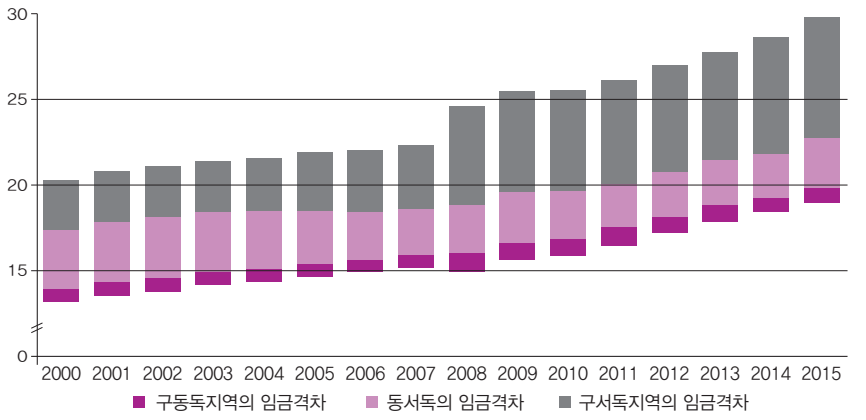


출처: Gunnar Winkler, 2017. p.164.

아래의 〈그림 1-7〉은 구동독지역에서의 임금 격차 그리고 구서독지역에서의 임금 격차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2007년과 2015년의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임금 격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7〉 독일 연방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격차

(단위: 유로)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85.

2007년 구동독지역에서 최고로 높은 지역인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14.94유로였으며 서독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의 경우 17.60유로로 그 격차는 2.66유로였다. 2015년 서독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는 21.93유로로 이는 구동독지역에서 가장 높은 작센(Sachsen)주의 18.80유로와 비교했을 때 3.13유로의 차이를 보이며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 18.78유로와는 3.15유로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 그리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 모두 2007년에 비해 임금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5년 두 지역 간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15] 이는 시간당 임금 격차는 오히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커진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평균적인 임금은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동서독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소비

1990년 초 동독의 많은 사람은 1989년의 평화혁명을 통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의 확립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있어 경제적 수준이 향상될 기회로 생각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당시 동독 사람들에게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재화, 용역에 대한 공급의 확대, 기술적으로 품질이 훨씬 좋은 가전제품 등의 소비, 경제 시스템 또는 체제의 변화에 대한 요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일되기 이전의 동독 시절 승용차 한 대를 구매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려야 했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서 통일된 이후 계절에 상관없이 과일과 채소가 공급되고 있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1990년, 1991년 구동독지역에서 일반 가정과 개인의 소비 행

[15] Gunnar Winkler, 위의 책 p.164.

동에서 나타났다. 특히 서독의 가격 체계가 동독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소득 보조금을 통해 동독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필요한 재화 등을 살 수 있었다.

소비 행동의 변화는 거의 모든 구동독 출신 주민들에게 이전 동독 시절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고품질의 재화 구매로 나타났는데 주로 자동차, 비디오 리코더, 컬러 TV, 하이파이 시스템, 냉장고, 세탁기, 가구, 패션 의류, 화장품의 구매에 집중되었다. 즉 동독 시절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 질 낮은 품질의 제품이 아닌 서독의 고품질 제품으로 대체된 것이었다.

이러한 소비의 변화와 관련해 1990년부터 2015년 사이 자동차, 전기제품 등의 가구의 내구 소비재를 비교해 보면 동독에서 어떠한 방식과 규모로 소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3〉 1989년에서 2015년 가구당 내구 소비재의 변화

(단위: 대/100가구당)

	구동독지역	통일 후 동독과 동베를린		통일 후 동독과 베를린		구서독지역
	1989	1993	1999	2010	2015	2015
전화기	25	54	97	99.9	100	99.9
유선전화	x	x	90	90	90	92
이동전화	x	x	91	93	93	94
컴퓨터	18	18	–	77	87	89
데스크톱 컴퓨터	x	x	–	52	48	52
노트북	x	x	–	64	71	74
인터넷	–	–	5	68	86	89
자가용	57	76	71	70	72	79
신제품 구입	–	x	34	32	32	35
중고품 구입	–	x	41	44	44	50
자전거	57	78	74	79	78	82
텔레비전	57	96	98	96	99	98
사진기	x	85	85	87	86	85
비디오카메라	x	8	17	20	19	18
냉동고	48	64	80	43	40	54
식기세척기	–	3	26	60	65	71
전자레인지	–	19	41	73	75	73
빨래 건조기	–	3	14	22	24	44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206.

위의 표에 의하면 2015년 구동독지역에서 100가구당 72%가 최소한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비율적인 측면과 달리 실질적으로 총 9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율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00가구당 텔레비전은 171대, 컴퓨터는 176대, 273대의 전화기 그중 휴대전화는 164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보유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지위 그리고 소득에 따라 높은 차이를 보였다. 동일 기간 서독의 경우 100가구당 실질적으로 108대의 자동차, 202대의 컴퓨터, 177대의 휴대전화, 59대의 내비게이션(동독과 베를린의 경우 51대)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동독 사람들의 소비 행동의 변화와 달리 소비 지출을 보면 구동독과 구서독지역에 있어 격차가 통일 직후 급속하게 향상되었으나 그 격차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베를린을 제외한 구동독지역 주민 1인당 연간 개인소비지출은 1991년에서 2013년 6,753유로에서 16,538유로로 245%가 증가하였고, 같은 시기 베를린을 포함한 구서독지역의 경우 11,933유로에서 19,619유로로 164%가 향상되었다. 이는 서독 수준의 84.3%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독 사람들의 소비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동서독 간의 소비 수준 차이의 감소는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에 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동서독 간의 차이는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16]

2013년 기준 1인당 개인소비지출을 보면 이러한 차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구동독지역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 16,192유로, 작센-안할트(Sachen-Anhalt)주 16,266유로, 튜링겐(Thueringen)주 16,423유로,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 16,723유로였

[16] Gunnar Winkler, 2017. Friedliche Revolution und deutsche Vereinigung. 1989-2016. Positionen der Buergerinnen und Buerger. p. 204. in. https://www.sfz-ev.de/index_htm_files/FR-V-16-E2.pdf(검색일: 2018. 10. 15).



다. 반면에 구서독지역의 바이에른(Bayern)주는 20,733유로, 자를란트(Saarland)주는 18,391유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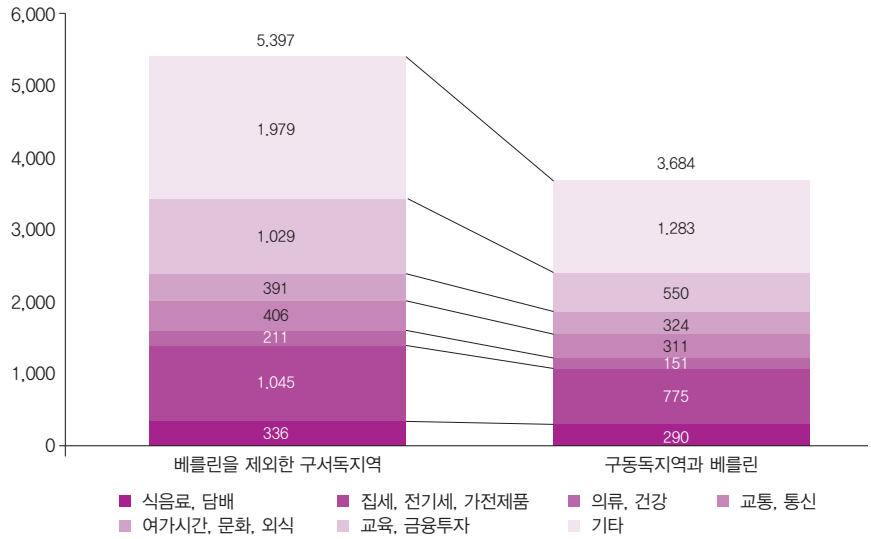
이러한 격차는 1인당 기준이 아닌 월별 가구당 기준에서도 유효하다. 독일 전체적으로 가구당 식료품, 의류, 집세, 여가비용 등 개인적 소비는 2,375유로이다. 베를린(Berlin)을 포함한 구동독지역의 경우 1,935유로, 베를린(Berlin)을 제외한 구서독지역은 2,494유로를 지출하고 있다. 대략 한 달에 가구당 동서독 간의 소비지출에 있어 559유로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는 서독 수준의 77.6%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구 전체의 소비를 예로 들면 개인소비와 보험료, 자동차세, 대출금, 자산투자 등에 지출되는 비용에 있어 구서독지역은 5,397유로지만 구동독지역은 구서독지역의 68.3%인 3,684유로로 1,713유로가 적다.

아래의 〈그림 1-8〉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동독과 구서독지역에 있어 식료품, 의류, 교통, 통신비용에 대한 지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교육 그리고 금융투자 부분과 집세, 전기세 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다. 결국, 가구당 월별 지출에 있어 이러한 차이는 식료품, 의류, 교통이 아니라 주로 자산투자, 주거, 임대, 전기료 등에 의한 차이에 근거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구서독지역의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구서독지역의 주민들이 더 큰 집에서 생활하거나 더 많은 집을 소유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다.[17]

[17] ebid. p.205.

그림 1-8〉 2014년 기준 개인 가구별 월 지출 내역

(단위: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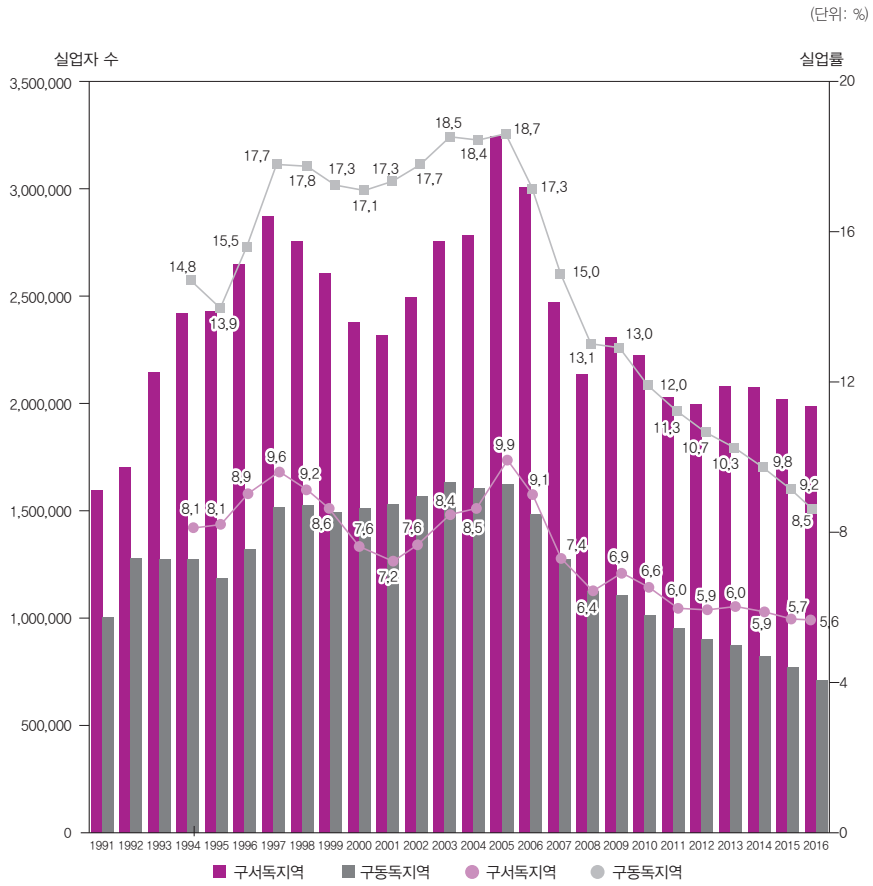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205.

결국 소비에서 동서독의 격차는 통일 직후 급속하게 감소하였지만, 소득의 격차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는 소비 격차에 있어 정체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3. 실업률

최근 몇 년 동안 독일의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규직 고용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독일 경제의 호황이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로 인한 혜택 또한 구동독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동독의 실업률은 통일 이후 최대치인 18.7%에 달하였으나 2016년에는 8.5%로 감소하였다. 이 수치는 서독의 실업률인 5.6%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아래의 〈그림 1-9〉는 통일된 이후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실업률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2005년 이후 그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9〉 동서독의 실업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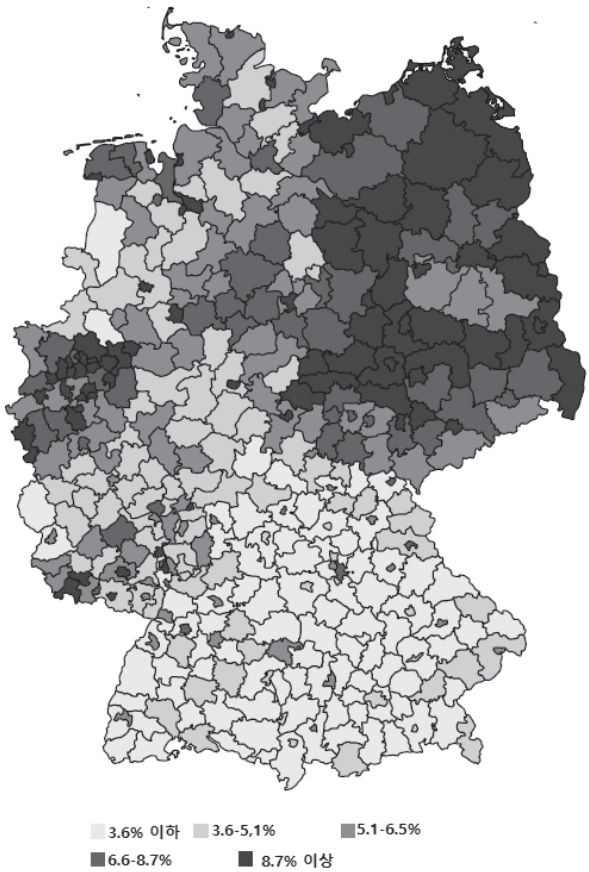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 앞의 책, p.99.

통일 직후 급속하게 증가했던 구동독지역의 실업률은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동서독 간의 격차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의 지역 간에는 평균 이상의 차이가 있는 지역들이 있다.

그림 1-10〉 동서독의 지역별 실업률

(단위: %)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 앞의 책, p.11.

위의 〈그림 1-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록 동서독의 실업률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 구서독지역에서 높은 실업률[18]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동서독 국경을 따라 실업률에 있어 차이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2016년 연간 평균 실업률에 있어 바이에른(Bayern)주의 경

[18] 2016년 브레멘의 경우 10.5%로 구동독지역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이들 구서독지역의 경우 이전에 전통적으로 산업도시로 알려진 곳의 경우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 앞의 책, p.11.).

우 3.5%인 반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의 경우 9.7%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평균 이상의 격차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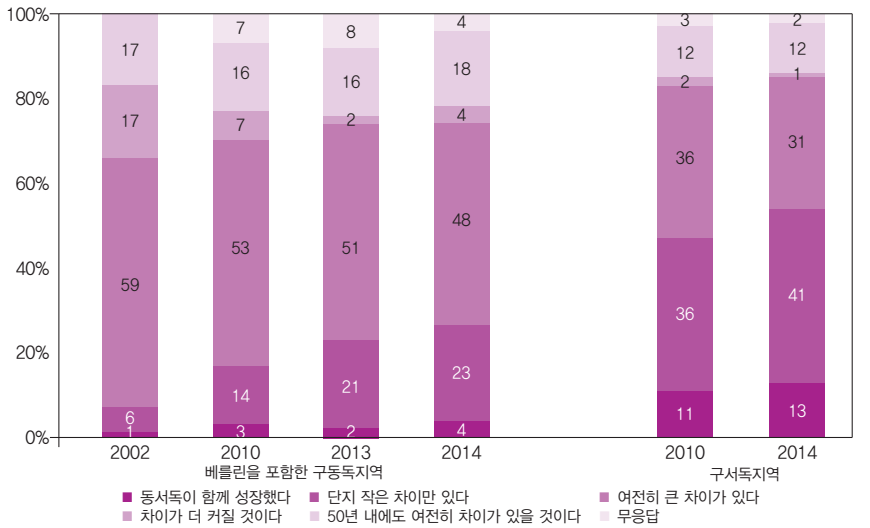
제2절 주관적 지표

주관적 계층 인식은 기본적으로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 또는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 내에서 자신의 계층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어떠한 관점에서 사회적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따라서 이러한 주관적 계층 인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통일 이후 변화된 사회에 대한 동독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주관적 계층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림 1-11〉 통일된 독일의 상황에 대한 평가

(단위: %)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42.

〈그림 1-11〉은 18세 이상 독일 성년들에게 통일된 독일의 상황을 설문한 결과이다. 2014년 구동독과 베를린지역의 경우 단지 4%만이 '동서독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23%는 '단지 작은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지만, 48%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4%는 그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18%는 앞으로 '50년 내에도 여전히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1-11〉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2002년 이후 2014년까지 비록 '동서독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차이가 없거나 있어도 '단지 작은 차이가 있다'는 비중은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동서독 간에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비중 그리고 '50년 내에도 여전히 그 차이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높다. 이러한 점은 독일 전체적인 평균과 비교했을 때 동독 사람들의 인식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동서독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대 간 차이이다. 즉 구동독지역의 젊은 연령층들은 통일 이후의 변화된 모습에 40%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25% 이하에 머물렀다. 이는 무엇보다 소득의 불균형, 장기실업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동독지역의 정서와 달리 구서독지역의 경우 젊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60대 이상에서는 60% 이상이 통일 이후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바라보았다.[19]

2. 통일이 개인에게 이득이 되었는가?

통일에 대한 동독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내용 중 하나가 통일이 이득이 되었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

[19] Gunnar Winkler, 앞의 책, p.43.

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일인의 24%는 통일이 '전체적으로 이익', 22%는 '이익이 더 많은 것'으로 바라보았다. 반면에 20%는 통일로 인해 '전체적으로 손실'이 많았으며, 21%는 '손실과 이익이 반반'이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동독과 서독 시민들의 의견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의 〈표 1-4〉와 같다.

표 1-4〉 통일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전체적으로 이익	이익이 큼	이익과 손실 반반	손실이 큼	전체적으로 손해	해당 사항 없음/무응답
독일	24	22	21	16	4	13
구동독지역과 동베를린	22	25	28	14	4	9
구서독지역	25	21	20	17	4	14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55.

위의 〈표 1-4〉는 통일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서독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동서독 주민들은 대체로 통일이 개인에게 이득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즉 구동독지역에서는 '이익' 또는 '손실보다는 이익'이라는 견해를 보인 비율이 47%이며 구서독지역에서는 46%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구동독지역과 동베를린의 경우 '이익과 손실이 반반'이라는 입장이 28%이며 '손실'이라는 입장이 18%(손실이 큼,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이고 있다. 통일이 개인에게는 손실이라는 입장과 관련해 구서독지역의 경우 '손실보다는 이익'이라는 입장은 1%가량 적고, 또한 '이익보다는 손실'이라는 입장은 3%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구서독지역의 주민들이 통일이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동독과 구서독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12〉는 1994년 이후 구동독 출신 주민들에게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 또는 손실을 주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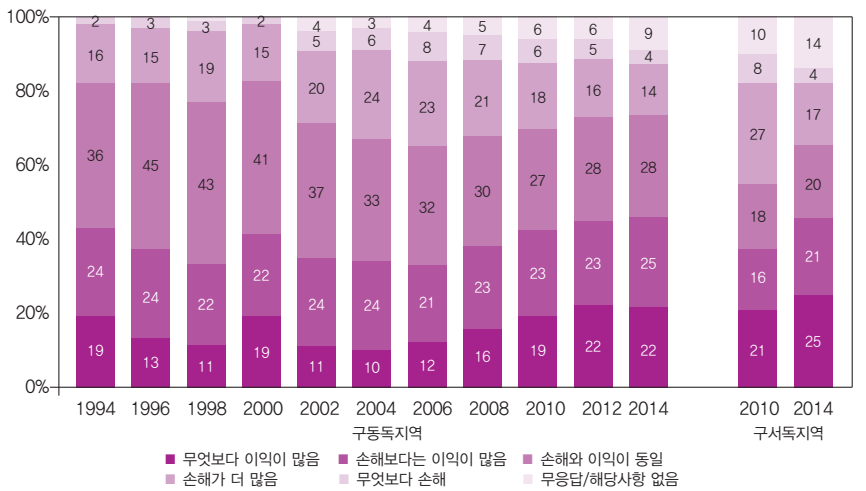
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통일된 지 22년 후인 2012년에 처음으로 구동독 출신의 사람들은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는 인식이 손해를 끼쳤다는 인식보다 앞서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12〉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통일 직후 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통일 이전 동독의 상황과 비교하여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통일 직후 지속적인 대량실업과 높은 실업률, 55세부터의 조기 퇴직 규정, 소득에 있어 동서독의 차이, 물가와 임대료의 상승 등은 구동독 출신 사람들에게 통일이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다주었다고 인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8년 이후, 2000년대 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1998년 독일은 적녹연정(rot-gruen)을 바탕으로 하는 슈뢰더(Schröder) 정권이 등장함으로써 통일 이후 처음으로 정권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정부와 의회의 새로운 구성은 모든 연령층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슈뢰더(Schröder) 정부의 새로운 사회개혁 정책이 사회 전반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2000년부터 기대가 비판적 견해로 변화되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50~65세의 사람들,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사회개혁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동독 사람들에게 삶의 수준에 있어 서독 수준으로 신속한 향상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경제 및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12〉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 또는 손실이었나?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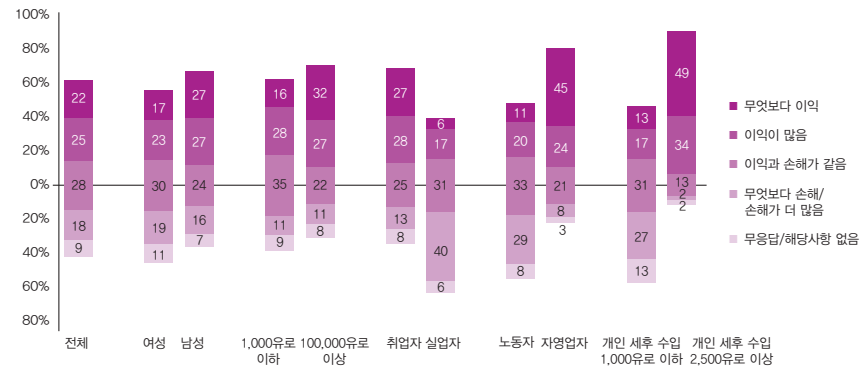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56.

아래의 〈그림 1-13〉은 통일에 대한 이러한 개인적인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것으로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세분화된 견해를 추적할 수 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주민 수, 직업의 유무 그리고 소득별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13〉 성별, 주민수별, 직업별, 직업의 유무, 소득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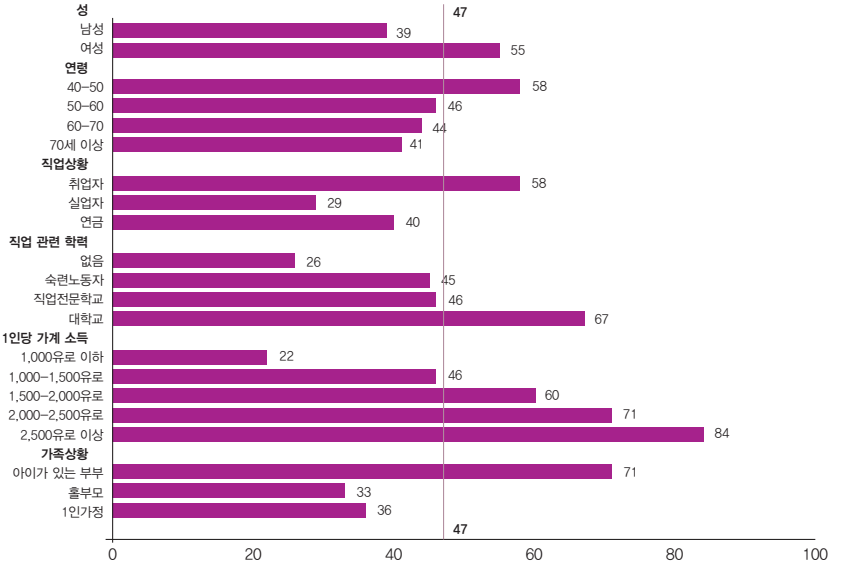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57.

먼저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 수가 적은 지역보다는 1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통일이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직업의 유무는 통일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식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직업을 통해 적절한 보수를 받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동자들보다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 아니면 손해를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함에 있어 판단의 기준은 경제적 측면이 강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아래의 〈그림 1-14〉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성별(Geschlecht)에 있어 여성들(Frauen)보다는 남성들(Männer)이, 연령별(Altersgruppen)로 40~50대의 58%, 50~60대의 46%, 60~70대의 44%, 70대 이상의 41%, 직업상황(Erwerbsstatus)과 관련해 직업이 있는(erwerbstätig) 경우 58%, 실업자(arbeitslos)의 경우 29%, 연금생활자(Rentner)의 40%, 직업교육(beruflicher Abschluss)과 관련해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26%, 숙련공의 45%, 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46%,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의 67%, 1인당 순 가계소득과 관련해 1,000유로 이하의 경우 22%, 1,000~1,500유로의 경우 46%, 2,000~2,500유로의 경우 71%, 2,500유로 이상의 경우 84%가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71%,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33%,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 36%가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들, 40~50대, 직업이 있는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통일이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 1-14〉 40대 이상의 동독 출신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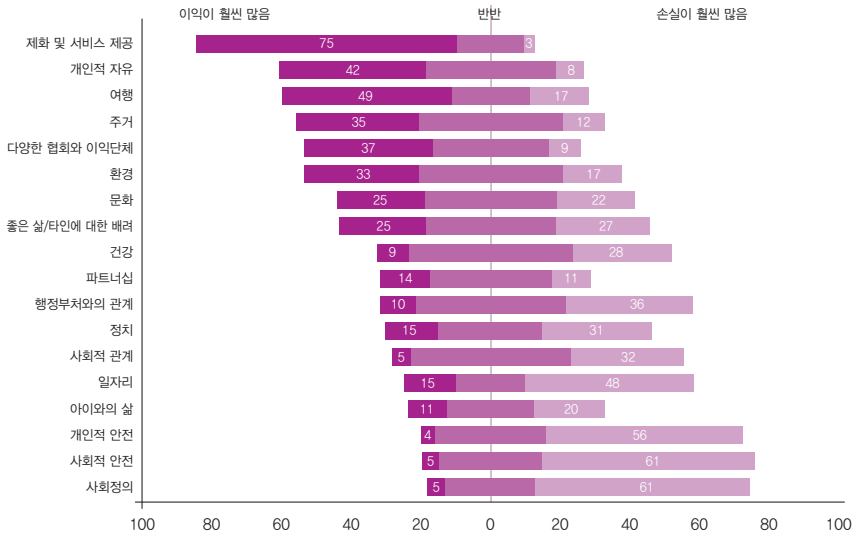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58

다른 한편 어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이득을 봤고 손해를 봤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그림 1-15〉는 통일 이후 동독 출신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거의 모든 연령, 성별, 직업의 상태, 자격에 상관없이 이득을 본 분야와 손해를 본 분야에 일정한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 먼저 구동독 출신 주민들은 통일 이후 가장 이득을 본 분야로 상품 및 서비스(75%)에 있었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각각 여행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49%), 개인적인 자유(42%), 단체, 이익단체의 다양성(37%), 주거(35%), 환경(33%) 분야에서 이익을 봤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가장 큰 손실을 본 분야로 사회적 평등, 사회적 안전이 각각 61%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적인 안전(56%), 직업(48%) 순으로 손실을 봤다고 답하였다. 이는 결국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통일로 인해 얻은 것, 잃은 것이 모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통일로 잃어버린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 이후의 경험 그리고 현실에서의 긴장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15〉 2002년 기준 통일 이후 얻은 것과 잃어버린 것

(단위: %)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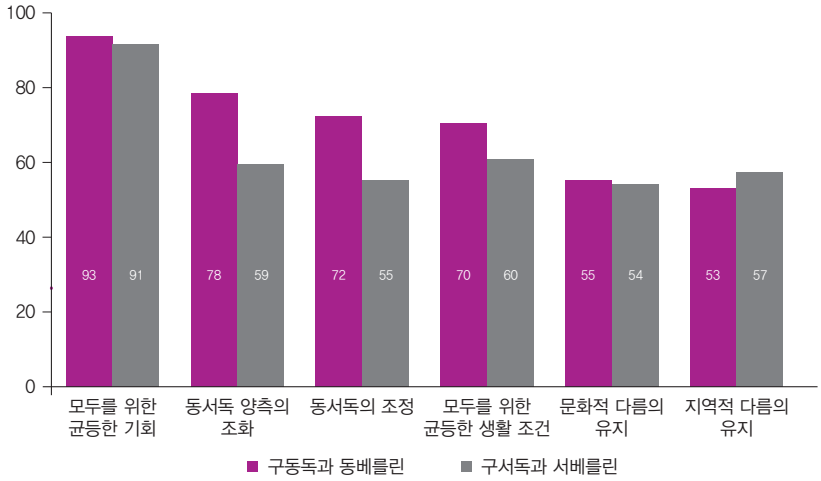
3. 균등화에 대한 인식

통일 이후 독일 연방정부의 핵심적 정책 중 하나는 동서독인의 삶의 균등화에 맞춰져 있었다.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이 동서독의 차이 극복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구동독 출신의 사람들에게 균등화라는 개념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16〉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에게 있어 균등화란 단순히 동서독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림 1-16〉 당신의 삶에 있어 균등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위: %)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69.

동서독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균등화라는 개념을 무조건적인 평등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기 위한 기회의 균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의 〈그림 1-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서독 모두 18세 이상 인구의 90%에 의해 표현되는 견해로 단순히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즉 누군가로부터의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위해 행동하기 위한 조건에 있어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고 있다.[20]

또한,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균등화와 관련해 지역적, 문화적 차이의 보존과 유지를[21]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20] Gunnar Winkler. p.68.

[21] 동독 문화의 보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이미 통일 초기의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독의 문화적 독자성 상실의 우려는 이미 1989년에 제기되었다〈문서번호 3, 6, 8, 12, 13〉 참조.

즉, 생활조건에 있어 균등화란 단지 소득에 있어 불평등의 제거만이 아니라 평균 이하의 사회적, 보건, 문화 인프라의 재건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즉, 다양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동독 사람들에게 균등화란 단순히 임금 분야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급여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독일의 통일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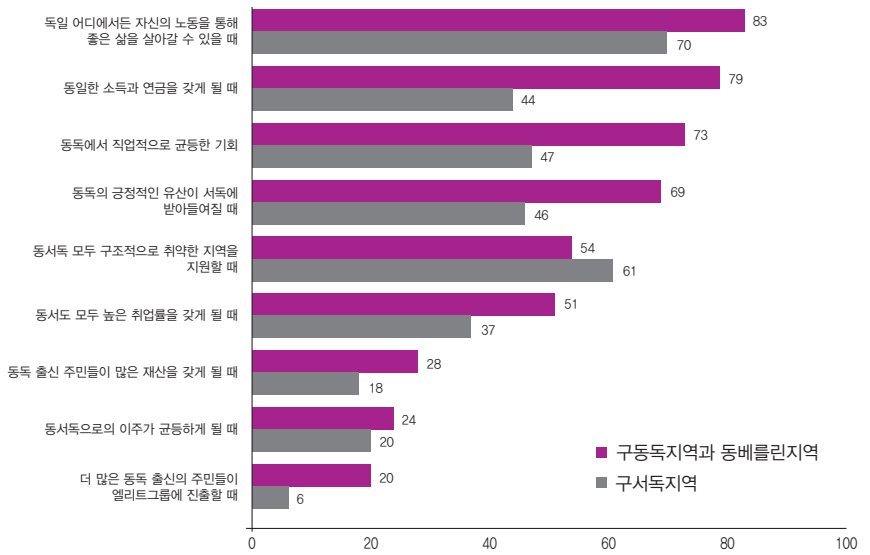
무엇이 달성되었을 때 진정한 독일통일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동독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아래의 그림은 동서독 사람들 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질문은 구동독 사람들이 통일된 이후에도 여전히 느끼고 있는 불평등한 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독 사람들에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노동을 통한 좋은 삶을 꾸려나가는 것에 있다. 이 항목은 동서독에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비록 동서독의 실업률에 있어 그 차이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편차가 유지되고 있는 동독의 실업률, 불안정한 직업 그리고 이로 인해 악영향이 미칠 연금과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독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통일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동등한 소득과 연금 그리고 동독에서의 동동한 직업기회 항목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안정적인 삶의 추구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구동독의 유산 중 긍정적인 요소가 서독에서 받아들여지는 항목이 높다는 점이다.

그림 1-17〉 무엇이 성취되어야 진정한 독일통일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단위: %)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70.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구동독 출신의 사람들이 구서독 출신의 사람들에 비해 보다 높은 균등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에 있어서의 불평등, 직업교육의 기회 그리고 동독의 장점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직업을 통한 삶의 안정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경제적 삶,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을 통일이 달성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구동독 출신 주민의 진정한 통일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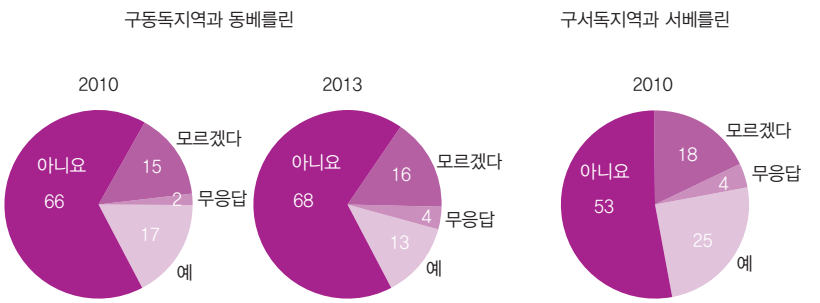
앞에서 구동독 출신 주민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통일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언제쯤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이 달성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다른 한

편으로 현시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3년 연방정부의 연정협약에 의하면 동서독의 생활 수준과 소득에 있어 균등화에는 마감 기한이 없고 꾸준하게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내용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구동독 출신 18세 이상 주민 중 13%만이 2019년까지 생활 수준에 있어 균등화를 달성하겠다는 2009년의 협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68%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서독지역의 주민들이 구동독지역의 주민들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줬지만, 전반적으로 구동독과 구서독 주민들은 모두 부정적인 인식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 통일 이후의 경험과 정치에 대한 신뢰감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18〉 2019년까지 독일 연방에서 생활 수준의 균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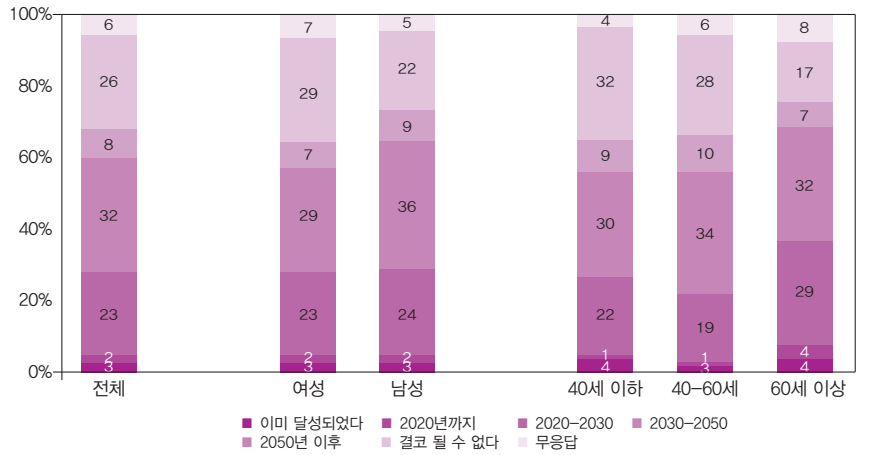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72.

구동독과 구서독 출신 주민들의 이러한 생각은 정치적인 선언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동서독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 있어 균등화가 단시일 내에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아래의 〈그림 1-19, 1-20〉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9〉 2013년 기준 동독의 생활 수준이 서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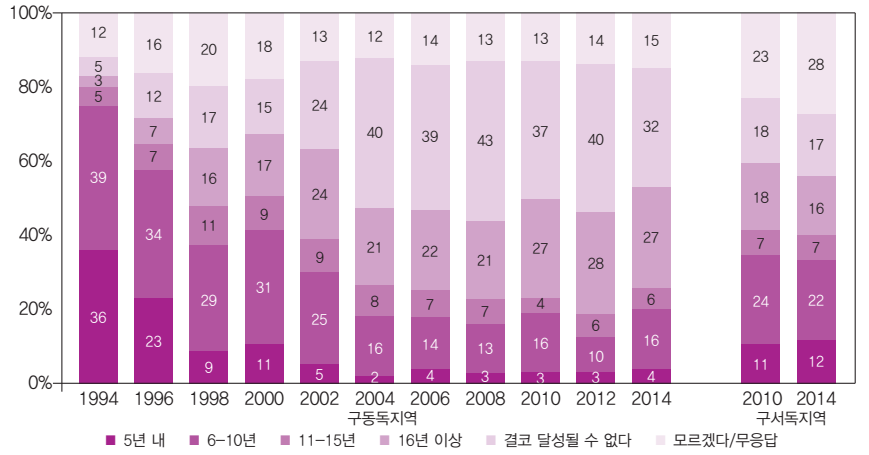
(단위: %)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73.

그림 1-20〉 소득에 있어 서독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단위: %)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74.

〈그림 1-19〉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32%의 구동독 출신 주민들은 2030년에서 2050년이 되어야 구동독지역의 생활 수준이 구서독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17~27년의 세월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통일 이후의 시기와 비교하면, 즉 〈그림

1-20〉을 보면 구동독 출신 주민들은 생활 수준에 있어 구서독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긍정적인 비율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된 지 5년 후인 1994년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75%는 소득에 있어 서독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을 10년 이내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2014년 이러한 비율은 20%로 감소하였다. 더불어 '16년 이상' 또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비율에 있어 1994년 8%였으나 2014년 5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구동독 출신 주민들이 통일 이후의 경험과 현실에서 느끼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자신들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6. 개인의 만족도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활 조건, 즉 정치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자신이 처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기본 조건 전체가 반영된 것으로 주관적인 삶의 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과거에 이루어진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 달성되지 못한 목표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언급함에 있어 개인이 처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본 조건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1990년 이후의 정치적 변화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는 무엇보다 개인의 삶에 있어 만족도는 현재 자신, 가족의 일상생활 또는 자신이 기대했고 생각했던 목표가 얼마만큼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이다.

동독 시절 민주적 참여의 부재, 여행·언론·개인의 자유 제한 그리고 고품질 소비재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던 동독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통일 이후 경제, 화폐,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한 발전은 구동독 출신 주민들에게 1990년대 초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구동독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1990년 이전의 실제 생활과의 비교가 아니라 통일 이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동서독 간의 소

득, 노동시장, 승진 기회, 단체교섭협약, 연금법 등의 불평등한 생활조건에 의해 규정되어지고 있다.

표 1-5〉 2014년 기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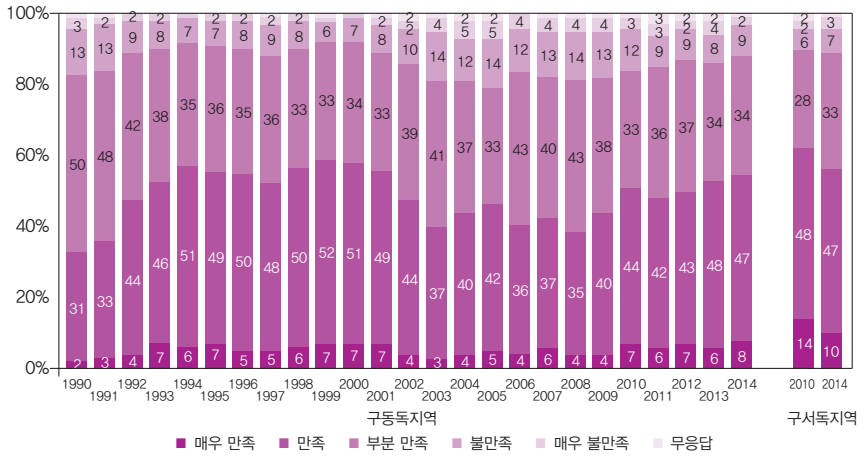
	매우 만족	만족	부분적으로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독일	9	47	33	8	3	1
구동독 및 동베를린	8	47	34	9	2	1
구서독 및 서베를린	10	47	33	7	3	1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121.

위의 표는 2014년을 기준으로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보여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매우 만족, 만족)의 비율이 55%이며 부분적으로 만족하는 비율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89%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만족도는 구서독 출신의 주민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1〉 삶의 만족도

(단위: %)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122

위의 그림은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비록 2002년,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만족도에 있어 감소의 경향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2009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2~2008년까지 삶의 만족도에 있어 감소의 원인으로 무엇보다 유로화 도입의 영향, 하르츠개혁과 같은 개혁 논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만족도에 있어 감소세를 보인다. 아래의 〈그림 1-22〉를 보면 2000년 이후 이전과 달리 크게 감소를 하다 2009년부터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림 1-22〉 연령별 삶의 만족도(매우 만족과 만족으로만 답)

(단위: %)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123.

그러나 다른 한편 연령별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50~60대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 있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실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60대 이상의 은퇴 연령의 경우 연금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 때문이라 할 수 있

다. 더불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업 상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곧 연금 생활을 할 사람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 위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50~60대 연령층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

그러나 2014년을 기준으로 전 연령층에 있어 삶의 만족도가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50~60대 연령층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연금법의 개정, 전국적인 최저 임금의 도입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 어떤 부분에서 만족 또는 불만족을 보이는 삶의 영역에 대해 연령별로 세부적인 추적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이 느끼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삶의 만족도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으로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이 느끼는 연령별, 분야별 만족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6〉 연령별, 분야별 사람의 만족도

(단위: %)

	전체	25세 이하	25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주거	80	79	71	85	84	81
여가시간	64	75	58	64	65	63
보건	39	52	38	36	35	41
사회적 안전	34	43	33	32	30	35
환경	22	26	23	24	25	19
민주주의	18	12	23	20	19	14
소득	13	9	14	16	14	12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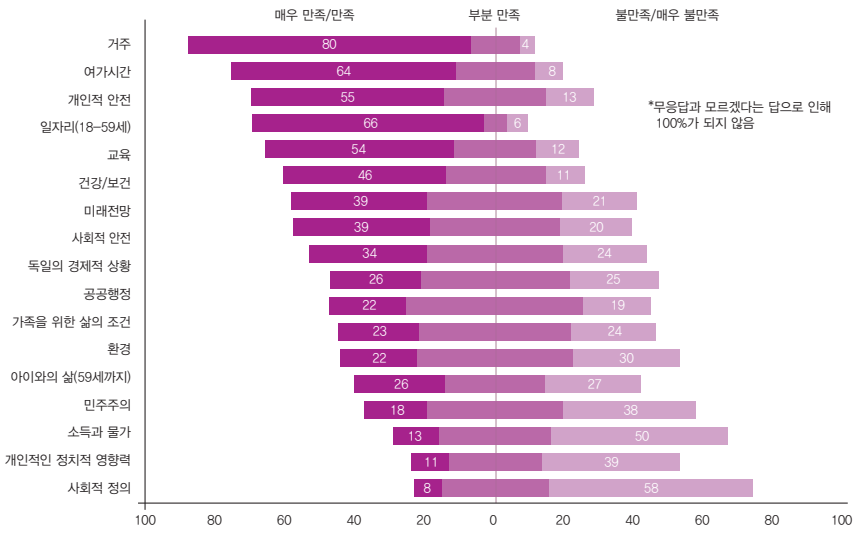
먼저 주거, 여가시간, 사회보장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1990년 통일 이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일 당시 동독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분야에서는 2014년 당시 만족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환경, 건강, 민주주의, 소득과 관련해서 만족도가 동독 시절

보다는 향상되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교육 분야는 만족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 양육의 경우 기대와 달리 통일 이후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분야에 속한다.

2014년 현재를 기준으로 만족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동독 사람들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높은 만족도와 낮은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구동독지역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23〉은 이러한 차원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림 1-23〉 분야별 만족도와 불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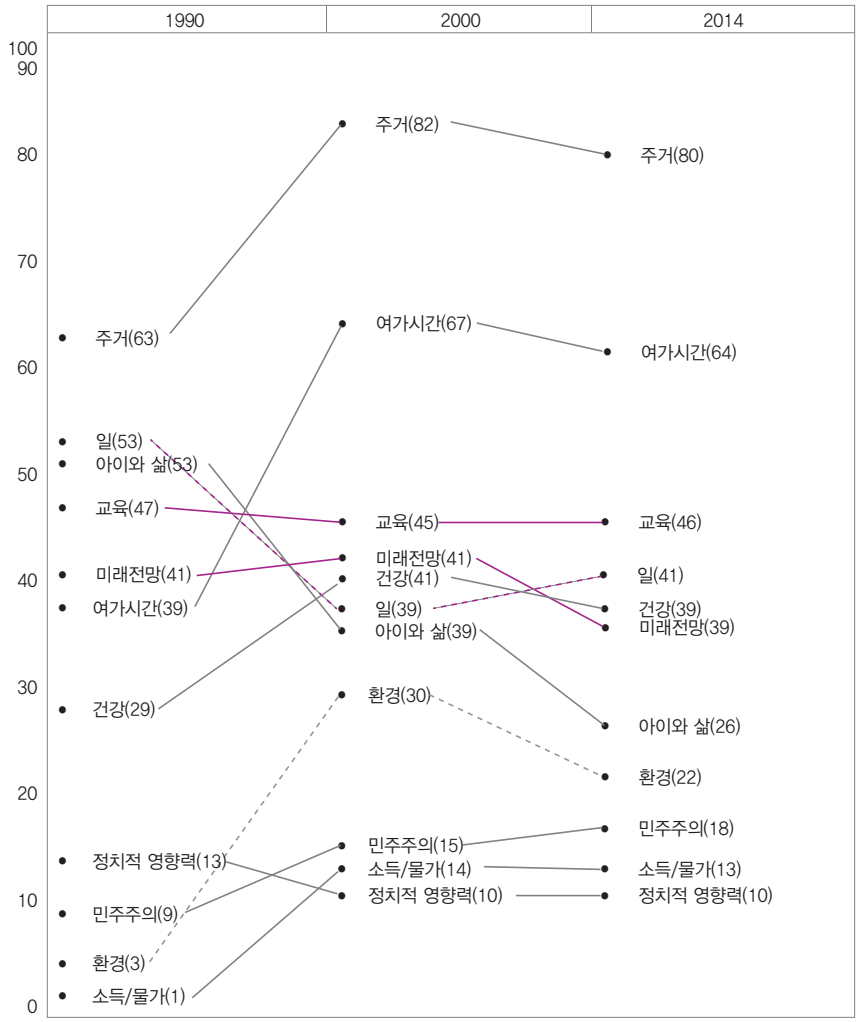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128.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분야는 거주(80%), 일자리(66%), 여가시간(64%)이다. 그리고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보이는 분야는 민주주의(18%), 개인적인 정치적 영향력(11%), 사회 정의(8%), 소득(13%)이다. 이러한 평균 이하의 만족도는 또한 불만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사회 정의, 소득, 개인적인 정치적 영향력,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은 각각 58%, 50%, 39%, 38%로 나타났다. 위의 〈표 1-6〉과 〈그림 1-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부분은 연령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위의 그림, 표에서 나타나는 만족도와 불만족도를 통해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통일 이후의 삶에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도는 다른 한편 평등한 사회의 해체, 불평등의 증가, 엘리트주의 사회로의 전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24〉 시대별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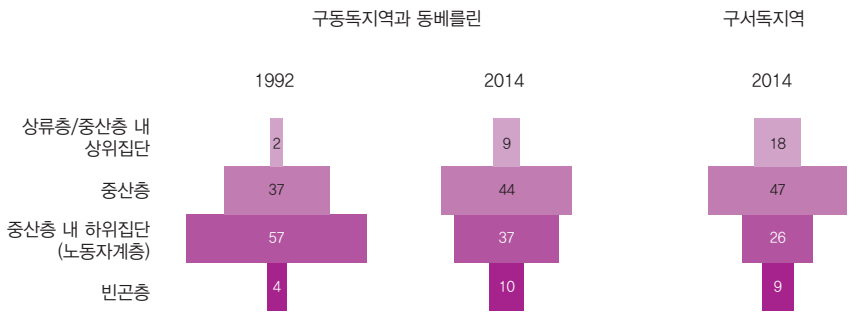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126.

7. 주관적 계층 인식

주관적 계층 인식은 스스로 자신이 어느 사회계층에 속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이 통일 이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회 내에서 삶의 방향, 사회적 지위를 기반으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계층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직업, 자신들이 가진 자격, 소득 등의 다양한 요인이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아래의 〈그림 1-25〉는 1992년과 2014년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주관적 계층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25〉 동서독의 주관적 계층 인식의 변화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530.

위의 〈그림 1-25〉에서 알 수 있듯이 1992년 동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 출신 주민들은 빈곤층으로 4%, 노동자계층(중산층 내 하위집단)으로 57%, 중산층으로 37%, 중산층 내 상위집단 또는 상류층으로 2%로 자신의 사회적 계층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2014년이 되면 18세 이상의 구동독 출신의 주민 중 10%는 빈곤층, 37%는 노동자계층(중산층 내 하위집단), 44%는 중산층 그리고 9%는 중산층 내 상위집단 또는 상류층으로 스스로 분류하고 있다. 같은 시기 서독의 경우 9%는 빈곤층, 26%는 노동자계층(중산층 내 하위집단), 47%는 중산층, 17%는 중산층 내 상위집단 그리고 1%는 상류층으로

분류하는 현상을 보인다.[22]

동독 사람들의 경우 1992년 자신을 노동자계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2014년에 알 수 있듯이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동독 시절과 비교하면 소득의 상승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계급적인 관점에 익숙하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무엇보다 연령대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통일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느끼는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통일 이전 동독에서 생활했던 세대들의 경우 39%가 노동자계층, 45%가 중산층으로 자신의 계층을 인식하는 반면 2014년 당시 25세 이하의 통일 이후 세대의 경우 49%가 중산층으로 13%가 중산층 내 상위집단으로 자신의 계층을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군나르 빈클러(Gunnar Winkler)에 의하면 구동독 출신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에서의 특징은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은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중요한 기준으로 현재 직업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현재 직업을 가진 경우 중산층 또는 중산층 내 상위집단으로 인식하지만, 직업이 없는 실직 상태의 경우 스스로를 빈곤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23]

이러한 주관적 인식에서 또 다른 특징적인 모습을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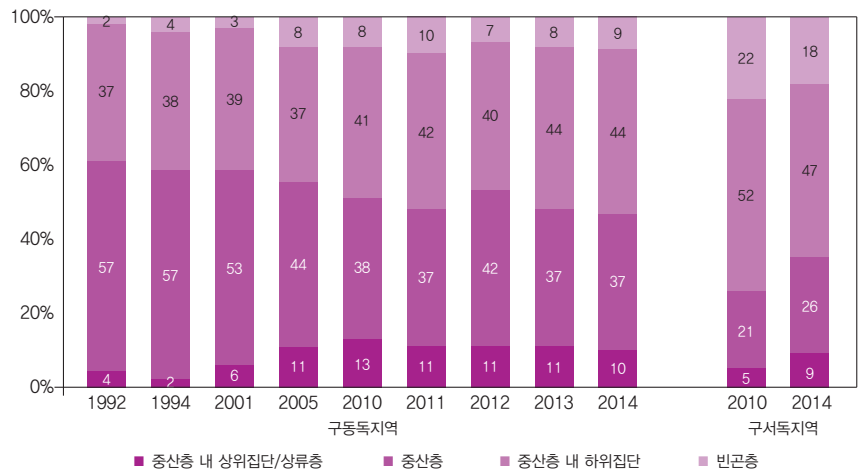
---

22 독일 전체적으로는 10%의 빈곤층, 28%의 노동자계층(중산층 내 하위층), 46%의 중산층, 17%의 중산층 내 상류층 또는 상류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Gunnar Winkler. 앞의 책, p.529.

23 Gunnar Winkler, 앞의 책, 531.

그림 1-26〉 동서독 주민들의 주관적 계층 인식의 변화(1992-2014)

(단위: %)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531.

위의 〈그림 1-26〉은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구서독 출신의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 인식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스스로 빈곤층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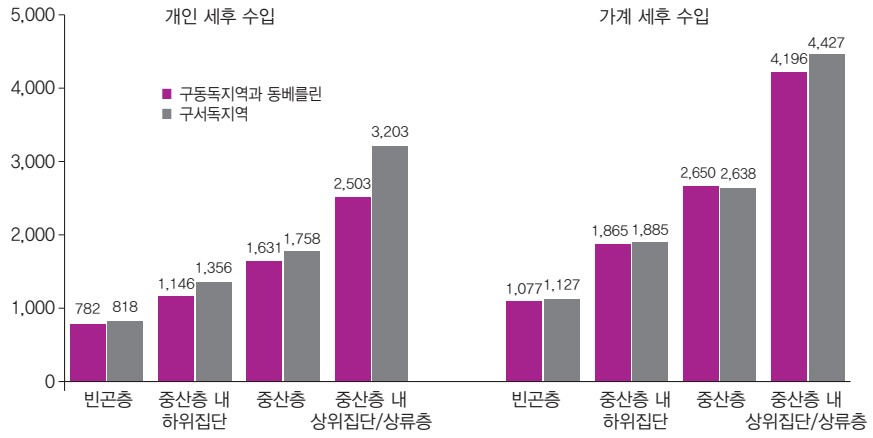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동서독 소득 수준에 있어 차이를 고려했을 때, 동독 주민들의 이러한 인식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서 소득은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가계 순소득에 있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계층에게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즉 2014년 개인의 월별 순소득에 있어 빈곤층의 경우 동독은 서독의 96%에 달하였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측면은 아래의 〈그림 1-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주관적 인식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직업을 갖고 있는가의 유무라는 점이다. 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자신을 중산층 또는 중산층 내 상위집단으로 인식하는 반면 실업자들의 경우 자신을 스스로 빈곤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1-28〉의 경우 학력과 그에 따른 직업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이를 대변해 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1-27〉 주관적 계층 인식과 소득(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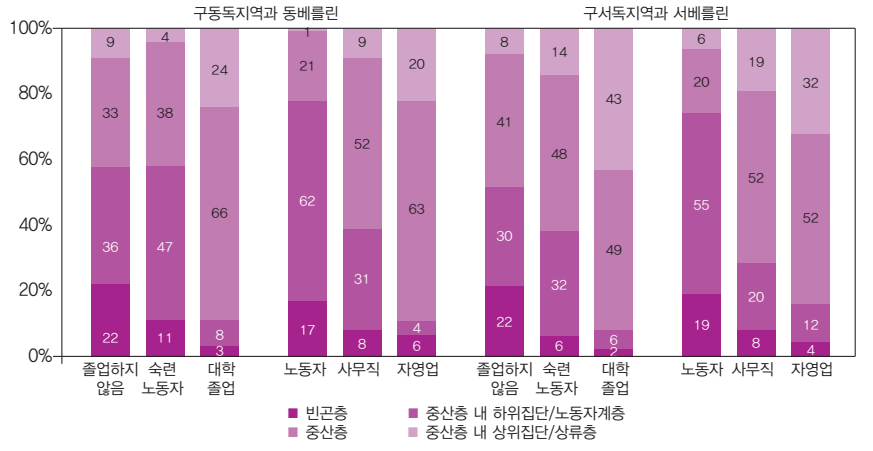
(단위: %)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533.

그림 1-28〉 주관적 계층 인식과 학력 및 직업(2014)

(단위: %)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532.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을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며, 더불어 직업을 가진 사람들, 특히 노동자 또는

사무직에 근무하는 경우 자신을 스스로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주관적 계층 인식에 있어 스스로 기준으로 삼는 항목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소득이 아닌 직업의 유무라 할 수 있다.

제3절 엘리트의 변동

사회변동과 관련해 엘리트의 변동은 변화된 사회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변화된 사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엘리트 또는 이전 사회에서 엘리트였던 사람들의 위상 변화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독의 경우 통일 이후 구동독 시절의 엘리트들은 획기적으로 교체되었고 이후 동독 사람들의 사회계층 인식에서 자신을 스스로 상류층으로 규정짓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측면에서 엘리트의 변동은 변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1. 통일 이전 동독 엘리트의 구성과 통일 후 엘리트 변동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독은 나치의 청산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엘리트들이 충원되었다. 동독에서 엘리트의 충원은 기본적으로 소련 점령군과 공산당에 의해 주도되었다. 따라서 엘리트들 충원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독일 공산당 또는 이후 창당된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소속이거나 이들과 친화적인 인물이었고,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충원되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그 기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적 교육을 통해 새로운 엘리트들이 육성되었다.

이들 새로운 엘리트층은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로 불렸는데, 동독의 새로운 특권층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사회주의적 법학·정치경제학을 전공한 후 당과 국가의 간부, 기술 관련 학과·자연과학·경제를 전공한 산업계 지도자 그리고 문화계 지도자들로 구분되었다.[24]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엘리트의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구체적인 확인을 통하여 좀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정치영역에 있어 정당, 입법부, 연방정부 차원의 경우 통일 후 1990년 첫 번째 선거 이래 독일의 연방의회에서는 인구의 비례에 맞게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의회에 진출한 정당 내에서 원내 교섭 단체의 의장 등의 지위에는 1990~1991년 이래 동독 출신의 진출이 있었는데 1990년 18%, 1994~1995년 25%, 2003~2004년 21%, 2012~2013년 21%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의 증가는 무엇보다 동독을 기반으로 하는 좌파정당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연방의회 의장단의 경우 통일 이후 동독 출신이 확실히 많이 증가하였는데 1991~1992년에는 한 명도 없었지만 2003~2004년 20명, 2012~2013년 50명으로 증가하였다. 연방 국가라는 독일의 정치적 특성상 앞의 사례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연방 내각의 동독 출신 인사들의 비율은 1990년 15%에서 2012년 13%로 하락하였으나 그 변화의 폭은 크지 않다.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의 주지사들의 경우 1992년 13%에서 2012년 2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각 주 내각의 구성에서는 1990년 23%에서 2013년 19%로 감소하였다.[25]

시민사회 영역, 즉 예술, 문화, 환경단체를 비롯해 경제협회의 경우 동독 출신 인사들의 비율은 지난 시기 거의 일정하게 8~10%를 유지하고 있다. 단 노조의 경우 지난 1995년 12%를 보였으나 2012년 10%로 감소하였다. 경제

[24] 앞의 책. p.72.

[25] Kollmorgen, Raj. 2015. "Aus dem Osten and die Spitze?" p.21. in. Berliner Debatte Initial 26(2)

관련 단체, 협회의 경우는 동독 출신의 인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최상위의 높은 직책들은 계속해서 서독 출신 인사들이 맡고 있는데, 2010년 처음으로 독일산업연맹(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BDI)의 총 54개 상임위원장 중 1명이 선출되었다.

행정 영역에 있어 동독 출신으로 연방기관의 책임자 또는 정무 차관 같은 고위직을 맡은 인사들은 증가하였지만, 그 비율은 높지 않다. 즉 1991~1992년에는 한 명도 없었지만 1994~1995년 3%에서 2012년 5%로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해 연방 각 주 부처의 부서별 책임자들을 엘리트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들이 향후 승진하여 엘리트로 분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독 출신의 관료들이 2013년 현재 약 7%이다. 이는 향후 앞으로 몇 년 동안 동독 출신이 연방 각 주에서 엘리트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의 경우 동독 출신의 엘리트를 찾아보기는 더욱 힘든 상황이다. 독일 연방군 최고의 지휘관 중에는 동독 출신이 없으며 모든 장성 중 의무부대에 여성 한 명이 2012년 장군으로 임명되었을 뿐이다.

사법부 영역에 있어 동독 출신 인사들은 더욱 찾기 힘들다. 즉 독일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연방행정법원에는 한 명도 없으며 계속해서 고등법원에도 동독 출신의 법관이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은 1991년 이후 0%로 지속되고 있다.

경제계의 경우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이 매년 발표하는 독일의 100대 기업 또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중 30개의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어느 회사에도 동독 출신 중 이사회의 의장과 같은 최고위직에 있는 인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범위를 확장하고 그중 매출액이 높은 회사의 이사진들을 모두 포함했을 경우 1990년대 중반 겨우 0.4%의 동독 출신 인사들을 찾을 수 있다. 2014년 현재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81개 회사의 이사진 중

단 4명의 동독 출신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소위 제4의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언론계도 유사하다. 2011년 이후에야 비로소 공영방송국에서 8% 비율로 동독 출신 인사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전국 일간지 및 잡지의 경우 현재까지 동독 출신의 편집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탑 엘리트가 아닌 그보다 아래 직위의 경우 1995년 12%의 동독 출신 인사들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다.

학계의 경우 1990년 이후 대학총장협의회 또는 큰 연구기관의 의장 또는 부의장은 동독 출신이 아닌 서독 출신 아니면 외국인들이 맡아왔다. 2012년에야 약 3% 미만의 동독 출신의 인사들이 의장 또는 부의장을 맡게 되었다. 중요한 대학의 외부 연구기관, 예를 들면 막스 플랑크(Max Planck Gesellschaft), 라이프니츠(Leibniz Gemeinschaft) 연구소의 이사 및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대학교수들 또한 비슷한 비율이다.

표 1-7〉 독일연방공화국의 분야별 엘리트 중 동독 출신의 비율(1991-2012/2013)

(단위: %)

	1991/1992	1994/1995	2003/2004	2012/2013
정치 분야				
전체	–	–/32	–	14/–
연방내각	15	12	13	13(2012)
주지사	13(1992)	–	25	25
연방의회	0	–	20	50
연방의회 내 정당 (의장, 원내 교섭 단체 의장)	18	25	21	21
주정부(주정부 내각, 베를린 제외)	23	22	22	19
정치 및 시민사회				
전체	–/ca. 8	–/10	–	ca. 5/ca. 10
경제계	0/–	0/8	–	0/–
노조	0/–	–/12	–	0/ca. 10
행정				
전체	ca. 0/0	ca. 1/3	–	4/ca. 5
연방 차관 공무원	0	0	–	0(2012)
주 차관 공무원	0(1990)	–	ca. 4	ca. 7
주 부처 국장	–	–	–	ca. 7
사법부				
전체	–	–/0	–	0/–
헌법재판소 재판관	0	0	0	0
연방대법원	0	0	0	0

군대				
고위 지휘관	0	0/0	–	0/0
장성	0	0	–	0.5
경제				
전체	–	0/0.4	–	0
상장회사의 이사	–	0	–	2
매스미디어				
전체	–	–/12	–	0/–
공영방송 이사	0	0	0	8
주요 전국 일간지 및 주간지 편집인	0	0	0	0
학계				
전체	–/7	–	–	3/ca. 8
막스 플랑크, 라이프니츠 연구소 (비대학 연구소)	–	–	–	3
대학 총장	–	ca. 2	–	4(2010)
사회학과 교수	–	ca. 1	–	4(2009)

* ( ) – 연도.

* 앞에 있는 수치는 2,300개의 지위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수치는 350개의 지위를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

출처: Kollmorgen, Raj. 앞의 글 p.22에서 재인용.

독일 연방 차원에서의 변동과 달리 각 주 차원에서 엘리트의 변동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작센(Sachsen)주의 경우 자체적으로 가장 높은 엘리트 충원을 보이는데 2003년 회사 내 직속 상사의 경우 76%, 대표의 경우 57%의 비율이었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경우 1990년 이후 차관급과 부서 책임자들의 75~100%가 서독 출신이었으며, 검찰의 경우 72~79%,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고위 판사의 비율은 통일 이후 25년간 100% 비율로 서독 출신들이었다.[26]

[26] Gunnar Winkler. 앞의 책. p.574.

2.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엘리트의 특징

지난 시기 독일에서 엘리트의 변동은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1933년 히틀러 정권의 성립 그리고 1945년 이후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 수립과 서독의 자유 민주주의 정권 수립이라는 역사적 변화와 관련되어 나타났다. 그런데 1990년 통일 이후 동독에서 엘리트의 변화는 독일 역사에 있었던 이전의 엘리트 변화보다 더욱 전면적인 변화였다. 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일 후 동독 출신의 인사 중 행정, 시민사회, 경제계, 사법부, 군대, 언론, 학계 등에서 엘리트에 속하는 비율이 낮다. 정치 영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엘리트의 충원이 선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동독 출신 인사들의 낮은 비율이 이러한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전면적인 변화는 동시에 엘리트의 외부 충원과 함께 이루어졌다. 즉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의 엘리트 변동은 서독으로부터 충원되는 형태의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 마디로 구동독지역의 경우 엘리트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질적인 독점적 구조였으나 서독 출신의 인사들로 충원되면서 각 분야의 전문 엘리트들로 구성되는 다원주의적 구조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즉 서독 출신의 인사들로 엘리트들이 충원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동독 체제가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서독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즉 서로 다른 체제들이 하나로 되는 과정에서 구동독 체제를 유지했던 엘리트들보다는 서독 출신의 엘리트들로 충원함으로써 체제변혁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독 출신의 인사들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정부의 경우 구동독 출신 인사 중 판사, 검사에 지원할 경우 평가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채용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제

시하고 있다.[27] 그러나 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동독 출신의 판사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서독 출신으로 충원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영역을 제외한 다른 많은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직후 통일된 독일, 특히 동독은 기본적으로 서독 출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던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곳이었다 할 수 있다.

구동독지역의 엘리트 변동에 있어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첫째, 동유럽의 엘리트 변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존 엘리트들이 체제변혁 과정에서 경제적 권력을 갖는 엘리트들로 변모하는 현상을 동독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동독의 변화는 자본주의 체제인 서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점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 동유럽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변혁의 과정에서 기존 체제에 저항했던 엘리트들이 새로운 정치적 엘리트로 부상하였지만, 동독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28] 1989년 동독의 평화적 혁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엘리트층이 원탁회의를 통해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후 1990년 연방의회 선거를 통해 94명의 동독을 대표하는 의원 중 12명만이 이들 시민운동 출신들이었다. 그나마 이들은 4년 뒤 연방의회 선거에서 대부분 물러났다.

27 동독 출신의 판사와 검사의 재임용에 대한 브란덴부르크주 결정기준(문서번호 29).

28 마르쿠스 폴만·이종희. 2011.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권력 엘리트의 변화', 한독사회과학회 엮음. 『독일통일과 동독 권력 엘리트-남북통일에의 함의』, p.59. 파주: 한울.

제4장

통일 후 동독 사회계층 변동의 함의

통일은 독일, 특히 동독 사회의 경우 기존의 체제가 완전히 다른 체제로 변화되는 급진적인 변동이었다. 이러한 변동이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 중 하나가 사회계층이다. 또한, 사회계층은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 지표, 개인이 타인 또는 집단과 비교해 스스로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를 인식하는 주관적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또한, 엘리트의 변동은 기존 사회의 엘리트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는 사례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본 글은 통일 후 동독 사회계층 변동을 객관적인 지표, 주관적인 지표 그리고 엘리트의 변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동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글에서는 각 지표들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그 원인을 제시하면서 함의점을 찾고자 한다.

제1절 객관적 지표와 관련된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그 원인

1. 의미

사회계층에 대한 논의에 있어 핵심적 지표 중 하나는 바로 소득이라 할 수 있다. 통일 후 구동독 사회의 소득은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통일 직후인 1991년 동독의 가처분 소득은 서독의 60.6%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6년 현재 8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소득의 증가는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소비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동독 시절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고품질의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향상된 소득과 삶의 질이라는 긍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에서는 수렴되지 못한 동서독의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통일 직후 1990년대 중반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던 동서독의 임금 격차는 정체되고 있고 〈그림 1-3〉,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전의 동서독 국경선을 따라 명확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시금 임금 격차의 정체에 대한 문제 제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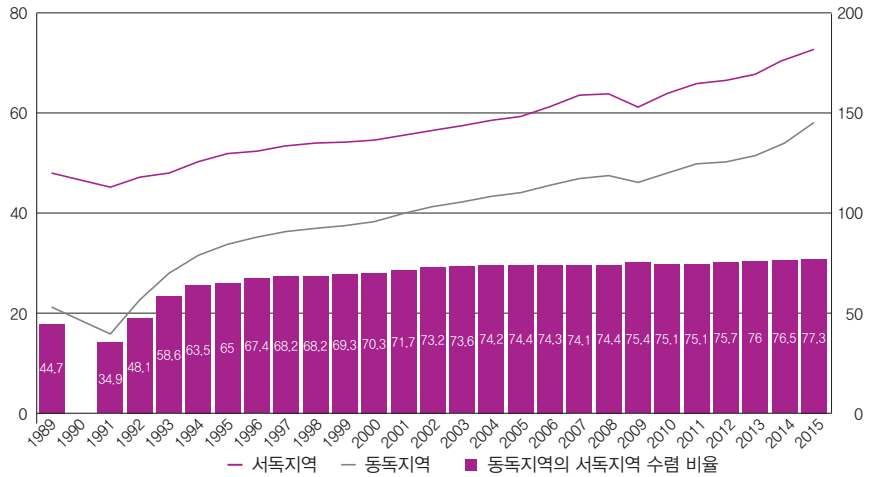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 제기는 어찌 보면 관점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전에 슈뢰더(Schröder) 총리가 말했듯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는지 아니면 반이나 있는지 관점의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에서 함의를 찾고자 하는 처지에서는 격차가 지속, 정체되는 현상을 단순히 관점의 차이로 치부할 수 없다. 더욱이 〈그림 1-3〉과 〈그림 1-4〉가 의미하는 바는 구동독지역이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지속해서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2014년 동독지역의 주민들은 1인당 평균 990유로의 조세를 납부하였다.[29] 이는 서독의

[29]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 2015.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p.71.

1인당 평균 납부액인 1,886유로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결국 2001년에 합의된 연대협약(Soliarpakt II)에 따라 2019년까지 독일 연방정부, 즉 서독에서 동독에 제공하는 동독 재건 프로그램이 동독의 인프라가 아니라 사회복지, 즉 동독인들의 연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임금 격차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노동생산성의 차이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그림 1-29〉는 동서독의 노동생산성의 격차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29〉 1989년부터 2015년 동서독 노동자 1인당 국내총생산(노동생산성 격차)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138.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1년 동독의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34.9%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5년 77.3%로 배 이상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 노동생산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대 이후 그 격차는 정체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격차는 자연스럽게 임금의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임금 격차가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서독 임금 격차에 있어 수렴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격차는 어찌 보면 당연한 답이다. 그러나 문제는 왜 그러한 노동생

산성의 격차가 수렴되지 않고 정체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노동생산성의 격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없는 문제로 동독지역이 가진 구조적 약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통일 이후 독일 연방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한 동독지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극복하고 자립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2차 연대협약(Solidarpakt II)이 끝나는 2019년 이후 자립경제를 갖추지 못한 구동독지역이 조세수입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보장을 책임지지 못하는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미 독일 연방정부는 1999년에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스스로 경제성장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독지역에 의존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30]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구동독지역이 자립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원인

동독지역 경제의 구조적 약점과 관련해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독일의 할레경제연구소(Institut fuer Wirtschaftsforschung Halle, IWH)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기업의 규모를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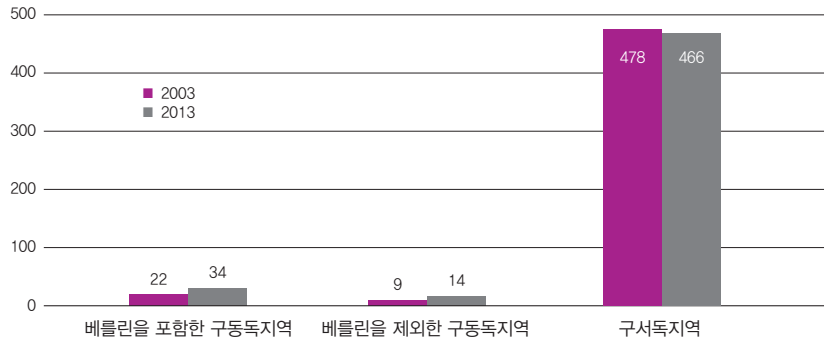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1-30〉은 할레경제연구소가 독일의 일간지인 디 벨트(Die Welt)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여 독일 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집계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독일의 상위 500대 기업 중 466개 기업의 본사는 구서독지역, 34개 기업의 본사는 구동독지역에 있음을 보여 준다. 2003년과 비교했을 때 구서독지역의 경우 12개 기업의 본사가 감

30 Deutscher Bundestag - 14. Wahlperiode. 1999. 『Jahresbericht 1999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p.16.

31 Institut fuer Wirtschaftsforschung Halle (IWH), 2014. "25 Jahre nach dem Mauerfall: Wirtschaftliche Integration Ostdeutschlands im Spiegel der Forschung am IWH," p.7.

소했지만, 구동독지역의 경우 분명 증가하였다. 하지만 베를린을 제외하면 5개만이 증가하였다.

그림 1-30〉 독일 상위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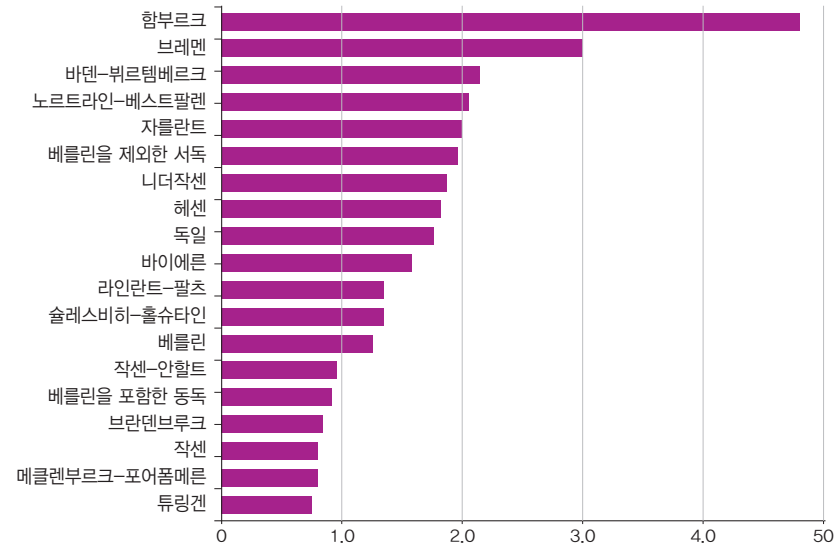


출처: IWH. 앞의 글, p.26에서 재인용.

이러한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 이외 거래세 납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동독 기업들의 규모가 훨씬 더 작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1-31〉 2012년 기준 거래세 납부 경제단위당 평균 매출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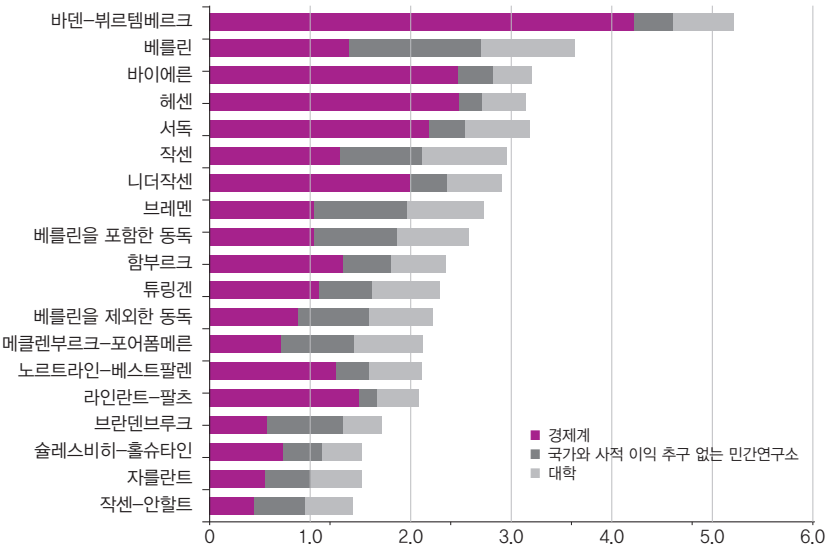


출처: IWH, 앞의 글, p.25.

이러한 규모의 문제는 또한 연구개발에 있어서 구동독지역에 취약점으로 작용을 한다. 즉 서독지역보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1-32〉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서독지역, 특히 대기업이 많은 지역인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바이에른(Bayern), 헤센(Hessen)주를 중심으로 한 구서독지역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있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에서 전체 연구개발 지출의 50% 이상은 공공부문에 의해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2〉 2012년 기준 국내 총생산에 연구개발 지출

(단위: %)



출처: IWH, 위의 글, p.27.

구동독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규모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산성, 수출시장 진입 그리고 연구개발에 있어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구동독지역 경제자립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왜 구동독지역의 기업들은 규모가 서독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 독일 연방정부는 꾸준히 독일 내에서 생활 수준의 균등화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양한 지표들은 이러한 정책이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구동독지역 경제가 자립적이지 못하고 서독지역에 의존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본원적인 문제, 즉 통일 당시의 경제정책과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1) 화폐통합

생산성에 비례하지 못한 높은 임금 수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화폐통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화폐통합이 통일 이후 독일, 특히 구동독지역의 경제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급격한 이주 증가는 동독에는 노동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동독의 수상이었던 모드로우(Hans Modrow)는 동서독 화폐의 호환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당시 서독 연방은행 총재는 전제조건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동독의 주민들의 요구와 서독의 콜(Helmut Kohl) 수상은 급속한 화폐통합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화폐통합은 무엇보다 당시 동독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즉 동서독의 화폐가 1:1로 통합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 또는 서독의 마르크가 동독으로 오면 동독에 머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독으로 가겠다는 당시 동독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위기에 처한 동독의 경제적 상황 속에서 화폐통합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개선시켜 서독 수준으로 향상할 수 있을 기회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동독 주민들의 요구로만 화폐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동독으로부터의 이주를 막는 방안으로 동독의 수상이 제안하였지만, 당시 서독 내 경제부처와 경제전문가들은 이른 화폐통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반대의 견해를 명확하게 표명했다. 그러나 서독 콜

(Kohl) 수상의 화폐통합 제안으로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안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1990년 3월 18일 실시되는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선거를 5주 정도 앞둔 여론조사에서 콜(Kohl) 수상이 중심이 된 기민·기사련의 지지율은 동독 내에서 사민당 그리고 민주사회주의당(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에 뒤처져 있었다. 이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가 1990년 2월 6일이었는데 콜(Kohl) 수상은 바로 다음 날인 2월 7일 서독 마르크화의 사용을 동독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콜(Kohl) 수상의 제안으로 2월 19일 화폐통합 전담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서독 마르크화와 동독 마르크화의 비율을 1:3으로 교환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콜(Kohl) 수상은 선거 3일 전 1:1로 교환비율을 적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콜(Kohl) 수상의 이러한 횡보로 인해 결국 열세였던 보수세력인 '독일을 위한 연대(Allianz für Deutschland)'는 선거에서 47.4%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화폐통합으로 동독 주민들의 임금, 연금은 1:1로 교환되었다. 이러한 교환비율은 당장 동독 주민들이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서독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였고 이러한 소비는 높은 생활 수준, 경제적 번영이 곧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품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환상이었다. 당시 동독 주민들의 소비는 증가하였지만, 이는 서독 제품에 대한 소비의 증가였으며 이로 인해 동독 제품은 판매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동독 기업들은 도산하게 되었다. 즉 동독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화폐통합은 결국 평가절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매출은 물론 기존의 동유럽으로의 수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서독 마르크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된 것이다.

결국, 화폐통합으로 동독 주민들은 이전 동독 시절 자신들이 갈망했던 제품에 대한 소비를 단기적으로는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대량해고를 동반한 동독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붕괴로 연결된 것이다.

2) 소유권 원상회복 원칙

분단으로 인해 동독 정부가 몰수해 소유하였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 당시 연립정부의 파트너였던 자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은 이를 사적 소유권의 문제로 보았다. 따라서 자민당은 소유권의 회복이 국유화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권리 회복이며 이를 통한 국가, 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적 소유권의 보장만이 향후 미래에 발생할 재산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의 전제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상이 아닌 반환이 결정되었다.[32]

그러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서독에 거주하는 110만여 명이 237만 건에 달하는 재산 반환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 소송들은 주로 동독의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베를린(Berlin)에서만 16만 건,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에서 60만 건이 집중되었다. 특히 베를린 일부 지역에서는 3채의 주택 중 1채가 그 대상이 되었다.[33]

소유권 문제는 이처럼 사회문제를 일으켰는데 동독 경제와 관련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투자 장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로서는 미해결로 남아 있는 소유권 문제로 인해 기업 인수를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즉 1만 7천 개의 기업들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인해 소유 관계가 불확실해지자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34]

3) 신탁청(Treuhandanstalt) 활동의 문제

화폐통합이 구동독지역 경제 붕괴의 출발이었다면 산업공동화 현상은

32 송태수. 2000. '신자유주의적 흡수통일', 『진보평론』, 12. p.216.

33 구춘권. 2011. '독일통일 20년의 정치경제-비판적 평가와 시사점'. 『21세기 정치학회보』, 21(1), p.164.

34 구춘권. 앞의 글, p.164.

신탁청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신탁청은 1989년 평화혁명 이후 구동독의 개혁을 위해 구성된 원탁회의의 발의로 모드로우(Hans Modrow) 정부에 의해 1990년 3월 1일 설립되었다. 애초 설립 당시 목적은 동독 국유재산의 관리,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기업 경영의 달성이었다. 즉 동독의 국유기업을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서독 자본에 의한 사유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보수세력인 독일연맹이 승리하면서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사유화의 주체로 그 목적과 역할이 바뀌었다. 즉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유화 및 매각의 임무를 갖는 기관으로 변질된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변혁의 과정을 겪은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경우 국영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무상분배 또는 바우처를 통한 사유화의 방식을 사용한 것과 달리 신탁청의 업무, 목적의 변질은 구동독지역 기업을 먼저 매각하고 투자가가 주축이 되어 경영정상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매각 후정상화라는 방법이 경쟁력 없는 국영기업을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동독 국영기업 경영자들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영방식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더욱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후 구동독지역 기업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신탁청 산하기업 중 8.9%는 자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고, 65%는 새로운 투자를 바탕으로 구제, 정상화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유화 방식은 정리해고, 대량실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통일 당시부터 1년 반 기간 동안 신탁청 산하기업들의 민영화로 인한 실업이 구동독지역 전체 실업의 75%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실업은 특히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신탁청 산하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410만 명으로 동독 전체 취업자의 45%에 달하였지만, 1994년

업무를 종료할 당시 1/3인 150만 명만이 고용이 승계되었다.[35]

또한, 이러한 실업으로 발생하게 될 실업 보조금 등의 사회보장 재원을 고려할 때 최고의 방법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서독으로부터의 재정지원 중 기간산업 확충에 드는 예산보다는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성 지출에 사용되는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1-8〉 1991-2003년 통일비용 내역(연방건설교통부 발표 내역)

(단위: 10억 유로)

구분	내용		금액	비율(%)
인프라 재건 지출	도로, 철로, 수로 개선; 기초단체 교통 개선; 주택 및 도시 정비		160	12.5
경제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구조 및 해안 보존; 투자 보조; 이자 보조; 전철 등 근거리 교통 보조		90	7.0
사회보장성 지출	연금; 노동시장 보조; 육아 보조; 고등교육 보조		630	49.2
임의 기부금 지출	독일통일기금(1991-1994)	62	295	23.0
	판매세 보조	83		
	주 재정균형조정	66		
	연방보조지급금	85		
기타 지출	인건비 및 국방비 지출		105	8.2
총 이전 지출			1,280	100
신연방주 수입(세입 및 사회부과금 수입)			300	23.4
순 이전지출			980	76.6

출처: 송태수. 2009. p.195. 재인용.

결국, 신탁청의 사유화 정책은 구동독지역 경제기반의 공고화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시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합리화라는 목적하에 미시적인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즉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먼저 구동독지역의 경제기반을 공고히 한 다음 민영화라는 방식을 아예 배제한 방식이었다.

신탁청의 사유화가 야기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신속한 사유화에 있

[35] 송태수. 2009. '독일통일 20년의 경제적 통합과정: 평가와 함의',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4호, p.194.

다. 신탁청은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해 명확하게 신속한 사유화가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연방정부 경제부 학술자문위원회는 통일 국면을 사유화를 실현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36]

이에 신탁청은 수평적, 수직적 대규모 생산조직 기업인 콤비나트를 작은 단위로 분할,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선권을 갖고 있던 서독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제거할 수 있었고, 동독 또는 동유럽 시장 진출에 필요한 입지를 선점하였다. 이로 인해 구동독지역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사라지고 서독에 본사를 둔 기업의 생산라인, 부품 제조업체, 판매 영업부로 변모하게 되었다. 또한 수평, 수직적 조직체로 거대 기업인 콤비나트가 해체됨으로 인해 매각되지 않은 기업은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었고, 지역경제 또한 급격하게 붕괴하였다.

제2절 함의

통일된 지 근 30년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분명 동독의 소득 등 경제지표는 향상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통일된 이후 독일 연방정부가 지속해서 동서독 삶의 균등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 동서독 간 소득 격차의 수렴 현상은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정체 현상은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1인당 노동생산성의 격차를 줄이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구동독지역은 서독지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독일 전체의 평균 이상으로 성장해야만 서독 경제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동독 경제를 만들어 의존성에서 벗어날

[36] 송태수. 2000. p.221.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구동독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이다. 지난 시기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일례로 2002년 연방정부는 특별수요-연방보충분담금법을 제정 구동독지역에 105억 유로의 사용을 인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과 기간시설산업 구축에 필요한 추가 수요에만 사용할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즉, 주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를 위해 사용하거나 투자를 위해서만 지출할 수 있는 용도였다. 그러나 베를린(Berlin)시를 비롯한 구동독지역의 주정부는 채무로 인해 인프라 강화를 위한 용도로 한 푼도 사용할 수 없었다. 또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사용하거나 인건비로 사용되었다.[37]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동독의 재건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서독에서 동독으로 온 돈은 연금 등 사회복지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었다.[38] 동독의 재건을 위한 투자가 아닌 사회복지로 사용되는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구동독지역의 재건을 통한 자립경제는 요원하다. 이러한 악순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통일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약하고 위기에 처한 동독 경제구조가 화폐통합, 신탁청의 사유화, 소유권 회복과 같은 정책들로 인해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서독 내 경제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을 급속하게 추진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적 판단이었다. 즉, 콜(Kohl) 수상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은 구동독 주민들에게 1:1의 화폐통합을 선물로 주고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이처럼 경제적 합리성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취약했던 동독 경제는 그 어떤 대비책도 없이 세계시장에 편

37 우베 뮐러 지음, 이봉기 옮김. 2006. 『대재앙 통일. 독일통일로부터의 교훈』 pp.185-186.

38 연합뉴스, 2016. 독일통일 전문가 '동서 경제격차 해소 난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6/0200000000AKR20160126094900980.HTML(검색일: 2018. 09. 10)

입됨으로써 자립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고 지속해서 서독 경제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신탁청의 사유화 정책은 여전히 구동독지역의 경제 붕괴 그리고 자립 경제 수립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서독의 수상이었던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는 구동독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기본적으로 옳은 방법이었으나 방법과 속도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동독의 시민 중 그 어떤 사람도 신탁청의 사유화 정책에 의해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거의 모든 구동독 기업이 서독 기업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39] 슈미트의 이러한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사유화 과정에서 매각 기업의 85%는 서독 기업에게 넘어갔고 동독 출신의 소유자는 단지 5% 미만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오히려 외국인들보다 작은 수치이다. 동독 기업의 성공 사례로 열거되는 옌옵틱 그룹(Jenoptik Gruppe)의 경우 신탁청의 정책에 저항하여 재건된 그룹으로 만 명 이상의 종업원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40]는 사실은 신탁청의 사유화 정책이 동독 경제의 붕괴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서독 연방정부에 의해 추진된 소유권 원상회복은 또한 구동독지역의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소유권 원상회복은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번 소유권이 변경된 상황에서, 즉 소련 점령군에 의해 몰수된 재산, 토지개혁으로 분배받은 농지, 국유화된 부동산 등 소유 관계가 너무 복잡해 어떤 경우 한 토지에 42명의 소유주가 소송을 벌이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금융자본의 제한 없는 이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세계화된 상황에서 서독은 그 중심지 중 하나다. 화폐통합은 결국 동독의 마르크화가 서독의 마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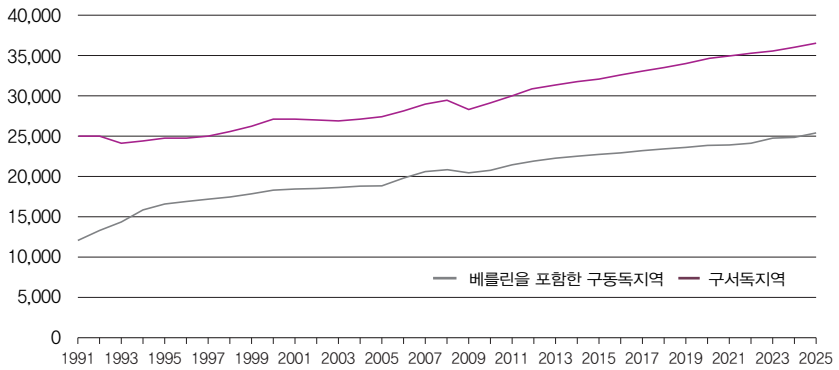
39 헬무트 슈미트 저, 오승우 역. 2007. 『독일통일의 노정에서』, p.195 서울: 시와 진실.

40 우베 뮐러 저, 이봉기 옮김, 앞의 책, p.203.

크화로 통합되는 것으로 세계 경제에 그 어떤 준비도 없이 편입되는 것이고, 신탁청의 사유화 정책은 세계시장 경제로의 재편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이는 경쟁력이 부족한 동독 기업의 도태, 배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야기된 구동독 경제의 붕괴는 다시금 실업률을 높이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주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이주로 인해 동독지역은 고령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할레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다시금 동서독 간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의 격차를 벌리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실업률의 상승은 연방정부에서 동독으로 이전되고 있는 재정의 많은 금액이 동독의 재건이 아닌 사회보장비로 지출되는 상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림 1-33〉 동서독 1인당 국내 총생산 추정



출처: IWH, 앞의 글, p.40. 재인용

화폐통합, 소유권 원상회복, 신탁청의 사유화 정책은 이처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립적 동독 경제 확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즉, 정치적 논리에 기반을 둔 미시적, 단기적 효율성의 추구가 체제변혁을 겪는 경제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명확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

주관적 지표와 관련된 함의

통일 후 구동독 출신 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계층 인식에 대해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동독 사람들이 통일 이후 변화된 사회에서 자신들이 느끼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무엇보다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계층 인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통일 이후 연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동서독, 즉 독일 전체의 삶의 수준의 균등화를 추진하였는데, 이 균등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연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균등화를 모든 것에 있어 평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불어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동서독 문화와 지역적 차이의 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동독 출신의 사람들은 균등화를 단순하게 소득에 있어 평등이 아니라 사회적 삶에 있어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문화적, 지역적 차이가 보존될 수 있다는 점은 자신이 가진 문화적 특징들을 유지하면서도 통일된 독일에서 사회적 삶을 추구할 기회의 균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스탈기(Ostalgie) 현상을 단지 이데올로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정치적 통일성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기본적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의 균등화와 관련해 어떠한 균등화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문화적, 지역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삶을 추구할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한 평가, 통일이 개인에게 이득이 되었는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 특징적인 점은 첫째, 세대 간의 차이와 경제적 상황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먼저 젊은 세대들의 경우 특히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 40%가량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5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젊은 세대에 비해 낮은 25%의 비율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2000년부터 시작된 사회개혁은 동서독에 모두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하였는데 특히 서독의 경우 사회개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통일비용으로 인한 희생자라는 느낌을 심어준다는 점이다. 더불어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서독지역 주민들의 경우 구동독지역의 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통일이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타난다. 셋째, 경제적 상황이 주관적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그림 1-13〉, 〈그림 1-14〉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실업자와 취업자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명확하다. 실업자의 경우 통일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었다는 비율은 23%이지만 직업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55%에 이르고 있다. 또 개인의 세후 수입이 1,000유로 이하의 경우 20%였지만 2,500유로 이상이면 63%에 달하였다.

이는 결국 통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남북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경제적 상황에 있음을, 특히 그중에서도 직업에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자신의 문화적, 지역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삶을 추구할 기회의 균등에 있어 직업이 중요한 요소였음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17〉은 진정한 통일을 위해 달성되어야 할 사안에 관한 것으로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이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독일 어디에서든 노동, 즉 직업을 갖고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는 것(83%), 균등한 소득과 연금(79%), 구동독지역에서 균등한 직업 기회(73%), 구동독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서독에도 받아들여지는 것(69%)으로 나타났다. 결국, 직업 그리고 동독의 긍정적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인정을 진정한 통일의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이 또한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연관성을 갖는다.

통일 후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동독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다. 이는 동서독 출신의 사람들에 있어 그리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인 사람의 비율이 구동독 출신 주민의 경우 11%, 구서독 출신 주민의 경우 10%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수치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통일 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족도를 추적해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또한 경제적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매우 만족, 만족을 기준으로 봤을 때 통일 직후 1990년대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가 되면 1990년대에 비해 만족도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또한 사회개혁, 즉 하르츠개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만족도와 더불어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불만족도가 높은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정의(58%), 소득(50%),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39%), 민주주의(38%)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통일 후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정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불만족이 높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

해 볼 수 있다. 먼저 자신들을 대표하는 구동독 출신의 엘리트들이 없다는 측면이다. 비록 연방수상,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구동독 출신의 인사들이 오르기는 했지만,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대표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는 구동독지역을 중심으로 좌파당 또는 우익 정당의 성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정의는 이러한 측면과도 연결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득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측면은 소득에 있어 불평등 사안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이 또한 경제적 측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25〉는 동서독 주민들의 주관적 계층 인식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1992년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자신들을 중산층 내 하위집단 또는 노동자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7%였으나 2014년에는 37%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7%에서 44%로 상승하였다. 2014년의 구동독 출신 주민들이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서독과 비교했을 시 3%의 차이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통일 직후인 1992년은 아직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자신들의 사회를 노동자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구동독 사회가 중산층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41] 동서독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과 관련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그림 1-27〉, 〈그림 1-28〉이다. 스스로 빈곤층으로 인식하는 동서독 주민들의 소득비율은 거의 96%에 달하였다는 점은 기준이 단지 소득에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림 1-2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학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직업에서 그 기준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결국 주관적 계층 인식의 기준은 바로 직업이라는 점을 찾아낼 수 있다.

[41] Rainer Geißler. 2014. 『Die Sozialstruktur Deutschlands』 7. Auf. p.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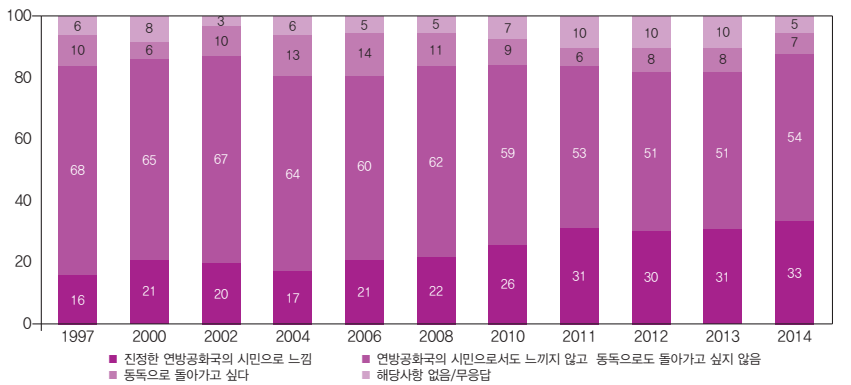
이러한 측면, 즉 직업을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계층 인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소득과 연관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직업이 있다는 것은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직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좋게 꾸려나가길 원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구동독 출신 사람들의 의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주관적 계층 인식과 관련해 언급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바로 구동독 출신 주민들이 느끼는 '2등 시민' 의식이다. 분단된 40년의 역사는 장벽이 무너진 30년이 되어가는 현재도 여전히 동독인, 서독인이라는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이 의미하는 것은 통일된 하나의 국가, 즉 독일연방공화국의 동등한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은 통일을 통해 자동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자기인식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 아래의 〈그림 1-34〉는 통일된 구동독 출신 주민들이 느끼는 자기인식에 관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연방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자기인식의 비율은 낮았으나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1997년 진정한 연방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비율은 16%였으나 2014년에는 33%로 증가하였다.

그림 1-34〉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자기인식 변화(1997-201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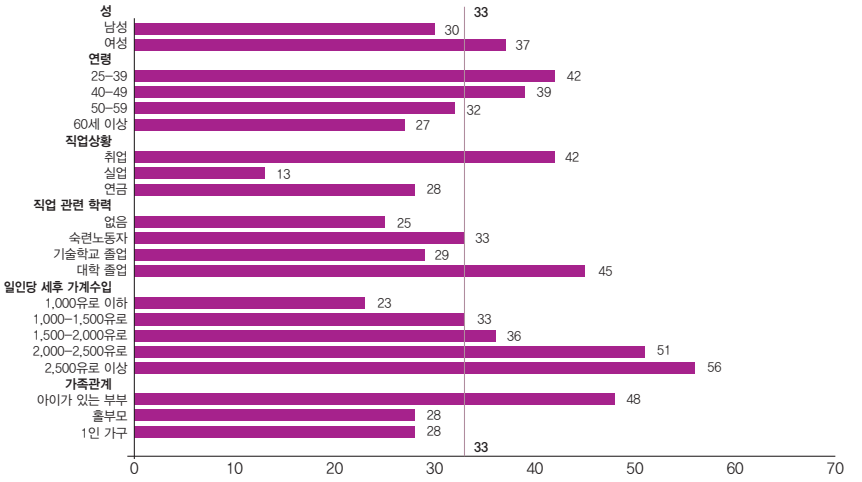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108.

아래의 〈그림 1-35〉는 2014년 당시 25세 이상의 구동독 출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인식 변화이다. 이 나이가 의미하는 것은 1990년 통일될 당시 아직 14세가 되지 않은 나이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5〉 인구통계학적 분류에 의한 자기인식(2014)

(단위: %)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108.

위의 그림에 의하면 25세 이상 39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 중 42%는 자신을 진정한 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느끼고 있는데 1997년 이들의 자기인식은 22%였다. 60대 이상의 연령층의 경우 2014년 27%의 비율을 보이며 1997년 이들의 비율은 19%였다.[42] 시간의 흐름 속에서 6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는 25~39세의 연령층에서 연방공화국의 진정한 일원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령층에서의 차이를 전통적인 역사적 원인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즉 통일된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현재의 삶과 구동독 시

[42] Gunnar Winkler. 앞의 책, p.108

절의 삶과의 차이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2015년을 기준으로 50대의 경우 삶의 거의 반을 통일된 연방공화국에서 그리고 나머지 반을 동독(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민주공화국)에서 보낸 세대이고, 65세 이상의 경우 직업인으로 사는 삶의 거의 반을 동독에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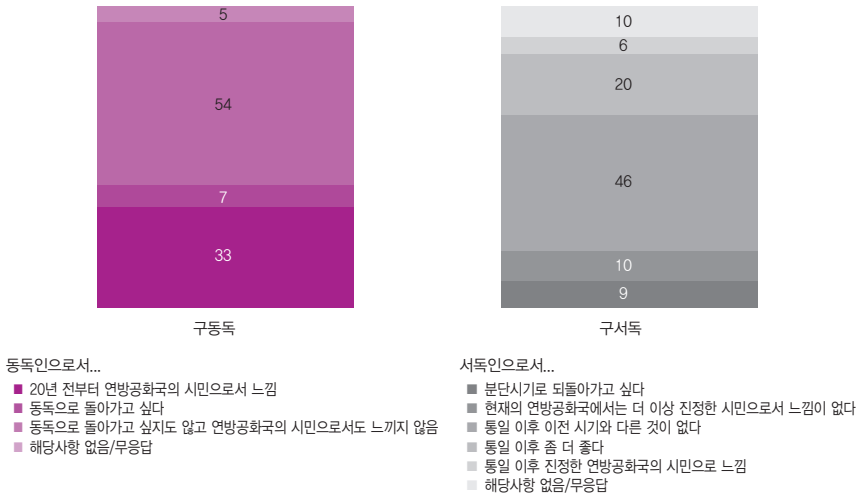
이는 무엇보다 위의 〈그림 1-35〉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42%, 반면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13%만이 연방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을 봤을 때 1,000유로 이하의 집단에서는 23%, 2,500유로 이상은 56%가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력을 고려했을 때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그림 1-35〉에서 좀 더 중요한 측면은 25세 이상의 구동독 출신의 사람 중 독일연방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더불어 〈그림 1-3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일체감에 있어 반반이라는 답이 50% 이상이라는 점이다.

결국, 독일연방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같은 헌법 체계 아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1990년 이후 변화된 다른 사회 체계에서 삶의 목적, 가치 체계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다른 체계에서 형성된 자신의 삶에 대한 인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그림 1-16〉 삶에 있어 균등화의 의미' 그리고 '〈그림 1-17〉 무엇이 성취되어야 진정한 독일통일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36〉에서 '다시금 동독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한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7%로 이들이 말하는 의미는 체제의 복원 그리고 구동독 의식의 잔재가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직업의 유무와 관련된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위의 〈그림 1-35〉에서 직업이 없는 실업자들이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일체감을 갖고 있다는 비율이 7%보다 높은 13%를 보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다시금 동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표현은 현재의 사회적 삶과 연관된 것이지 동독에 대한 향수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동독의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일자리에 맞는 소득과 연관된 것으로 실업률의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비율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36〉 통일된 지 25년 어떤 표현이 당신의 의견에 가장 부합하는가?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110.

결국,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하여 지속하는 2등 시민이라는 인식은 이전의 동독 체제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즉 동독 체제 복원의 의지가 아니라 직업, 소득과 관련해 현재의 삶에 있어 문제로 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에서 명확한 것은 전반적으로 통일 이후 삶에 있어 만족하고 있으며 사회계층 인식에서도 2010년대 이후 점차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경제적 요소, 즉 직업과 소득에 의해 주관적 인식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제6장

엘리트 변동의 함의

1990년 동서독의 통일은 동독의 서독으로의 편입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는 곧 동독 체제 지도층의 급격한 교환과 사회 각 분야 엘리트의 근본적인 변화, 즉 서독 엘리트의 교체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본질은 독점적 엘리트에서 다원적인 엘리트로의 변화, 즉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구조이며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질적인 권력 엘리트 체제가 해체되고 다원적이며 폭넓은 정치적, 세계관적 지향을 가진 부분으로 자율적인 기능 엘리트 체제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구동독 체제의 엘리트들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상실[43]하게 되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의 붕괴와 더불어 나타난 서독의 엘리트 교체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였다. 이는 무엇보다 엄격한 통제 사회였던 동독 체제하에서 교회 영역을 제외하고는 반대 엘리트의 성장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엘리트의 교체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구동독 출신의 주민 중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 상류층으로 보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원인은 통일, 즉 동독이 서독으로 편입되는 형태의 체

[43] 예외적으로 교회의 지도층들은 명예가 거의 실추되지 않았다.

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완전히 다른 체제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동독의 효율적이며 신속한 체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력풀이 서독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즉 구동독 체제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의, 즉 구동독 체제를 유지하였던 지식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서독 엘리트로 충원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영역보다 군대, 행정, 법, 경제계가 근본적으로 서독 출신의 엘리트들로 충원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기존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또는 특정한 영역에서의 전문적 능력 문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군대의 경우 일반 군인들은 서독 출신 장군의 지휘하에 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업, 사법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치 영역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거를 통해서 변화되는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1998~2005년 연방의회 의장을 역임한 볼프강 티어제(Wolfang Thierse), 2000년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의 당 대표와 그리고 2005년 이후 연방수상의 지위에 있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2012~2017년 연방대통령을 역임한 요아힘 가우크(Joachim Gauck)의 사례는 정치 영역이 갖는 특수한 측면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과연 정치 영역은 서독 엘리트로 충원되지 않았고 완벽한 통일의 사례로 지적될 수는 없다. 과연 이들이 구동독 출신을 대변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8년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서독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연설은 구동독 출신 주민들에게 구동독지역의 재건에 의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특히 정당과 관련해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가 동독에서 실행되고 있지만, 서독의 선거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곧 동독의 정당들이 서독의 정당에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연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에게 자신들

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게 하며 스스로 자신들을 2등 국민으로 느끼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구동독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좌파당(Die Linke), 그리고 최근 지지를 확대하고 있는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의 사례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44]

이러한 구동독 엘리트들이 서독 출신의 엘리트로 교체됨에 따라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에 대해 지식 또는 정치적 선입견은 구동독 출신 주민들에게 낯섦, 식민지화의 분위기가 만연하게 하였고 이는 다시금 동서독 주민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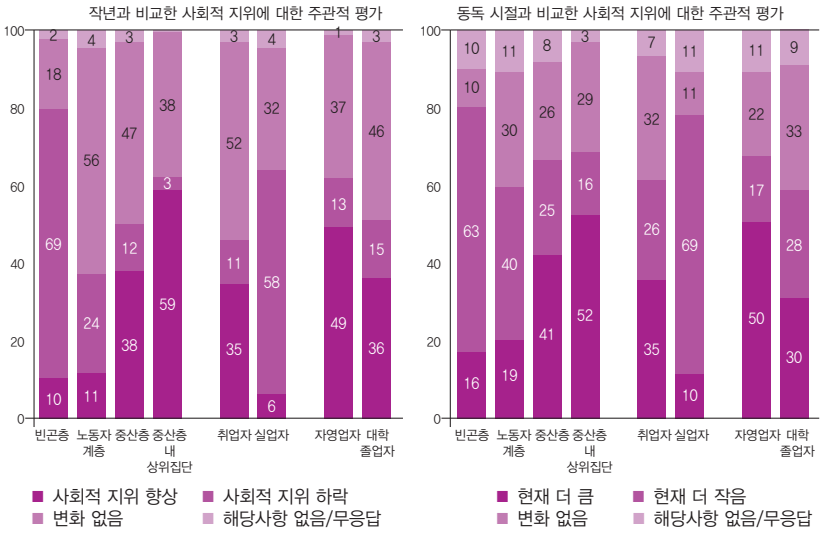
다른 한편 엘리트 변동에 있어 서독 출신에 의한 교체는 구동독 출신 주민들에게 사회적 상승의 기회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되었다. 아래의 〈그림 1-37〉은 1999년 빈곤층의 69%는 1998년에 비해 자신이 사회적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자계층은 24%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지만 56%는 사회적 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대비되게 중산층의 38%, 중산층 내 상위집단의 59%는 사회적 상황이 좋아졌다고 평가하였다. 직업이 없는 실업자의 58%는 사회적 상황이 나빠졌다고 평가하였고, 반면에 자영업자 49%는 사회적 상황이 좋아졌다고 평가하였다. 군나르(Gunnar)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층에 따른 변화도 추적할 수 있는데 젊은 세대(25세까지)의 44%는 자신의 사회적 상황이 좋아졌다고 인식하였지만, 50~60대는 단지 20%만이 좋아졌다고 인식하였다.[45]

[44] 정치 엘리트의 변동과 관련한 식민지화에 대한 논의는 『독일통일 총서 6 정당 분야』 pp.94-107 참조.

[45] Gunnar Winkler, 앞의 책, pp.576-577.

그림 1-37〉 1999년 기준 25-60세의 전년도와 비교한 사회적 상황과 동독시절과 비교한 사회적 상승 기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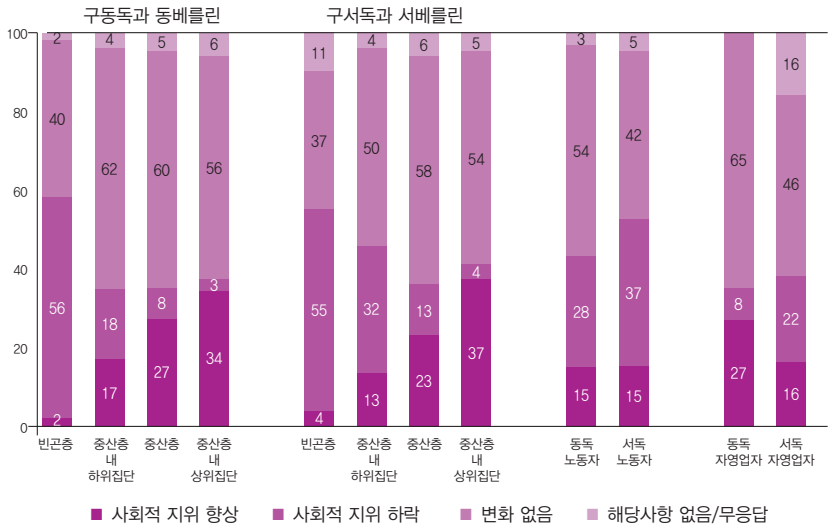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576.

또한, 동독 시절과 비교해 1999년 당시 사회적 상황이 좋아질 기회가 어떠한지에 대한 인식에서 빈곤층 16%, 노동자계층 19%, 중산층 41%, 중산층 내 상위집단 52%는 통일된 이후 현재가 동독 시절보다 사회적 상황이 더 좋아질 기회가 있다고 답하였다. 직업이 있는 경우는 35%, 실업자의 경우 10%, 자영업자의 50%, 대학 졸업자의 30%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에 대한 평가를 2014년과 비교해 봄으로써 사회적 상승의 기회에 대한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3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의 사회적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빈곤층 56%, 중산층 내 하위집단 18%, 중산층 8%, 중산층 내 상위집단 3%의 비율이다. 또 노동자 28%, 자영업자 8%도 자신의 사회적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1–38〉 2014년 기준 25–60세의 사회적 상승 기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단위: %)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577.

표 1–9〉 1999년과 2014년의 사회적 상승 기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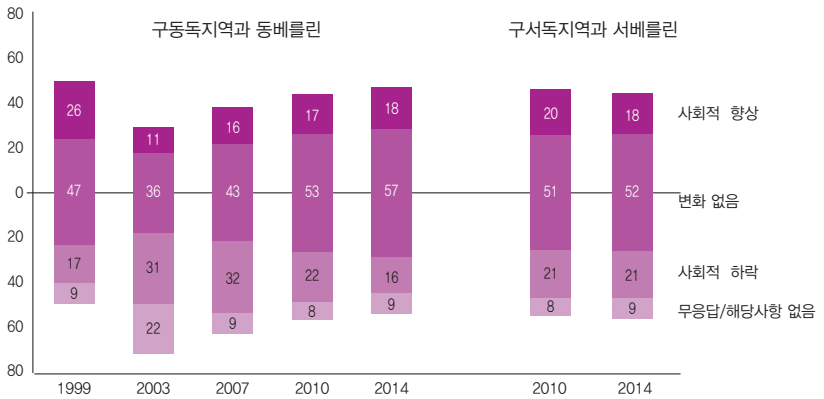
	사회적 상황	1999년	2014년
빈곤층	좋아짐	10	2
	나빠짐	69	56
	변화 없음	18	40
	무응답/해당 없음	2	2
노동자계층/ 중산층 내 하위집단	좋아짐	11	17
	나빠짐	24	18
	변화 없음	56	62
	무응답/해당 없음	4	4
중산층	좋아짐	38	27
	나빠짐	12	8
	변화 없음	47	60
	무응답/해당 없음	3	5
중산층 내 상위집단	좋아짐	59	34
	나빠짐	3	3
	변화 없음	38	56
	무응답/해당 없음	–	6

1999년의 인식과 비교했을 때 빈곤층의 경우 자신의 사회적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그렇다고 향상되었다는 비율 또한 노동자층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증가한 영역은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곧 자신의 사회적 상승의 기회에 대해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9〉 사회적 상승 기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시대적 흐름

(단위: %)



출처: Gunnar Winkler, 앞의 책, p.578.

위의 〈그림 1-3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3년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였다는 비율은 아주 근소하지만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였다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 없음이라고 답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사회적 상황이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구동독 출신 주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2002년 유로화 도입 이후 소득과 생활 수준에 있어 느끼는 상실감과 사회개혁 논쟁에 있다.

특히 하르츠개혁, 불안정한 일자리, 미니잡과 같은 새로운 노동정책으로 인해 실업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이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에게 실업을 다른 일자리를 찾기까지의 이행단계가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사회적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엘리트 변동에 있어 구동독지역이 서독 출신의 엘리트에 의해 충원될 수 밖에 없는 근거는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이 결국 구동독의 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엘리트의 부족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상승의 기회가 현실적으로 부재하다는 인식을 하게 하였다.

제7장

정부의 역할

동서독의 통일은 급격한 사회변동의 사례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사회변동으로 야기되는 사회계층의 변화는 사회변동의 구체적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정책을 사용하였는지는 사회계층의 변동, 즉 통일 이후의 변화되는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연방정부는 통일된 이후 지속해서 동서독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삶의 조건에 있어 균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균등한 삶의 조건은 독일연방 헌법에서 변화될 수 없는 내용이며 연방정부의 중요한 정치적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동적인 경제와 안정적인 일자리가 그 전제조건이다. 이에 연방정부는 자신들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측면을 매혹적인 산업입지로서 구동독지역의 재건에 두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독일통일을 주도하였고 통일된 독일의 초대 수상이었던 헬무트 콜(Helmut Kohl) 정부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구동독지역을 산업입지로서 매혹적인 지역으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1998년 집권한 슈뢰더(Gehard Schröder)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직접적 개입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돌려 연대협약 II를 바탕으로 투자육성, 혁신 지원,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는 특별 진흥책을 제시하였고, 하르츠개혁 등의 사회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과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다.[46]

슈뢰더(Schröder)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 개입은 구체적으로 구동독지역의 경제 잠재력을 찾아 산업입지로서의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유치, 연구개발, 중소기업지원, 노동시장에 초점을 두었다.[47] 더불어 구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해 성장과 고용의 강화, 혁신 강화, 지역사회 통합, 국제경쟁력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먼저 연구혁신 분야에서의 진전이 있었다. 비록 구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기업 연구개발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전을 통해 동독의 중소기업이 평균적으로 서독의 중소기업과 비교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48]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에 새롭게 편입된 주정부는 지역의 경제 잠재력을 찾아 산업입지로서의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별 중점산업 그리고 클러스터 육성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부족한 구동독의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 간 협력 틀을 마련하였고 민간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그리고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는 결국 연방정부가 구동독지역이 처한 산업기반, 연구 분야에 있어 취약한 부분의 강화를 통해 매력적인 산업입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구동독지역의 혁신에 있는 것으로 구동독지역의 제조업 기업 1/3은 연구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액은 구서

46 송태수. 2009. 앞의 글, p.197.

47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ua, und Stadtentwicklung. 2006.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pp.11-14.

48 송태수, 앞의 글, p.198.

독지역의 1/10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이다.[49]

본 글에서 사용된 다양한 지표에 의하면 대략 2009년, 2010년을 전후해 비록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구동독지역의 경제적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이러한 장려책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자산업 클러스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1998~2004년 사회보험에 가입된, 즉 정규직이 1.9~2.3% 증가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즉 클러스터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4.4~7% 정도 감소하였다.[50]

이러한 노력이 아직 구동독지역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인 현상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함의가 있다. 먼저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구동독지역이 가진 산업입지로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극복에 있다. 즉 구동독지역의 약점인 연구개발을 위한 대기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전제조건의 마련이다. 우베 뮐러(Uwe Müller)가 지적하듯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구동독지역의 주정부에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은 구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될 수 없는 상황에서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51] 비록 구동독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여전히 구서독지역보다 취약한 상황이지만 이의 극복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은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자립적인 경제력을 갖기 위한 기반 마련에 두어야 할 것이다.

49 송태수. 앞의 글, p.199.

50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ua, und Stadtentwicklung. 2005.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p.32.

51 우베 뮐러 저, 이봉기 옮김. 앞의 책, pp.184-197.

제8장

결론

통일 후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사회계층에 대한 분석이 갖는 의미는 통일이라는 급격한 사회변동 이후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2018년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서 손을 맞잡은 모습, 한반도 남쪽에 북한 평양의 옥류관 분점이 생길 수 있다는 소식은 다시금 한반도에 통일과 평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갖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사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통일 후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사회계층 변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다.

통일 후 구동독 출신 주민들의 소득, 소비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상승하였고 통일 이후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이라는 상황은 과연 통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를 갖게 하였고, 줄어들지 않고 정체된 동서독 주민의 소득 격차는 진정한 통일이 달성되었는지 의문을 품게 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스스로 독일연방공화국의 2등 시민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일 후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의 격차가 수렴되지 않고 정체된 근본적인 원인이 주는 시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의 화폐통합, 신탁청, 소유권 원상회복 정책은 동독 경제를 붕괴시켰고 이는 30



여 년이 되어가는 현시점에도 여전히 서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2019년이 되면 종료되는 연대협약 II 이후 구동독지역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은 이유이다.

이러한 현상이 야기된 근본적인 원인을 본 글에서는 화폐통합, 신탁청의 정책 그리고 재산 반환에서 찾았다. 즉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당리당략적인 정치적 논리에 근거한 화폐통합, 신속한 사유화 정책은 그나마 경쟁력 있는 동독의 기업이 서독 또는 외국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소유권 원상회복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꺼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동독 경제는 자립할 수 있는 근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통일 이후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통일과정에서 어떠한 관점, 방향성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가를 보여 준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제의 자립을 위한 기반에 초점을 두어야 통일 후 격차가 계속해서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업과 소득은 기본적인 사회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이라는 사회변동 이후의 삶은 이전 체제에서의 삶과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헌법 체계에서 살아가는 현시점에서의 비교를 통해 구성된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 특히 소득, 직업은 통일 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반의 마련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사회적 계층 또는 지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주관적 인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다.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노동과 그에 맞는 소득을 진정한 통일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 또한 통일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45년간 서로 다른 체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동독 주민들에게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부정은 곧 자신들 삶에 대한 부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소득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있어 균등하지 못한 상황이 더해

지면 자신들을 스스로 2등 시민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의 인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고통 중 최고의 고통은 실업이라는 말이 동독 사람들에게 크게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다. 기본적으로 동독 사회는 노동자 사회였으며 노동과 일자리는 동독 시절 일상의 생활을 규정하였고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생활을 했던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에게 실업은 자신의 삶에 있어 사회적 관계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고통이다.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통일은 정치적 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논리가 국내 차원에서 적용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화폐통합과 같은 당리당략적인 차원의 논리는 결국 30여 년이 되어 가는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서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동독을 만들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통일 전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보다 현시점에서 남북의 격차는 더욱 크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독일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일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서독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통일 이후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즉 진정한 통일은 어찌 보면 분단의 시기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즉 단일한 하나의 헌법 체계 아래 묶이는 단순한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통일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지만 그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통일 후 구동독 사회를 서독의 관점에서, 즉 동독 사회를 더욱 발전된 서구사회로 적응시키는 것으로 바



라봄으로써 구동독 출신의 주민들이 구동독의 재건 과정을 식민화 또는 오리엔탈리즘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일으켰다. 구동독 사회가 가진 문제를 그들의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동독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결국 통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통일은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동질성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동질성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구춘권. 2011. '독일통일 20년의 정치경제–비판적 평가와 시사점.' 『21세기 정치학회보』 21(1), pp.155–178.

김선웅. 2006. 『개념 중심의 사회학』, 파주: 한울아카데미.

마르쿠스 폴만·이종희. 2011.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권력 엘리트의 변화', 한독사회과학회 엮음. 『독일통일과 동독 권력 엘리트–남북통일에의 함의』, 파주: 한울.

변상우. 2018. '사회계층에 대한 재조명–심리학에서 개념화 및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문화 및 사회문제』 24(1), pp.101–130.

송태수. 2000. '신자유주의적 흡수통일', 『진보평론』, 12. pp.206–229.

송태수. 2009. '독일통일 20년의 경제적 통합과정: 평가와 함의',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4호, pp.173–208.

R.H. 라우어 지음, 정근식·김해식 옮김. 2018.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변동의 유형·메카니즘·전략』, p.21. 파주: 한울아카데미.

우베 뮐러 지음, 이봉기 옮김. 2006. 『대재앙 통일. 독일통일로부터의 교훈』, 서울: 문학세계사.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2004. 『사회과학의 이해』,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헬무트 슈미트 저, 오승우 역. 2007. 『독일통일의 노정에서』 서울: 시와 진실.

홍두승·구해근. 2001. 『사회계층·계급론』. pp.28–32. 제2판. 서울: 다산출판사.

〈외국 문헌〉

Kollmorgen, Raj. 2015. "Aus dem Osten and die Spitze?" p. 21. in. Berliner Debatte Initial 26(2)

Rainer Geissler. 2014, "Facetten der modernen Sozialstruktur," in. http://www.bpb.de/izpb/198045/facetten–der–modernen–sozialstruktur?p=all (검색일: 2018. 06.12)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2005.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05』, in: https://www.beauftragter–neue–laender.de/BNL/Redaktion/DE/Downloads/Publikationen/Berichte/jahresbericht_de_2005.pdf?__blob=publicationFile&v=5 (검색일: 2018. 07.20)

_____. 2006.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06』, in: https://www.beauftragter–neue–laender.de/BNL/Redaktion/DE/Downloads/Publikationen/Berichte/jahresbericht_de_2006.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 2018.07.20.)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 2015.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in: https://www.beauftragter–neue–laender.de/BNL/Redaktion/DE/Downloads/Publikationen/Berichte/jahresberi–

cht_de_2015.pdf?__blob=publicationFile&v=9 (검색일: 2018.07.10.)

_____. 2017.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7』, in: https://www.beauftragter-neue-laender.de/BNL/Redaktion/DE/Downloads/Publikationen/Berichte/jahresbericht_de_2017.pdf?__blob=publicationFile&v=5 (검색일: 2018.07.10.)

Deutscher Bundestag – 14. Wahlperiode. 1999. 『Jahresbericht 1999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in: https://www.beauftragter-neue-laender.de/BNL/Redaktion/DE/Downloads/Publikationen/Berichte/jahresbericht_de_1999.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 2018.07.20.)

Gunnar Winkler, 2017. "Friedliche Revolution und deutsche Vereinigung. 1989-2016. Positionen der Buergerinnen und Buerger." . https://www.sfz-ev.de/index_htm_files/FR-V-16-E2.pdf (검색일: 2018.06.20.)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IWH), 2014. "25 Jahre nach dem Mauerfall: Wirtschaftliche Integration Ostdeutschlands im Spiegel der Forschung am IWH," in: https://www.iwh-halle.de/fileadmin/user_upload/publications/sonstint/2014_iwh_25_jahre_nach_dem_mauerfall.pdf (검색일: 2018.09.20.)

Rainer Geissler. 2014. 『Die Sozialstruktur Deutschlands,』 7. Auflage. Wiesbaden: Springer VS.

독일통일 총서 26

사회계층 변동 분야 관련 정책문서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사회변동

이은정, 베르너 페니히, 라스 포겔,
다니엘 게르스텐 하우어, 베른트 마틴스
(독일 베를린 자유대 / 예나대학)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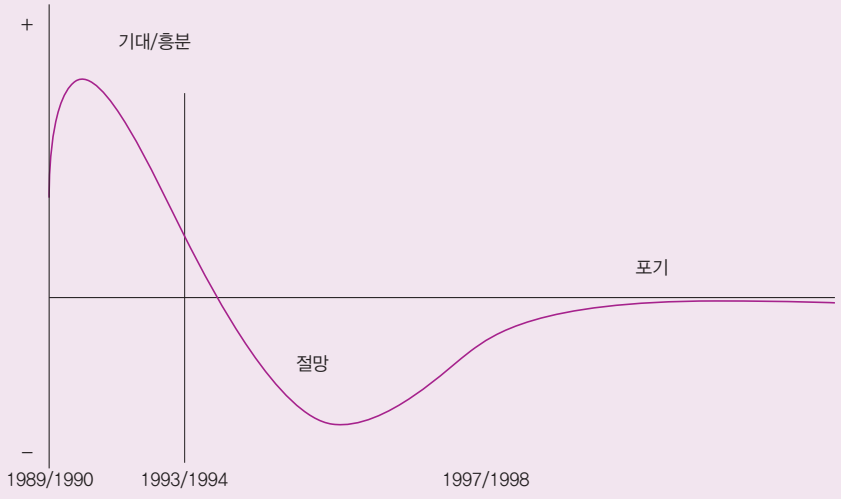
1990년 이후 독일의 사회변동을 모두 '통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모든 사회는 항상 변동을 겪고 있다.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사회도 자세히 보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사회주의통일당 독재하의 동독 사회도 실제로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의 사회가 겪은 변동은 기존의 사회변동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상이한 두 체제가 통합되면서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의 변동도 일어났다. 그것은 1989년 가을의 평화적 혁명에 이어 통일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이 시기에 1,600만 명의 동독 주민들은 그들의 사회적 공동생활체의 구조와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했었다.

통일과정에서 특히 구동독(신연방)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과도하게 부풀어졌던 기대는 현실적으로 충족될 수 없었다. 그로 인한 실망감 때문에 구동독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동독 체제의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스탈기'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그림 2-1〉. 1990년대 중반 구동독지역 주민들 중에는 심지어 나쁜 것은 모두 서쪽에서 온 것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정서적 변화는 1990년까지만 해도 서독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던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1] 이 과정에서 '로트 캡헨'과 같이 오랜 전통을 가진 동독 상품이 구동독지역

[1] 동독지역 성공의 비밀: 최상품의 생존 전략-경영자가 배울 수 있는 점(문서번호 145).

의 브랜드가 아닌 전 독일의 브랜드로서 통일된 독일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2]

그림 2-1〉 통일 이후 동독지역 주민들의 감정 변화



통일을 통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동독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통일 이후 충분히 만족될 정도의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이 질문에 대해 독일통일 연구자들이 자신 있게 긍정적으로 답을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많은 경우 사회변동 과정에서 '내적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답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독일통일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논리로서 미완의 사회적 통합 문제를 부각시키는 사람들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보면 통일 이후 동-서 지역 간의 격차가 극복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들이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언급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2] 브랜드를 통한 통일? 전체 독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문서번호 115).

- 전체 국민의 20%를 차지하는 독일 엘리트 중 단지 5%만이 구동독지역 출신이다. 구동독지역, 즉 신연방주 출신 중에 독일의 대기업 총수 또는 전국적인 방송국이나 신문사의 편집장이 없다. 신연방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엘리트 중에서도 30%만이 현지 출신이다.
- 통일된 지 30여 년이 되어가는 현재에도 신연방지역의 주정부에 서독지역 출신 장관들이 여러 명 활동하고 있지만, 구동독지역 출신의 정치인이 서독지역의 주정부에서 장관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구서독지역의 독일인 3분의 1은 구동독지역에 가 본 경험이 없다.
- 연방군 지휘부 장군은 대부분 서독 출신이고, 구동독 출신은 거의 없다. 반면에 사병 중에는 구동독 출신의 비율이 더 크다.
- 구동독지역 주민의 3분의 2는 자신들을 2등 국민으로 느끼고 있으며, 구동독지역 주민의 4분의 3은 서독지역 주민들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고 느낀다.
- 결혼을 통한 지역 간의 혼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일 전체 혼인 중 4%만이 구동독지역 사람과 서독지역 사람 간에 이루어졌다.
- 동서 지역 간의 소득 수준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 동쪽에서 서쪽으로 인구 이동이 있었다.
- 실업자의 수는 구동독지역이 더 많고, 영업장의 평균 크기는 구서독지역보다 작다. 비율로 보면 구동독지역은 구서독지역의 두 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이며, 직업별 수입은 평균 17% 정도 적다. 생활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9.5% 정도의 격차를 보인다.
- 구동독지역 대학의 인문·사회과학의 교수들 중 95%가 구서독지역 출신이다.
- 연방헌법재판소의 16명의 재판관 중 구동독지역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

통일독일의 내적 통합이 여전히 미완성되었다는 증거로 제시되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 현상과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인 것으로 보이는 수적인 차이조차도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서지역 간의 임금과 연금의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20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 통일된 독일이 내적으로는 여전히 동-서로 분열되어 있다는 증거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서독지역과 신연방주 주민의 연금의 차이는 구동독 주민이 평생 이룬 성과에 대한 상이한 가치평가의 증거라고 비난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도 있다. 실제로 연금에 관한 2008년의 수치를 보면 구동독지역 주민의 연금수령액과 서독지역 연금생활자의 수령액 간의 격차가 많이 감축된 것을 볼 수 있다〈표 2-1〉. 여성 연금생활자의 경우 구동독지역의 연금생활자가 수령하는 액수가 오히려 서독의 동일 그룹이 수령하는 액수보다 높다. 물론 이것은 완전고용을 원칙으로 이루어진 동독의 경제 체제하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특히 1990년 통일 당시에 이미 연금수령 연령에 도달한 신연방주의 여성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단지 여성들이 받는 절대적인 연금 액수는 남성이 수령하는 연금의 절반 정도에 달했다. 여성과 남성 간의 연금 수준의 격차는 구동독지역과 서독지역에서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임금의 경우 1990년대 초반 구동독지역의 임금이 아주 빠르게 상승했었다.[3]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내적 통일의 미완성을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자료보고서 2006: 독일의 물가, 소득 그리고 노동비용(문서번호 133).

표 2-1〉 연금수령자의 월 수령액 비교(2008)

연방 주	남자	여자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emberg)	1,055.39	516.05
바이에른(Bayern)	983.41	496.12
베를린(Berlin)	1,039.27	684.06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1,035.67	677.38
브레멘(Bremen)	1,044.16	507.53
함부르크(Hamburg)	1,069.70	596.02
헤센(Hessen)	1,051.61	493.9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1,000.65	652.84
니더작센(Niedersachsen)	1,024.05	459.3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1,118.28	457.83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1,013.52	429.57
자를란트(Saarland)	1,119.18	390.32
작센(Sachsen)	1,059.04	682.58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1,031.79	649.76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1,017.89	482.99
튜링겐(Türingen)	1,030.28	669.74
연방 평균	1,049.27	528.23

출처: 독일 연금보장의 지역별 일람, http://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 강조함.

40년 동안 상이한 이념적 체제하에서 살아온 두 사회가 하루아침에 통합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한 것이다. 2018년 신연방지역에서 관찰되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통일과 직접 연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보면 통일 이후 독일의 지역적인 격차는 오히려 남북을 기준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독지역의 남부에 있는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헤센주와 구동독(신연방)지역의 남부에 있는 작센, 튜링겐주가 북부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니더작센, 또는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와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훨씬 부유하다. 나아가 지역의 경제적 혁신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특허출원 숫자에서도 남북지역 간의 격차를 분명히 볼 수 있다〈표 2-2〉.

표 2-2〉 주민 100,000명당 특허 등록수(2005)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emberg)	120
바이에른(Bayern)	110
헤센(Hessen)	56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55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45
자를란트(Saarland)	34
니더작센(Niedersachsen)	34
튜링겐(Türingen)	30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21
작센(Sachsen)	20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15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12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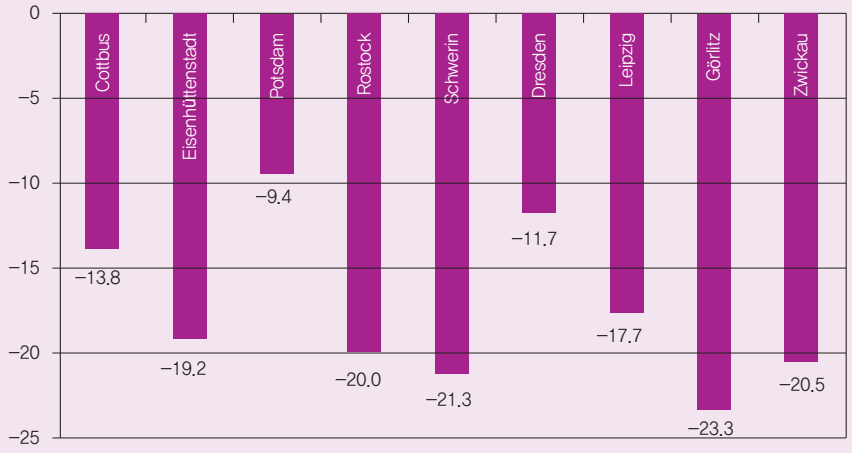
출처: Bohler, Karl Friedrich/Hildenbrand, Bruno. 2006. Nord - Süd. In: Lessenich, Stephan-Nullmeier, Frank, Hrsg.: 독일 - 분열된 사회(Deutschland - eine gespaltene Gesellschaft). Frankfurt/M: Campus Verlag, S. 247.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인구변화는 이 지역의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지표로 자주 언급된다. 실제로 1989~1990년에 1,660만 명이었던 것이 2008년 말에 1,303만 명으로 감소했었다. 베를린과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등과 같은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구동독지역의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4]

[4] '새로운' 고령지역: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신연방주 고령 주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현실과 입장-군나르 빈클러(Gunnar Winkler)(문서번호 132).

그림 2-2〉 동독지역 9개 도시의 인구 변화(1989-1999)

(단위: %)



출처: Kehm 2002.

구동독의 많은 지역에서 인구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은 구동독지역의 탈산업화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1989년에서 1992년 사이 이 지역에서 4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일자리를 상실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91년에서 2003년 사이에 203만 5천 명의 인구가 구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반면, 111만 9천 명의 서독지역 주민이 구동독지역, 특히 대도시로 이주했다는 사실은 통일과정에서 동에서 서로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5] 물론 분단시기에도 동서독 간의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1980년 이후에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었다.

반면 구동독지역의 출생률은 1990년에서 1991년 사이 40%, 1992년에 19%, 1993년에 8%가 감소했다〈그림 2-3〉.[6] 출생률은 물론 경제적 불확실성

[5] 2050년까지의 연방주의 인구 변동(문서번호 128).

[6] 2050년까지의 연방주의 인구 변동(문서번호 128).

으로 인한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전쟁이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출생률은 항상 일정한 정도 감소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구동독지역의 출생률 감소는 1920년대의 대공황이나 두 번의 세계대전 때보다도 훨씬 높았다. 그것은 독일통일로 인해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칼 지크베르트 레베르크는 이것이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이 행동하기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통일 이후 급격히 변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7] 그는 당시 구동독지역의 사회적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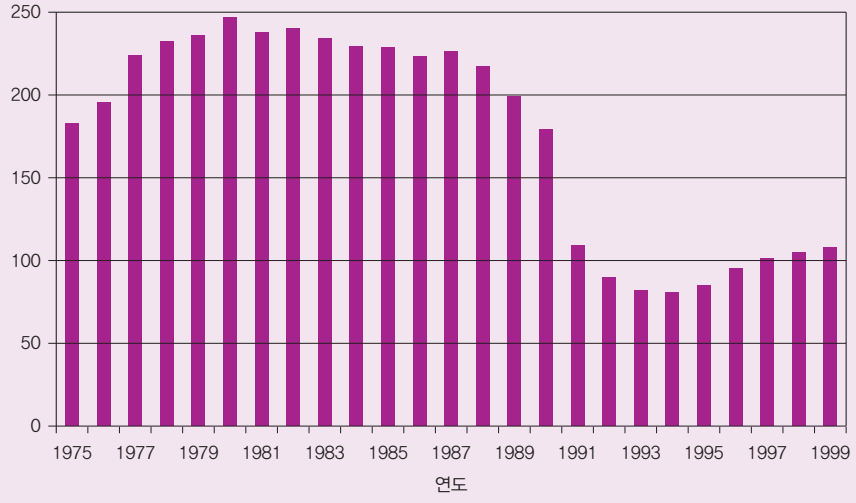
"급격하게 변하는 역사에 휩쓸리면서 순간적으로 모든 가치가 변했다. 동독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소비품들이 갑자기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서독 상품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동독 화폐를 서독 마르크로 환전하고 난 후,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은) 마법에서 풀리고 자신의 정부를 몰아내고 '황금의 서부'를 통해 얻은 것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첫 번째 충격을 받았다. 많은 지식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이방인'이 되었음을 느꼈다. 작가 폴커 브라운이 1990년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나는 아직 여기에 있는데, 나의 나라는 서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8]

[7] Rehberg, Kart-Siegbert. 2006: Ost – West. In Sessenich, Stephan/Nullmeier, Frank, (편). Deutschland – eine gespaltene Gesellschaft. Frankfurt/New York, p.221.

[8] 위의 글 p.221.

그림 2-3〉 동독의 출생자 수

(단위: 천 명)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그래픽 Ralf Mai.

통일 이후 1990년대 중반 구동독지역의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오스탈기'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반면에, 주민 개인과 가족의 소득 증가에 따른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9] 구동독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간의 간극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그림 2-4〉.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구동독지역의 사회계층 분화가 심화되면서 주관적인 만족도도 계층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10] 동시에 동서지역 모두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대두되었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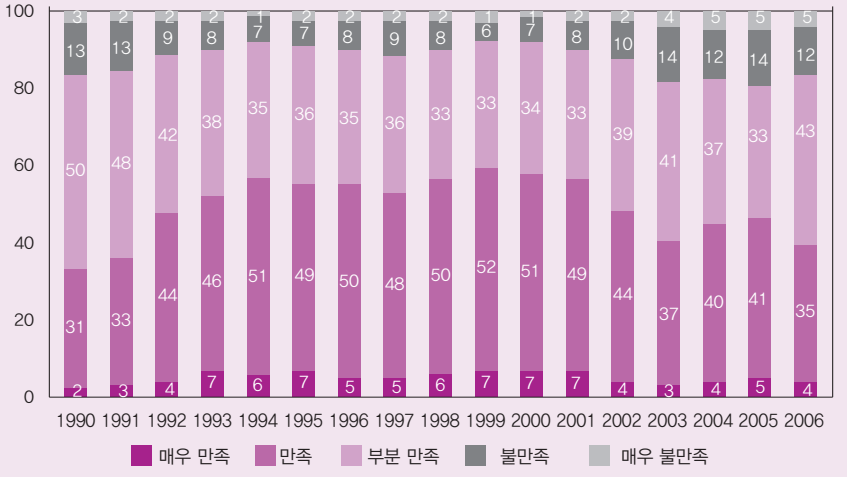
9 사회보고서 2009: 신연방주 50세 이상 주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자료와 현실(문서번호 151).

10 자료보고서 2008: 주관적인 만족도와 가치 지향(문서번호 140), 1989년부터 2009년까지 평화적 혁명 이후 20년: 신연방주 주민들의 견해(문서번호 150).

11 '인구 통계적 발전':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가 각 개인과 정치에 주는 과제-앙케이트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문서번호 121), 브란덴부르크주의 인구 통계상의 변동에 대한 감정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위탁 감정서(문서번호 136), 획득한 시간: 독일의 고령화에 대한 제안-아카데미그룹(문서번호

그림 2-4〉 일반적 삶의 만족도-동독지역(1990-2006)

(단위: %)



출처: sfz/leben 1900-2006.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변화과정을 정책문서만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회변동을 정책문서만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 그와 관련된 정책문서를 선별하는 작업 또한 쉬운 작업은 아니다. 사회변동의 틀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영역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고려해야만 한다. 나아가 사회변동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연구결과를 포함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직접 조사를 의뢰해야만 했다. 이 장에서는 2010년에 본 연구 프로젝트에 합류했던 예나대학 연구팀의 분석을 바탕으로, 구동독지역에서 일어난 사회변동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 세대적 분석을 먼저 제시하고, 정치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의 변동을 설명할 것이다.

143), 인구 통계적 변화: 신연방주를 고려한 정책 제안(문서번호 149).

제1장

구동독지역 사회변동의 역사적 성격

제1절 사회주의 혁명과 새로운 엘리트의 형성

동독의 정치 엘리트와 반엘리트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히 20세기 독일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제국의 호엔졸렌 왕조가 폐지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건국되었을 때 독일의 노동운동계는 사회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온건파와 공산당이 주도하는 급진파로 분열되었다. 이들은 1933년에 나치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이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어떤 정치적 타협점도 찾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충돌했다. 나치 체제하에서 사회 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 모두 강제수용소에 감금되는 등 심하게 억압받았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에 4대 승전연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한 서독지역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의 시민 사회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반면,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엄격한 탈나치화 작업을 통한 사회적 변혁이 있었다. 기업가, 은행가, 군인, 학자를 포함한 시민 혹은 귀족 엘리트들이 나치 경력으로 인해 재산이 몰수되거나 혹은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소련군 점령통치 이후 1949년에 동독이 건국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

진 사회변혁 과정에서 전통적인 지배계층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이주했다. 1945년 이후 1961년까지 약 200만 명의 주민이 서독으로 떠난 결과, 동독 사회에서는 기존의 상위계층이 급속히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1940년대와 1950년대 후반의 동독에서는 탈나치화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지배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민계층을 대체할 새로운 엘리트를 신속하게 충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실제로 1960년대 중반까지 동독 정부는 교사, 기술자, 기업인, 행정 및 정치 엘리트를 양성·충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건국 초기에는 교육을 통해 다수의 인원이 지도적 지위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노동자 계급의 독재'가 모토였던 동독의 상층부에 국가와 당에 높은 충성도를 보이는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엘리트 집단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 출신이라는 사회적 성분은 엘리트로 선발되는 데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엘리트 선발의 중요한 기준은 물론 사회주의 체제와 당에 대한 충성심이었다. 또한 엘리트의 선발작업 자체도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의 손에 독점화되고 위계질서화되었다. 최종적인 단계의 결정은 여러 주요 관직을 겸임한 소수의 인물에 의해 이루어졌다. 약 500명에서 600명 정도의 간부들로 구성된 비교적 소규모 그룹이었다.

새롭게 형성된 엘리트의 구성을 보면 권력을 다루는 행정가그룹, 기술 관련 학과나 경제학을 전공한 기술관료그룹, 학자와 문화인으로 이루어진 문화그룹 등 세 부류로 분류되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동독 체제에 감사하며, 높은 충성심을 보여 주었다. 소련의 영향하에 있던 모든 국가의 간부 엘리트들은 러시아어로 '노멘클라투라'라고 불리는 사회주의 상층부를 구축했다.

건국 초기에 두 가지 기준인 교육과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기존의 하위 계층 출신의 젊은 인재를 간부직으로 선발하였기 때문에, 동독 사회 모든 분야에서 건국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 동일한 인물들이 고위직을

차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인물이 엘리트 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동독 건국 초기부터 소수의 엘리트들이 여러 개의 공직을 겸임했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 인재들이 중앙 정부의 주요 공직을 맡는 것이 어려웠다.

제2절 동독 사회의 분화

사회주의 교육혁명이 종결된 1960년대 중반 이후 동독 상층부의 엘리트 계층이 자체적으로 충원하기 시작하면서, 건국 초기처럼 새로운 인물군이 대거 엘리트 계층으로 신분 상승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동독 사회의 사회적 이동성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승진 기회의 봉쇄는 당연히 고학력 젊은층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의사, 학자, 예술가그룹은 정치 엘리트들의 끊임없는 간섭과 개입으로 인해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는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통한 동독의 억압 체제하에서 체제 비판자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1970년대에 동독이 서독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승인받게 되고, 호네커 정부가 새로운 사회정책을 실시하면서, 동독인들의 삶 또한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대중소비와 대중관광이 일상화되고, 서구의 대중문화와 대중음악이 유입되면서 이 시기에 사회화된 사람들은 서구의 현대적인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문화적인 변화와 함께 사회적, 정치적 신분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계층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1968년에 서구사회의 학생운동을 주도한 젊은 세대가 1970년대 이후 제도권에 들어가서 제도 자체를 개혁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의 사회세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들은 동독 사회에서 음악을 좋아하

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교양계층을 형성하면서, 내면적으로 동독 체제와 거의 연결되지 않은 채 별개의 영역을 구축했다. 음악과 자신의 취미생활에 집중하면서, 많은 경우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동독 내에서 대안세력이 되었다.

동독 체제 후기의 사회구조는 전통적인 노동자와 소시민으로 이루어진 사회계층 위에 사회주의 엘리트 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주변세력으로 좌파적 경향을 보이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와 비판적 지식인들이 새로운 대안적 엘리트 집단을 구축하는 양상을 보였다. 1989년 동독의 평화적 시민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은 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형성된 대안적 엘리트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반면에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와 소시민 계층에 속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1980년대 동독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주의 체제에 충성하기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안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개혁에 대한 희망조차도 포기해 버렸다.

제3절 1990년 이후 구동독지역 사회계층의 분화 및 새로운 구성

독일통일 이후 1990년대 구동독지역에서는 사회구조가 변동했다. 사회적 유동성이 아주 높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12개월 이내에 직장을 변경하는 현상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되었다. 직업을 변경하는 경우 사회적 지위가 하향조정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심지어 일자리를 상실하는 경우도 많았다. 1993년의 경우 구동독지역 주민의 23%가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경험한 반면, 77%는 사회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2] 특히 전통적 사회구조에서 근로자로 분류되던 계층에서 사회적 지위의 하향조정 경향이 강했다. 그것은 무엇보다 구동독지역의 경제산

[12] 이 수치는 독일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된 SFB 580 프로젝트 '구동독지역의 사회적 변혁'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업의 토대가 내적으로 함몰되면서 발생한 문제였다. 물론 구동독지역의 근로자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근로자 계층의 붕괴로 인해 숙련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체제전환기 구동독지역에서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구동독지역의 전통적인 공업지역에서 오랜 기간 여러 세대에 걸쳐서 특정한 금속을 다루는 숙련기술을 보유해 왔던 숙련 노동자 가문이 이 시기에 붕괴되어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통일 이후 약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구동독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근로자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회계층이 절반 정도의 규모로 축소되었다.[13] 소시민 계층 또한 현저하게 감소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산층이 부분적으로 살아나면서 일부 소시민 계층의 사회적 지위가 공고해지는 경향도 관찰되었다. 한편 경제산업의 변화와 함께 하층으로 분류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전통적인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는 새로운 계층이 증대하는 것도 관찰되었다.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주민의 약 4분의 1이 사회계층 구조의 하층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주의 체제하의 대안 엘리트를 구성했던 계층은 자신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구축한 편이다. 특히 현대적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활동영역을 구축한 사람이 많았다. 동독 체제하에서 기술관료 엘리트로 분류되었던 사람들 또한 체제 전환 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집단이다.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13] Hofmann/Rink(1993): Die Auflösung der ostdeutschen Arbeitermilieus,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6 – 27/1993 참조.

창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집단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다. 물론 구체제하에서 기술관료 엘리트 집단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도 비밀경찰에 연루되었던 사람들과 같이 일부 그룹은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사회적 지위가 하향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제의 기술관료 엘리트들은 1990년대에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다. 사회주의 지배 체제하에서 엘리트 기능을 수행하다가 자본주의 산업 분야에서도 지배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철새'라고 불리기도 했다.

동독 사회는 사통당 집권 후반기에 젊고 높은 적응능력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성취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었다. 그들에게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데올로기 교육, 국가기구, 군대, 경찰, 스포츠 등의 영역에서 제한된 기회만 제공되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동독 지배 체제에 대해 적극적인 충성심을 보였더라도 엘리트그룹에 진출하지 못했었다. 바로 이 그룹이 통일 직후 새롭게 형성된 노동시장을 재빠르게 점령했다. 그들의 경력과 성향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들어난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들만이 새로운 행정과 경제기구를 구축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구축되는 서비스 영역의 좋은 일자리가 동독의 최상위 엘리트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차상위 기득권층에 속했던 사람들에 의해 주로 충원되었다. 반면에 사회주의적 교양을 축적한 시민 계층은 통일 이후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갈등했다. 그 원인은 이들이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사회주의적 이상사회의 구축 또는 사회주의적 계몽윤리의 실천과 밀접하게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의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종사하는 시민계층은 체제 전환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 편이다. 그들은 노동자들들과 달리 대학교육

을 받은 사람에게 보장되는 높은 수입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르주아화된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과 사법 분야에서는 대부분 서독 출신의 엘리트들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배경에는 사회주의적 사회이념의 탈정당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동독 체제의 교양계층은 통일 이후 결과적으로 두 집단으로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한편에는 엘리트 간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확실한 직업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계몽적, 사회주의적 윤리를 통합 이데올로기로 계속 신봉하는 지식인집단이 있었다.[14] 그들은 대부분 동독 체제에 뿌리를 내린 정당, 즉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과 그 후신인 현재의 좌파당에 소속되었다. 좌파당의 경우 현재 동독 체제하의 기득권 세력을 넘어서, 새로운 자체적인 지지 세력과 당원집단을 구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르주아화 과정을 거치면서 통일 이후 새로운 삶의 양식을 정착시킨 집단이 있었다. 사회주의적 고등교육을 통해 기득권 세력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들은 통일 이후 새로운 자신감을 확보하고 구동독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집단이 되었다. 그들이 사회적 경험으로 인해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정의와 평등에 대한 별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동독 체제하에서 사회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채 자체적인 하위문화를 구축하며, 헤도니즘을 추구하는 현대적인 노동자군의 경우 체제 전환 이후 자신들의 활동 반경을 광범위하게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주로 동독의 핵심적인 산업지역에 거주하던 이들은 통일 이후 새로운 소비문화와 미디어문화에서 새로운 정착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과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진 중부 유럽의 젊은이들과 섞여서 헤도니즘을 추구하는 청소년문화와 음악 집단으로 흡수되었다.

동독 체제하에서 저항적 시민운동을 주도했던 좌파대안적 지식인그룹은

[14] Sinus-Institutes, Out fit 4, Hamburg 1998 참조.

통일 이후 크게 분열되었다. 그들의 다수는 민주적 체제하에서 서독의 1968년 학생운동 세대처럼 기술 분야 또는 자유시민적 삶의 세계로 서서히 정착해 갔다. 반면 소수의 그룹은 여전히 자신들이 꿈꾸었던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통일과 함께 진행된 체제 전환으로 인해 이루어진 구동독지역의 사회구조의 변동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사회주의적 기득권 세력이 상위 계층의 지위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② 근로자 소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사회계층이 축소되었다.

③ 현대적인 사회계층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사회적 공간이 붕괴되면서, 수직적, 수평적 사회적 분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체제 전환 이후 구동독지역의 사회구조는 세밀하게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어떤 계층도 그 규모가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은 집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동독지역의 중간 계층에 분명한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제2장

사회변동의 세대적 측면

사회과학적으로 '세대' 개념은 일정한 문화권에서 동일한 역사적 시기를 살면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시간적으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가치관, 기본적인 태도와 입장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세대 개념이 한 연령대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 역사학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소수의 집단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색을 통해 사회적, 역사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세대'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세대 개념을 논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젊은 시절과 청소년기에 겪은 경험이 인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쟁과 혁명, 경제 위기, 국가의 패망 또는 국가 재건과 같이 일시적인 사건들이 그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는 지속적인 사회변동보다 더 강하게 인격형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이 붕괴된 동독 체제에 대해 세대 간에 아주 상이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 또한 각 세대의 상이한 경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1949년 동독이 건국되었을 때부터 1990년 통일과 함께 체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까지 약 40년 동안 동독 사회에서 4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는 세대가 형성되었다. 이들을 할레-예나대학의 연구팀은 '재건 세대', '전환기 부모 세대', '탈경계적 세대', '전환기 청소년 세대' 등으로 칭한다.[15] 여기에서 전환기는 장벽 붕괴로 인해 시작된 체제 전환기를 의미한다.

제1절 동독의 재건 세대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은 1945년과 1989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가 몰락하는 것을 경험했다. 1945년에 이미 성년이었던 사람들은 1930년대 나치 체제 하에서 태어난 전쟁 세대였다. 그들은 젊은 세대로서 동독 사회의 재건을 담당했기 때문에 '재건 세대(Aufbau-Generation)'라고 불린다. 이 세대는 스탈린과 나치의 박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과 사회적 곤경의 경험에 의해 지배되는 집단이다. 그들은 앞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독 체제가 종료될 때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후속 세대에 대한 불신감으로 인해 체제 내에서 세대교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16]

그들보다 조금 늦은 1935년에서 1945년 사이 출생한 사람들이 실용주의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서 일을 잘한다는 의미에서 '기능적인 세대'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나치 체제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1950년대에 동독 체제를 새로이 구축하는 과정에서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비교적 높은 상향 이동을 달성할 수 있었다. 동독 건국 초기에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많은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재건 세대의 당 지도부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당 노선에 충성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나치 조직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관대하게 포용했었다. 재건 세대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체제에 대해 높은 귀속감을 보여 주었다.

15 Ahbe/Gries 2011.

16 연방정부의 5차 가족보고서-통일독일의 가족과 가족정책-인적자원의 장래(문서번호 96).

1989년 베를린 장벽이 열리고 체제 전환 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동독의 재건 세대는 이미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야만 하는 압력을 받지 않았다. 그들의 대부분은 이미 퇴직해서 연금생활자가 되었거나, 혹은 퇴직 바로 직전의 연령에 있었다. 이들은 동독 체제에서 직업경력의 중단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연금점수를 축적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물질적인 의미에서는 재건 세대가 체제 전환의 수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재건 세대의 구성원들은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기업이 폐쇄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들이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성과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제2절 전환기 부모 세대와 탈경계적 세대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환기 부모 세대' 혹은 '장벽 붕괴기 부모 세대'로 불린다. 이들은 동독 체제와 통합된 세대로 지칭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특히 이들이 청소년기를 오롯이 동독 체제하에서만 보낸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이다. 전환기 부모 세대의 두 번째 그룹은 1960년대에 태어난 세대이다. 이들은 '탈경계적 세대'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1950년대 태어난 세대보다 서구문화에 더 큰 친화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주의적으로 사회화된 이 세대는 사회주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재건 세대의 '손자'로서 그들의 유산을 이어받았어야만 했다. 이 세대는 유소년기에 1961년 장벽이 건설된 후 이념적으로 완전히 폐쇄된 사회에서 살면서 이웃의 서독을 전혀 접하지 못했었다. 장벽 건설 이후 동독 사회는 내적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경직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것은 1968년 소련군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군대가 체코슬로바키아로 진입하면서 프라하의 봄이 무참히

진압된 것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사회주의 체제에도 '해빙기'가 오기를 바라던 사람들의 희망이 무참히 짓밟힌 것이 이 세대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동의 경험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독 지도부가 약속한 보다 나은 삶과 노동조건에 대한 기대가 이 세대를 지배하는 공동의 경험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1960년대 말에 라이프치히 청년연구소가 진행한 설문조사는 동독의 청소년들이 체제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높은 정체감을 보이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동독 국가를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가 감소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17]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묻는 청소년이 줄어드는 데 반해, 국가가 자신의 행복과 장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주는지 묻는다는 것이다.[18] 동독 국가가 이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동독의 첫 번째 세대인 재건 세대가 국가로부터 기대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적었다. 동독 국가가 국민들에게 더 좋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미래를 위한 약속을 했지만 동독 경제가 세계 경제 체제에 통합되면서 세계 경제의 변화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게 되면서, 늦어도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제 조건의 변화로 인해 동독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전환기 부모 세대에게는 동독 체제하에서 "삶이 희망차게 출발할 때와는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한 인식은 학생들보다 노동자들이 훨씬 더 먼저 가지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큰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고, 대학 졸업자들처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크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19]

동독 사회의 내적인 분위기를 조사하기 위해 서독 연방정부의 내독관

17 Wierling 2002, p.326 참조.

18 Wierling 2002, S. 335.

19 Wierling 2002; p.558.

계부(내독성)는 1968년부터 동독 체제가 종결될 때까지 동독을 방문한 서독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독의 내적 상황에 대한 간접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20] 동독 체제가 붕괴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늦어도 1980년대 초부터 동독 사회에 체제 신봉자보다-겉으로 가시화되었건 그렇지 않든 간에-체제 비판자의 비율이 더 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체제 신봉자의 비율이 30% 이상을 넘긴 적이 없었다. 1989년의 경우 이 비율은 20%였는데, 체제 반대자의 비율은 그에 반해 거의 30%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설문이 진행된 기간 전체를 보면, 동독 주민의 약 절반가량은 체제 문제에 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적어도 겉으로는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21]

통합된 세대 및 탈경계 세대가 동독 체제와 거리를 둘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신분 상승이 단지 제한적으로만 가능했었던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엘리트를 위한 요직들이 배타적으로 '상속되는 자리'가 된 결과, 동독 체제 말기에는 직업적 신분상승 구조에 정체현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195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은 동독과 완벽한 일체감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사회적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1989년 가을 시민혁명 과정에 앞장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1950년대에 출생한 통합 세대가 특히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구동독지역에서 진행되는 체제 전환 작업의 틀에서 경제적, 사회적 제도가 변하면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하루아침에 적응하는 것이 이미 40대에 달한 이들에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22]

---

20 본 프로젝트에 합류한 예나대학의 SFB 580연구팀이 이 자료를 전부 인수해서 동독 사회에 대한 세대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21 Köhler 1992, S. 61.

22 세대 간 관계와 연대협약: 인구통계적 발전 맥락에서 본 세대 간 조화(문서번호 134).

제3절 전환기 청소년 세대

1970년에서 1985년 사이 동독에서 태어난 그룹은 전환기 청소년 세대로 불린다. 독일의 사회학자들은 이들을 '조언받지 못한 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동독 체제하에서 1차 사회화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이 세대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와의 동일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꿈과 희망, 취미는 대부분 서방세계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이들에게는 장벽의 개방과 독일통일은 아주 큰 기회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일정한 정도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독일통일 초기에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특히 청소년 세대가 원칙적으로는 통일을 찬성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것을 알 수 있다.[23]

그러나 1970년 이후 출생한 사람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 이들이 예를 들어 정치적 변혁 이후 새롭게 신설된 대학 학과를 '막혀 있던 삶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다.[24] 서구사회의 청소년들이 당연히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구동독지역의 청소년들에게도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얻은 기회를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구동독지역을 떠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25] 1973년 동독에서 출생한 사람들에 대한 장기적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네 명 중에 한 명은 서독지역이나 외국으로 떠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통일 이후 고향에서는 자신의 연령대를 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다수는 이주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

23 Köhler 1992, p.66.

24 Stutz 2006, S. 142.

25 동서독 간의 이주 움직임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와 그것이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문서번호 23), 연방정부-동독 주민들의 분위기-융 국장이 콜 수상에게 제출한 보고(문서번호 2).

고, 구동독지역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보다 높았다.[26]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대는 부모와 조부모에 비해 체제 전환 과정에 비교적 잘 적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 이후 장기적인 조사를 근거로 보면 197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가 동독 체제하에서 보낸 자신들의 유년기를 평가하는 데에 체제 전환기의 경험이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1973년 출생한 동독 출신의 피설문자의 70% 정도는 최소한 한 번 이상 실업자가 되는 경험을 했고, 많은 경우 실업상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과거 동독에서 보낸 유년시절과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들이 과거 체제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통일 이후의 독일 상황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장벽 붕괴 시 청소년이었던 이들의 상당수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시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동독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27] 이들이 동독에서 보낸 유년기의 경험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독에서의 경험이 이와 같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장벽 붕괴 시 청소년 세대(Mauerfallkinder)'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뒷받침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전환기에 유년기를 보낸 그룹은 변혁과 체제 전환기의 고유한 체험으로 인해 다른 그룹과 구분되는 별도의 집단을 형성한다. 전환기에 유년기를 보낸 세대의 특별한 경험을 문학적으로 소화해서 발표된 작품들도 있다.

예를 들어 야나 헨젤(Jana Hensel)의 소설 '구역의 아이들(Zonen-kinder)'

[26] Berth 외. 2010, p.191 참조.

[27] Berth 외. 2010, p.190.

이 바로 그런 작품이다. 1976년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난 작가는 2002년에 발표된 이 작품에서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체제 전환을 경험한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는 우리 구역이 역사의 실험 뒤안길에 남겨졌다는 것을 안다. 그 실험으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우리이지만 그 실험에 대해 우리는 그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지 이야기로만 알고 있다. 예전의 모습대로 오늘까지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예전에 당연했던 모습들도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은 없다. 그래도 우리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집에 있듯 가장 편하게 느꼈다."[28] "우리가 자란 곳은 동독도, 통일 후의 독일연방공화국도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 지어져야만 했던, 어떤 초석도 남아 있지 않았던 그리고 어떤 목표도 아직 달성되지 않았던 그 구역의 아이들이었다."[29]

장벽 붕괴 시 청소년 세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험은 동독이 내부로부터 무너졌던 기억이다. 야나 헨젤은 이를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 옮겼다: "하나의 새로운 세대가 체제의 소멸 속에서 배태되었다."[30] 또 다른 경험은 1990년대 초반 동독지역의 혼돈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방향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모도, 교사도 당시 흔히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세대 전체가 조언 없이 자라야 했던 시절이었다. 1984년 바이마르에서 태어난 작가 안드레아 한나 휘닝어(Andrea Hanna Hünniger)는 자신의 책 '낙원, 장벽 붕괴 이후 나의 삶'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 만 24세에서 29세인 많은 동독지역의 젊은이들과 내가 모두 한결같이 경험한 것은 우리를 교육한 부모와 교사들이 언제나 우울하고 기가 꺾였으며 구부정하고 실망감에 가득한, 뭔가 부끄러워하는,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31] 이

[28] Hensel 2002, S. 155.

[29] Hensel 2002, S. 159f.

[30] Hensel 2002, S. 160.

[31] Andrea Hanna Hünniger 63.

것이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던, 스스로도 어찌할 바를 모르던 부모 세대의 상황을 잘 미루어 보게끔 하는 표현임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어찌 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 끈끈한 유대관계가 존재했던 동독에서 사회적 변혁기 동안 그러한 관계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도 하겠다. 1934년에 태어난 한 동독 출신의 여성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잘 드러난다. 전환기 이후 젊은 세대에 조언을 줄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여성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아니오, 우리는 우리대로 우선 이 골치 아픈 상황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데 매달려야 했습니다."[32]

장벽 붕괴 시 청소년 세대는 최소한 자신이 인식하기에는 더 나이든 동독 출신 사람들보다는,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의 부모들과 교사들보다는 더 빨리 '서방 세계'에 적응할 수 있었다. 종종 이들은 부모들이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최소한 그들이 느끼기에는 부모들이 그들의 도움에 의지했었다. 야나 헨젤의 책 '구역의 아이들'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온다: "우리 부모들은 지쳤으며, 이 새로운 시대에는 조금은 너무 나이를 먹었다. 그들은 막 끝나버린 시대로부터 남겨진 이들이다. 그 시대로부터 남은 것은 단지 동독 출신 방송인 카르멘 네벨, 동독식 신호등, 동독산 소주, 의류 상표인 플아에너 스핏체 그리고 민주사회당(PDS)뿐이다."[33]

'구역의 아이들'의 서평과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수상은 위의 설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만일 이 구역의 아이들 세대가 체제 전환기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들만 침착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것은 지나친 자신감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두지요."[34]

32 Interview 293, 21.8.14, Zeile 421.

33 Andrea Hanna Hünniger 80.

34 Angela Merkel, 2004, S. 75.

장벽 붕괴 시 청소년 세대의 상당수는 길고도 어려운 사춘기를 겪었다. 이 연령그룹은 새로운 '회의적 세대'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학자 쉘스키(Schelsky)가 독일통일 훨씬 이전에 서독의 전후 세대를 가리키면서 회의적 세대라고 부른 것과 달리, 장벽 붕괴 시 청소년 세대는 불확실성이라는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종교에서 의미를 찾거나,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프로젝트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다른 한 그룹은 그들만의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집단이다. 이 경우 극우단체에 속해서 활동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구동독지역의 청소년 중에서 극우적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언론을 통해 많이 논의되었다. 독일의 역사학자인 프랑카 마우바흐는 통일 이후 극우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체제 전환기에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이 독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문제지역으로 분류하는 고층 아파트촌에서 사는 것에서 느낀 안락함과 그런 안락함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상실감에 대해 기록했다. 그런 상실감은 성인이 되어서 분명한 구조를 가진, 내적으로 폐쇄된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통해 보충되었다. 청년결사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1978년생 남자는 2004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동독 시절 고층 아파트촌에서의 삶이 얼마나 좋았는지 열심히 설명했다. 그곳에서는 "밤이면 따뜻한 노란색 불빛이 촛불처럼 일렁였고, 완전히 컴컴해지는 일이란 없었다."[35] 1975년생으로 극우 정당인 독일 국가민주주의당(NPD: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의 당원인 청년 역시 2004년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와 동독에서의 어린 시절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사회는 완전히 부정적인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대신 옛날 시절을 점점 더 자주 즐겨 되돌아보게 되었다.

[35] Maubach 2004, S. 38.

그때 저녁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다른 집 어머니들과 함께 창가에 서서 창을 깨끗이 닦고 계셨고 아버지는 아래층에서 다른 집 아버지들과 좁은 화단을 가꾸고 계셨다. 집 건물을 여럿이 함께 꾸려나가던 이 아름다운 시절에 대한 기억이 뚜렷이 남았다."[36] 프랑카 마우바흐는 이러한 '질서'를 되찾으려는 장벽 붕괴 시 청소년 세대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들이 대부분 공동체적 질서에 대한 이상화된 소년기의 상상을 성년이 된 현재까지도 갖고 있으며, 그 상상은 강한 현실적 힘을 지녔다고 지적한다.[37]

2000년 이후 독일에서는 조언받지 못한 세대에 속하는 이들의 사회적 발언이 이어졌다. 그들의 일부는 2012년에 '동독지역의 제3세대(Dritte Generation Ost)'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자신들의 공통적인 경험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 이들이 자신들이 유년기를 보낸, 이제는 사라진 동독을 보는 시각은 비교적 비정치적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동독에서의 삶에 관해 이야기할 경우 부모와 자식 세대 간에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이러한 세대 간 대화가 실종되는 현상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보자. 작센주 마리엔베르크에서 1975년에 태어난 언론인 로버트 이데(Robert Ide)는 구동독지역에서 자식이 부모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서독에서 68세대나 그 이후 세대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떤 저항이나 끈질긴 요청으로 이해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체제 전환기 구동독지역에서는 차라리 "별말을 하지 않으며 고집스럽게 부모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 특별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하는 것이었다"고 회상한다.[38] 1976년생으로 구동독지역에서 화보잡지 중 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수퍼일루(SuperIllu)지 편집주간인 로버트 슈나이더(Robert Schneider)의 짧은 인터뷰는 더 함축적이다. 그는 자기 아

[36] Maubach 2004, S.40.

[37] Maubach 2004, S. 38.

[38] Ide 2007, S. 145f.

버지가 "사통당이나 비밀경찰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언론인이 하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라고까지 할 두 문장을 보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에게 혹시 그쪽에 아는 사람 없었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39]

서독의 68세대에서 그랬었던 것과는 달리 구동독지역의 독일 가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이 자주 언급되었다. 어쩌면 구동독지역의 조언받지 못한 세대가 침묵하게 된 것, 바로 그것이 구동독지역 특유의 세대 간 갈등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볼 만하다. 이제는 장벽 붕괴 시 청소년이었던 세대가 자녀를 둔 부모세대가 되었다.

[39] Dritte Generation Ost 2012, S. 167.

제3장

정치 엘리트의 변동

독일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 엘리트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가 분단기 동독 사회의 정치 엘리트에 속했는지 알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동독의 정치 엘리트를 규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분단기 동독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계급이 없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국가 지배계층조차도 스스로를 노동자 계급에 속한다고 칭했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보면 사통당 당원 신분, 당에 대한 충성도와 같은 정치적 평가기준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지도부를 충원하는 데 영향을 주었으므로 동독의 경제, 행정, 언론, 군사 부분의 지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정치 엘리트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이들이 통일 이후 새로운 정치 체제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한 연구와 통일 이후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 구동독 출신 엘리트들의 구성 방식에 관한 몇 가지 연구가 이루어졌었다.[40] 2000년

[40] Derlien, Hans-Ulrich (1997): Elitenzirkulation zwischen Implosion und Integration. Abgang, Rekrutierung und Zusammensetzung ostdeutscher Funktionseliten 1989-1994, in: Wollmann, Hellmut, u.a. (Hrsg.) (1997): Transformation der politische-administrativen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Leske und Budrich, Opladen, S. 329-417; Brueklin, Wllhem und Rebenstorf, Hilke (Hrsg.) (1997): Eliten in Deutschland. Rekrutierung und Integration, Opladen leske und Budrich; Welzel, Christian (1997): Rekrutierung und Sozialisation der ostdeutschen Elite - Aufstieg einer demokratischen Gegenelite, in: Bürklin, Wilhelm und

에 구성된 할레-예나대학의 SFB 580팀은 통일 이후 체제 전환을 거치면서 구동독지역에 새로운 정치적 엘리트가 등장했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연구팀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독일 연방의회와 지방의회에서 의원직을 수행한 6,804명의 의원들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 데이터뱅크를 구축했다.

표 2-3〉 비교 기간별 예나 의원 연구 사례 건수

(단위: 명)

예나 의원 연구		1990-1994	1994-1998	1998-2002	2002-2006	2006-2010
구서독 의원 엘리트	연방의회	550	555	558	526	519
	지방의회	1,570	1,586	1,548	1,470	1,253
구동독 의원 엘리트	연방의회	149	138	141	102	123
	지방의회	670	573	588	591	565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80/A3.

2010년에 본 연구사업에 합류한 할레-예나대학 연구팀은 구축된 데이터뱅크의 기본 자료 외에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보충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장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 아래에서는 먼저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체제 전환 과정에서 동독의 정치 엘리트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설명할 것이다. 이어서 통일 이후 등장한 구동독 출신 신진 엘리트들의 사회적 구조를 살펴본 후, 2010년 이후 독일 전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 엘리트층이 형성되었는지에 관해서 보게 될 것이다.

Rebenstorf, Hilke (Hrsg.) (1997): Eliten in Deutschland. Rekrutierung und Integration, Opladen Leske und Budrichs, S. 201-238; Solga, Heike (1995): Der Elitenimport nach Ostdeutschland: Transformationstypen und Veränderungen in der Elitenrekrutierung, In: Diewald, Martin/Mayer, Karl-Ulrich (Hg.), Zwischenbilanz der Wiedervereinigung, Opladen 1996, S. 89-111.

제1절 변혁과 구체제의 엘리트들

독일의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과도변혁기 동독의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사회적,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와 혁명을 준비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집단은 주로 엘리트들이다.[41] 일반 시민들은 변혁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동인을 제공하는 것에 주로 그 역할이 제한된다. 물론 아래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엘리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도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독일통일 과정에서는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4대 승전연합국으로 지칭되는 주변국가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소련에서 진행된 개혁 정치가 독일통일 과정에 준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1989년 가을,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무력으로 진압될 수도 있었다. 실제로 1953년 6월 17일의 동베를린 노동자 봉기는 군대에 의해 진압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8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리는 개혁정책을 천명하고,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면서 사회주의 공동체 국가들의 독자적인 노선 추구를 허용하는 시나트라 독트린[42]을 선언했다. 물론 1988년 당시 고르바초프가 독일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바란 것은 사회주의 체제 내의 개혁이었다.[43] 그러나 1989년 가을에 시작된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은 결국 걷잡을 수 없이 강력한 변혁의 물결로 변화되었다.

1989년 가을 이후 동독 엘리트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에 압도당한 상태가 되었다. 많은 수의 주민이 동독을 떠나겠다고 주변국의 서독대사

41 Dogen/Higley 1998: 15.

42 시나트라 독트린이라는 명칭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My Way'를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43 Ritter 2009, p.10.

관을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통당 지도부는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라이프치히에서 7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월요일의 촛불시위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과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이 시기에 동독 지도부의 권력이 이제 종료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사통당의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사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이유로 동독의 체제 붕괴를 설명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내부적인 파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공직을 장기적으로 집권한 재건 세대의 간부들이 '무계획적이고, 무조직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 아래로부터의 변혁요구에 대응한 것이다.[44] 이러한 상황은 베를린 장벽의 개방을 불러온 귄터 샤보브스키의 11월 9일 기자회견과 에리히 밀케가 1989년 11월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정말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라고 맹세한 순간 더욱 분명해졌다. 1989년 11월에 동독의 엘리트들은 반체제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운동 단체들에 의해 주도되는 변혁운동을 거의 관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당시에 개혁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조차도 시민운동의 동력과 그 운동의 막강한 힘에 놀랐다는 이야기도 있다.[45]

그러나 기존의 엘리트 세력이 사회변혁운동에 무기력하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 동독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원탁회의가 조직되었고, 기존의 정부 대표를 비롯해 위성정당과 새로운 정당 및 각종 단체의 대표들은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동독의 개혁과 민주화 추진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원탁회의는 지역 단위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의 중앙 원탁회의도 설치되었

[44] Edinger 2004: p.66.

[45] Edinger 2004: p.66.

다. 동독과 서독의 모든 언론은 원탁회의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고, 동독의 국민들은 이러한 보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통일당이 권력을 독점했던 과거의 구조들은 그 정당성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락했다. 중앙 원탁회의는 동독 역사에서 최초로 자유총선거를 통해 최고인민회의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일을 1990년 5월 6일로 잡았다가, 그것도 3월 18일로 앞당겼다.

1990년 3월 18일의 자유총선거를 통해 동독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엘리트 교체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선거를 통해 새로운 세력들이 대거 권력의 중심부에 진출했지만 이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동독 국가기구를 청산하고 서독과의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은 처음부터 자명한 사실이었다. 총선거에서 신속한 통일을 정책으로 내세운 로타 드 메지에르가 이끄는 '독일을 위한 연맹'이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동독 주민들의 절대적인 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3월 18일에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는 1990년 8월 31일의 회의에서 동독지역을 1990년 10월 3일 자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편입하기로 결의했다.

제2절 개혁과도기 동독 구체제 엘리트의 잔류와 새로운 엘리트의 충원

동독의 엘리트 교체는 총 4개의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제1기는 1989년 10월 18일 에리히 호네커의 사임을 기점으로, 제2기는 1989년 11월 17일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의 취임을 기점으로, 제3기는 1990년 3월 18일의 인민회의 선거를 기점으로, 제4기는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을 기점으로 본다.

제1기의 엘리트 교체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1989년 3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 조작이 증명되고, 외교적으로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 후 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1989년 초까지만 해도 동독의 정세는 안정적인 것으로 비추어졌으며, 동독의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서

독의 관측자들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때문에 동독의 엘리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헝가리 국경 개방으로 거세진 탈출의 물결과 점차 자각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운동에 직면했었다.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무능력함이 분명히 드러났다. 1989년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 7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열린 이후, 에곤 크렌츠를 비롯한 정치국과 SED 중앙위원회에 소속된 동독의 핵심 엘리트 중 일부는 자기 자신들의 직위를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엘리트 순환을 통해 새로운 행동의 여지를 열어 둘 시점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월 18일에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호네커의 사임으로 인해 동독의 반체제 세력과 사통당 내의 개혁 세력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그 후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동독의 권력 구조는 내적으로 '파열'되었다. 이 시기에 기존의 엘리트들에 의해 사회적 지위상승의 기회가 봉쇄되었던 세대가 엘리트 직위로 진급하고, 당시까지 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구엘리트 세력이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권력구조의 변화를 통해 여러 개의 고위 간부직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구체제의 엘리트 세력이 물러난 자리를 신규 엘리트로 충원하지 않아도 되었다.[46]

변혁이 일단 시작된 이후 동독에서 엘리트 퇴직은 매우 신속히 이루어졌다: 1989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10월 18일 이전까지 현직에 있던 793명의 간부 중 57%가 퇴직했다〈표 2-4〉. 동독의 중앙집권적이며 위계질서적인 조직구조에 따라, 엘리트 교체는 1989년 12월 초 SED위원회 전체가 해산된 SED의 정치국과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수평적으로는 국가 행정기관과 위성정당, 정치 외 분야의 엘리트를 대상으로, 수직적으로는 하위 간부진과 지역행정기구로 이어졌다. 1989년 11월 말까지 15명의 지역 제1 비서들이 퇴직하였고, 13명의 제1 부서기를 비롯해 142명의 사통당 군 단위 지부 제1 비서들이 교체되었다. 새로이 선출된 사통당 중앙위원회급의 당 최고 대표위원

[46] 브란덴부르크 정당의 인사 관리 영속성과 엘리트 이동-앙케이트위원회 의견서(문서번호 158).

104명 중 구중앙위원회 출신 인물은 단 4명에 불과했다.

표 2-4〉 시기 및 분야별 호네커-엘리트의 퇴직(절대 수치)

	1989				1990								
주요 직책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10월	11월 (임기 중)	무	합계
최고직 정치인		2	199	5	9		17	11				3	246
의회		1	4				9						14
SED 중앙기구		1	11	64								1	77
SED 지역기구				14									14
위성정당 중앙기구													
위성정당 지역기구				34	1	1			1			13	50
대중조직/연맹 중앙기구			3	1		2					2	1	9
대중조직/연맹 지방기구			7	34								28	69
슈타지			38	2			2						42
지역 의회 대표			6	1			1		5			1	14
인민경찰/국가보위부 지역 지도부			2	2	2							22	28
중앙 사법부			1	1	1							4	7
중앙 국방부												3	3
중앙 경제부							1		131			6	138
교육			4	4			2	1			2	17	30
언론				12								3	15
교회			1				1				11	1	14
총 퇴직 건수		4	276	174	13	3	33	12	137	20	15	(103)	793
월별 비율(%)		0.5	35	22	1.6	0.4	4.2	1.5	17	2.5	1.9	13	100

출처: Derlien 1997: 342.

이 시기에 이루어진 해고와 퇴직, 해임은 모두 사통당과 위성정당, 대중조직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정당이 사회적으로 새로운 지지기반의 구축과 함께 자신의 지위 상승을 추구하는 세대의 강력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개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한스 모드로우가 11월 17일에 각료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1989년 12월 1일에는 국가 체제에서 사통당이 지도적인 역할을 독점한다는 헌법 조항이 삭제되었다. 중앙 원탁회의가 설치된 후 원탁회의 소속 의원의 일부가 1990년 2월 5일에 정부로 흡수되었다. 엘리트 교체 2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 중에, 늦어도 12월 이후에는 엘리트 선발의 기준이 정치적 동기 외에 대중의 여론과 사법적 비판을 통해 보충·강화되었다. 이 시기의 비판은 주로 개혁된 이상사회를 구축하기를 꿈꾸던 시민단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구체제의 엘리트 퇴직은 저항운동을 주도하던 대안 엘리트들의 자동적 진급을 가져오지 않았다. 구체제 엘리트들의 퇴직률이 가장 높았던 달인 1989년 11월의 경우 퇴직자 수가 266명이었지만 새로이 채용된 수는 16명이었다. 구체제 엘리트의 퇴직자 수와 새로이 진급한 신진 엘리트 수가 불일치하는 이유는 많은 수의 엘리트직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사통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국방위원회의 해체 및 각 정부 부처의 관료주의 축소로 인해 엘리트직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적 조직 외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 분야에서 이미 1990년 초부터 민영화 작업이 추진되었으며, 언론과 노조, 대중 조직들 또한 중앙 조직에서 독립하거나 완전히 해체되어, 당시까지의 중앙 감독조직까지도 소멸되었다. Derlien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89년 10월 18일 이전 453개였던 엘리트직이 1990년 3월 18일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드 메지에르 정부에서는 184개로 줄어들었다.[47]

엘리트의 신규 충원 수가 적었던 또 다른 이유는 구체제의 엘리트들이 상당 부분 잔류하였기 때문이다. 한스 모드로우의 취임으로 시작되는 제2기에는 호네커 사퇴(1989년 10월 18일) 이전에 재직하고 있던 엘리트의 60%가 이전의 직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분야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한스 모드로우를 중심으로 하는, 이전 정부보다 훨

[47] Derlien 1997: 338.

씬 더 축소된 사통당 중앙조직 내에는 과거 호네커 시절의 엘리트 중 한 명(16.6%)만이 남아 있던 데 반해, 국가 행정기관(58명 중 42명)과 교육 분야(33명 중 23명)의 경우 구체제 엘리트 출신의 잔류 비율이 약 70%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제 엘리트 출신 중 자신의 활동 분야만을 바꾼 인물들도 있었다: 이러한 인물들을 엘리트 커리어를 지속한 인물 수에 더하면 한스 모드로우 임기 중 구체제 엘리트 출신의 잔류 비율은 69%로 높아지게 된다.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최고인민회의 자유총선거 이후 로타 드 메지에르 정부가 구성되면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관직에 남아 있던 구체제 엘리트 세력의 해고와 해임이 이루어진 엘리트 교체 제3기가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동독 구체제의 엘리트 세력 중 약 1/3이 관직에서 물러났다〈표 2-4〉.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권력 이양 이후 엘리트로서의 커리어를 지속한 구체제 엘리트 출신의 비율은 다시 한번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 결과 로타 드 메지에르 정부의 신진 엘리트들의 비율은 66%로 비교적 높았다. 호네커 실각 전부터 동독 엘리트로 활동한 사람들 중 드 메지에르 정부 시기에 간부직을 차지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10차 최고인민회의는 회기 동안 정치 인력의 검증과 경우에 따른 해임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최고인민회의 검증위원회). 당시까지 사통당 내부에서 진행되던 엘리트 청산은 이를 통해 체계적이며 사법적인 검증을 통해 보완되고, 대체되었다. 이러한 검증 작업은 행정기관과 법조인, 학자들에 대한 검사-검증위원회, 판사-선출위원회, 대학-윤리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의 모델이 되었다.[48]

일반적으로 단순한 사통당 가입 여부는 해고 기준이 아니었다. 사통당 가입 여부보다 큰 논란을 야기한 것은 슈타지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위부의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협력 문제였다. 비공식적인 협력의 경우 진위 여부를 증명

[48] Derlien 1997: 348.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 슈타지 문서 연방관리청의 설립으로 용이해지기는 하였으나, 비공식 활동의 조사 결과의 해석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49]

정치 엘리트들에게 있어 슈타지와의 협력이나 정치적인 고위직을 통해 동독 정권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경력은 입후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당선 이후라도 그런 활동 경력이 밝혀질 경우 해임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1990년 초에 자유총선거와 지방의회를 위한 선거전에서 각 정당들은 입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슈타지 과거가 있는 인물들을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에 슈타지 활동을 했던 전력은 후보자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결정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 여러 차례 폭로된 것처럼, 정당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슈타지 활동 전력이 있는 입후보자들을 완전히 가려내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제3절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 출신 신진 엘리트의 충원

1990년 10월 3일과 통일 후 동독의 국가 구조는 완전히 해체되고, 동독 구체제의 엘리트 직책들은 모두 사라졌다. 1989년 10월 18일과 1990년 10월 3일 사이에 퇴직하였거나 새로이 채용된 동독 엘리트들 중 243명의 경우 1990년 11월까지 이들이 수행한 직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존재한다〈표 2-5〉. 그러나 이들 중 절반이 넘는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는 잔류에 관한 정보를

[49] 동독 출신의 판사와 검사의 재임용에 대한 브란덴부르크주 결정기준(문서번호 29), 동독 슈타지를 위한 활동에 대한 근무법적 판단을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초안(문서번호 89), 동독 출신 인력의 검증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의 고등교육기관의 조치(문서번호 100), 제11차 의원법 개정법(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브란덴부르크주(문서번호 153), 사회통일민주당 평가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앙케이트위원회(EK 5/1)-인물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의견서(뤼디거/카텐후센)(문서번호 157).

확보할 수 없었다. 그것은 해당 인물들이 의사 결정과 관련된 고위직에 잔류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의 잔류 여부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큰 문제없이 확인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608명 중 134명, 즉 22%는 1990년 11월에 은퇴했다.

통일 직후인 1990년 11월에 신연방주의 지방정부 또는 연방정부에서 장관 혹은 차관으로 활동한 13명의 엘리트들은 새로운 체제에서 엘리트 기능을 가장 먼저 확보할 수 있었던 그룹이었다. 연방의회, 지방의회, 유럽의회에서 의원직을 맡은 33명은 동독 구체제의 서브-엘리트 출신이었다. 한편, 과도개혁 초기에 사법적 형사재판에 의해 구금된 구체제 엘리트들의 수가 매우 적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많아졌다. 그러나 1997년까지 과거의 동독 엘리트들을 상대로 진행된 27건의 형사소송 중에 피고의 연령이 높아 재판 참석이 불가능해 소송이 취하된 경우도 있었다.

표 2-5〉 1990년 11월 과거 동독 엘리트 및 과도기 엘리트의 잔류(절대 수치)

1990년 11월 후속 직책	호네커 기간의 엘리트	모드로우 1기 신규 채용	모드로우 2기 신규 채용	드 메지에르 신규 채용	합계 1989-1990
대학: 강사	1				1
대학: 교수	1	2			3
대학: 기타	1				1
언론	4				4
연맹/협회	4	2		1	7
교회	12				12
행정	1	5		7	13
입법	4	16	5	13	38
자유직	4	2			6
비숙련공	2				2
일반 직원	3			1	4
관리 직원	4			2	6
실업자	2	1			3
은퇴자	132	2			134
구금	4				4
사망	4				4
기타	1				1
무응답	269	24	6	66	365
직책 소유자 합계	453	54	11	90	608

출처: Derlien 1997:361.

통일 직후 구동독(신연방)지역의 엘리트에 대한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먼저 간단히 요약하면, 구동독 출신 신진 엘리트들의 평균 연령은 1990년 이후 5년 내에 62세에서 47세로 낮아졌다. 이러한 급격한 평균 연령의 감소는 1920년대 후반에 출생한 구체제의 엘리트가 퇴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엘리트 내 여성의 비율은 5%에서 30%로 상승했다.[50] 사실, 동독 구체제의 엘리트를 비롯해 체제 전환기에 기용되었던 엘리트들은 통일 이후 엘리트직에 거의 오르지 못했다. 신연방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엘리트 직책들은 그들과는 다른 인물이나 다른 사회집단에 의해 채워졌다. 새로 충원된 구동독 출신의 신진 엘리트들은 주로 공학 분야의 지식인, 동독의 서브 엘리트에 속하던 전문가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동독의 반체제 인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기할 점이다. 그 외에 많은 수의 엘리트가 서독지역으로부터 충원되었다.

구동독 출신의 신진 엘리트들 중 대학 졸업자 비율을 보면 1995년에 80%였다. 이것은 구서독 출신의 엘리트 중 대학 졸업자 비율과 유사하다.[51] 그들의 전공을 보면 동독 구체제의 엘리트와 달리 자연과학이나 공학과 같은 정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진 분야를 공부한 사람이 지배적이었다〈그림 2-5〉. 이러한 전공 분야들은 동독 체제하에서도 고위 전문직 엘리트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영역이었다. 그 외에 신연방지역 주민의 일반적인 구성과 비교할 때 구동독 출신의 신진 엘리트들 사이에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던 이유 또한 신학이 체제 이데올로기에 의한 정치적 도구화의 가능성이 없었다. 동독 체제하에서 이들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감시당하던 그룹에 속했다. 한편 통일과 체제 전환 이후 동독 사회의 제도적 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던 전공 분야와 그 전문 지식의 가치가 얼마나 상실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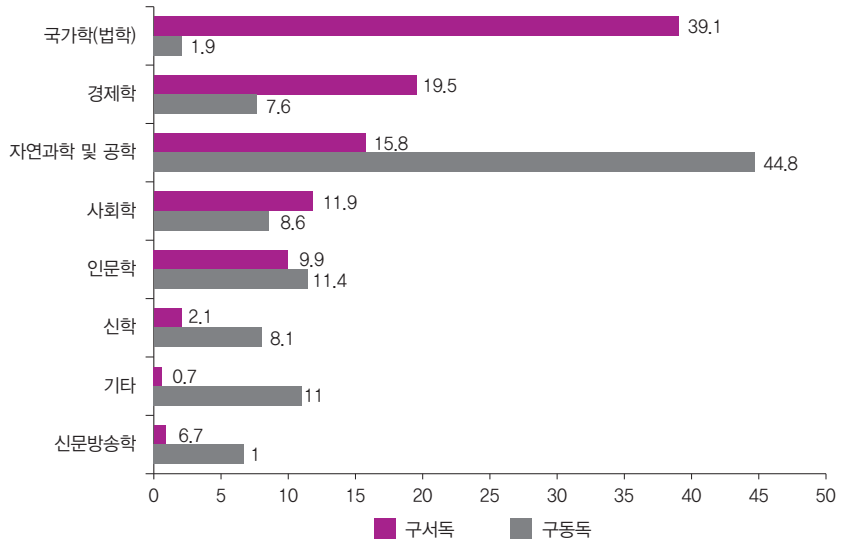
50 Welzel 1997: 208f.

51 독일의 학제에서 대학 졸업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한국과 비해 아주 낮다. 1995년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이 30%가 되지 않았다.

는가는 신연방지역 출신의 엘리트들 중에 정치학 및 경영학을 전공한 인물들의 비율이 낮아진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동시에 서독지역 출신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법학, 정치학, 경영학 전공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림 2-5〉 동서독 엘리트 중 대학 졸업자들의 전공 분포(1995)

(단위: %)



출처: Welzel 1997: 210, 포츠담 엘리트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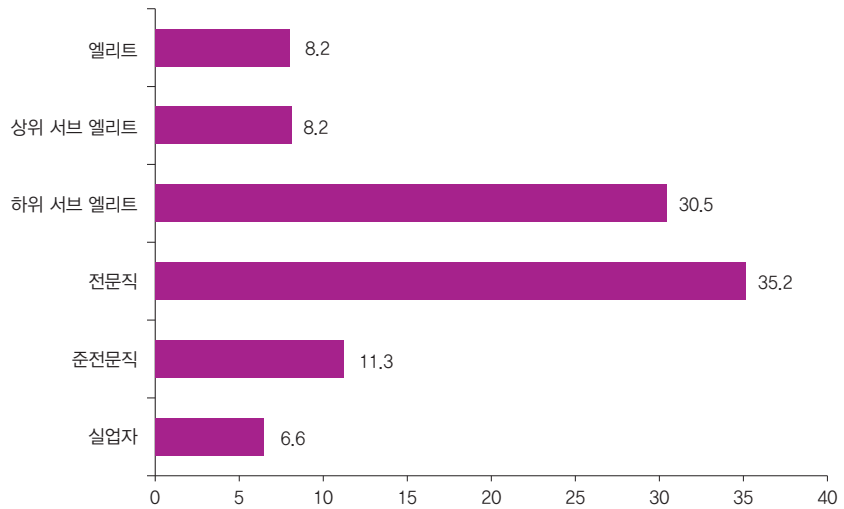
신연방지역 출신의 신진 엘리트들의 경우 동독의 구체제에서 어떤 사회적 분야와 위계질서층에 속했었는지에 관해서는 〈그림 2-6〉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1995년을 기준으로 보면, 신연방지역 출신 신진 엘리트들의 70%는 1988년에 가졌던 직위, 직책과 무관한 분야에서 활동한 것으로 포츠담지역의 엘리트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결과 드러났다.[52] 서독지역 출신 엘리트의 경우 분야를 완전히 변경한 비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신연방지역 출신 신진 엘리트들이 동독 구체제하에서 수행한 직책을 보면 위계질서에 따른 직급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1995년의 포츠담 엘리트 연구는 군

[52] Welzel 1997, p.213.

(Kreis) 혹은 지역(Kommunal) 차원에서 지도적인 위치(Spitzenposition)를 맡은 인물들을 모두 '상위 서브 엘리트(obere Subelite)'로 분류하였고, 반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예: 부장(Abteilungsleiter)) 조직 내부의 부문별 장(Leiter)들을 하위 서브 엘리트(untere Subelite)로 분류하였다. 위계질서에 있어 하위 서브 엘리트 아래에 위치한 직업군으로는 대학 졸업을 자격요건으로 요구하지만, 관리자급의 직책을 부여받지 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 위계질서 최하위 두 직급에는 서브 전문직 종사자(Subprofession)들과 실업자들이 속한다(Welzel 1997: 216f).

그림 2-6〉 신연방지역 출신 신진 엘리트들의 직위/직업(1988)

(단위: %)



출처: Welzel 1997: 217, 포츠담 엘리트 연구.

1995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시기에 신연방지역 출신 신진 엘리트 중에서 1988년부터 엘리트 직위를 수행했었던 사람의 비율이 8%에 그친 데 반해, 서독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50%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신연방지역에서 거의 완전하게 엘리트 교체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특기할 것은 동독 구체제하에서 하위 서브 엘리트군에 속했던 사람과 전문직 종사

자들이 1989년 이후 신연방지역 출신 신진 엘리트로 진출한 수가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동독 구체제하에서 엘리트 직급으로 오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많은 경우 새로운 체제하에서 엘리트로 진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동독의 구체제하에서 엘리트로 오를 수 있는 경로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동독 체제가 지속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들이 꼭 지도적인 엘리트 직위에 올랐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물론 없다. 그렇지만 이들은 분명히 1988년에 동독 체제의 조직구조 틀에서 관리직 기능을 수행하는 직위에 올랐었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통일 이후 새로운 체제에서 엘리트로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그들이 고위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외부에 거의 노출되지 않아서 동독의 시민들이 지도적 지위에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은 동독 구체제에서 당지도부에 속했던 지도적 인물들과 고위 관료들과 달리 사통당 구체제와 직접 연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단 조직구조 내에서 관리자급의 직위를 수행한 경험을 통해 관리기획 및 지휘능력을 획득할 수 있었고, 그 능력을 통일과 체제 전환 이후 새로운 제도적 조건하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다. 1988년 당시 동독 구체제하에서 하위 서브 엘리트로 분류될 수 있는 집단의 인원은 당시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보다 훨씬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새로운 체제하에서 신진 엘리트로 진출한 사람 중에 그들의 비중이 전문직 종사자 비율보다 약간 낮을 뿐이다. 그것은 구체제 하위 서브 엘리트 중에서 새로운 체제의 엘리트로 충원된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직종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동독 구체제하에서 획득한 관리능력이 이전과 동일한 분야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체제하에서 다른 분야의 신진 엘리트로 충원되기 위한 좋은 자격요건을 만들어준 것이다.[53]

[53]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이주 또는 머무르기? 동서독 간의 노동시장 연계성에 대해(문서번호 11).

동독의 구체제하에서는 어떤 형태든 엘리트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통당에 가입해야만 했었다.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도 정당 가입이 요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1995년에 조사된 신연방지역 출신 신진 엘리트의 절반 정도가 이미 동독 구체제하에서 사통당 또는 위성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이 사통당 당원이었다〈표 2-6〉.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사통당과 다른 위성정당 내에서 밖으로 드러날 정도의 비중 있는 직책을 맡지 않았었다. 어쩌면 맡고 싶었지만 맡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구체제의 핵심적인 엘리트그룹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통당 또는 다른 위성정당의 당원이었다는 사실이 1989년 이후에 엘리트직을 맡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표 2-7〉.

표 2-6〉 신연방지역 출신 신진 엘리트의 동독 구체제 정당 활동

	비율(%)
SED 당원	28.0
위성정당 당원	17.5
무소속	30.3
반체제	24.2
합계(명)	268

출처: Welzel 1997: 219, 포츠담 엘리트 연구; 분류 근거-1995년 기준 설문조사 대상 엘리트들이 진술한 자가 정보.

표 2-7〉 당원 중 지역 단위별 당 직책 수행 비율

	비율(%)
DDR 전국 단위 당직	2.3
지역	9.0
군	10.5
마을	10.5
무직	67.7
합계(명)	133

출처: Welzel 1997: 220, 포츠담 엘리트 연구.

통일 이후 신진 엘리트로 충원된 사람 중에 1989년 10월 이전, 동독 구체제하에서 저항운동을 주도했던 반체제 인사였던 사람들의 비중은 24.2%였다. 동독에서 반체제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주민 전체 중에 0.3% 정도 되었던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체제 인사가 신진 엘리트로 채용된 비율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새로운 체제에 등용된 신진 엘리트 중에서 동독 구체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시민운동 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25%가 채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다.

통일 이후 충원된 신연방주 출신 신진 엘리트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계층은 어떤 소속도 없었던 일반적인 주민들이다. 이들은 동독 전체 인구의 약 78%를 차지했었다. 동독 구체제하에서 많은 경우 사회적, 정치적 출세를 위해 정당, 특히 사통당에 가입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일 이후 새롭게 충원된 신연방주 출신 신진 엘리트의 압도적인 비율이 이미 동독 구체제하에서도 최소한 정치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제4절 서독 출신 엘리트의 충원

1989년 가을 시민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시작된 후, 동독의 기관들이 행정 전문가를 비롯해 법조인, 정치인 등 다양한 부류의 서독 출신 인사들을 자문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중앙 원탁회의의 결정으로 1990년 3월 18일에 최고인민회의 자유총선거가 실시되는 것이 확정된 후에는 서독의 정당과 이익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독에 있는 유사한 기관과 통합을 추진했다. 동독의 정당 단체들과 비교할 때 서독 정당과 단체들이 당원/회원 수가 월등히 많고 재정능력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했기 때문에 통합과정 자체가 서독 정당과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동시에 동독인들이 그들의 경영관리 방식에 익숙하지 못하고, 관리경험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과 조

직의 통합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조직의 구조를 대부분 서독인들이 점령했다.[54] 통일 이후 체제 전환 과정에서 서독의 제도가 대거 구동독지역에 새롭게 구축되면서 행정관리 능력을 갖춘 서독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이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통일된 독일의 엘리트 구조가 두 가지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 그 하나는 독일 엘리트 전체적으로 볼 때 구동독지역 출신 엘리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신연방지역의 신진 엘리트 중에 서독지역 출신 인물의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55]

1989년 전까지 동독에 살았던 인물들 중 엘리트 직책을 맡은 이들은 12%에 불과했다〈표 2-8〉. 전독일 대비 동독 국민들의 비율이 21%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비율은 확실히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연방지역 출신 신진 엘리트의 비율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특히 대기업과 행정, 사법 분야에서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 엘리트의 최상위층의 경우에는 신연방지역 출신 엘리트의 비율이 32.1%로 전체 국민 중에 구동독지역의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 그것은 신연방주의 지역 단위 기구에 비교적 많은 직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표 2-8〉 통일독일 엘리트의 출신지역 비율(1995)

	합계(명)	서독지역(%)	신연방지역(%)
정치	498	67.9	32.1
행정	474	97.5	2.5
대기업	249	99.6	0.4
기업 연맹	173	91.9	8.1
노조	97	87.6	12.4
대중언론	281	88.3	11.7
합계	1,772	88.4	11.6

출처: Hoffmann-Lange 1999: 325, 포츠담 엘리트 연구.

54 Hoffmann-Lange 1999: 324.

55 브란덴부르크의 정부 엘리트(문서번호 141).

엘리트로 분류되는 직위를 해당지역에 따라 분류해 보면 동서독지역 출신 엘리트의 불균형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정치적 엘리트로 규정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신연방지역 출신의 비율은 연방의회의 경우 22.3%로 독일 국민 중에서 신연방지역의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다〈표 2-9〉. 일반적으로 존재감이 드러나며, 상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장관직에만 그 포커스를 맞추어 보면, 통일된 지 3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2018년까지도 신연방지역 출신 정치 엘리트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 통일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신연방지역 출신 연방 장관의 비율이 단 한 번도 13%를 넘어선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 이후 오히려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앙겔라 메르켈 수상 4기 내각에는 단 1명의 장관이 신연방지역 출신이다.[56] 통일된 후 15년 만에 연방정부의 수상으로 신연방지역 출신 앙겔라 메르켈이 선출되고, 요아힘 가우크가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였다.

표 2-9〉 1995년 독일 엘리트 중 연방 및 연방주 활동 지역의 동서독지역 출신의 엘리트 비율(1995)

출신	연방의회	서독지역 지방의회	신연방지역 지방의회	연방정부 행정부	서독지역 지방행정부	신연방지역 지방행정부	서독지역 기타 엘리트	신연방지역 기타 엘리트
서독지역	77.7	98.4	13.1	98.4	100.0	87.3	98.6	46.8
신연방지역	22.3	1.6	85.9	1.6	0	12.7	1.4	53.2

출처: Hoffmann-Lange 1999: 326, 포츠담 엘리트 연구.

통일된 독일의 정치, 사회 모든 영역에 서독지역 출신의 엘리트들이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다. 이들이 신연방지역의 행정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87.3%에 달한다. 반면에 신연방지역 출신 인물이 서독지역의 주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여전히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엘리트 충원에 있어서는 동서지역 간에 명확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서독지역 출신

[56] 사민당 소속 프란치스카 기파이 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 장관이 신연방지역의 프랑크푸르트-오더 지역 출신이다.

은 신연방지역에서도 엘리트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데 반해, 신연방지역 출신의 경우 극히 일부만이 서독지역에서 엘리트직위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인구 이동의 방향이 주로 신연방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향했던 것과 정반대였다.

물론 서독지역 출신이 신연방지역에서 엘리트직을 대거 점령하고 있는 이유가 신연방지역의 제도를 서독의 모델에 따라 개혁하거나,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통일 이후 독일 전역에서 필요로 하게 된 군사, 연방정부의 부처 행정, 사법, 대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지식은 1989년까지 대부분 서독에서만 습득할 수 있었다. 동독의 구체제에서 습득했던, 동독의 제도 운용을 위해 필요했던 전문지식은 체제 전환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독지역에는 신연방지역으로 전보발령 받는 것을 커리어를 쌓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더욱이 서독지역에서 신연방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로 지급되는 '야생근무수당(Buschzulage)'과 함께 승진 기회도 제공되었다. 그 결과 체제 전환 과정에서 동독 구체제의 엘리트들이 물러나면서 발생한 엘리트의 공백은 신연방지역 출신의 신진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서독지역으로부터 새로운 엘리트를 충원함으로써 채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 3월 동독의 자유총선거와 통일 이후 이 지역에서 동독 구체제의 엘리트들이 보유했던 전문지식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57]

통일 직후 독일의 정치와 행정, 사법 모든 분야에서 직급이 높아질수록 서독 출신 인물의 비율이 높아졌다. 중하위 관리자급의 경우에는 서독지역 출신 엘리트들의 비중이 상위급에 비해 훨씬 낮았다.[58] 물론 여기에서도 분야

[57] Welzel 1997: 214.

[58] Derlien 1997: 396.

별로 차이가 있었다. 정치 영역에서도 서독지역 출신의 비율이 아주 낮은 분야가 있었다. 그것은 대부분 필요한 정치적 전문지식을 특수한 정치적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근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분야였다. 정치적인 직위는 상급기관의 임명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만 맡을 수 있는 것이었다. 선거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지역출신이라는 친근감과 지역 시민들과의 신뢰 관계, 구동독지역 주민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대표해 준다는 것이었다. 결국 군사, 행정, 사법, 경제 분야와 같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규정에 따라 단계적인 경력을 쌓는 것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신연방지역 출신이라는 것이 단점이었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엘리트로 충원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그런 배경지식을 가지고 보면 신연방지역의 정치 엘리트 중에서 서독지역 출신 엘리트의 비율이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지역 출신이 두 개의 신연방주에서 주총리직을 수행한 외에도 신연방주 정부의 내무부, 법무부, 대도시의 행정수장 등과 같이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고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는 요직을 맡았던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서독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통일 직후 신연방주에서 상징적이고, 눈에 띄는 정치 요직을 맡으면서 신연방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식민지화'된 것이 아니냐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식민지화'라는 개념은 물론 서독 출신 외부세력에 의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다는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통일 이후에도 독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본사가 대부분 서독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 그런 감정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민지화'의 감정은 통일 초기에 신연방지역의 주민들이 서독지역 출신 독일인들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내적인 통합을 어렵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제5절 구체제 엘리트의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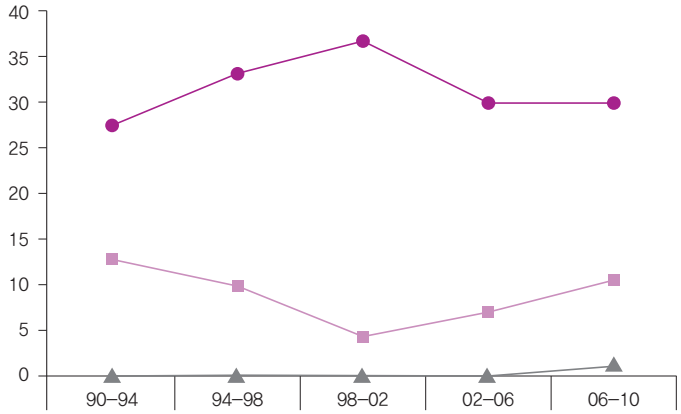
예나대학의 연구팀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1989년 이후의 사회 전반에 걸친 분야별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정치 엘리트의 변화가 그대로 고착화되었는지, 아니면 사라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장기적인 시기를 포괄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독일 연방의회와 연방주의 주의회 소속 의원이었다. 정치 엘리트의 일부에 제한된 연구이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연방지역의 정치 엘리트의 변동을 대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연구로 간주된다. 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엘리트 출신지역 비율의 불균형이 여전히 지속된다. 2. 동독 구체제의 엘리트는 복귀하지 못했다. 3. 과도개혁기에 등장한 정치 엘리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신연방지역에서 정치 엘리트 중에 서독지역 출신 인물의 비율은 여전히 높고, 독일 전체적으로 볼 때 신연방지역 출신 엘리트의 비율이 낮다는 문제는 통일된 지 20년이 지난 2010년의 조사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연방지역 출신이 연방정부 내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변함없이 낮은 데 비해, 신연방지역의 주정부 장관 중에 3분의 1이 서독지역 출신이었다. 이 수치는 2018년까지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반대로 2009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신연방지역 출신의 여성 장관이 서독지역의 주정부 내각에 최초이자 유일하게 임명되었다〈그림 2-7〉.

그림 2-7〉 연방정부와 주정부 장관의 출신 지역 비율

(단위 : %)



	90-94	94-98	98-02	02-06	06-10
연방정부 내각 신연방지역 출신	12.9	10.0	4.5	7.1	10.5
서독지역 주정부 내각 신연방지역 출신	0.0	0.0	0.0	0.0	1.2
신연방지역 주정부 내각 서독지역 출신	27.8	33.3	36.8	30.2	30.2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80/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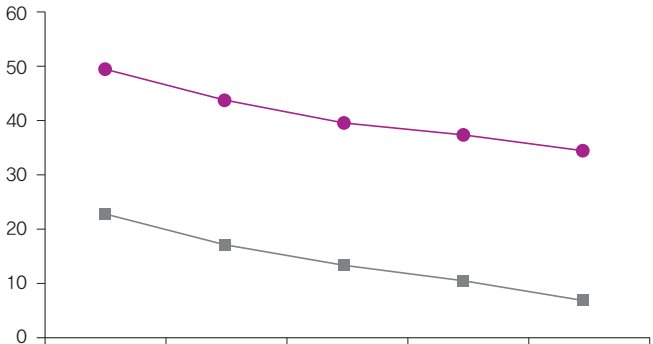
연방의회와 주의회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연방의회에서조차도 신연방지역 출신 의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 이유는 많은 지역구에서 서독지역 출신의 인물들이 후보로 공천되는 데 성공하기 때문이다. 신연방지역의 지방의회에서도 서독지역 출신 의원의 비율이 통일 후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가 점차 주춤하면서 서독지역 출신이라는 사실이 점차 신연방지역에서의 정치적 커리어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서독지역의 지방의회에서 신연방지역 출신의 의원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1990년대 중반의 조사에 따르면 신연방지역 출신 엘리트들은 동독 구체제하에서 상위 엘리트 직위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사통당이나 위성정당의 당원이었으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하위 서브 엘리트 직책을 수행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했다. 연방의회 의원들에 대

한 조사 결과가 그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1990년에 처음 실시된 지방의회와 최고인민회의 자유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과 최초의 전 독일 연방의회(1990~1994년)에 선출된 신연방지역 출신 의원들의 절반이 이미 1989년 이전에 당원이었다〈그림 2-8〉.

그림 2-8〉 1989년 이전 동독 구체제하에서 정당에 가입 혹은 정치적 관직/의원직을 수행한 의원

(단위: %)



	90–94	94–98	98–02	02–06	06–10
1989년 이전 동독 간부	22.8	17.1	13.4	10.1	7.1
1989년 이전 당원	49.1	44.0	39.8	37.7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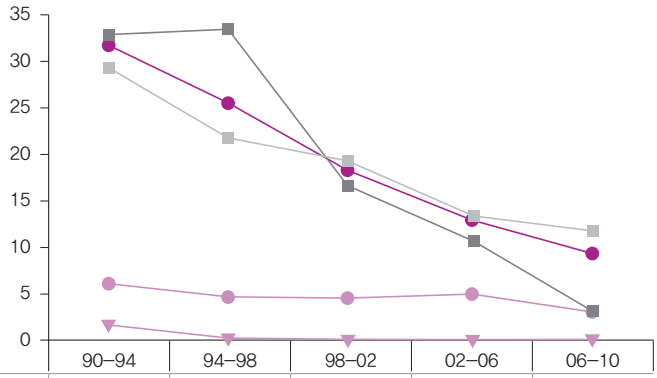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80/A3, 정치적 관직/의원직: 시평의회, 읍-면 의회, 시의회, 군평의회, 군의회, 시장, 지방평의회, 지방의회, 인민의회, (사통당) 지방 행정부 서기관, 장관 및 차관, 동독 과거 정권의 직책에 속한 최종 기일은 지방 차원의 직책의 경우 1990년 5월, 중앙 차원의 직책의 경우 1990년 3월 말이다.

2010년에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예나대학의 연구팀은 동독 구체제의 정권과 연관된 인물의 비율이 통일 이후 연방의회 회기가 순차적으로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동독 구체제하에서 정치적 관직이나 의원직을 수행한 사람들은 2010년 현재 연방의회와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1989년 이전에 공개적으로 노출된 간부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연령의 문제로 인해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과 직접 연관된다. 참고로 과도개혁 1기에 동독 정부의 총리직을 수행했던 한스 모드로우의 경우에도 1990년에서 1994년까지 연방의회, 1995년에서 2000년까지는 유럽의회의 의원직을 수행했었다. 2000년에 그는 72세였다.

1989년 이전 동독의 구체제하에서 정당에 소속되었던 인물의 비율은 1990년 신연방지역 출신 정치 엘리트의 약 절반에 이르렀던 데 반해, 2010년에는 약 1/3로 줄어들었다.

신연방지역 출신 엘리트의 변화는 통일 이후 정당 간의 세력관계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1990년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독의 구체제하에서 그 어떤 공직도 맡은 경험이 없는 인물들이 소속된 정당들이 연방의회와 주의회를 지배했다〈그림 2-9〉.

그림 2-9〉 1989년 이전 동독 구체제하에서 정치적 엘리트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의원의 수



	90–94	94–98	98–02	02–06	06–10
CDU	31.9	25.5	18.4	13.1	9.2
SPD	6.0	4.7	4.7	5.3	3.3
FDP	32.8	33.3	16.7	10.8	3.3
PDS/Die Linke	29.3	21.7	18.7	13.3	11.8
B90/Grüne	2.1	0.0	0.0	0.0	0.0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그나마 소수 남아 있었던 동독 구체제하에서 기능 엘리트 역할을 담당했던 그룹의 비중도 1989년 이전에 동독에 존재했던-기민당, 민사당/좌파연합, 자민당 등-모든 정당에서 감소하는 추세였다. 사통당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민사당/좌파연합도 동독 구체제하에서 고위직을 수행한 것이 선거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구동독지역에서 1990년에 처음 창립된 사민당과 녹색당의 경우 동독 구체제하에서 고위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한번도 6%

를 넘지 않았다. 체제 전환 초기에 사민당과 녹색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했던 사통당 당원의 입당 금지 조항이 1990년대 중반에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1989년 이전에 사통당과 위성정당의 당원이었던 인물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동독 구체제하에서 위성정당의 후신인 기민당과 자민당의 경우 동독 시절에 위성정당에 가입했던 당원의 비율이 1990년 60%가 넘었던 데 비해, 2010년에는 1/3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사통당의 후속 정당인 민사당/좌파연합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도 당원의 60%가 넘는 비율이 동독 구체제하에서 이미 당원이었던 사람들이었다. 1989년 과도개혁기 동독에서 정당으로 설립된 사민당의 경우 구체제하에서 정당에 소속되었던 비율은 1990년대 말까지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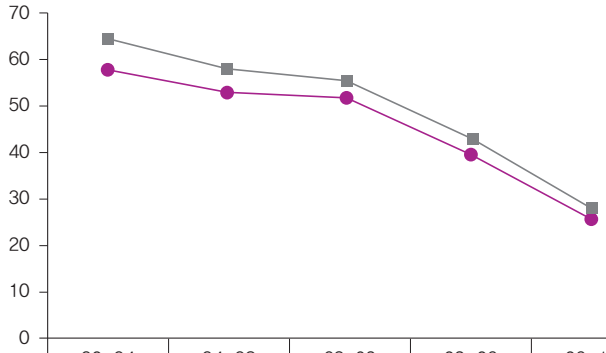
신연방지역에서 새로운 정치 엘리트로 충원된 의원들은 동독에서뿐만 아니라 변혁기에도 정치활동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특히 1990년 3월의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1990년 5월의 지방선거를 통해 고위직으로 새롭게 충원되었다. 나아가 1989년 가을부터는 모든 정치 단계에서 원탁회의가 구성되고, 반체제 세력과 구체제 대표들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했었다. 이러한 직책을 가졌던 사람들은 과도기 엘리트라고도 불린다. 독일통일로 가는 과도기에 동독의 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과도기 엘리트의 1/4은 동독 구체제하에서 정치적 관직이나 인민회의 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1989년 가을부터 1990년 10월까지의 기간에 대부분의 과도기 엘리트가 처음으로 정치적 책임을 맡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통일 직후 연방의회와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된 신연방지역의 정치 엘리트 중 약 60%가 과도기 엘리트로서 경험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0〉. 의회의 회기가 점차 지나면서 이러한 비율은 일차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머물게 된다. 그러나 2000년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비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게 된다. 이를 통해 1990년대의 구동독 신진 엘리트 중 50%가 여전히

체제 변환기에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하위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있어 개별 정당들은 차이가 거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세의 원인은 정당 간 세력 관계의 변화 때문이 아닌, 1990년대 말부터 과도기 정치인들의 비중이 모든 정당들에서 감소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2-11〉.

그림 2-10〉 의원 중 과도개혁기 또는 동독 체제하에서 정치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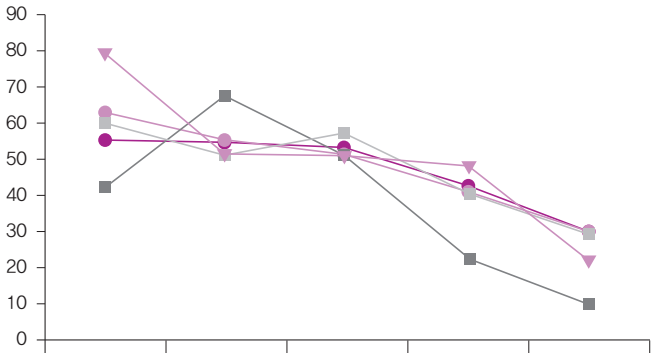


	90–94	94–98	98–02	02–06	06–10
과도기 정치인	57.4	53.1	51.5	39.7	25.9
과도기 정치인 겸 동독 간부	64.2	57.6	55.0	42.6	28.2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과도기 정치인: 직책에 관한 정보는 그래프 5를 참조, 추가로 원탁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다. 지방 차원의 최종 기일은 1990년 5월 이후, 중앙 차원의 최종 기일은 1990년 3월까지.

그림 2-11〉 정당별로 본 과도기 엘리트의 비율

(단위: %)



	90-94	94-98	98-02	02-06	06-10
CDU	55.6	53.7	52.7	42.3	29.4
SPD	61.4	53.6	50.4	41.1	27.9
FDP	42.2	66.7	50.0	21.6	8.3
PDS/Die Linke	58.6	51.6	56.5	40.3	28.1
B90/Grüne	78.7	50.0	50.0	47.4	21.6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요약해서 말하자면, 통일 이후 충원된 신진 정치 엘리트 중에서 동독 구체제하에서 고위 엘리트였던 사람들의 비율이 원래부터 아주 경미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하급직을 수행했던 사람들만 새로운 체제에서 엘리트직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독 구체제의 엘리트가 지속성을 보인다거나 또는 시간차를 두고 복귀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통일독일의 대의기구에 선출된 신연방지역 출신 의원 중의 많은 수가 1989~1990년 과도개혁기에 정치 경험을 쌓고 오랜 기간 동안 과도기 엘리트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1990년 12월에 선거를 통해 구성된 연방의회를 제외하면 이들의 비율이 전체 의원의 절반을 넘었던 적이 없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 체제가 신연방지역에도 수용되면서 동독 구체제와 과도개혁기에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이 체제 전환 이후부터 모든 정치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대의기구의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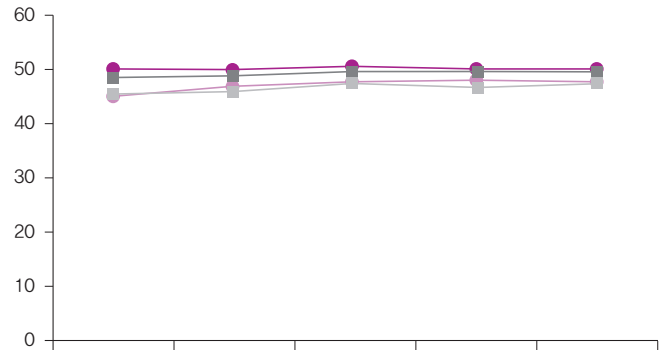
제6절 신연방지역 출신이 신진 엘리트가 되는 경로

통일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동서지역 간의 불균형과 서독지역 출신 엘리트가 여전히 중요한 집단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부분적으로 차별성을 보이는 신연방지역 의원 엘리트군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예나대학 연구팀은 이들에 관한 연구에서 연방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과 신연방주의 주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을 구분해서 조사했다. 그 이유는 연방의회의 경우 신연방지역 출신과 서독지역 출신 의원들이 한 기관에서 활동함으로 신속한 평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의회의 경우 서독지역 출신이 유입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한 지역 출신의 의원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색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독지역 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연방의회 의원이 약 50세, 주의회의 경우 약 48세이다. 주의회의 경우 평균 연령이 1990년 이후 한 살 많아졌다〈그림 2-12〉. 반면에 통일 직후 신연방지역 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연방의회 의원이 45세, 주의회 의원이 44.6세로 서독지역의 동료 의원들보다 약 4살이 적었다. 그것은 통일 직후 신연방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대부분 정치 신인이었다는 사실과 거의 모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당시 신연방지역에서는 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공천받기 위해 의회 입성 전에 정당 조직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정치적 능력을 입증해야만 하는 독일 의회의 전형적인 정치인 충원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물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었다. 1990년부터는 신연방지역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기는 했으나, 연방의회와 주의회 모두 서독지역 의원의 평균 연령과 비교해 여전히 2살이 적었다. 이것은 신연방지역에서 정당활동을 통해 의회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짧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12〉 의원들의 평균 연령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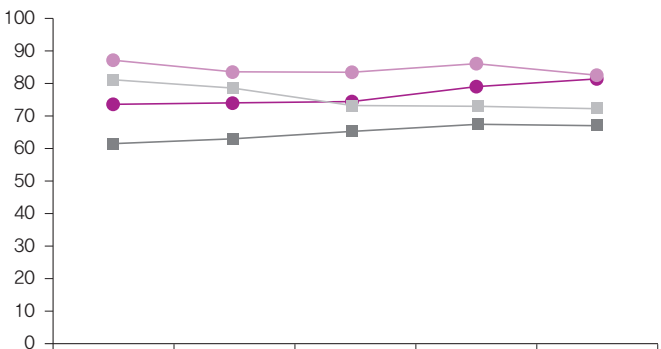


	90-94	94-98	98-02	02-06	06-10
(서)연방의원	49.7	49.7	50.5	49.5	49.8
(동)연방의원	45.0	47.0	47.5	48.2	47.6
(서)주의원	48.3	48.4	49.1	48.9	49.3
(동)주의원	44.6	45.7	47.4	46.7	46.9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그림 2-13〉 의원 중 대학 졸업자 비율(종합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

(단위: %)



	90-94	94-98	98-02	02-06	06-10
(서)연방의원	73.3	74.2	74.6	79.1	81.3
(동)연방의원	86.6	83.3	83.0	86.3	82.1
(서)주의원	61.3	62.5	65.5	67.3	66.9
(동)주의원	80.6	77.8	73.1	72.6	71.8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1995년의 포츠담 엘리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던 동서지역 엘리트의 높은 학력은 연방의회와 주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그림 2-13〉. 연방의회와 주의회의 의원 중 대학 졸업자의 비율만 보면 1990년대 초에 신연방지역 의원들의 학력이 서독지역 의원들보다 높았다. 통일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연방의회와 주의회의 의원들의 학력이 유사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서독지역 의원들의 학력이 연방의회에서 신연방지역 의원들의 수준으로 높아진 반면, 구동독지역 주의회 의원들의 학력은 낮아져서, 서독지역의 주의회 의원들과 비슷한 수준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서독지역 의원들은 과반수 이상이 고학력자이며, 모두 유사한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능력을 훈련받았다. 이것은 통일된 독일사회에서 지역 간의 통합과 협력을 용이하게 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포츠담 엘리트 연구를 통해 동서독지역 엘리트들의 중요한 차이로 신연방지역 엘리트의 경우 자연과학과 공학을 전공한 지식인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990년 이후 선출된 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자연과학과 공학 전공자의 우세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체제 전환이라는 특수한 조건하에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나대학의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 졸업 학력을 소지한 의원 중에서 자연과학과 공학을 전공한 사람의 비율은 1990년 약 60%에서 2010년 약 1/3로 감소했다〈표 2-10〉. 동일한 기간에 법학을 전공한 사람의 비율은 5%에서 14.7%,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의 비율은 약 8%에서 12%, 인문학 및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의 비율은 21.6%에서 35.6%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신연방지역 출신의 신진 엘리트들이 점차적으로 서독지역의 의원들과 유사한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로 충원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서독지역 의원들과 비교하면 신연방지역 출신 의원 중에 공학을 전공한 사람의 비율이 여전히 높고, 경영학이나 법학 전공자의 비율이 낮다. 인문학 및 사

회학 전공자의 비율은 동서지역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표 2-10〉 기간별 의원 엘리트의 대학 전공 분야별 비율

(단위: %)

		1990~1994	1994~1998	1998~2002	2002~2006	2006~2010
구서독	신학	0.5	0.8	0.7	0.8	1.3
	법학	27.3	24.8	25.2	26.0	27.5
	경제학	16.6	17.2	17.7	19.7	18.7
	자연과학, 공학, 의학	15.1	15.1	14.0	14.3	14.1
	사회 및 인문학, 교육학	38.9	40.1	41.1	36.9	35.7
	기타	1.6	2.1	1.3	2.3	2.6
구동독	신학	4.2	4.5	3.7	3.6	2.5
	법학	5.5	5.2	7.1	8.8	14.7
	경제학	7.8	9.7	9.2	11.7	12.1
	자연과학, 공학, 의학	59.9	52.3	46.5	38.3	33.5
	사회 및 인문학, 교육학	21.6	27.8	33.2	36.8	35.6
	기타	1.0	0.5	0.4	0.8	1.6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80/A3.

대학 전공 분야의 차이는 직업 경력에 직접 영향을 주고, 문제 인식과 해결 전략을 세우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독일의 의원들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적어도 정치활동에서는 대학 전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인은 주로 정당 간의 경쟁 논리와 제도적 구조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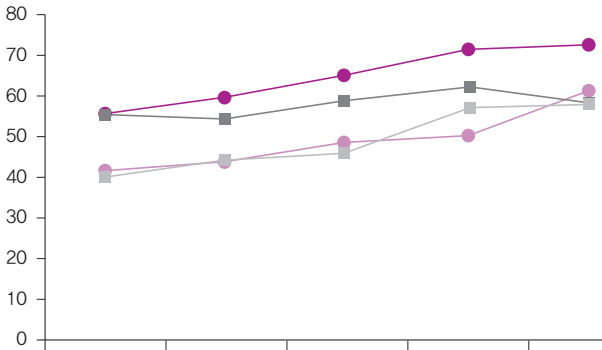
서독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연방의회와 주의회 의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정당의 간부직을 비롯해 지역 및 지자체 관직이나 의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었다. 당내의 다양한 분야와 직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황소 투어(Ochsentour)'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오랜 과정을 거쳐서 당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 소통하는 방법, 자기 권력 기반의 구축과 정치적 프로세스와 조직의 흐름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익집단 간의 공동보조를 위해 필요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능력을

훈련받는다. 모든 정당에서 이러한 훈련과정을 거친 대부분의 의원들이 연방의회나 주의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유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 전략을 모색한다. 그것은 정치적 사안에 따라 의원들의 초당적인 통합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의 의원들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발전경로가 관찰되었다. 의원 중 당내 간부직을 수행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연방의회와 주의회에서 모두 1990년 약 40%에서 20년 만에 약 60%로 상승했다〈그림 2-14〉. 신연방지역 주의회 의원 중 당내 간부직을 수행한 경험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서독지역 주의회에서 조사된 것과 유사하다. 연방의회의 경우에만 동서지역 간에 약간의 차이가 남아 있을 뿐이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초자치단체나 지역에서 사전 경험을 쌓은 비율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은 전체 조사 기간 동안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15〉. 그것은 연방의회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나 지역에서 경험을 쌓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드물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해서는 1990년 초 주의회 차원에서만 동서지역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관찰되었을 뿐, 통일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연방지역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나 지역에서 경험을 쌓은 비율이 서독지역에서 조사된 것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

그림 2–14〉 첫 임기 이전에 정당 조직의 직위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의원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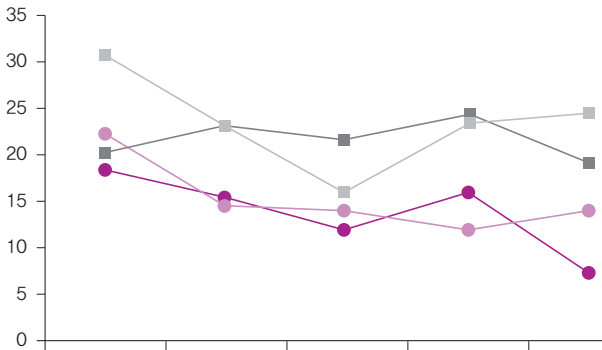


	90–94	94–98	98–02	02–06	06–10
(서)연방의원	55.5	59.3	64.5	70.9	72.4
(동)연방의원	41.6	43.5	48.2	50.0	61.0
(서)주의원	55.0	54.2	59.0	61.9	58.4
(동)주의원	39.7	43.8	45.9	56.5	57.8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80/A3; 지방과 연방 차원 당 조직의 최고의원 또는 대표직.

그림 2–15〉 첫 임기 이전에 기초자치단체 의원 또는 관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의원의 비율

(단위: %)



	90–94	94–98	98–02	02–06	06–10
(서)연방의원	18.4	15.1	11.6	15.8	7.7
(동)연방의원	22.1	14.5	14.2	11.8	13.8
(서)주의원	20.1	23.1	21.6	24.2	18.9
(동)주의원	30.7	22.9	15.8	23.2	24.5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지방 관직/의원직: 시장, 지방의회. 시의회, 군의회

겉으로 보기에는 당내 조직에서 경험을 쌓은 것이 연방의회나 주의회 선거를 위한 후보 공천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이 후보자 지명을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통일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연방의회와 주의회의 의원이 되는 과정은 독일의 동서지역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구조적으로 유사한 엘리트층이 형성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엘리트 순환의 규모를 보면 이런 경향이 견고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동유럽의 다른 탈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신연방지역의 의원들의 경우 엘리트 순환,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엘리트의 연속성이 1990년대 중반부터 연방의회와 주의회 차원에서 서독지역의 수준으로 올라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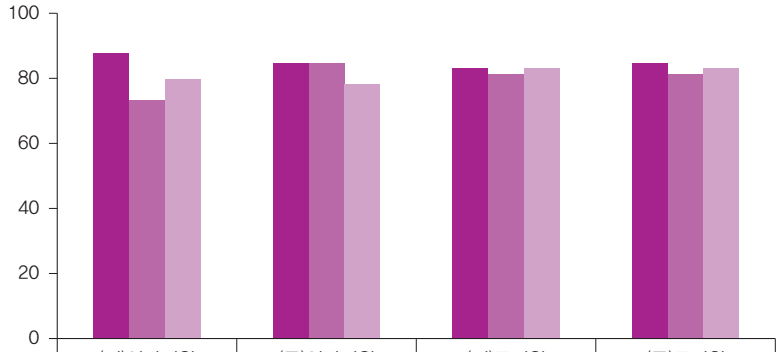
제7절 통일독일 대의제 엘리트 특성의 정착?

과도개혁기와 통일 이후 체제 전환기에 서독지역 출신 엘리트들이 구동독지역으로 유입되었다고 하지만, 신연방주지역의 정치 엘리트는 우선적으로 동독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인물들로 충원되었다. 통일 이후 서독지역 출신의 엘리트 외에 서독의 제도와 구조 또한 구동독지역으로 수입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서독의 제도와 인력이 신연방지역의 정치적 현실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놀랍게 보이지 않는다. 물론 동독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정치 엘리트들은 '동독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신연방지역의 의원들은 서독지역의 동료들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연방의회와 주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통일된 독일의 동서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 간에 본질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들은 모두 정치를 직업으로 간주하며, 당의 경계를 넘어서 협력하고, 의회 규율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단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에서만 동서지역 의원들 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연방의회와 주의회 의원직이 진정한 직업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연방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했다. 동서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주의회의 의원들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작다. 주의회 의원 중 80% 이상이 의원직이 진정한 직업이라고 답했다〈그림 2-16〉. 이러한 의견은 직업활동과 의원직을 겸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신연방지역 출신 연방의회 의원 대부분은 의원직과 직업을 병행하는 것에 반대했다(80~85%). 반면에 서독지역의 연방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원직과 직업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왔었다(23~32%). 그러나 통일 직후 동서지역 의원들 간에 있었던 시각의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좁혀졌다. 신연방지역 출신 의원 중에서 의원직과 직업활동의 병행을 찬성하는 의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그것을 찬성하는 서독지역 의원들의 비율은 낮아지면서, 2010년의 조사에서 동서지역 간의 차이는 3%대로 줄어들었다. 2003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구동독 지방의회 의원들 중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비율은 38%에서 32%로 줄어들었다. 구서독 의원들 중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비율 변화는 훨씬 더 역동적이었다: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비율은 52%에서 42%로 감소했다〈그림 2-17〉.

그림 2-16〉 의원직이 하나의 직업이라는 데 동의한 의원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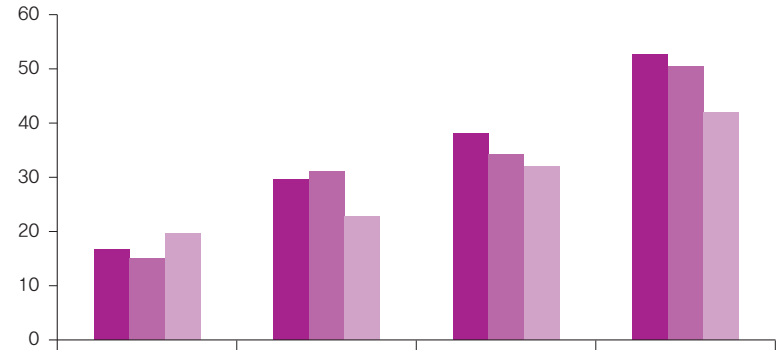
	(서)연방의원	(동)연방의원	(서)주의원	(동)주의원
2003	88.1	84.2	82.8	84.3
2007	72.9	84.4	82.1	80.7
2010	80.4	77.4	83.5	81.9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80/A3; 질의문: 다음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관한 평가이다.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당신은 의원직이 하나의 직업이라는 데 매우 동의하는가? 꽤 동의하는가? 별로 동의하지 않는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가?

* "꽤 동의하는가?"와 "매우 동의하는가?"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통합되었다.

그림 2-17〉 의원직과 직업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원의 비율

(단위: %)



	(동)연방의원	(서)연방의원	(동)주의원	(서)주의원
2003	16.7	29.2	38.1	52.7
2007	14.6	31.4	33.9	50.8
2010	19.6	22.6	32.3	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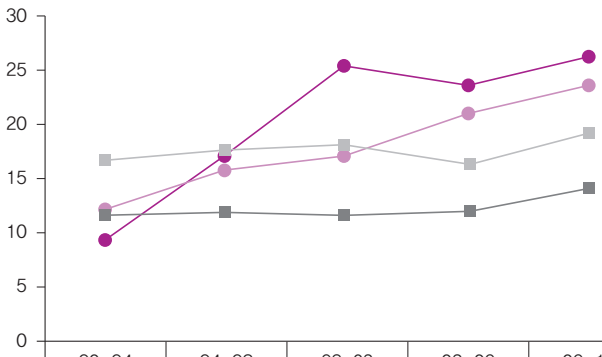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80/A3; 질의문: 다음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관한 평가이다.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당신은 의원직과 동시에 또 다른 직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매우 동의하는가? 꽤 동의하는가? 별로 동의하지 않는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가?

* "꽤 동의하는가?"와 "매우 동의하는가?"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통합되었다.

연방의회와 주의회의 의원이 되기 전에 노조 간부 또는 정치 보좌관처럼 정치와 관련된 직업을 가졌던 의원들의 비율은 1990년 이후 동서지역 모두에서 증가했다〈그림 2-18〉.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의 경우 의원 경력의 전문화가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관련된 직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의원의 비율이 신연방지역에서 급증했다. 신연방주 주의회에서보다 연방의회에서 그런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경에는 서독지역에서보다 신연방지역에서 의원 중 직업정치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변화의 역동성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그림 2-18〉 첫 임기 이전 정치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의원의 비율

(단위: %)



	90-94	94-98	98-02	02-06	06-10
(서)연방의원	9.4	16.7	25.5	23.5	26.0
(동)연방의원	16.4	17.5	18.1	16.2	19.1
(서)주의원	12.1	16.2	17.7	21.2	23.8
(동)주의원	11.6	11.8	11.6	11.8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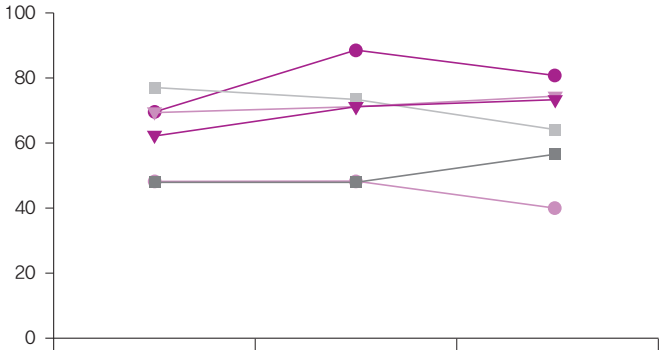
출처: 예나 의원 연구, SFB590/A3;
* '정치 분야와 가까운 직업'으로는 관청의 정치 담당자 혹은 노조 간부 등을 꼽을 수 있다.

통일 이후에도 연방의회와 주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하나의 정치적 계층에 속한다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2-19〉. 좌파당 소속 의원들만 예외적으로 그런 동질감을 가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대의기구의 의원들이 동일한 정치계급에 속한다는 것에 찬성한 의원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동서지역 간의 차이가 2007년

이후 점차 좁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의회 단위의 조사를 보면 좌파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정치적 계층에 속한다는 계층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2-19〉 의원들의 정치적 계층 의식

(단위: %)



	2003	2007	2010
(동)연방의원(LINKE 제외)	69.0	88.2	80.0
(서)연방의원	76.6	73.6	64.0
(동)연방의원(LINKE 포함)	–	50.0	42.1
(동)주의원(LINKE 제외)	61.6	69.4	72.7
(서)주의원	69.0	72.3	74.0
(동)주의원(LINKE 포함)	47.9	48.5	56.9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80/A3; 질의문: "다른 당이나 당파에 속한 의원들과도 소속의식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전혀 느끼지 못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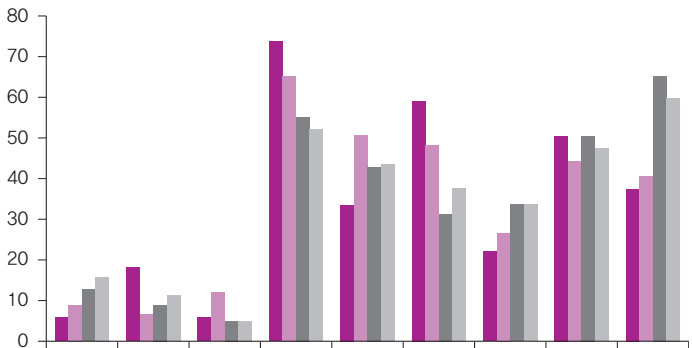
의원으로서 정치적 엘리트로 분류되는 특정계급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은 당연히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방의회와 주의회 소속 의원들 중에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들과 비공식적으로도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은 지극히 소수였다. 동서지역의 모든 주의회에서 유사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의회 의원들 중에서 2003년부터 2010년 사이에 다른 정당에 소속된 의원과 전혀 접촉을 하지 않는다거나, 거의 접촉하지 않는다고 답한 의원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자주 접촉한다는 비율은 증가했다. 연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서독지역 의원들과 신연방지역 의

원들이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과 접촉하는 빈도가 유사해지는 것은 확인되지만, 그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것이 아니라 2007년에는 접촉 빈도가 높았다가 2010년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2-20〉.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차이점들과 더불어 의원들의 상호 인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신연방지역과 서독지역의 의원 모두를 포함된 연방의회와 베를린 시의회의 경우 동서독지역 출신 동료들 간의 차이를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다. 출신 지역 간의 어떤 차이도 인식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소수였다. 약간의 혹은 상당한 차이를 느낀다는 의원이 다수였다. 이 경향은 2010년에 더욱 강화되어 '상당한 차이'를 느낀다는 의원이 늘었다. '큰 차이'를 느낀다고 응답한 의원의 비율이 신연방지역 출신 연방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서독지역 출신 연방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오히려 줄었다〈그림 2-21〉.

그림 2-20〉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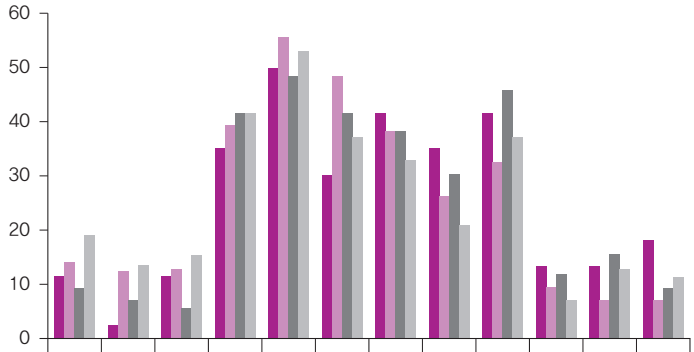


	2003	2007	2010	2003	2007	2010	2003	2007	2010
	없다			거의 없다			자주 있다		
(동)연방의원	5	17	5	73	33	58	22	50	37
(서)연방의원	9	6	12	65	50	48	26	44	40
(동)주의원	12	8	4	55	42	31	33	50	65
(서)주의원	15	10	4	52	43	37	33	47	59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80/A3; 질의문: "정규 회의 이외에 다른 당파의 의원들과 정치적 조율을 위해 만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주 만나십니까, 아니면 거의 만나지 않으십니까?
* '자주'와 '매우 자주'는 '자주'로 통합되었다.

그림 2-21〉 신연방지역과 서독지역 의원들의 상호 인식 차이

(단위: %)



	2003	2007	2010	2003	2007	2010	2003	2007	2010	2003	2007	2010
	차이가 없다			거의 없다			차이가 꽤 있다			차이가 크다		
(동)연방의원	11	2	11	35	50	30	41	35	41	13	13	18
(서)연방의원	14	12	13	39	55	48	38	26	32	9	7	7
(동)주의원	9	7	5	41	48	41	38	30	45	12	15	9
(서)주의원	19	13	15	41	53	37	33	21	37	7	1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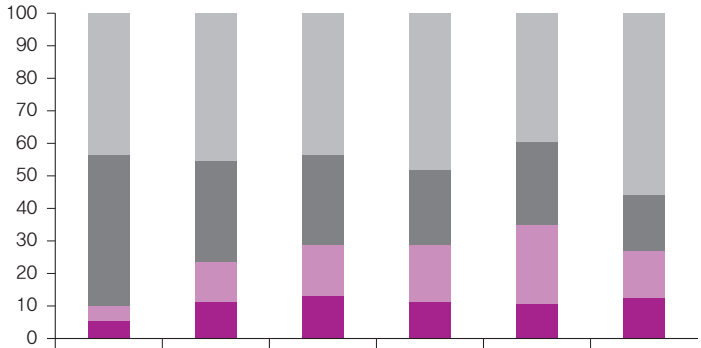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80/A3; 질의문: "의회 내 구동독 및 구서독 의원을 떠올려 보면, 차이가 크거나 꽤 있습니까, 아니면 동서독 의원 간에 차이가 거의 혹은 전혀 없습니까?"

* 해당 설문 조사는 연방의회 및 베를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만 진행되었다.

연방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신연방지역과 서독지역 의원들의 응답은 일부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점점 유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독지역 의원들의 경우 연방의회 의원으로 독일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생각이 그들의 의식에 중심적이 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신연방지역의 의원들의 경우 그런 인식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자신의 지역구를 보는 시각도 유사한 변화를 보인다. 신연방지역의 연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서독지역 의원들에게서는 그런 경향이 주춤한 것을 볼 수 있다. 서독지역 의원들의 경우 소속 정당을 대표한다는 생각이 신연방지역의 동료들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2〉.

그림 2-22〉 연방의회 의원들의 '대표성'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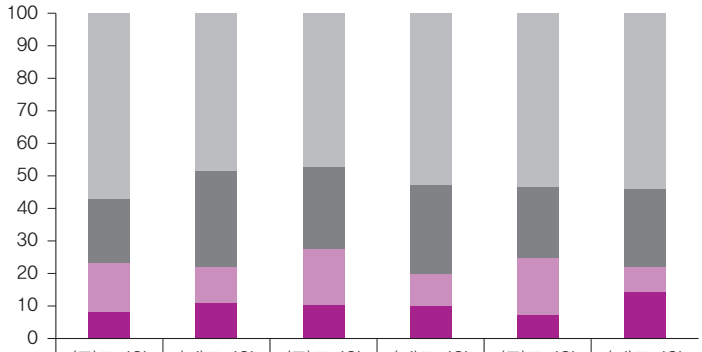
	(동)연방의원 2003	(서)연방의원 2003	(동)연방의원 2007	(서)연방의원 2007	(동)연방의원 2010	(서)연방의원 2010
전국 대표	45	46	45	49	41	57
지역구 대표	45	31	27	23	24	16
소속 유권자 대표	5	12	15	17	25	15
정당 대표	5	11	13	11	10	12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의문: "의원으로서 자신의 임무가 소속 당의 대표, 소속 유권자의 대표, 소속 선거구의 대표, 전국 대표 중 어느 것이 가장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회 소속 의원들의 경우 동서지역 간에 유사한 점이 연방의회 의원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신연방지역 주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서독지역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을 더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측의 의원들이 모두 자신이 연방주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2-23〉.

그림 2-23〉 주의회 의원들의 '대표성'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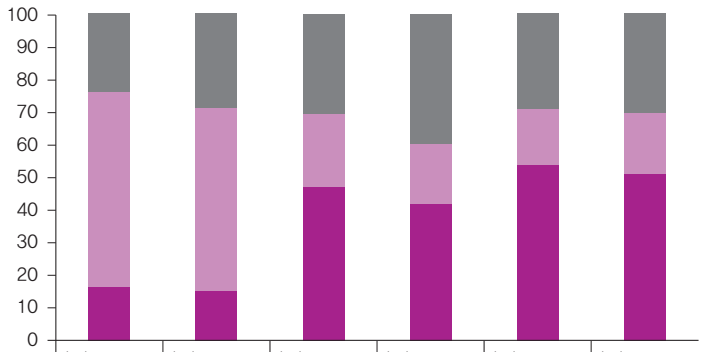


	(동)주의원 2003	(서)주의원 2003	(동)주의원 2007	(서)주의원 2007	(동)주의원 2010	(서)주의원 2010
전국 대표	57	49	48	53	53	54
지역구 대표	19	28	24	26	21	23
소속 유권자 대표	15	11	17	10	18	8
정당 대표	9	12	11	11	8	15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의문: "의원으로서 자신의 임무가 소속 당의 대표, 소속 유권자의 대표, 소속 선거구의 대표, 전국 대표 중 어느 것이 가장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2-24〉 연방의회 의원들이 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과제의 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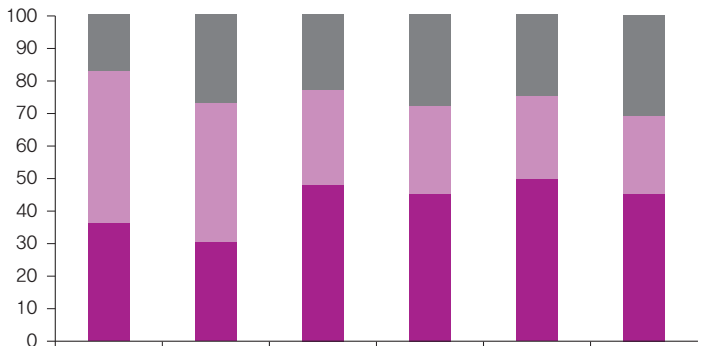
	(동)연방의원 2003	(서)연방의원 2003	(동)연방의원 2007	(서)연방의원 2007	(동)연방의원 2010	(서)연방의원 2010
국가 재정 건전화	22.0	26.6	29.5	38.7	27.5	28.6
경제 성장	61.0	57.8	22.7	18.5	17.6	19.6
복지 불균형 축소	17.1	15.6	47.7	42.9	54.9	51.8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의문: "국가 재정 건전화와 경제 성장, 복지 불균형 축소 중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복지 불균형 축소, 경제 성장, 국가 재정 건전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지에 관한 평가는 동서지역의 연방의회와 주의회 의원들 모두에게서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 이어서 거의 유사한 변화를 보여 준다. 이런 변화가 아주 역동적이고, 동시에 동서지역에서 눈에 띄게 유사하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이, 특히 현실 정치적 상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그림 2-24, 2-25〉.

그림 2-25〉 주의회 의원들이 뽑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과제의 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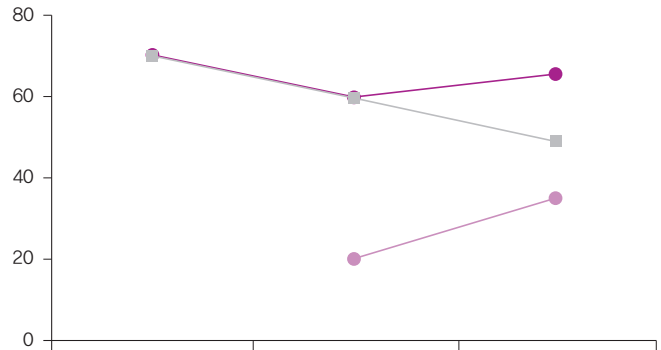
	(동)주의원 2003	(서)주의원 2003	(동)주의원 2007	(서)주의원 2007	(동)주의원 2010	(서)주의원 2010
국가 재정 건전화	16.4	26.3	22.8	27.5	24.6	29.6
경제 성장	47.7	42.2	28.1	27.8	25.4	24.5
복지 불균형 축소	35.9	34.5	49.1	44.7	50.0	45.8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의문: "국가 재정 건전화와 경제 성장, 복지 불균형 축소 중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복지 불균형 축소, 경제 성장, 국가 재정 건전화?"

통일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상태에서 동서지역 의원들의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태도는 원칙적으로 유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만 차이가 있다. 당의 노선을 추종해야 한다는 의식은 연방의회 차원에서는 동서지역에서 아주 유사한 결과가 나오다가 2010년에 차이를 보였다. 좌파당 소속 의원들이 당의 노선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2-26〉. 좌파당 소속 의원들은 주의회에서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그림 2-27〉.

그림 2-26〉 당의 노선에 대한 연방의회 의원들의 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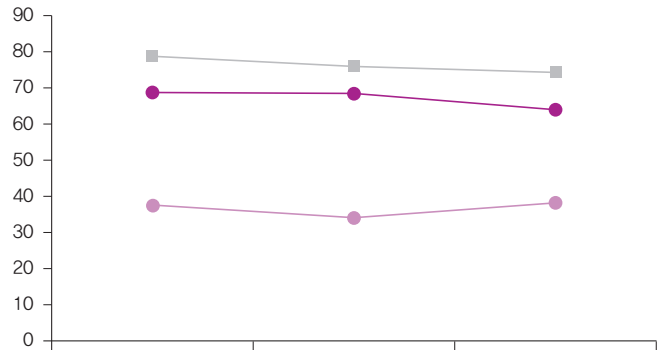
	2003	2007	2010
(동)연방의원(LINKE 제외)	73.0	60.6	65.6
(서)연방의원	71.6	62.4	49.6
(동)연방의원(LINKE 포함)	–	21.4	36.8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의문: "중요한 투표의 경우 본인의 의견이 당과 다르다고 해도, 당파 노선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 "꽤 동의한다" 와 "매우 동의한다"는 통합되었다.

그림 2-27〉 당의 노선에 대한 주의회 의원들의 태도

(단위: %)



	2003	2007	2010
(동)주의원(LINKE 제외)	68.7	68.5	64.9
(서)주의원	78.4	76.0	74.2
(동)주의원(LINKE 포함)	38.8	35.8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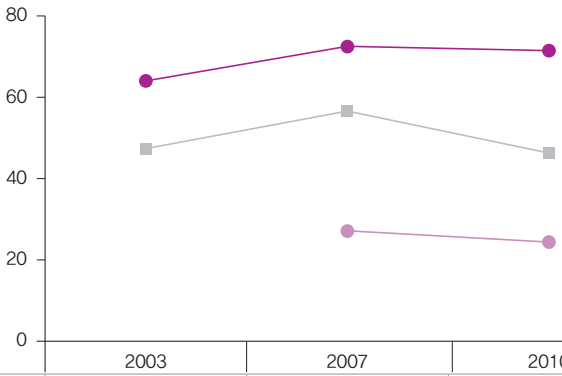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의문: "중요한 투표의 경우 본인의 의견이 당과 다르다고 해도, 당파 노선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 "꽤 동의한다" 와 "매우 동의한다"는 통합되었다.

좌파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주의회에서도 동서지역 의원들의 유사성이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난다〈그림 2-28〉. 원내 표결과정에서 당의 노선에서 벗어나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런 경향은 동서독 의원들 모두에게서, 연방의회와 지방의회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찰되는 동서지역 간의 차이가 전부 좌파당 소속 의원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신연방지역의 의원들은 서독지역의 의원들보다 훨씬 더 자주 의회에서 투표권 행사의 자유를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2-29〉.

그림 2-28〉 연방의회 의원 중 당의 노선을 벗어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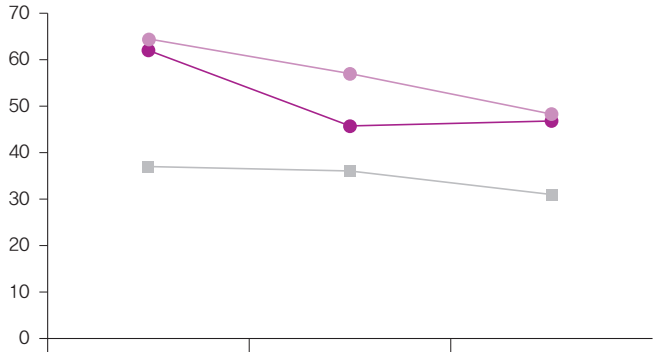


	2003	2007	2010
(동)연방의원(LINKE 제외)	63.4	73.5	71.9
(서)연방의원	47.8	57.7	46.2
(동)연방의원(LINKE 포함)	–	28.6	26.3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의문: "당파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투표에서 당파 노선에 반대되는 투표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림 2-29〉 주의회 의원 중 당의 노선에서 벗어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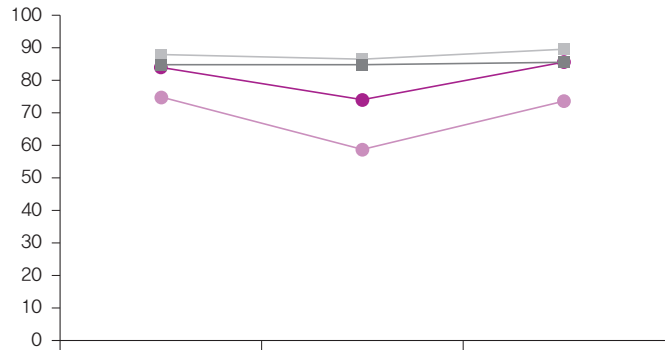
	2003	2007	2010
(동)주의원(LINKE 제외)	61.9	45.9	47.6
(서)주의원	36.8	36.0	31.7
(동)주의원(LINKE 포함)	65.3	57.5	49.1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의문: "당파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투표에서 당파 노선에 반대되는 투표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의정활동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그 정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그러나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은 그 변화의 폭이 크다. 2003년에는 신연방지역 의원 20명 중 한 명이 자신의 활동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데 반해, 서독지역 의원 중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한 사람의 비율은 2%에 그쳤다. 2007년에는 자신의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신연방지역 의원의 비율이 8%로 늘고, 서독지역 의원들의 비율은 계속해서 2%에 머물렀다. 2010년에는 서독지역 의원들의 불만족 비율은 여전히 2%를 고수하고, 신연방지역 의원들의 불만족 비율이 3%대로 낮아졌다〈그림 2-30〉.

그림 2-30〉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2003	2007	2010
(동)연방의원	84	73	86
(서)연방의원	87	86	90
(동)주의원	76	60	76
(서)주의원	82	82	84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90/A3; 질의문: "일반적인 관점에서 의원직 활동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꽤 만족한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 "꽤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통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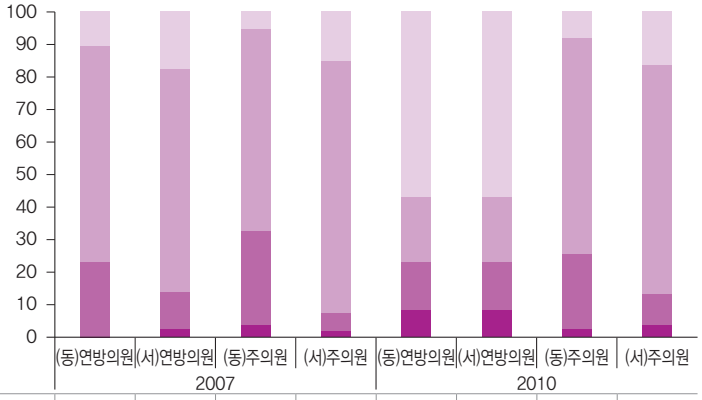
통일 이후 독일에서 민주주의가 기능하는 방법에 대한 의원들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신연방지역과 서독지역 의원들 간에 몇 가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과 2010년에 신연방지역의 의원들은 독일의 민주주의가 기능하는 방법에 있어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다. 그들이 그 어떤 질문에도 “매우 불만족스럽다”라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들의 불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서독지역에서 사회화된 의원들의 대부분이 ‘매우 만족’과 ‘상당히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동서지역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변했다. 서독지역의 연방의회, 주의회 의원들 중에 2007년 이후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늘고, 반대로 신연방지역 출신의 의원들, 특히 주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족도가 점차 줄고 있다〈그림 2-31〉.

동독 체제와 서독에서 성장한 의원들 간의 차이가 여전히 극복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점차 명확해졌다. 이

러한 상호 수렴하는 것은 두 가지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서독지역 의원들과 신연방지역 의원들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동독 구체제하에서 사회화된 여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 틀을 통해 그 영향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통일 이후 체제 내에 들어와서 정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통일독일의 정치적 안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 좌파당이 아직까지 연방정부의 차원에서는 완전히 당위성을 인정받은 연정 파트너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2-31〉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동)연방의원	(서)연방의원	(동)주의원	(서)주의원	(동)연방의원	(서)연방의원	(동)주의원	(서)주의원
	2007				2010			
매우 만족	10	17	5	15	9	18	8	16
꽤 만족	67	69	62	78	56	61	66	71
꽤 불만족	23	11	29	5	35	16	23	9
매우 불만족	0	3	4	2	0	5	3	4

출처: 예나 의원 설문조사, SFB580/A3; 질의문: "민주주의가 독일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꽤 만족, 꽤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제4장

경제 엘리트의 변동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통일 이후 20년이 지난 2010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구동독지역의 경제, 특히 산업은 중소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표 2-10〉. 예나대학의 연구팀은 신연방지역의 경제 엘리트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적 중소기업(Industrielle Mittelstand)'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높은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제조업 분야의 독립적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직원의 수가 적고 매출액이 낮은 소규모 회사는 산업적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 배제되었다.

표 2-11〉 근로자 수와 업종을 기준으로 한 2004년 사회보험 의무가입 근로자(업종별 총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

(단위: %)

신연방지역/구동독지역							
경제 분야	기업 규모(근로자 수 기준)						
	1~4명	5~9명	10~49명	50~199명	200~249명	250~499명	500명 이상
농림업	13.3	11.3	46.9	21.5	1.9	4.1	1.0
제조업	4.6	6.2	25.4	30.7	5.1	11.4	16.6
기업 대상 서비스업	15	10.8	27.5	27.4	3.6	8.3	7.4
기타 서비스업	5.3	4.6	18.6	25.4	3.9	14.5	27.7
총계	10.7	9.3	26.1	24.7	3.5	9.6	16.1
서독지역							
경제 분야	기업 규모(근로자 수 기준)						
	1~4명	5~9명	10~49명	50~199명	200~249명	250~499명	500명 이상
농림업	35.1	19.9	33.4	9.5	0.6	0.2	1.3
제조업	3	3.9	15.5	21.8	4.3	13.9	37.6
기업 대상 서비스업	12.4	9.6	26.6	26.1	3.6	8.9	12.8
기타 서비스업	8.4	6.9	21.3	24.1	4.3	12.2	22.8
총계	9.2	8.6	22.9	22.8	3.5	10.4	22.6

출처: 중소기업 통계 주요 자료(Eckdaten der Mittelstands-statistik), 만하임 중소기업 연구소(Institut für Mittelstandsforschung).

신연방지역의 기업 규모는 서독지역의 기업과 비교할 때 비교적 작다. 신연방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예나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옌옵틱의 경우 직원 수가 4천 명으로 독일 기업 순위 452위에 올라 있을 뿐이다. 이것은 독일에서 자주 인용되는 호펜슈테트-기업 데이터뱅크(Hoppenstedt-Firmendatenbank)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만일 독일의 대기업 전체를 포함한다면 옌옵틱의 순위는 945위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500개의 대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경제 엘리트에 관한 조사를 한다면 신연방지역 출신 경제 엘리트는 조사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다. 실제로 1995년에 이루어진 포츠담 엘리트 연구에 따르면 구동독 출신으로 통일독일의 경제 엘리트에 속

하는 인물은 0.4%밖에 되지 않았다〈표 2-12〉.

표 2-12〉 동서독 경제 엘리트들의 경제계 고위직 임용 비율

분야	총	신연방주 출신	분야별 신연방주 출신 비율
경제	249	1	0.4
경제연맹	173	14	8.1
합계	422	15	3.6

출처: Elitenbefragung von Bürklin/Rebenstorf 1997, p.67.

2002년과 2010년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는 신연방지역의 중소기업 임원이 서독지역 출신 인물로 충원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표 2-13〉. 반면에 신연방지역 출신이 서독지역 기업의 최고 경영진으로 승진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표 2-13〉 기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직원 수 50-1,000명 규모의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대표의 출신 지역 분포도

2002년 조사			
기업 대표들의 출신지역	기업 소재지		수
	서독지역	신연방지역	
서독지역	99.0%	30.5%	493
구동독/신연방지역	1.0%	69.5%	255
수	387	361	
2010년 조사			
기업 대표들의 출신지역	기업 소재지		수
	서독지역	신연방지역	
서독지역	97.7%	35.1%	297
구동독/신연방지역	2.3%	64.9%	162
수	217	242	

출처: SFB 580, A2 기업 조사.

이런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신연방지역의 경제 엘리트들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보여 주기 어려웠기 때문에, 예나대학의 연구팀은 신연방지역에서 2010년까지 여러 차례 50명에서 1천 명 사이의 직원을 둔 제조업 분야의 기업 대

표와 임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장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신연방지역의 경제 엘리트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0년 이전 동독 구체제하에서의 상황과 함께 1990년 과도개혁기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1절 1989년 사회변혁 이전의 동독 경제 엘리트

동독의 경제는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지배하에 정치 우선의 논리에 종속되어 있었다. 상품과 생산과정에 대한 결정이 당위원회와 국가계획위원회에 의해 내려졌다. 기업 경영과 관련된 결정은 현장이 아닌, 중앙기관에 의해 내려졌다. 기업 내 근로자들은 근본적으로 관료주의적인 조직에서 계획을 수행하는 단위에 불과했다. 관리자들은 경제 엘리트로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계획의 실행을 담당했다. 이들의 지위는 샌드위치와 같은 것이었다.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계획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부기관에 해명해야만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도 못했었기 때문이다.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동독 기업이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대해 임기응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비공식적으로 설정된 계획과 규정을 위반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목표 수치를 매우 낮게 설정해서, 아래 인용된 인터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획된 양의 달성을 용이하게 하거나,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사나 부품 공급처, 관청, 당기관, 타기업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했다: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죠. 우린 1,000명이면 충분할 일자리를 1,3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는 1,100명의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시켰죠. 그렇게 하면 일자리 200개를 절약한 셈이 됩니다. 한 마

디로 12달 치 임금을 절감해 이미 계획을 달성하게 된 겁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일을 했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아주 밑바닥부터 그랬다니까요. 안될 때까지 별의별 술책들을 다 썼었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경제 사회에서도 그런 술책은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만 해도 우린 훨씬 더 정직했습니다. 이건 제가 X(콤비나트)에서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59]

이런 방식의 대응전략의 결과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 기업 간부들은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고, 계획방법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그런 모든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규칙을 통해 유지될 수 있는 카오스와 같은 생산과정을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보호막일 뿐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이러한 모순이 동독 사회주의 사회질서의 당위성을 서서히 파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동독에서 기업 간부와 같은 기능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모범을 보이는 도덕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동독의 이런 사회현상을 분석한 독일의 한 사회학자는 동독 구체제의 경제구조하에서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일종의 해결사와 같은 간부 유형이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정치 체제에 순응하면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법의 경계도 넘어서는 관리자로 대부분 정치에는 무관심했다고 한다.[60]

기업의 관리자 간부들은 업무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목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기업 관리자로서 계획달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부담도 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자

59 경제계획 달성 전략에 관한 과거 동독 기업 간부와의 인터뷰 인용문. 출처: Schreiber et al. 2002, S. 158.

60 Stefan Hornbostel 2000, S. 127.

조달과 시설수리를 위해 끊임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했다. 한편, 그들은 업무를 위해 종업원들에게 협력을 강요할 수도 없었다. 종업원들은 관리자에게 종업원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관리자들이 권위주의적인 관리방식을 취한다고 비판하는 것 등을 통해 강하게 관리자를 견제할 수 있었다.

동독의 경제 엘리트들이 계획경제의 관료주의적 조직구조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로 했지만, 시장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능력을 보여 줄 필요는 없었다. 동독 경제 체제에서 경영능력은 필수조건이 아니었다. 시장개척, 소비자 중심의 제품개발, 새로운 제품의 상품화와 같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 관리자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동독 경제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동독 기업 간부 관리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의 내부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뛰어났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영자가 필요로 하는 시장 전체를 분석,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이것은 1989년 이후 동독에서 개혁과도기가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게 되었을 때 문제로 드러났다.

독일 역사의 산업화과정을 보면 기업의 관리직을 전통적으로 엔지니어와 기술자가 주로 맡아 왔다. 기술개발 업무와 생산과정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대적인 대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직은 전통적으로 법조인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그로 인해 국가 단위의 경제 엘리트는 법조인이 독점했었다. 서독의 경우 이런 현상은 1960~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서독 대기업 대표 중에 경영학 및 경제학 전공자 비율이 다른 서유럽 국가나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높아지기 시작했다〈표 2-14〉.

표 2-14〉 독일 100대 기업의 이사회 대표들의 학위 유형

(단위: %)

연도	전공 분야					
	경영학	공학 및 자연과학	법학	대학 無 진학	도제 (Lehre)	박사학위
1970(n=84)	26.2	25.0	32.1	16.7	16.7	44.0
1995(n=86)	38.4	23.2	31.4	7.0	25.6	46.5
2004(n=88)	41.0	36.4	12.5	10.2	23.9	47.7

출처: Hartmann 2006, S. 435.

한편 동독에서는 1989년까지 독일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이 기업 콤비나트의 관리직을 맡았다. 그때까지 동독은 총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엔지니어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업국가였다. 콤비나트 대표들 중 경제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이들의 비율도 비교적 높았다〈표 2-15〉.

표 2-15〉 동독 경제 엘리트들의 직위별 대학 전공 분야

(단위: %)

전공 분야	직위			
	대표 (Generaldirektor)	부서장 (Fachleiter)	공장장 (Betriebsleiter)	부장 (Abteilungsleiter)
경제	48.2	44.3	47.4	35.5
공학 및 자연과학	53.6	46.6	47.0	55.3
법학	0.9	2.3	2.4	1.8
인문학	3.6	9.1	3.2	4.3
사회과학	39.3	4.1	3.2	1.2
합계*	145.6	106.4	103.2	98.1

* 복수전공자로 인해 합계가 100%를 넘는 경우가 발생.

출처: 1989년 동독 내각 산하 중앙간부자료보관소 자료(Zentraler Kaderdatenspeicher des Ministerrates der DDR 1989), Salheiser 2009, S.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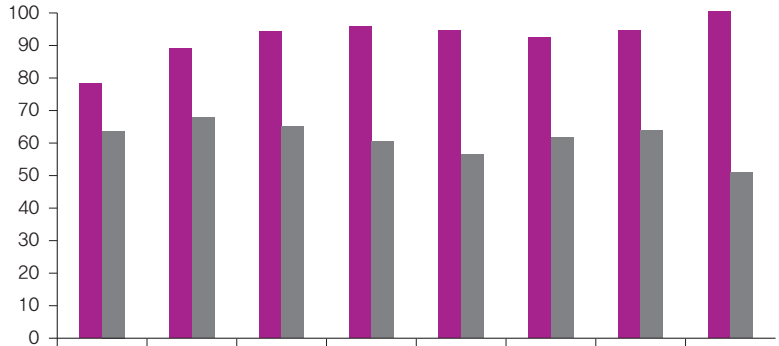
동독 경제 엘리트들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보다 정당 가입 또는 다른 대중조직에서의 활동을 통해 보여 주는 정치적 충성도, 부모의 정치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배경, 전문성 등 세 가지였다. 예나대학의 연구팀은 동독 정부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간부 관리자들을 체

계적으로 확보·양성하기 위해 작성한 방대한 자료[61]의 분석을 통해 위의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자세히 평가할 수 있었다.

〈그림 2-32, 2-33, 2-34〉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학졸업과 같은 전문능력은 기업에서 최고위 관리직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요소였지만, 사통당 가입을 통해 입증되는 정치적 충성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모가 노동자 계급에 속한 것과 같은 사회적 배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엘리트로 선발되는 데 비중이 감소했다. 1970~1980년대에는 경제 엘리트들이 자기 계층 내에서 충원되면서 사회적으로 폐쇄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그림 2-32〉 동독 경제 엘리트의 사통당 가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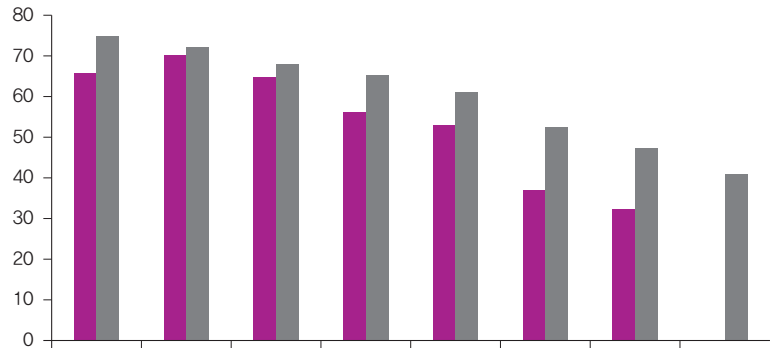
	25세 이하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세 이상
기업 대표	77.9	88.2	93.9	95.3	93.7	91.9	93.1	100.0
사업부 대표	63.3	66.8	64.7	59.2	55.6	60.8	62.7	50.0

* 제조업 분야 인민 소유 기업의 대표 및 사업부 대표(주부서장)의 연령별 사통당 가입률.
출처: 1989년 동독 내각 산하 중앙간부자료보관소 자료, Best 2007,S.36.

[61] 예나대학 연구팀이 확보한 자료는 동독 내각 평의회 중앙간부자료보관소(Zentralen Kaderdatenspeicher des Ministerrates der DDR)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다.

그림 2-33〉 동독 경제 엘리트의 사회적 배경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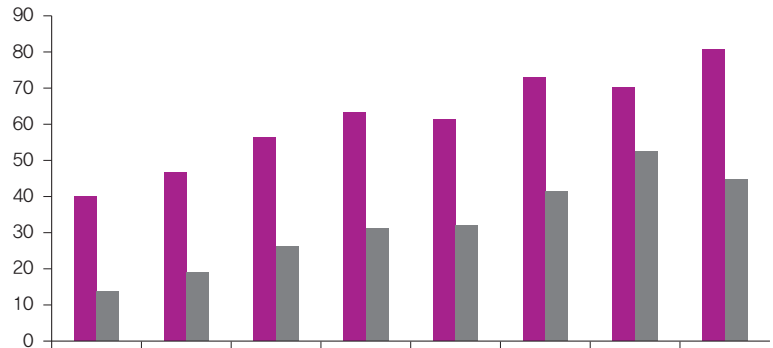
	25세 이하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세 이상
■ 기업 대표	65.2	69.4	63.9	55.6	52.6	36.4	31.8	0.0
■ 사업부 대표	74.0	71.4	67.0	64.1	60.3	51.9	46.8	40.1

* 제조업 분야 인민 소유 기업의 대표 및 사업부 대표(주부서장)의 연령별 사회적 배경(부모가 노동자 계급에 속함).

출처: 1989년 동독 내각 산하 중앙간부자료보관소 자료, Best 2007,S.32.

그림 2-34〉 동독 경제 엘리트의 대학졸업자 비율

(단위: %)



	25세 이하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세 이상
■ 기업 대표	39.1	46.6	55.8	62.8	60.8	72.2	69.3	80.0
■ 사업부 대표	13.1	18.1	25.0	30.3	31.1	41.0	51.6	43.7

* 제조업 분야 인민 소유 기업의 대표 및 사업부 대표(주부서장)의 연령별 대학 졸업자 비율.

출처: 1989년 동독 내각 산하 중앙간부자료보관소 자료, Best 2007,S.34.

제2절 경제적 체제 전환기와 경제 엘리트

1989년 이후 진행된 동독 사회의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변혁의 결과 동독뿐만 아니라 서독의 고용구조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표 2-16〉.

표 2-16〉 동독 변혁기 전후를 기준으로 조사된 제조업 분야의 기업 규모별 기업 및 직원 수

기업 분포도								
	직원 수 기준 기업 규모							
	연도	1~19명	20~99명	100~199명	2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합계(천 명)
동독 지역	1987	3.5%	15.2%	15.2%	25.1%	16.3%	24.7%	3,423
	1992	14.6%	57.8%	14.2%	8.6%	2.9%	1.9%	6,364
	1994	11.8%	67.2%	12.7%	6.1%	1.5%	0.7%	6,950
서독 지역	1980	12.6%	59.9%	12.9%	9.3%	3.0%	2.3%	48,719
	1994	11.6%	60.8%	13.5%	9.3%	2.9%	1.9%	43,700
직원 분포도								
	직원 수 기준 기업 규모							
	연도	1~19명	20~99명	100~199명	2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합계(천 명)
동독 지역	1987	0.1%	1.0%	2.4%	8.6%	12.2%	75.7%	3,230.6
	1992	1.2%	19.8%	14.6%	18.9%	14.5%	31.0%	878.2
	1994	1.6%	33.2%	19.3%	21.4%	11.8%	12.7%	634.1
서독 지역	1980	0.8%	17.3%	11.4%	18.1%	13.2%	39.2%	7,717.7
	1994	0.9%	19.2%	13.2%	20.2%	14.2%	32.3%	6,231.9

출처: 동독 국가중앙통계관리청(Staatliche Zentralverwaltung für Statistik der DDR), 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폴만/게르크스 자료, nach Pohlmann/Gergs 1996, S.98.

고용구조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물론 동독에서 변혁이 시작된 후 2년 사이에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사라지지 않았거나, 부도가 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1990년 통일 이후 2년이 지나자 구동독지역의 산업 생산성은 1989년 수준의 73%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수치는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구조조정의 결과이다.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 주민들이 겪어야만 했던 변혁의 강도는 1930년대에 일어난 세계 대공황의 여파와 비교할 수 있었다. [62]

동독 과도개혁 1기였던 1990년 2월에 한스 모드로우 정부가 동독 경제를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하도록 개혁하기 위해 도입한 신탁관리청이 1990년대 중반부터는 동독 기업의 민영화를 주관하는 기구로 변신되고, 콤비나트로 합병된 인민 소유 기업들을 분해해서 민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나아가 매각을 용이케 하기 위해 종업원 대부분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을

62 베를린시 노동청의 정보자료(문서번호 15).

중소기업으로 전환했다. 신탁관리청의 최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방식은 동독 기업의 매각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63]

신탁관리청의 업무와 관련해 수치로 드러나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90년 중반부터 민영화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탁청이 동독 기업의 관리자들보다는 서독과 외국의 투자자들을 선호한다는 인상을 동독 주민들이 받은 것이다. 이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까지도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이 체제 전환기의 경험을 기억할 때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언급하는 이유이다. 예나대학의 연구팀이 진행한 인터뷰를 보면 당시 동독의 경제 엘리트들이 신탁관리청에 대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동독 중금속 가공 사업장 관리자는 2004년에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우리 기업은 장벽이 붕괴된 후에 가장 먼저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경영자 엽입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실행 가능한 좋은 계획을 세웠고,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탁청은 우리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서로 이야기했지요." 2007년에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동독 전자회사의 관리자였던 사람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1989년 전환 이후 1990년 초에 우리는 재민영화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민영화되었지요. 그 후에도 3년 넘게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신탁청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의 전자회사 관리자는 2007년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신탁청이 4년 동안이나 경영자 영입을 거부했습니다. 신탁청은 저희 사업장 자체를 폐쇄하려고 했지요. 그냥 문을 닫는다는 것이지요. 콘센트 생산부터 전자부품 생산까지 모두 신탁청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지금 우리 기업이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탁청은 독일 전체적으로 볼 때 과잉생산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 사업장을 그냥 폐쇄하려고 했지요. … 서독지역의 기업에서 이미

63 신탁관리청에 관해서는 독일통일 총서 11권 신탁관리청 분야 참조.

충분히 생산하고 있는데 신연방지역에 경쟁자를 살려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 우리가 1994년에 재민영화 신청 절차를 성공적으로 관철시켰을 때에는 1989년에 3,000명이었던 종업원 중에서 120명만 남았습니다."

이런 인터뷰들을 보면 신연방지역의 주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제개혁을 '구동독지역의 식민지화'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경제적 체제 전환의 틀에서 단순히 '구동독지역의 식민지화'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수의 기업이 창업되었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로 창업한 기업들은 일부 인민 소유 기업으로부터 분리된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구동독 출신 기업가들이 경영하였기 때문에, 신연방지역 출신 경제 엘리트 구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신연방지역에서 50~1,0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제조업 분야 기업의 관리자 중에 구동독 출신의 비율은 〈표 2-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약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199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경제적 체제 전환이 구동독지역에서 경영의 식민지화가 추측했던 것만큼 심각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영화된 대부분의 대규모 기업들에서는 과거의 기업 간부 관리자들이 오너가 되지 못하고 외부 경영진으로 대체되면서 엘리트 순환(Elitenzirkulation)이 일어나기는 했다. 그 결과 신연방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본 소유주가 서독지역 출신이거나 외국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어도 인민 소유 기업에서 분리되어 창업된 기업의 경우 과거 기업의 간부 관리자들이 기업주가 되는 엘리트 재생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경제적 체제 전환은 동독 체제의 경제 엘리트에게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연령대가 높은 지도급의 관리자들은 조기 정년퇴직해야만 했다. 2000년에 이루어진 과거 콤비나트 엘리트들, 즉 동독 콤비나트의 관리자급에서 근무한 사람의 잔류에 관해 실시된 연구를 보면 경제적 체제 전환이 이들의 삶의 계획과 커리어에 단절을 의미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렇지만

사회적 지위 하락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기업 간부 관리자들은 통일 후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표2-17, 2-1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의 대표직 혹은 임원직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달했다.

표 2-17〉 1990년 통일 후 약 10년간 과거 동독 콤비나트 엘리트들의 직위

(단위: %)

직위	비율
경제 기업 대표	36
경제 기업 관리자급 중 지도적인 직위	12
경제 기업 직원	9
자영업자	7
연맹 대표	3
노동 지원 기업 관리자급 중 지도적인 직위	2
행정 부문 관리자급 중 지도적인 직위	2
ABM*–프로젝트 직원	2
실업자	2
조기 은퇴자 / 연금 생활자	24

* ABM이란 고용지원센터(Agentur für Arbeit)에서 재정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조치를 의미한다. 일자리 창출 조치는 실업자들에게 일반 노동시장 외에서의(일명 '제2 노동시장(Zweiter Arbeitsmarkt)')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BM은 1990년대 독일 전역에서 활발히 실시되었다.

임의 추출 조사 표본 58건. 출처: Schreiber et al. 2002, S. 139.

표 2-18〉 1990년 통일 후 약 10년간 과거 동독 콤비나트 엘리트들의 전형적인 커리어 유형의 비율

(단위: %)

커리어		비율
설립자 (Gründer)	자신의 기업을 설립하고, 그 기업에서 대표로 활동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 엘리트로 분류될 수 있다.	20
지속자 (Fortsetzer)	오너가 따로 있는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 혹은 임원으로서, (조건적으로만) (지역) 경제 엘리트로 분류될 수 있다.	20
신분 하락자 (Absteiger)	자신의 엘리트 신분을 잃게 된 자로, 한 기업의 전문 능력을 갖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17
잔류자 (Bleiber)	콤비나트 후속 기업의 최고 경영자직을 넘겨받아, 콤비나트의 해체와 정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18
이직자 (Wechsler)	다른 엘리트 분야의 최고 경영자 혹은 임원 직책으로 이직 (예: 행정 분야의 대표)	5
휴직자 (Ausfaller)	대부분의 직업 이력이 실업으로 점철된 사람	4
은퇴자 (Aussteiger)	곧바로 조기 은퇴 혹은 연금 생활자로 전환	16

임의 추출 조사 표본 289건.

출처: Schreiber et al. 2002, S. 141.

이 조사를 통해서 1990년 이후 실업자가 되었거나, 연금 생활자가 된 기업 간부들의 비율, 즉 휴직자와 은퇴자의 비율은 해당 인물이 동독 경제에서 몸담았던 전문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특히 이러한 비율이 낮은 분야로는 기술 분야 혹은 연구개발(R&D)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9〉. 동독 체제에서 콤비나트의 대표나 부대표직을 수행한 경제 엘리트도 경제적 체제 전환 이후에도 대부분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과거 기업의 간부 관리자들이 통일 후에도 놀라울 정도로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19〉 1990년 통일 후 약 10년간 과거 동독 콤비나트 엘리트들의 관리 분야에 따른 휴직자 및 은퇴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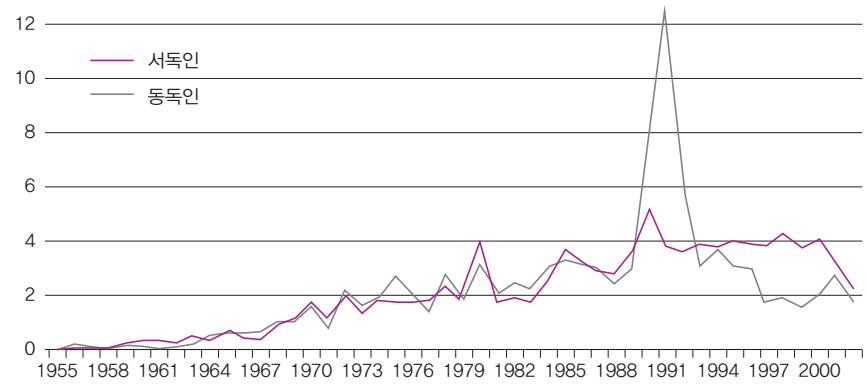
관리 분야	휴직자 및 은퇴자 비율
연구개발(R&D)	0
과학기술	5
자재관리	7
특정 관리 분야가 없는 대표 및 부대표	14
기술	15
대표	16
데이터 처리	17
생산	17

'휴직자(Ausfaller)' = 1990년 이후 직업적 운명이 주로 실업으로 점철된 사람; '은퇴자' = 연금 생활자.
출처: Schreiber et al. 2002, S. 144.

위에 언급한 잔류 연구의 틀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통일 이후 개인적인 삶의 궤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했다. 인터뷰 대상자 86%가 통일의 승자로 평가하였으며, 36%가 자신을 통일의 패자라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20%가 통일을 통해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다고 답한 것이다.[64]

[64] Schreiber et al. 2002, S.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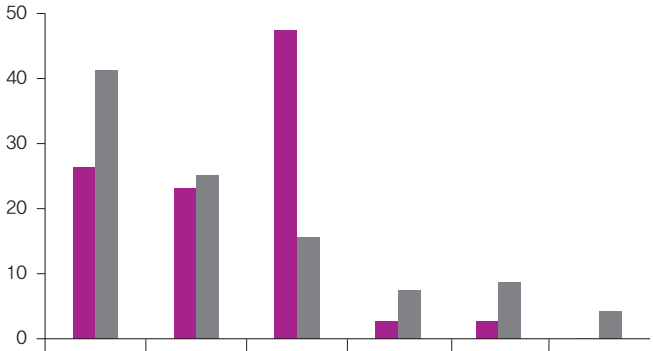
그림 2-35〉 직원 수 50-1,000명 제조업 분야 기업 대표들의 직업 변화 시작 연도



출처: SFB 580, A2 기업 설문조사.

그림 2-36〉 2002년 기준 직위 유지 기간

(단위: %)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 이상
구동독 출신 기업대표 253명	26	23	47	2	2	0
구서독 출신 기업대표 483명	41	25	15	7	8	4

출처: SFB 580, A2 기업 설문조사.

예나대학의 연구팀은 2002년에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업 이력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동독 경제의 붕괴로 인해 이들은 1990년대 초반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2-35〉. 구동독 지역 출신 기업의 사장과 대표들 중에 1990년대 초에 동일한 대표직에 올라서, 2002년까지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그림 2-36〉.

부분적으로 구동독지역 출신의 기업 대표들이 서독지역 출신의 기업 대



표들보다 대표직을 더 오랫동안 수행한 것도 볼 수 있다. 기업대표 중에 기업에 머무는 기간과 관련해 동서지역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신연방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서독지역 출신 기업인들과 비교해 보면, 동일한 경우의 구동독지역 출신 기업인들이 대부분 1990년대 초에 존재했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기업 대표직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1990년대 초반의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만 그 기회가 존재했을 수도 있다. 그 후에는 시장이 분화되면서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체제 전환으로 특징지어지는 변혁기가 동독의 경제 엘리트에게는 마치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만 하는 '출발점'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직업상의 커리어나 창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경제적 체제 전환으로 인해 동독 구체제하에서 간부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사적 관리능력은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았다. 과거에 구축한 기업의 내부와 외부적 인맥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또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기업들이 더 이상 자사 제품에 대한 공급 독점권을 갖지 못했고, 기업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해야만 했다. 이런 모든 상황이 동독 구체제하에서 훈련된 간부 관리자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를 보면 신연방지역의 경제 엘리트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이해할 수 있다. [65]

2004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철 제조기업의 대표는 체제 전환기의 막막했던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리고 1991년이 왔지요. 그때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경제적인 변화도 같이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때는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또 무엇을 해야만 할지 고민해야만 했지요. 장래에는 무엇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때 당장 생

[65] 1991년 가을 현재 신연방주의 사회 분위기와 문제점(문서번호 54), 신연방주에서의 실업(문서번호 70).

산해 놓았던 것들을 어디로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야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시장에는 이미 모든 것들이 있었고요. 어떤 조직을 구성해야만 하고, 내가 설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지요. 한꺼번에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어요."

동독 구체제하에서 전철 생산기업의 대표였고, 통일 이후 그 기업을 매수한 한 기업인은 2002년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통일 이후 나는 기업의 이익 때문에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모든 것을 뒤에 감추어야만 했지요. 그것이 내가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외에, 가장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나를 억누르고 숨겨야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지요. … 내가 경영하는 기업은 동독 시절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었고, 중앙으로부터 관리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5~7년 전에 이미 생산량을 미리 계획했었습니다. 시장판매와 고객유치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제품의 판매를 위해 고객을 유치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현재 자동차 생산기업의 대표이며, 1989년 이전에 동일한 직종의 기업의 관리자였던 신연방지역 경제 엘리트의 한 사람은 2002년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의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생산품의 질과 생산속도를 서독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작동하는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장을 위해 상품을 개발하면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과제는 발전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비용 구조를 개선해서 적절한 상품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3절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경제 엘리트들의 커리어

경제적 체제 전환기의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동독 구체제하에서 경제 엘리트로 분류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기업의 간부 관리자들 중에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의 경제 엘리트로 진출할 수 있었다. 통일독일의 신연방지역 출신 경제 엘리트들의 직업 이력을 정확히 관찰해 보면, 이들의 커리어는 세 가지 유형으로 압축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첫 번째 유형은 동일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인민 소유 콤비나트 기업에서 수행한 직책과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적 체제 전환이 시작된 후 초기 몇 년간 동일한 기업에서 일하다가 관리경영자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 소유 지분의 매입과 연결되어 있었다. 1990년대에 신연방지역 출신으로 성공한 기업 대표의 절반 이상이 기업 지분의 매입을 포함해서 동일한 기업 내에서 직업을 유지한 경우라는 사실은 이들이 1990년대 초반 아직 열려 있었던 기회의 창을 잡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직장을 변경하거나 스스로 새롭게 창업을 통해 경영자급으로 승진한 경우이다. 응답자의 1/3 이상은 경영진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이유로 1990년대 초에 직장을 옮긴 것을 들었다(27.0%).

세 번째 유형은 다른 두 유형에 속하는 인물군보다 연령이 낮은 '차세대 리더'들로 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동독의 콤비나트 기업에서 근무했지만, 통일 이후 1990년대 초에 직장을 바꾸면서 관리자급으로 진급했다. 이들이 경영진으로 승진한 시기는 1990년대 말, 혹은 그 이후였다. 구동독지역 출신 기업인 응답자 중 약 1/5이 이러한 커리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0〉 구동독지역의 직원 수 50-1,000명의 제조업 기업 대표의 커리어 유형의 특징

독립 변수		커리어 유형							표본추출 조사 합계
		1: 통일 후에도 동일한 직책 유지	2: 동일 기업 내 '통일의 승자'	3: '조기 기업교체로 인한 '통일의 승자'	4: 1990년대 기업 교체로 인한 신분상승자	5: 기업 이직자	6: 동일 기업 내 경영자직	7: 통일 후 경영자 직책에 변화	
해당 기업 입사연도 (평균치)		1973	1978	1984	1991	1991	1988	1995	1984
취업활동 시작년도 (평균치)		1965	1968	1968	1970	1968	1971	1973	1969
연령(평균치)		56	54	53	52	52	50	48	53
여성 비율		–	2.9%	21.4%	3.6%	10.3%	14.3%	5.0%	7.6%
대표 (Geschäftsführer)		100.0%	83.8%	78.6%	89.3%	89.7%	76.2%	80.0%	84.8%
공장장 (Betriebsleiter)		–	7.4%	7.1%	7.1%	6.9%	14.3%	10.0%	7.6%
총지배인 (Prokuristen)		–	8.8%	14.3%	3.6%	3.4%	9.5%	10.0%	7.6%
경영 간부직으로 해당 기업에 입사하지 않음(내부 승진)		82.4%	82.4%	78.6%	14.3%	27.6%	61.9%	45.0%	59.7%
기술 분야 전공 비율		94.1%	89.7%	71.4%	92.9%	89.7%	81.0%	80.0%	86.3%
경영학 전공 비율		17.6%	17.6%	42.9%	21.4%	20.7%	28.6%	30.0%	24.2%
기업 지분 보유 비율		76.5%	57.4%	66.7%	64.3%	65.5%	33.3%	35.0%	57.6%
기업 지분 획득 방법	회사 설립	7.7%	20.5%	11.1%	55.6%	68.4%	–	42.9%	62.8%
	매입	84.6%	76.9%	72.2%	50.0%	21.1%	85.7%	42.9%	62.8%
신설 기업		11.8%	28.8%	34.6%	81.5%	63.0%	38.1%	52.6%	42.9%
임의표본추출조사 내 비율		8.1%	32.2%	13.3%	13.3%	13.7%	10.0%	9.5%	

출처: SFB 580, TP- A2, 2002 기업 설문조사(직원 수 50~1,000명의 제조업 분야 기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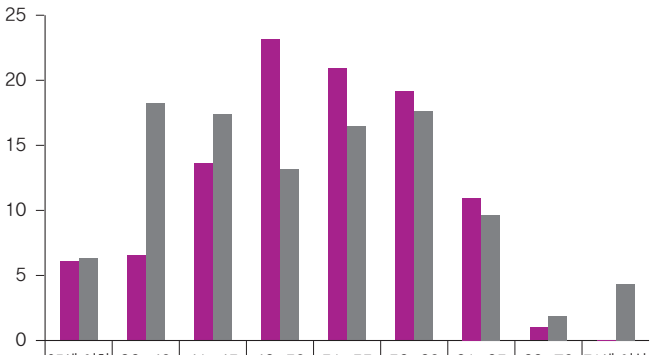
동독 구체제의 경제 엘리트와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의 경제 엘리트 간에 확인된 지속성의 규모는 놀라울 정도로 크다. 그것은 정치 엘리트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동독 구체제하에서 경제 엘리트였던 사람들이 통일 후 새로운 체제하에서 지역 경제에서 성공적으로 창업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동일한 직장에서 1990년대 초반에 잠시 주어진 기회의 창을 활용했다는 점에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신탁관리청의 민영화정책

으로 인해 동독 구체제의 경제 엘리트들이 초기에 겪었던 불이익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지역 출신 경제 엘리트의 이력을 보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의 단절을 뛰어넘는 연속성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

예나대학 연구팀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신연방지역 경제 엘리트의 연속성은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에서 경제적 체제 전환으로 인한 기관의 구조조정과 기업 대표의 세대교체가 철저히 분리되어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통일과 함께 사회, 경제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단행된 데 비해, 경제적 기능 엘리트 사이에서의 세대교체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그것은 1990년 초반의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 연령과 특별한 조건하의 인물들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작은 기회의 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 있었던 인물들은 주로 1989년에 약 40세였던 동독 기업 위계질서의 관리자 서열에서 '두 번째 열'에 속했던 사람들이다. 이것은 2002년에 조사된 구동독지역 기업 대표들의 연령 분포도를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그림 2-37〉. 2002년 당시 구동독 기업 대표직을 맡은 이들의 주 연령대는 45세에서 60세 사이였다. 8년이 지나자 구동독 기업 대표들의 주요 연령대는 8살이 높아졌다〈그림 2-38〉.

그림 2-37〉 2002년 기준 신연방지역과 서독지역 기업 대표의 연령 분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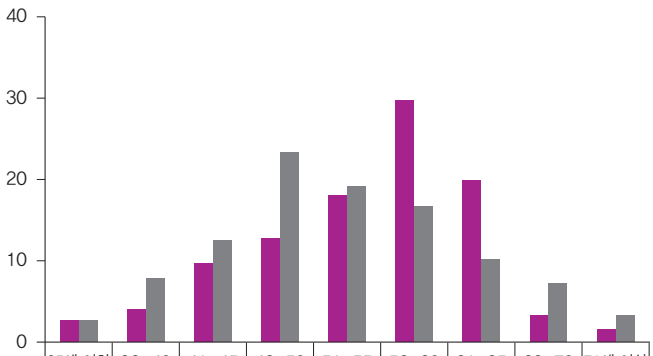


	35세 이하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71세 이상
동독인 기업대표 253명	6.0	6.3	13.4	22.9	20.9	19.0	10.7	0.8	0.0
서독인 기업대표 488명	6.1	18.0	17.2	12.9	16.4	17.6	9.6	1.6	4.0

* 직원 수 50~1,000명의 제조업 분야 기업 대표들의 연령 분포도, 설문 시기 2002.
출처: 특별연구영역580, 부분 프로젝트 A2의 2002년 기업 설문조사.

그림 2-38〉 2010년 기준 신연방지역과 서독지역 기업 대표의 연령 분포도

(단위: %)



	35세 이하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71세 이상
동독인 기업대표 161명	2.5	3.7	9.3	12.4	18.0	29.8	19.9	3.1	1.2
서독인 기업대표 239명	2.1	7.5	12.1	23.4	18.8	16.3	9.6	7.1	2.9

* 직원 수 50~1,000명의 제조업 분야 기업 대표들의 연령 분포도, 설문 시기 2010.
출처: 특별연구영역580, 부분 프로젝트 A2의 2010년 기업 설문조사.

통일 후 20년이 흐른 2010년까지도 구동독지역의 중소기업 대표 중 다수가 동독의 콤비나트에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표 2-21〉. 여전히 구동독 기업 대표들 중 절반 이상이 동독에서의 경영 이력을 갖고 있었다.

표 2-21〉 1989년 이전부터 인사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경영 직책을 담당한 기업 대표의 비율

(단위: %)

설문 연도	1989년부터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진 기업 대표 비율	
	구동독/신연방지역	서독지역
2002	79.1	72.0
2005	74.8	55.7
2010	67.1	54.8

출처: SFB 580, TP- A2, 2010 기업 설문조사(직원 수 50~1,000명의 제조업 분야 기업 대상).

제4절 통일 이후 20년–신연방지역의 경제 엘리트

1990년 통일 이후 신탁관리청에 의한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구동독지역에서 '경영자 자본주의'가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이 많았다. 지역적 연고가 없는 서독지역 출신의 경영자가 구동독지역의 기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예나대학 연구팀의 조사결과는 이러한 예측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예측과는 달리 제조업 분야에서 구동독지역 출신 중소기업 대표의 기업지분 보유율은 서독지역의 비교 집단의 기업지분 보유율보다 높았다〈표 2-22〉.

표 2-22〉 기업 대표에 의한 기업지분 소유 여부

(단위: %)

기업 대표 전체 중 기업 오너 비율	
구동독/신연방지역	서독지역
51.3	44.0

출처: SFB 580, TP- A2, 2010 기업 설문조사(직원 수 50~1,000명의 제조업 분야 기업 대상).

구동독지역에 입지를 둔 구동독 기업 대표들의 특징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러한 지분을 체제 전환 과정에서 매입하거나 혹은 창업을 통해 획득했다는 점이다. 서독지역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하가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소유권 획득은 대부분 상속과 증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0년에 기업 양도를 앞두고 있는 기업 대표들 중 1/3 이상이 친족 내 양

도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동서독의 차이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 내 세대교체라는 전통적인 형태는 기타 인물 집단 혹은 기타 기업에 기업을 양도하는 것에 비해 지배적인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23〉.

표 2-23〉 기업 대표의 정보에 따른 기업 이전 계획

기업 대표의 후계자는...	기업 대표	
	구동독/신연방지역 출신	서독지역 출신
친척	34.8%	39.5%
공동 소유자	9.2%	4.6%
고용 중인 관리자	13.5%	6.7%
직원	1.4%	1.0%
외부 관리자	2.1%	4.6%
다른 기업	1.4%	1.5%
계획 중인 기업 이전 건수	141건	195건

출처: SFB 580, TP- A2, 2010 기업 설문조사(직원 수 50~1,000명의 제조업 분야 기업 대상).

일반적으로 독일 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 자본주의적' 구조가 지배적이다. 한 사람이 회사를 소유하고 경영하면서 가계 내의 승계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이 오랜 기간 유지된 기업이 많다. 흥미 있는 사실은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의 1세대 경제 엘리트가 2선으로 물러나면서 가족 내 기업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앞으로 구동독/신연방지역의 경제구조가 가족 중심의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서독지역의 경제구조와 유사한 '가족 자본주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통일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동서 양쪽의 경제구조도 가족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Best, H., 2007. Cadres into Managers: Structural Changes of East German Economic Elites before and after Reunification. In: Lane, D./ Lengyel, G./ Tholen, J., (Hrsg.), Restructuring of the Economic Elites after State Socialism. Recruitment, Institutions and Attitudes. Stuttgart, S. 27–44.

Best, Heinrich / Becker, Ulrike (Hrsg.), Elites in Transition. Elite Research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Leske–Budrich: Berlin 1997.

Bürklin, Willhem/Hoffmann–Lange, Ursula (1999): Art. Eliten, in: Weidenfeld, Werner/ Korte, Rudolf (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49–1989–1999 (Neuausgabe 1999) (= Schriftenreihe, Bd. 363), Bonn: BPB, S. 317–330.

Bürklin, Wllhem/Rebenstorf, Hilke (Hrsg.) (1997): Eliten in Deutschland. Rekrutierung und Integration, Opladen leske und Budrich.

Derlien, Hans–Ulrich (1997): Elitenzirkulation zwischen Implosion und Integration. Abgang, Rekrutierung und Zusammensetzung ostdeutscher Funktionseliten 1989–1994, in: Wollmann, Hellmut, u.a. (Hrsg.) (1997): Transformation der politische–administrativen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Leske und Budrich, Opladen, S. 329–417.

Dogan, mattei/Higlez, John (1998): Elites, Crises, and Regiems in Comparative Analysis, in: dies. (Hrsg.): Elites, Crises, and the Origins of Regimes, Lanham/Oxford: Rowman & Littefield.

Edinger, Michael (2004): Alte Eliten in einer jungen Demokratie? Elitenzirkulation und Elitenreproduktion unter ostdeutschen Parlamentariern, in: Veen, Hans–Joachim (Hrsg.): Alte Eliten in jungen Demokratien. Wechsel, Wandel und Kontinuität in Mittel– und Osteuropa, S. Böhlauf–Verlag, S. 61–92.

Edinger, Michael / Vogel, lars (2005): Role Perceptions, Party Cohesion and Political Attitudes of East and West German Parliamentarians, in: Czech Sociological Review 41 (2005) 3, S. 375–399.

Eithe, Ulrich (1999): Art. Parteien, in: Weidenfeld, Werner/Korte, Rudolf (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49–1989–1999 (Neuausgabe 1999) (=Schriftenreihe, Bd. 363), Bonn: BPB, S. 617–631.

Geißler, Rainer (2008): Die Sozialstruktur Deutschlands. Zu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mit einer Bilanz zur Wiedervereinigung, 5. Aufl., VS–Verlag, Wiesbaden.

Gergs, H.–J./ Pohlmann, M., 1999. Ökonomische Eliten vor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Die Selektivität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In: Hornbostel, S. (Hrsg.), Sozialistische Eliten. Horizontale und vertikale Differenzierungsmuster in der DDR.

Opladen, S. 223–252.

Hartmann, M., 2006. Vermarktlichung der Elitenrekrutierung? Das Beispiel der Topmanager. In: Münkler, H./ Straßenberger, G./ Bohlender, M., (Hrsg.), Deutschlands Eliten im Wandel. Frankfurt/ New York, S. 431–454.

Hornbostel, S., 2000. Von Überlebenden, Kolonisten und Newcomern. Neue und alte Eliten in Ostdeutschland. In: Kursbuch, Nr. 139, 123–136.

Klein, S., 2004. Familienunternehmen. Theoretische und empirische Grundlagen. Wiesbaden, 2. Auflage.

Kleinfeld, Ralf: Art. Verbände, in: Weidenfeld, Werner/Korte, Rudolf (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eheit 1949–1989–1999 (Neuausgabe 1999) (= Schriftenreihe, Bd. 363), Bonn: BPB, S. 765–780.

Martens, B., 2005. Der lange Schatten der Wende. Karrieren ostdeutscher Wirtschaftseliten. In: Historical Social Research, 30, S. 231–237.

Martens, B., 2007. Orthodoxie der Proselyten – Einstellungsmuster ökonomischer Funktionseliten im Ost/West–Vergleich. In: Zeitschrift für Soziologie, 36, S. 118–130.

Meyer, Gerd (1991): Die DDR–Machtelite in der Ära Honecker, Tübingen.

Münkler, H., 2000. Werte, Status, Leistung, Über die Probleme der Sozialwissenschaften mit der Definition von Eliten. In: Kursbuch, Nr. 139, 76–88.

Pohlmann, M., Gergs, H.–J., 1996. Manageriale Eliten im Transformationsprozeß. In: Pohlmann, M./ Schmidt, R., (Hrsg.), Management in der ostdeutschen Industrie. Opladen, S. 63–98.

Ritter, Gerhard A. (2006): Der Preis der deutschen Einheit. Die Wiedervereinigung und die Krise der Sozialstaats, München: C.H.Beck.

Ritter, Gerhard A. (2009): Wir sind das Volk! Wir sind ein Volk! Geschichte der deutschen Einigung, München: C.H.Beck.

Rödder, Andreas (2010): Deutschland einig Vaterland. Die Geschichte der Wiedervereinigung (Schriftreihe, Bd. 1047), Bonn BPB.

Salheiser, A., 2009. Parteitreu, plangemäß, professionell? Rekrutierungsmuster und Karriereverläufe von DDR–Industriekadern. Wiesbaden.

Salheiser, Axel (2009): Parteitreu, plangemäß, professionell?, 1. Aufl. Wiesbaden: VS Verl. für Sozialwissenschaften.

Sattler, F./ Boyer, C., 2009. In Lieu of an Introduction: Big Structures, Large Processes and Huge Copmarisons – A Frame of Interpretation. In: Sattler, F./ Boyer, C., (Hrsg.), European Economic Elites. Between a New Spirit of Capitalism and the Erosion of State Socialism. Berlin, S. 19–70.

Schmidt, R. 2005. Die zwei Welten der ostdeutschen Manager. In: Historical Social Research, 30, S. 231–237.

Schreiber, E./ Meyer, M./ Steger, T./ Lang, R., 2002. Eliten in „Wechseljahren". Verbands- und Kombinatsführungskräfte im ostdeutschen Transformationsprozess. München/ Mering.

Solga, Heike (1995): Der Elitenimport nach Ostdeutschland: Transformationstypen und Veränderungen in der Elitenrekrutierung, In: Diewald, Martin/Mayer, Karl-Ulrich (Hg.), Zwischenbilanz der Wiedervereinigung, Opladen 1996, S. 89–111

Weingarz, Stephan (2003): Laboratorium Ostdeutschland. Der ostdeutsche Transformationsprozess als Herausforderung für die deutschen Sozialwissenschaften, LIT-Verlag, Münster, Hamburg, London.

Welzel, Christian (1997): Rekrutierung und Sozialisation der ostdeutschen Elite – Aufstieg einer demokratischen Gegenelite, in: Bürklin, Wilhelm und Rebenstorf, Hilke (Hrsg.) (1997): Eliten in Deutschland. Rekrutierung und Integration, Opladen Leske und Budrichs, S. 201–238.

독일통일 총서 26

사회계층 변동 분야 관련 정책문서



사회계층 변동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 통일연구팀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	우리 시대의 투쟁에 있어 국가시민 교과의 의의–교육학술원 내 '사회과학수업' 연구소 소장의 논문	1989년	교육학술원 내 '사회과학수업' 연구소 소장 호르스트 리허르트	Gagel, Walter (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2	연방정부–동독 주민들의 분위기–융 국장이 콜 수상에게 제출한 보고	1989년 11월 3일	연방수상청, 수상청 국장 융, 연방수상 헬무트 콜	Bundesarchiv, BArch/602 – 35001 (78) De 2/64/89, Band 29, Bl. 61–63
3	동독 '국가시민교육' 교과의 재정비에 관해–츠비카우 교육대학 내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 학부의 입장	1989년 11월 10일	츠비카우 교육대학 '국가시민교육 교과 방법론' 학부	Gagel, Walter (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4	우리 도시들을 구할 수 있을까?–동독 문화연맹 문화재관리부 부장의 글	1989년 말	동독 문화연맹 문화재관리부 부장 겸 문화재관리협회 중앙위원회 비서 베른트 메터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41–50
5	동독 시민에 고함 "우리의 구도시를 폐허화로부터 구하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도시와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1989년 12월 11일	드레스덴 문화재보호관, 베를린 문화재보호관, 할레 문화재보호관, 슈베린 문화재보호관, 에어푸르트 문화재보호관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64
6	동독 예술가협회 공동 선언	1989년 12월 20일	동독 문인협회, 동독 미술가협회, 작곡가 및 음악가 협회, 연극인협회, 영화방송협회, 엔터테인먼트협회, 건축설계사협회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17–121
7	통일 이후–일상의 시작	1990년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 연방협회	AOK Bundesverband, DOK 21/1990 S. 656–658, Bonn 1990
8	문화 장관 켈러가 모드로우 수상에게 제출한 1989년 12월 20일에 발표된 예술가협회의 선언문에 대한 입장	1990년 1월 5일	디트마 켈러 동독 문화 장관,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12 f.
9	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교육 시행령	1990년 2월 8일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노동임금부 장관 하넬로레 멘쉬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1 – Ausgabetag: 2. März 199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0	직업알선 기간 동안 제공되는 국가보조와 기업에 의한 지원금에 대한 시행령	1990년 2월 8일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노동임금부 장관 하넬로레 멘쉬, 교육부 장관 한스-하인츠 에몬스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7 – Ausgabetag: 12. Februar 1990
11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이주 또는 머무르기? 동서독 간의 노동시장 연계성에 대해	1990년 2월 16일	연방고용노동청,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	Sammlung (Dokumentatio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r Entwicklung der Arbeitsverwaltung in Deutschland (HdBA Mannheim): SEAD-BA 8.4 / 626
12	향토문화사협회의 창립선언문	1990년 2월 21일	향토문화사협회 발기인 그룹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88 f.
13	동독의 문화 현황-중앙원탁회의 14차 회의 결과	1990년 2월 26일	동독 중앙원탁회의	Bundesarchiv, BArch/DA 3/84, fol. 144-166
14	사회헌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입장-동독 원탁회의의 토론	1990년 3월 5일	동독 중앙원탁회의, 노동임금부, 보건부	Thaysen, Uwe (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 Band IV: Identitätsfindung?" S. 963-974 (15. Sitzung, 5. März 1990), Wiesbaden 2000
15	베를린시 노동청의 정보자료	1990년 5월 23일	동베를린 노동청 II 지소(팡코, 바이센제, 프렌츠라우어베르크), 갈레 소장	Sammlung (Dokumentatio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r Entwicklung der Arbeitsverwaltung in Deutschland (HdBA Mannheim): SEAD-BA 8.4 / 691
16	1990년 10월에 동독에 주거지를 가졌던 주민과 법인에게만 농지와 임야의 취득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1990년 5월 23일	동독 농림부 차관 페터 카우프폴드	Bundesarchiv, BArch/DA 1/17517
17	농업 산림 분야의 대지 및 토지 소유권 처리에 대해-동독 농림부와 농민회 및 민사당의 제안	1990년 5월 29일	동독 농림부, 농민연맹, 민사당	Bundesarchiv, BArch/DA 1/17517
18	사립 탁아시설 운영 규정	1990년 6월 27일	동독 내각위원회,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4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9	연방정부의 1990년 사회보고서–'독일 사회통합' 발췌	1990년 6월 29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1. Wahlperiode, Drucksache 11/7527
20	동독의 소유관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기정보–서독 연방정부 농림식품부	1990년 7월 1일	서독 연방정부 농림식품부 장관 칼 프리드리히 퇴네	Unabhängiger europäischer Presse– und Informationsdienst für Agrarpolitik und Agrarwirtschaft (Hrsg.). Agra–Europe. 31. Jahrgang, 3.9.1990 Nr. 36
21	새로운 아동청소년지원법과 청소년지원조직법의 도입에 관한 법	1990년 7월 20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49
22	독일통일의 문화정책적 문제에 관한 문화평의회의 성명서	1990년 7월 26일	동독 문화평의회, 서독 문화평의회	Bundesarchiv, BArch/DR 1/19417
23	동서독 간의 이주 움직임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와 그것이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	1990년 8월 22일	연방고용노동청, 독일경제연구소	Sammlung (Dokumentatio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r Entwicklung der Arbeitsverwaltung in Deutschland (HdBA Mannheim): SEAD–BA 8.4 / 646
24	통일조약 31조와 32조–가족, 여성 그리고 사회적 세력에 관한 규정	1990년 8월 31일	내무부 장관 쇼이블레, 동독 정무차관 클라우제	Bundesgesetzblatt 1990 Teil II S. 889. zitiert in: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juris GmbH. www.juris.de
25	"지불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독일통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부담과 문제에 대한 연방 노동장관과의 대담	1990년 9월 7일	연방 노동사회부 노베르트 블륌 장관	Der Spiegel, 38/1990, S. 24–27
26	탁아시설의 유지–최고인민회의 가족여성상임위원회가 지방기초단체에 전하는 시행수칙	1990년 9월 21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가족여성상임위원회	Bundesarchiv, BArch/DA 1/17538
27	시민교육 · 교육, 문화 · 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베를린 시의회 회의록	1990년 10월 10일	시민교육 · 교육, 문화 · 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베를린 시의회, 쥐빌레 폴크홀츠 위원, 학교, 직업교육 및 스포츠 행정처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8	연방정부의 1990년도 연금조정보고서-신연방주 관련 발췌	1990년 11월 28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연방 노동사회부, 사회자문위원회 빈프리드 슈맬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504
29	동독 출신의 판사와 검사의 재임용에 대한 브란덴부르크주 결정 기준	1990년 11월 29일	브란덴부르크 주법무부, 판사선출위원회, 검사임명위원회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0
30	소수민족 집단의 보호와 지원-브란덴부르크 주의회 헌법위원회에 청원 및 권고	1990년 12월 3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헌법위원회, 도모비나 대표 베른하르트 치데쉐, 연방의회 청원위원회,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총리실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000 Nr. 612
31	신연방주 연금조정 1차 시행령(1차 연금조정시행령)	1990년 12월 14일	연방회의, 헬무트 콜 수상, 연방 노동사회부 블륌 장관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0, Teil I Nr. 71
32	노동력 부족에서 현재의 노동력 과잉으로: 신연방지역의 여성과 경제활동	1991년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	Engelbrech, Gerhard (1991):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Vom Arbeitskräftemangel zum gegenwärtigen Arbeitskräfteüberschu ß : Frauen und Erwerbsarbei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München.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3	브란덴부르크주 내 정치시민교육 중등교육 1단계 '사회 과목'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브란덴부르크주 청소년 · 교육 · 스포츠부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 Vorläufiger Rahmenplan Lernbereich "Gesellschaftslehre", Politische Bildung Sekundarstufe I, Potsdam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4 368
34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 사회 과목: 하웁트슐레,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에 대한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교육 · 학술 · 문화부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 – Sozialkunde – des Landes Mecklenburg Vorpommern, Schwerin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9 f.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5	작센-안할트주 내 사회 과목 교육: 중고등학교와 하웁트슐레 관련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작센-안할트주 교육 · 학술 · 문화부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des Landes Sachsen-Anhalt.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 Sekundarschule: Bildungsgang Hauptschule – Sozialkunde, Magdeburg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2-374
36	튜링겐 주 내 사회 과목: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튜링겐주 문화부	Thüringer Kultusministerium. Vorläufige Lehrplanhinweise für Regelschule und Gymnasium Sozialkunde, Erfurt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4-376
37	주택시장 문제에 대한 작센주 주의회 논의	1991년 2월 22일	작센 주의회, 작센주 내무부 차관 알브레히트 부톨로, 작센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 Plenarprotokoll 1/12, S. 560-568
38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택정책에 관한 주의회의 논의	1991년 4월 10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무 장관 게오르크 디데리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16, S. 678-69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9	주택경제 상황에 관한 주의회의 질의에 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무 장관의 답변	1991년 5월 6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무 장관 게오르크 디데리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사민당 소속 켈러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Drucksache 1/425
40	주택건설 지원 지침에 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토론	1991년 5월 15일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17, S. 1289-1303
41	주택정책과 임대료 규정에 대한 주의회의 질의에 대한 작센주 내무 장관의 답변	1991년 5월 16일	작센 주의회, 작센주 좌파/민사당 원내 대표 클라우스 바텔, 작센주 내무 장관 루돌프 크라우제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 Drucksache 1/400
42	연금보험과 산재보험의 법적인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연방회의의 심의	1991년 5월 17일	연방회의	Deutscher Bundesrat, Archiv, Plenarprotokolle, 630. Sitzung, S. 187-194
43	사회복지 계획을 위한 기본원칙	1991년 6월	신탁관리청	Treuhandanstalt (Hrsg.). Dokumentation 1990-1994, Berlin: Treuhandanstalt 1994
44	신연방주의 유치원과 탁아소 그리고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호시설-연방의회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1년 6월 4일	연방정부, 사민당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61
45	제1차 기본임대료 인상 규정	1991년 6월 17일	이름가르트 아담-슈베처 연방 건설부 장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37, S. 1269
46	신연방주를 위한 주택수당 특별법 도입	1991년 6월 20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연방정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37, S. 1250-1267
47	신연방주의 주거비보조법-주거보조금과 다른 복지규정의 개정	1991년 6월 20일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연방 대통령, 콜 수상, 연방 건설부 장관 아담-슈베처, 연방 재무부 장관 바이겔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1, Teil I Nr. 37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8	문화 관련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작센-안할트 주의회의 결정	1991년 6월 21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8/502 B
49	브란덴부르크주 주의회가 제출한 주택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도시개발주택건설교통부 장관의 답변	1991년 6월 26일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비아테 트람스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22, S. 1611-1612
50	연금 및 산재보험 통합을 위한 법-연금이관법	1991년 7월 25일	연방회의 대표 헤닝 포르쉐라우, 수상 헬무트 콜, 연방 노동사회부 장관 블륌, 연방 법무 장관 클라우스 킹켈, 연방 재무 장관 테오 바이겔, 연방 외무 장관 겐셔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1, Teil I Nr. 46
51	학력 동등성 인정(대학교, 교회 양성교육기관, 전문대학교 및 공업전문대학교 학위)	1991년 10월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52	브란덴부르크주의 학교 개혁: '인생설계-윤리-종교' 과목 시범모델	1991년 10월	브란덴부르크주 청소년 · 교육 · 스포츠부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Gemeinsam leben lernen: Modellversuch des Landes Brandenburg zu einem neuen Lernbereich und Unterrichtsfach "Lebensgestaltung – Ethik – Religion", Potsdam, 15. Oktober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85-287
53	튜링겐주 주택 현황에 대한 주의회에서의 토론	1991년 11월 7일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주 내무부 차관 미하엘 리페르트, 튜링겐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Plenarprotokoll 1/34, S. 2182-2189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4	1991년 가을 현재 신연방주의 사회 분위기와 문제점	1991년 12월 10일	연방 경제부, 알렌스바흐 인구문제연구소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Probleme und Stimmungslage der Bevölker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e aktuelle Bestandsaufnahme im Herbst 1991.
55	작센-안할트 주의회의 질의: 사회문화센터/예술가의 지원	1992년 1월 16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장 클라우스 카이텔,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원 치헤, 숌부르크, 작센-안할트주 교육학술문화부 장관 베르너 소베츠코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27, S. I f., 286 f.
56	주택정책의 구채무를 연방정부에게 인계 제안에 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총회 토론	1992년 2월 6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무 장관 게오르크 디데리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크로이처, 토마스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43, S. 2153-2157
57	브란덴부르크주 임대인 현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 제안에 관한 주의회 총회	1992년 2월 13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브란덴부르크주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39, S. 2877-2883
58	소련군 군부대 부지를 기초자치단체에 양도해 사회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한 튀링겐 주의회 총회	1992년 2월 26일	튀링겐 주의회, 튀링겐주 내무무 차관 미하엘 리페르트, 튀링겐 주의회 부의장 페터 박하우스, 튀링겐 주의회 의원 그리제, 푀제, 피들러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Plenarprotokoll 1/45, S. 2960-2963
59	주택정책 및 도시건설정책 의결안에 관한 튀링겐 주의회 총회 토론	1992년 2월 28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피들러, 그리제, 코흐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Plenarprotokoll 1/46, S. 3037-3042
60	주거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정부의 답변	1992년 3월 17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무 장관 게오르크 디데리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토마스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Drucksache 1/1577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1	'우리 주를 위한 헌법'–1992년 6월 14일 브란덴부르크주 주민투표를 위한 홍보자료	1994년 4월 22일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센터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000 Nr. 42
62	국가 간부에서 법치국가의 행정 공무원으로	1992년 5월	요하임 폴무트 실장 겸 연방내무부 공공행정 연방아카데미의 독일통일 관련 재교육 교육단 V팀 팀장	Die Öffentliche Verwaltung, Mai 1992, Heft 9, S. 376–385
63	신연방주 여성들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연방의회 논의	1992년 5월 20일	연방의회, 여성청소년부 정무 차관 이제르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Parlamentsprotokoll 12/93
64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1장 브란덴부르크주의 현황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총리실 및 모든 부서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65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82장 사회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노동 · 사회 · 건강 · 여성부 장관 레기네 힐데브란트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66	주택 임대료 현황에 대한 작센주 주의회 토론	1992년 7월 9일	작센 주의회, 작센주 내무부 장관 하인츠 에거트, 작센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 Plenarprotokoll 1/49, S. 3312–3322
67	주거 문제에 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토론	1992년 9월 30일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53, S. 3830–3846
68	주택 및 임대료 현황에 관한 작센주 주의회의 토론	1992년 10월 13일	작센 주의회, 작센주 내무부 차관 알브레히트 부톨로, 작센 주의회 다수 의원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 Plenarprotokoll 1/53, S. 3673–3677
69	주택수당특별법과 주택수당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1992년 11월 12일	브란덴부르크주, 연방회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2, Nr. 36, S. 1380–138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0	신연방주에서의 실업	1992년 12월 1일	연방 경제부, 알렌스바흐 인구문제연구소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Arbeitslosigkei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llensbach am Bodensee 1992.
71	세입자에 의한 주택 개량 및 현대화에 관한 튜링겐 주의회 총회 토론	1992년 12월 11일	튜링겐주 내무 장관 프란츠 슈스터,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베르너 그리제, 튜링겐 주의회 기민당 의원 한스페터 헤프너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Plenarprotokoll 1/69, S. 5001–5007
72	작센–안할트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3년 1월 28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기민당 및 자민당, 작센–안할트 주정부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2262
73	독일을 위한 연대협약/ 연방수상과 연방주 총리 정당과 원내 대표들의 연석회의	1993년 3월 16일	연방정부, 주정부, 국민정당의 당수, 연방의회 원내 대표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Nr. 22/S. 185; Treuhandanstalt (Hrsg.). Dokumentation 1990–1994, Band 11, S. 594–644. Berlin: Treuhandanstalt 1994, 16.03.1993
74	건물통계 및 주택통계 조사에 관한 법률(주택통계법)	1993년 3월 18일	연방정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10, S. 337–341
75	작센–안할트주 주거공간 및 도시건설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3년 3월 23일	작센–안할트주 건설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Anhalt, Drucksache 1/2435
76	신연방주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전망에 관한 연방의회의 논의	1993년 3월 25일	연방의회, 연방의회 의원 다수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Plenarprotokoll 12/149
77	작센–안할트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의회에서의 토론	1993년 4월 1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기민당 의원 우베 슐체, 작센–안할트주 문화 장관 베르너 소베츠코,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46, S. 5297–5304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8	국영재산으로 분류되었던 대지와 토지를 주택공사로 양도하는 것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튜링겐 주정부의 답변	1993년 4월 6일	튜링겐주 내무부 차관 리페르트,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그리제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Drucksache 1/2137
79	연대협약을 통해 주택건설 프로그램의 재원을 충당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정부의 답변	1993년 4월 15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무 장관 루돌프 루디 가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사민당 의원 에버하르트 호페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Drucksache 1/3037
80	작센-안할트 지역의 주거에 관한 주의회의 토론	1993년 5월 13일	작센-안할트주 교통부 장관 대레,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Anhalt, Plenarprotokoll 1/47, S. 5477-5487
81	동독 주택건축의 사회규정 및 주택 관련 구채무 탕감 신청에 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토론	1993년 5월 27일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71, S. 5617-5624
82	신연방지역의 여성 현황에 대한 연방의회의 논의	1993년 6월 17일	연방의회, 연방의회 의원 다수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Plenarprotokoll 12/163
83	주택구입 보조금 프로그램	1993년 6월 23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S. 2407-2412
84	주택소유권에 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토론	1993년 9월 29일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하르트무트 마이어,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76, S. 6077-6092
85	브란덴부르크주의 치안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주정부의 첫 번째 보고서	1993년 11월 15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사법부, 내무부, 노동 · 복지 · 건강 · 여성부, 교육 · 청소년 · 체육부, 도시개발 · 주택 · 교통부, 학술 · 연구 · 문화부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Drucksache 1/ 2476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6	신연방주의 문화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3년 12월 8일	연방의회 사민당, 연방정부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385
87	주택수당특별법과 주택수당법에 관한 제2차 개정법률	1993년 12월 22일	작센, 연방회의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74, S. 2438–2439
88	구동독지역의 주택정책의 변화: 총괄상황진단보고서	1994년	연방 건설부	Bundesministerium für Raumordnung, Bauwesen und Städtebau (Hrsg.), Bonn 1994; (auf Basis einer Studie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89	동독 슈타지를 위한 활동에 대한 근무법적 판단을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초안	1994년 1월	브란덴부르크주 내무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내무위원회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1
90	주거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튜링겐 주정부의 답변	1994년 2월 3일	튜링겐주 내무부 차관 리페르트, 튜링겐 주의회 기민당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Drucksache 1/3065
91	브란덴부르크주 1994 유아–청소년보고서	1994년 2월 22일	브란덴부르크주 교육 · 청소년 · 체육부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Drucksache 1/2788
92	주택건설정책에 관한 질의에 대한 튜링겐 주의회의 토론	1994년 3월 4일	튜링겐주 내무 장관 프란츠 슈스터, 튜링겐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Plenarprotokoll 1/108, S. 8491–8510
93	연방정부의 1993년도 사회보고서–발췌	1994년 3월 23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7130
94	신탁관리청에 의한 주택민영화 문제에 관한 작센–안할트주 주의회의 토론	1994년 3월 24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작센–안할트주 교통부 장관 대레,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원 펠케, 폰다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Anhalt, Plenarprotokoll 1/60, S. 7146–7149
95	사회주택 건설에 관한 튜링겐 주의회의 토론	1994년 5월 4일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주 내무 장관 프란츠 슈스터, 튜링겐 주의회 의원 헤프너, 그리제, 디틀, 묄러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Plenarprotokoll 1/114, S. 8826–883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96	연방정부의 5차 가족보고서–통일독일의 가족과 가족정책–인적자원의 장래	1994년 6월 15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7560
97	주택수당특별법과 주택수당법에 관한 제2차 개정 법률	1994년 10월 7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작센–안할트주, 튜링겐주	Bundesgesetzblatt, Teil I, 1994, Nr. 69, S. 2644–2645
98	주택정책 전문가 위원회: 신연방주의 주택정책(연방정부의뢰평가보고서)	1994년 10월 15일	연방정부, 건설은행, 은행 관련 기관, 관련위원회 위원	Gutachten der Expertenkommission Wohnungspolitik vom 15. Oktober 1994. Keine Ortsangabe. Erstellt im Auftrag der Bundesregierung.
99	구동독지역의 주택정책(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평가보고서)	1994년 12월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울리히 파이퍼, 미하엘 아만	Friedrich–Ebert–Stiftung (Hrsg), Bonn 1994.
100	동독 출신 인력의 검증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의 고등교육기관의 조치	1995월 2월 22일	포츠담대학의 인사위원회	Rektorat der Universität Potsdam (Hrsg.). Dokumentation zur personellen Erneuerung der Universität Potsdam. Potsdam 1995
101	신연방주의 임대료 이양법	1995년 6월 6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Bundesgesetzblatt, Teil I, 1995, Nr. 28, S. 748–751
102	세입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구채무지원법	1995년 6월 6일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Bundesgesetzblatt, Teil I, 1995, Nr. 28, S. 748–751
103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결의안에 따른 증명확인–1993년 5월 6–7일 '그라이프스발트 결의안', 제2항	1996년 2월 21일	작센–안할트주 교육부, 막데부르크, 할레 및 데사우 지역행정청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04	경직성과 적응 유연성 사이–체제 붕괴와 이익조정 상황에서 1991–1994 작센–안할트와 작센의 주택정책 지원 프로그램 실행	1997년	작가 딕 마이젤,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 지자체	Dirk Meisel: Zwischen Restriktion und Anpassungsflexibilität. Die kommunale Implementation wohnungspolitischer Förderprogramme 1991–1994 in Sachsen–Anhalt und Sachsen im Kontext von Umbruch und Interessenvermittlung. Opladen: Leske + Budrich, 1997, Seiten 11–13 und 273–301.
105	통일 후 5년 시점의 구동독지역 청소년	1997년	케어스틴 자이링, 연방정치교육원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0, S. 52–55.
106	첫 직장을 갖기 직전에: 동–서지역 직업교육생 청소년의 경험 사례 및 관점들	1997년	다그마 베어, 베른하르트 드레스바흐, 모나 그라나토, 클라우스 쉬바이케르트, 연방직업교육원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5/97
107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 학교의 개혁–브란덴부르크 및 기타 지역의 경험	1998년	브란덴부르크주 교육 · 청소년 · 스포츠부 전 장관(1990–1992) 마리안느 비어틀러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rsg.). 1998. Einheit in der Vielfalt: 50 Jahre Kultusministerkonferenz 1948–1998. Neuwied/Kriftel/Berlin.
108	'체제변환–구동독지역 내 주간 탁아시설(Kindertagesstätte, Kita) 체험'/엘케 헬러(Elke Heller)	날짜 미상–1998년경 추정	그로스–글리니케 유치원장 겸 포츠담군 유치원 전문위원회장 엘케 헬러 박사	Heller, Elke. Vortrag an der Internationalen Akademie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109	1997년 고용전략 연간보고서	1998년 5월 26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노동 · 사회 · 건강 · 가족부, 브란덴부르크주 기술과학부	Landtag Brandenburg, 2. Wahlperiode, Drucksache 2/532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10	1998 유아-청소년 보고서: 1권, 1장(Band 1, Teil I)	1998년 9월 16일	브란덴부르크주 교육 · 청소년 · 체육부	Landtag Brandenburg, 2. Wahlperiode, Drucksache 2/5664
111	DGB: 조합원 현황 및 조직도	1950년 – 1999년	독일노동조합	Müller-Jentsch / Ittermann, Industrielle Beziehungen, S. 91.
112	브란덴부르크주 복지정책 개관	1999년 3월	브란덴부르크주 노동 · 사회 · 건강 · 여성부, 브란덴부르크주 사회복지청 내 건강청	Ministerium für Arbeit, Soziales, Gesundheit und Frauen des Landes Brandenburg, Abt. Öffentlichkeitsarbeit (Hrsg.) Potsdam, 1999
113	동독의 국내총생산(GDP), 소비 및 직업활동	1970년-2000년	게어하르트 헤스케	Heske, Gerhard. 2005. Bruttoinlandsprodukt, Verbrauch und Erwerbstätigkeit in Ostdeutschland 1970-2000. Köln: Zentrum für Historische Sozialforschung. S. 259
114	누가 독일에서 '부자'에 속하는가? 200% 선 이상 소득자의 사회경제적 특징	2000년 7월	설문 방법론 및 분석 센터, 평균 소득 200% 초과 소득자	Zentrum für Umfragen, Methoden und Analysen (ZUMA) e.V. Abteilung Soziale Indikatoren (Hrsg.). Informationsdienst Soziale Indikatoren (ISI), Ausgabe 24. Mannheim, 2000. S. 11-15.
115	브랜드를 통한 통일? 전체 독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2001년	라이프치히 시장연구소	Institut für Marktforschung GmbH (Hrsg), Leipzig 2001
116	신용재건기금의 주택현대화 프로그램	2001년 3월	재건은행, 신연방주	KfW-Wohnraum-Modernisierungsprogramm II, 03.200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17	연방정부 프로그램 '구동독-도시정비'	2001년 8월 15일	연방정부	Bundesregierung (Hrsg): Initiative der Bundesregierung zur Verbesserung der Stadt- und Wohnungsmarktentwicklung in den neuen Ländern. Programm "Stadtumbau Ost". Beschlussvorlage für das Bundeskabinett, August 2001.
118	생활/윤리/종교 과목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2001년 12월 1일	연방헌법재판소, 브란덴부르크주, 개신교 교회, 가톨릭 교회, 연방의회 의원 279명	Evangelischer Pressedienst, epd-Dokumentation Nr. 52 (17. Dezember 2001)
119	10년간의 논쟁에 대한 연대기	2001년 12월 10일	브란덴부르크주, 개신교 교회, 개신교 공보, 가톨릭 교회	Evangelischer Pressedienst, epd-Dokumentation Nr. 52 (17. Dezember 2001)
120	1995-2001 경제발전결산/작센-안할트	2002년 3월	작센-안할트주 수상실 보고서	Staatskanzlei Sachsen-Anhalt. Magdeburg, 2002.
121	'인구 통계적 발전':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가 각 개인과 정치에 주는 과제-앙케이트위원회의 최종보고서	2002년 3월 28일	연방의회, 앙케이트위원회	Deutscher Bundestag, 14. Wahlperiode, Drucksache 14/8800
122	신연방주에서의 양성조약, 양성조화	2003년 1일	포츠담 대학 여성학자 이레네 될링 교수	Kulturnation 1/2003 – Online Journal für Kultur, Wissenschaft und Politik (http://www.kulturation.de/ki_1_text.php?id=13 (29.07.201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23	초등학교 단계부터 니더라우지츠(Niederlausitz) 지역에서 소르벤어와 벤드(족)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 조직적 체계 및 학교에서의 전달방식에 관한 콘셉트	2003년	마들레나 노르베르크, 소르벤어 센터, 소르벤족 재단	Madlena Norberg: Konzeption zur pädagogisch-organisatorischen Struktur und zu schulischen Vermittlungsformen der Arbeitssprache Sorbisch/Wendisch in der Niederlausitz ab der Primarstufe. Bautzen 2003 (Download: https://www.witaj-sprachzentrum.de/wp-content/uploads/sites/3/2016/05/Koncepcija_Norbergowa.pdf (Stand: 9.4.2018))
124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주의회에 제출한 1994~1999년의 유럽연합지원회기 기간에 실시한 주의 프로그램 '브란덴부르크의 전문성 신장 및 노동(Qualifizierung und Arbeit für Brandenburg)'에 대한 보고서	2003년 1월 8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노동 · 사회 · 건강 · 가족부	Landtag Brandenburg, 3. Wahlperiode, Drucksache 3/5293
125	제2차 발전 보고서: 구동독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경제연구소 보고	2003년 11월	독일 경제연구소, 키일대학교 부속 세계경제연구소,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 경제문제연구소, 유럽 경제연구센터	Forschungs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126	2004년 독일의 가족과 생활형식	2004년 3월	독일 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Sonderheft 1: Familien und Lebensformen, Ergebnisse des Mikrozensus 1996–2004. Wiesbaden, 2006.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BevoelkerungHaushalteMikrozensus/LebenArbeitenSonderheft1_1023101049004.pdf?__blob=publicationFile (Stand: 17.04.2018))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27	동독시기와 과도기 이후의 파트너-부모자녀 관계	2004년 5월 3일	연방정치교육원	Scheller, Gitta: Partner- und Eltern-Kind-Beziehungen in der DDR und nach der Wende.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9/2004: S. 33-39.
128	2050년까지의 연방주의 인구 변동	2004년 8월	독일 국민, 독일 통계청, 베티나 조머	Sommer, Bettina: Bevölkerungsentwicklung in den Bundesländern bis 2050 – Annahmen und Ergebnisse der 10. koordinierten Bevölkerungsvorausberechnung. in: Statistisches Bundesamt (Hrsg.). Wirtschaft und Statistik 8/2004. Wiesbaden 2004, S. 834-844
129	브란덴부르크 주개발회사 적자 해명에 관한 주의회 조사위원회 3/2의 결정권고 및 보고서	2004년 8월 23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조사위원회 3/2 디터 헬름 의원, 도시건설 · 주택 · 교통을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개발회사(LEG)	Land Brandenburg, 3. Wahlperiode, Drucksache 3/7777
130	생산자본을 고려한 민간 가구 재산의 형성과 배분	2005년 1월 18일	유럽경제연구소, 베스터하이데	Westerheide e. a. (2005): Die Entwicklung und Verteilung des Vermögens privater Haushalt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Produktivvermögen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131	가족과 자녀를 원하는 소망-BuG 연구조사	2005년 12월 1일	연방인구조사연구소	Höhn e. a. (2005): Kinderwünsche in Deutschland. Konsequenzen für eine nachhaltige Familienpolitik; Robert-Bosch-Stiftung, S. 46-7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32	'새로운' 고령 지역: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신연방주 고령 주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현실과 입장–군나르 빈클러(Gunnar Winkler)	2006년	신연방주 고령 주민, 라이프니츠–조찌에탯, 동독 학술 아카데미 소속 사회학 및 사회정치학 연구소 전 디렉터 군나르 빈클러	Winkler, Gunnar: Die Region der 'neuen' Alten – Fakten und Positionen zur sozialen Situation älterer Bürg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990 bis 2005. (Pressematerial). Berlin 2006
133	자료보고서 2006: 독일의 물가, 소득 그리고 노동비용	2006년	서독 주민	Statistisches Bundesamt (Hrsg.). Datenreport 2006 – Zahlen und Fakten üb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2006;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konferenzen/2006/Datenreport/Datenreport_pdf.pdf?__blob=publicationFile
134	세대 간 관계와 연대협약: 인구 통계적 발전 맥락에서 본 세대 간 조화	2006년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회학 연구센터	Hanf, Thomas / Liebscher Reinhard. Generationenbeziehungen und Solidarvertrag (Pressematerial). Sozialwissenschaftliches Forschungszentrum Berlin–Brandenburg (Hrsg.), Berlin 2006
135	자료보고서 2006: 민주주의와 사회 복지 국가	2006년	독일 전 국민, 설문 방법론 및 분석 센터, 독일 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Hrsg.). Datenreport 2006 – Zahlen und Fakten üb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2006;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konferenzen/2006/Datenreport/Datenreport_pdf.pdf?__blob=publicationFil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36	브란덴부르크주의 인구 통계상의 변동에 대한 감정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위탁 감정서	2007년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베를린 인구발전연구소	Berlin-Instiut für Bevölkerung und Entwicklung (Hrsg.). Berlin, 2007 (https://www.berlin-institut.org/fileadmin/user_upload/Studien/Brandenburg_Webversion.pdf (Stand: 17.4.2018))
137	보건제도에 있어서 시스템 변경을 위한 도전과제 및 경험적 지식	2007년 기준	브란덴부르크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 제1 위원장 베른트 그리거	Archiv der AOK Berlin
138	인구변동의 조건하에서 튜링겐주 농촌지역의 기초단체 게마인데-모니터링 체제의 최종 보고서	2007년 4월 30일	튜링겐주 건설교통부(제2국: 도시건설, 주택건설, 공간질서와 지역계획)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au, Landesentwicklung und Verkehr: http://www.thueringen.de/imperia/md/content/tmbv/monitoring_abschlussbericht.pdf
139	사통당 독재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구상	2007년 11월 8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교육 · 청소년 · 체육부, 학술 · 연구 · 문화부, 법무부, 내무부, 포츠담 현대사연구소	Landtag Brandenburg, 4. Wahlperiode, Drucksache 4/ 5325
140	자료보고서 2008: 주관적인 만족도와 가치 지향	2008년	독일 전 국민, 설문 방법론 및 분석 센터, 독일 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und Gesellschaft Sozialwissenschaftlicher Infrastruktureinrichtungen (Hrsg.). Mannheim, 2008. (https://www.gesis.org/fileadmin/upload/forschung/publikationen/datenreport/2008/15-Wohlbefinden.pdf (Stand: 17.4.20018))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41	브란덴부르크의 정부 엘리트	2008년 3월 15일	포츠담대학 경제사회학부 디르크 아르네 하이옌	Heyen, Dirk Arne: Regierungseliten in Brandenburg im Zeitverlauf –Zu der Frage der Ost–West–Herkunft und dem sozioprofessionellen Hintergrund der Kabinettsmitglieder (von 1990 bis heute). Universität Potsdam, 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liche Fakultät, 2007/08
142	2007년 각 주별 건축용 토지의 구매가	2009년	구 · 신연방주, 독일 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2009. S. 517
143	획득한 시간: 독일의 고령화에 대한 제안– 아카데미 그룹	2009년	독일 전 국민	NOVA ACTA LEOPOLDINA, Abhandlungen der Deutschen Akademie der Naturforscher Leopoldina. Neue Folge, Nummer 371, Band 107. Halle (Saale), 2009 https://www.leopoldina.org/uploads/tx_leopublication/2009_NatEmpf_Altern_in_D–DE.pdf (Stand: 17.4.2018)
144	제13차 아동 · 청소년 보고서: 청소년의 생활 환경과 독일 아동 · 청소년 지원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	2009년	독일의 젊은 연령 집단	Deutscher Bundestag, 16. Wahlperiode, Drucksache 16/12860
145	동독지역 성공의 비밀: 최상품의 생존 전략– 경영자가 배울 수 있는 점	2009년	아른트 찌쉐, 올리버 에리히엘로	Zschische, Arnd / Errichiello, Oliver: Erfolgsgeheimnis Ost, Survival–Strategien der besten Marken – und was Manager daraus lernen können. Wiesbaden 2009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46	2009 연방주 순위: 작센주의 강점/약점의 특성(새로운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	2009년	이니셔티브 '새로운 사회시장경제', 쾰른 독일경제자문, 경제전문지 '경제주간'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Consult GmbH (https://www.iwconsul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public/pdfs/sachsen.pdf (Stand: 07.05.2018))
147	2009 연방주 순위: 작센-안할트주의 강점/약점의 특성(새로운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이니셔티브 (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	2009년	이니셔티브 '새로운 사회시장경제', 쾰른 독일경제자문, 경제전문지 '경제주간'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Consult GmbH (https://www.iwconsul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public/pdfs/sachsen-anhalt.pdf(Stand: 07.05.2018))
148	2009/2010 연방주의 입지경쟁력: 수입-고용-안전	2009년-2010년	베르텔스만 재단	Bertelsmann-Stiftung (Hrsg.): Die Bundesländer im Standortwettbewerb 2009/2010, Einkommen – Beschäftigung – Sicherheit; 2010;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de/publikationen/publikation/did/die-bundeslaender-im-standortwettbewerb-20092010/
149	인구 통계적 변화: 신연방주를 고려한 정책 제안	2009년 6월	연방 교통 · 건설 · 도시개발부, 베를린 인구발전연구소	Berlin-Instiut für Bevölkerung und Entwicklung (Hrsg.). Berlin, 2009. (https://www.berlin-institut.org/fileadmin/user_upload/Studien/Demografischer_Wandel.pdf (Stand: 17.04.2018))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50	1989년부터 2009년까지 평화적 혁명 이후 20년: 신연방주 주민들의 견해	2009년 7월 20일	국민연대, 신연방주	Volkssolidarität Bundesverband e.V. : 20 Jahre friedliche Revolution 1989 bis 2009. Die Sicht der Bürger der neuen Bundesländer. Ergebnisse einer Erhebung im Auftrag der Volkssolidarität. 08/2009
151	사회보고서 2009: 신연방주 50세 이상 주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자료와 현실	2009년 11월	신연방주 50세 이상 주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회학 연구센터, 국민연대	Sozialwissenschaftliches Forschungszentrum Berlin-Brandenburg e.V. (https://www.sfz-ev.de/index_htm_files/Sozialreport_50plus_2007.pdf (Stand 08.05.2018))
152	일곱 번째 연방주 순위: 연방주 비교-누가 가장 최고로 경영했는가?	2009년 12월	이니셔티브 '새로운 사회시장경제', 쾰른 독일경제자문, 경제전문지 '경제주간'	IW Consult GmbH Köln, http:77www.iwconsult.de; www.bundeslaenderranking.de
153	제11차 의원법 개정법(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브란덴부르크주	2010년 1월 21일	브란덴부르크주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21. Jahrgang, Nummer 3
154	'브란덴부르크주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의 극복 및 역사 청산과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앙케이트위원회 설치	2010년 3월 9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기민당, 자민당, 연합 90/녹색당 원내 교섭단체	Landtag Brandenburg, 5. Wahlperiode, Drucksache 5/554
155	구동독의 아동 · 청소년 지원의 전환-브루노 힐덴브란트(Bruno Hildenbrand)	2010년 7월	예나대학 사회학연구소 교수 브루노 힐덴브란트	Hildenbrand, Bruno /Institut für Soziologie, 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 Jena, 2010
156	소득과 재산-빈부격차의 증가. 동서비교	2011년 1월 1일	연방정치교육원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57	사회주의통일당 평가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앙케이트위원회(EK 5/1)–인물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의견서(뤼디거/카텐후센)	2011년 6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기셀라 뤼디거, 한스–크리스티안 카텐후센	Parlamentsdokumentationssystem Brandenburg (https://www.parlamentsdokumentation.brandenburg.de/parladoku/w5/drs/ab_8500/8500_13.pdf (abgerufen: 26.07.2011))
158	브란덴부르크 정당의 인사 관리 영속성과 엘리트 이동–앙케이트 위원회 의견서	2011년 8월 19일	에어하르트 노이베르트, 마리오 니만, 크리스토프 부니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사회주의통일당 독재 청산 관련 앙케이트위원회 5/1	Landtag Brandenburg, Parlamentsdokumentation (https://www.parlamentsdokumentation.brandenburg.de/parladoku/w5/drs/ab_8500/8500_15.pdf (Stand: 07.05.2018))
159	'신연방주 지방자치정책에서의 여성' 최종 보고서	2013년 4월 12일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관, 에른스트 영 유한회사	Ernst & Young GmbH (2013): Abschlussbericht. Forschungsprojekt "Frauen in der Kommunalpolitik der neuen Länder", für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문서 요약

문서 요약(문서번호 1~159)

문서 번호 1

우리 시대의 투쟁에 있어 국가시민 교과의 의의-교육학술원 내 '사회과학수업' 연구소 소장의 논문

1989년

담당자 / 기관_ 교육학술원 내 '사회과학수업' 연구소 소장 호르스트 리허르트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교육학술원 소속 '사회과학수업' 연구소의 소장 호르스트 리허르트가 1989년 역사 및 국가시민교육 교과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동독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시민 교과의 현재적 역할과 미래에 대한 의의를 검토하였다.

리허르트는 그때까지 이루어진 국가시민 교과는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존속될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 이유는 그를 통해 학생들의 정치적 방향 정립에 근본적인 기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과의 내용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여기서 피력하지 않고, 어떤 요소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증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출처_ Gagel, Walter (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문서 번호 2

연방정부-동독 주민들의 분위기-융 국장이 콜 수상에게 제출한 보고

1989년 11월 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수상청 국장 융, 연방수상 헬무트 콜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보부 국장이 연방수상에게 1989년 11월 당시 동독 주민들의 분위기에 관해 얻은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9년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일종의 자포자기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반면에 대규모의 동독 이탈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동독 주민들의 분위기가 경악과 분노로 변해가고 있다. 동독 이탈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동독 지도부가 주민을 잃어버렸다고 고소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대규모 탈출사태로 변한 이후에는 국가의 장래에 대한 염려와 함께 무력한 지도부에 대한 분노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던 많은 수의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갖게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동독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대규모 동독 이탈로 인한 충격 외에도 라이프치히와 다른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월요일의 시위와 변화를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정한 주민들이 결성한 노이에스 포럼과 같은 것이다. 이들은 동독 이탈주민들이 동독을 떠나겠다고 외친 것과 반대로 우리는 이곳에 남겠다고 외치면서 남아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602 - 35001 (78) De 2/64/89, Band 29, Bl. 61-63

문서 번호 3

동독 '국가시민교육' 교과의 재정비에 관해-츠비카우 교육대학 내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 학부의 입장

1989년 11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츠비카우 교육대학 '국가시민교육 교과 방법론' 학부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인 1989년 11월 10일에 츠비카우 교육대학의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 학과의 교수들이 교육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그 내용은 동독의 '교육학 저널(1989년 말 발행)', '역사 및 국가시민 교과 저널(1990년 1월호)'에 수록되었다. 그들은 학교 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국가시민 교과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개혁된 새로운 사회에서도 성숙한 국민의 교육과 육성은 필요하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가시민 교과의 명칭을 사회교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 과목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능력 배양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또는 학생들 간의 대화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나아가 1989년 11월 당시 동독에서 진행되던 국가시민교육의 문제점들을 열거하였다. 거기에는 수업량이 과도하게 많으며, 수업의 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수업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과정으로 전락되어버린 점 등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안한 개혁안을 보면 그들이 동독에 존재하던 현실 사회주의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_ Gagel, Walter (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문서 번호 4

우리 도시들을 구할 수 있을까?-동독 문화연맹 문화재관리부 부장의 글

1989년 말

담당자 / 기관_ 동독 문화연맹 문화재관리부 부장 겸 문화재관리협회 중앙위원회 비서 베른트 메터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도시 구도심의 문제를 진단한 것으로 문화연맹의 문화재관리부 부장이 작성한 것이다. 그는 이 문서에서 동독 정부의 건축정책의 성과와 도심이 급속하게 폐허화된 것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과연 동독의 도시들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의 현재 상태를 점검·분석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도시의 구도심은 대부분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것은 사회적인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자기 지역의 문화재, 특히 고건축물은 고향에 대한 귀속감을 갖게 해주지만, 동독에서는 그런 고건축물들이 수십 년간 방치된 결과 고향에 대한 귀속감이 사라지게 되었다. 문화재 관리는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근원을 지키게 해주는 것이다. 동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보다 잘못된 건축정책 때문이다. 역사적인 건물들을 대거 철거한 결과 많은 수의 동독 도시들이 자신의 얼굴을 상실하였다. 조립 가공된 아파트들은 도시의 얼굴이 되지 못하고 귀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고향의 이미지를 제공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잘못된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만들어질 정책에 대한 신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몇몇 도시에서는 이미 문화재급 고건축물의 삼분의 일 이상이 폐허가 되었다. 그것이 수많은 동독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든 한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사회주의가 완전히 기회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의 주관주의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사회주의이다. 동독에서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은 자주 조롱을 받고 적대시되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개념은 문학과 영화 등 창작활동에만 적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관한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구도심의 오래된 건축물이 더 이상 철거되어서도 안 된다.

문화재보호법을 어긴 모든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보호받아야 할 문화재를 위한 기부금을 모금하고, 그를 위한 재단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 보호 전문 인력을 다른 분야에 투입하는 것도 중지되어야만 한다. 부득이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건축 자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구도심의 교통을 감소하고 문화재 보호지역에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관리협회는 문화재 목록을 새로이 작성하는 데 참여하고자 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41-50

문서 번호 5

동독 시민에 고함 "우리의 구도시를 폐허화로부터 구하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도시와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1989년 12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드레스덴 문화재보호관, 베를린 문화재보호관, 할레 문화재보호관, 슈베린 문화재보호관, 에어푸르트 문화재보호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각 지역의 문화재보호관들이 함께 작성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폐허화되고 있는 구도심의 고건축물을 다시 살리기를 호소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수많은 동독의 구도시들의 현재 상황은 아주 우려스러운 상태이다. 오래되고 소중한 역사적 건물들이 지속적으로 폐허가 되면서 주민들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었다. 우리가 중부 유럽의 문화국가라는 자부심을 계속 갖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런 폐허화와 철거는 중단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건축정책의 수정이 급선무이다. 그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이제는 시민들이 위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계획과정의 민주화를 달성해야만 한다. 그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고건축물 철거의 즉각적인 중지와 건축물의 새로운 평가를 요구해야만 한다. 고건축물의 기초를 보전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정부가 구도시를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즉각 도입하기를 요구한다. 정당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구도심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건축 설계사와 시공사들은 구도시에 아파트 건설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Y 27/4316, fol. 64

문서 번호 6

동독 예술가협회 공동 선언

1989년 12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문인협회, 동독 미술가협회, 작곡가 및 음악가 협회, 연극인협회, 영화방송협회, 엔터테인먼트협회, 건축설계사협회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예술가협회에서 한스 모드로우 수상에게 보낸 공개서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예술가'의 이름으로 하나의 협회가 창립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동독이 문화적 독자성을 상실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예술가협회 대표들은 모드로우 수상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면담을 요청한다. 우리는 모드로우 수상이 발표한 정부 성명 중에 문화가 교육정책의 틀에서 간단히 언급된 것에 특히 주목한다. 예술가들이 동독의 정치적 변혁을 이끌어 낸 주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술가협회는 사회적으로 예술이 상품으로 치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동독 문화부는 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서두르고 있다. 어떤 과도기적인 조치도 없이 지방기초단체에 문화와 예술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문화상임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17-121

문서 번호 7

통일 이후–일상의 시작

1990년

담당자 / 기관_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 연방협회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의 보건제도 시스템 재조직과 관련된 현황 평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독 의료보험공단에 누적된 적자는 유동자산 융자를 통해 해소될 것이다. 의사에게 지급되는 진료비와 약값에는 연방 지원금이 보조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감소하게 될 의사 및 외래병원에 대한 보상조치 방안이 강구되었다. 제약업계에서는 여전히 동독 및 서독에서의 약값 인하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동독 재무부에 의해 의료보험 기여금 납입 시스템의 전환이 결정되자 이를 처리할 전문 인력의 부족과 서독과는 근본부터 너무도 상이한 동독 관료들의 가치관으로 인해, 한편으로는 은행 이체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 많은 직원이 서독으로 '이주'하게 되고, 아울러 노동보상 금액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수많은 외래병원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출처_ AOK Bundesverband, DOK 21/1990 S. 656-658, Bonn 1990

문서 번호 8

문화 장관 켈러가 모드로우 수상에게 제출한 1989년 12월 20일에 발표된 예술가협회의 선언문에 대한 입장

1990년 1월 5일

담당자 / 기관_ 디트마 켈러 동독 문화 장관,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

내용_

이 문서는 디트마 켈러 동독 문화 장관이 모드로우 수상에게 동독의 대표적인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질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많은 예술가들이 체제의 민주적 변혁을 위해 직접 참여했었다. 그들은 동독 문화예술이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탈중앙집권화되기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제 이들 예술인들은 동독 문화의 장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예술가들이 익명으로 협박을 받기도 한다. 그들은 불법으로 소유권을 획득하였다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런 비난은 중단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가들이 동독을 떠날 것이다. 켈러 장관은 모드로우 수상이 예술가들과 만나는 자리에 자신도 기꺼이 동석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R 1/13526 (1), fol. 112 f.

문서 번호 9

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교육 시행령

1990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노동임금부 장관 하넬로레 멘쉬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주민과 동독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직업재교육 실시에 관한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에는 노동임금부는 재교육의 수요와 규모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교육부와 산하기구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해당 노동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재교육기간에는 실업연금이 지급되며 사업장과 교육시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1 – Ausgabetag: 2. März 1990

문서 번호 10

직업알선 기간 동안 제공되는 국가보조와 기업에 의한 지원금에 대한 시행령

1990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위원장 한스 모드로우, 노동임금부 장관 하넬로레 멘쉬, 교육부 장관 한스-하인츠 에몬스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주민과 동독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조기정년연금제도의 시행령이다. 조기정년연금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근로자는 정년을 5년 남긴 연령에 있는 사람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사람들로 적어도 25년간(여성의 경우 20년간) 실업보험을 납입한 사람이다. 조기정년퇴직은 각 기업에서 결정하며 마지막 순급여의 70% 또는 적어도 500 DM을 받게 된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가 그 비용의 50%를 공공예산에서 지원한다. 생산협동조합은 총회를 통해 이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관해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집행지침은 동독의 노동임금부 장관이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것은 재무 장관이 지침을 내리도록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7 – Ausgabetag: 12. Februar 1990

문서 번호 11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이주 또는 머무르기? 동서독 간의 노동시장 연계성에 대해

1990년 2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고용노동청,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의 국책 연구 기관인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관해 연구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은 1989년에만 34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였고, 1990년 현재 7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주할 것이라고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와 함께 실업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실업의 위험으로 인해 서독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사람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전환과 함께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에 따라 노동시장정책은 노동력을 위한 정보 안내 알선과 함께 직업 재교육, 실직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더 이상 새로운 직장 알선이 불가능한 사람을 위한 조기정년연금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서독으로 이주의 물결이 감소되고 이들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또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절약된 재정을 다른 노동시장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노동시장에서 임금협상 당사자의 자율성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X-영역, 다시 말해 국가보위부(비밀경찰), 인민경찰, 인민군, 정당 소속 통제기구, 비스무트 회사 등과 같이 특수영역에 약 백만 명의 인원이 종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은 이들이 대부분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겠지만, 그들 중의 다수, 약 60만 명에서 8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한 고급 인력이며, 이런 고급 인력을 새로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동독의 직업훈련이 비교적 유동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_ Sammlung (Dokumentatio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r Entwicklung der Arbeitsverwaltung in Deutschland (HdBA Mannheim): SEAD-BA 8.4 / 626

문서 번호 12

향토문화사협회의 창립선언문

1990년 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향토문화사협회 발기인 그룹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과도기에 기존의 단체들이 민주적 이익단체로 전환된 수많은 사례 중의 하나인 향토문화사협회의 창립선언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월 20일에 에어푸르트시에서 동독 문화연맹의 향토사협회 중앙위원회가 향토문화사협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협회는 기존의 향토사협회의 후속기관이며 민주적으로 조직된 이익단체이다. 이 협회는 향토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게 된다. 향토사의 입장은 전문위원회를 통해 대변된다. 협회는 법적, 조직적으로 독립적이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립을 취하며 학술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념적, 이론적, 방법론적 다원성을 보장한다. 협회는 동독과 서독의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협회의 목표는 개인의 자기실현과 진정한 애향심 및 민주적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협회는 '토사지'를 발행하며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Y 27/11477, fol. 88 f.

문서 번호 13

동독의 문화 현황-중앙원탁회의 14차 회의 결과

1990년 2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중앙원탁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변혁기 초반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중앙원탁회의 14차 회의의 결과로 동독 문화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와 관련하여 앞으로 필요할 조치와 원탁회의에 참여한 다양한 단체들의 입장표명, 제안서, 신청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들은 대부분 문화시설과 예술인의 생활보조를 위한 재원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적 선거를 앞두고 있는 동독의 정당들은 지금까지도 문화예술을 위한 어떤 정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오케스트라나 문화예술회관, 극장,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클럽, 디스코텍, 일반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모든 문화시설이 정치적 변화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도입해야만 한다.

-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의 보장
-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 지방관청이 문화와 관련하여 배정된 예산을 임의로 다른 부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문화와 관련된 다른 지출이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공개 토론을 거친 후에 새로 결정되어야 한다.
- 동서독 간의 환경협력의 틀에서 역사적 구도심을 보존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 소수 민족인 소르벤의 문화보존을 위한 지원
- 1990년도 문화예산 공개, 전문위원회를 통한 문화 장관 자문 및 감시

원탁회의는 나아가 동독 헌법에 동독이 문화국가라고 명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장경제적 기준들이 문화영역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의 문화재정법과 주민 문화국가의 구축을 위한 행정규정 및 시민참여권을 확대하여 문화의무법을 제정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A 3/84, fol. 144-166

문서 번호 14

사회헌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입장–동독 원탁회의의 토론

1990년 3월 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중앙원탁회의, 노동임금부, 보건부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11월 장벽의 붕괴 직후부터 1990년 3월의 자유총선거를 통해 민주적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기까지 동독의 개혁과정에서 의회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원탁회의(Runde Tisch)의 15차 회의 보고서이다. 이 회의에서 두 번째 주제로 '양성평등'을 넘어서는 '사회헌장(Sozialcharta)' 문제가 논의되었다.

먼저 타냐 뵘 무임소 장관이 발언하였다.

사회헌장은 노동임금부의 주도로 노조와 보건부와 협력하면서 훔볼트대학의 법학전문가와 학술원의 사회정책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서독 정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고려하여 작성한다. 사민당의 '사회정책' 실무그룹과 원탁회의의 '사회정책', '양성평등' 실무그룹도 이 작업에 참여한다. 이렇게 작성된 사회헌장은 내각의 제안으로 원탁회외와 최고인민회의에 제출되며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주적 의회에서 토론되도록 한다. 그러나 사회헌장은 경제 및 화폐 사회공동체의 도입에 관해 서독과 협상하고 있는 '롬베르그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문제는 아니다.

자료 15/5에서는 '사회헌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입장'을 볼 수 있다. 전문에는 경제 및 화폐 사회통합이 노동과 여가, 가족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쓰여 있다. 동서독의 사회보장 체계가 서로의 개혁과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동독 주민들이 이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그런 방식의 개혁은 유럽 차원에서의 개혁을 시도할 때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헌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였다: 1. 동독에서 법으로 성문화된 노동할 권리 유지, 2. 근로자의 공동결정권 보장 및 노조활동의 자유보장, 3. 직장과 가정생활에서의 양성평등, 4. 모든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5. 모든 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유지·보호할 기본권 보장, 6. 노인복지, 7. 장애인과 재활환자의 사회적 통합, 8. 주거를 확보할 권리, 9. 모든 시민이 예상치 못한 질병과 재난 등 고통에 부딪혔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출처_ Thaysen, Uwe (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 Band IV: Identitätsfindung?" S. 963-974 (15. Sitzung. 5. März 1990), Wiesbaden 2000

문서 번호 15

베를린시 노동청의 정보자료

1990년 5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동베를린 노동청 Ⅱ지소(팡코, 바이센제, 프렌츠라우어베르크), 갈레 소장

내용_

이 문서는 동베를린 노동청 Ⅱ지소의 갈레 소장이 자신의 관할구역인 팡코와 바이센제 그리고 프렌츠라우어베르크 지역의 현황을 보고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66.9%가 경제활동 가능 연령에 속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직업훈련과 이 지역에 있는 사업체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었다.

그는 1989년 4월부터 노동청을 찾는 사람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노동청이 지급하는 비용과 재원의 목록과 직업자문 그리고 조기정년퇴직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었다. 나아가 이 지역 노동청의 인프라와 직원 현황을 설명하였다. 열악한 사무 공간과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출처_ Sammlung (Dokumentatio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r Entwicklung der Arbeitsverwaltung in Deutschland (HdBA Mannheim): SEAD-BA 8.4 / 691

문서 번호 16

1990년 10월에 동독에 주거지를 가졌던 주민과 법인에게만 농지와 임야의 취득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1990년 5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농림부 차관 페터 카우프폴드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농림부 차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일시적으로라도 1989년 10월 이전에 동독에 거주하지 않았던 개인과 법인들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자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토지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토지가 투기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동독 주민들의 예금이 2:1의 비율로 서독 마르크와 교환되는 상황하에서 만일 외국인에게 투자가 허용된다면, 동독 주민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하는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없다.

동독에서는 농지의 이용과 소유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과 땅을 소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농민들은 토지를 구입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동독 주민이 아닌 사람들에 의한 토지매입의 제한으로 주민들을 여러 가지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이 문서의 작성자는 왜 이러한 조치가 동독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지 설명한다. 나아가 이를 위해 법적으로 작성될 문구의 여러 가지 유형을 제안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A 1/17517

문서 번호 17

농업 산림 분야의 대지 및 토지 소유권 처리에 대해-동독 농림부와 농민회 및 민사당의 제안

1990년 5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농림부, 농민연맹, 민사당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의 농림부가 농민과 협동농장에게 토지와 임야의 소유권을 보장하기로 계획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농림부는 이 계획을 통해 토지개혁의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선언하고 기존의 소유관계를 문서화하고자 하였다. 농민들이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농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영 형태가 공존하면서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인민 소유의 토지와 임야는 민영화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공동체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 농업경영과 임업경영이 사회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동안 단기간 과도규정을 도입해서 민영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동시에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도록 한다.

동독 농민연맹은 동독 정부가 통일조약에 별도의 부록을 통해 농업의 토지소유권 및 이용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을 서독과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농림부의 계획과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농민연맹은 신속하게 서독의 법을 적용하고 문서화를 통해 소유권관계를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에 이용되는 인민소유지는 신탁관리청에 양도되어 민영화되거나 지역의 공공기관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민사당의 요구도 그와 일치했다. 민사당은 나아가 1995년까지 농경지와 임야의 매매는 1989년 10월 1일까지 동독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A 1/17517

문서 번호 18

사립 탁아시설 운영 규정

1990년 6월 27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수상 로타 드 메지에르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민주 정부 내각이 발표한 사립 유치원과 탁아시설의 과제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아동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시설은 교육적, 조직적으로 아동과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사립 시설은 국가관청과 협조해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 먼저 탁아시설 운영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탁아시설은 기초단체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탁아시설이 아동 복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닐 경우 국가관청에 의해 운영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출처_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41

문서 번호 19

연방정부의 1990년 사회보고서-'독일 사회통합' 발췌

1990년 6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도 사회보고서이다. 이 문서의 1부에는 동서독의 사회통합과 통일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에서 공동의 사회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밝히고 1990년에 동서독이 경제화폐통합조약에 서명하기까지 동독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한다. 이 보고서는 경제화폐사회통합을 통해 동독에서 고용이 확대되고 독일 땅에서 두 번째 경제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동독에서 실현되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보았다.

국가조약을 통해 동독의 노동권 규정을 서독의 기본구조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그 결과 동독에도 연대의 자유, 임금협약의 자율권, 노동투쟁권, 노사평의회규정, 사내 공동결정권 및 해고 보호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가조약은 나아가 동독의 단일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적인 관리기관으로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새로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앞으로 진행될 경제적 구조조정 과정으로 인해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실업이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정책이 절대적으로 동반되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조약에서는 고용지원법에 따라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국가조약의 규정에 따르면 동독의 연금규정에 임금과 납입금에 의해 운영되는 서독의 연금제도가 도입되게 된다. 1차 국가조약이 효력을 갖게 됨과 동시에 개인은 각자의 임금 수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만 한다. 동독에 존재하던 추가적인 또는 특별연금제도는 1990년 7월 1일 자로 폐지된다.

동독의 건강의료보험법은 단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서독의 제도에 맞추도록 한다. 그 결과 동독에도 보험납입금에 의해 운영되는 분화된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열악한 동독 의료체계 상황을 고려하여 서독 연방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국가조약에 따라 동독 정부가 제공하던 사회지원금제도가 폐지되고 사회부조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를 규정에 맞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1. Wahlperiode, Drucksache 11/7527

문서 번호 20

동독의 소유관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기정보-서독 연방정부 농림식품부

1990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정부 농림식품부 장관 칼 프리드리히 퇴네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 농림식품부가 작성한 것으로 '공적 등록을 통해 동독의 농촌 공간을 새로이 구성하기 위해 소유권과 사용권의 문서화 및 토지거래와 소유권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등기부, 지적, 사용권 등의 부동산문서는 동독의 지배적인 소유형태를 알려준다. 그것은 인민 소유, 협동농장 소유, 민간 개인 소유 등으로 분류된다. 이 자료는 전체를 포괄하며 정확하고 치밀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1990년 6월 29일에 도입된 농업구조적응법에 따라 소유관계를 새롭게 확정하는 절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를 위해서는 신연방주의 농업지역에 지적관리관청이 필요하며, 모든 분야에서 인력보충, 전문지식의 개선, 기술수준의 향상이 필수적이다.

농토와 관련된 시설물정보와 실제 위치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많은 경우 대규모 토지이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지적 지표를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조사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_ Unabhängiger europäischer Presse- und Informationsdienst für Agrarpolitik und Agrarwirtschaft (Hrsg.). Agra-Europe. 31. Jahrgang, 3.9.1990 Nr. 36

문서 번호 21

새로운 아동청소년지원법과 청소년지원조직법의 도입에 관한 법

1990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비네 베르그만-폴

내용_

이 문서는 새로운 아동청소년지원법과 청소년지원조직법의 도입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을 통해 교육이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국가는 부모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런 의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와 청소년보호와 같은 청소년사업의 내용이 정해져야만 하고 아동, 청소년, 청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만 한다.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은 지방기초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나아가 사립단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두 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지방기초단체는 청소년국을 설치하며 이 조직의 업무는 청소년복지위원회가 담당한다. 나아가 청소년국의 업무가 전문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연수와 현장업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한다. 사립 청소년사업기관과 자원봉사자의 경우 필요한 전문적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며 그들도 공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_ DDR Gesetzblatt 1990 Teil I Nr. 49

문서 번호 22

독일통일의 문화정책적 문제에 관한 문화평의회의 성명서

1990년 7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문화평의회, 서독 문화평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문화평의회 대표가 쉬르머 동독 문화 장관에게 보낸 서한으로 통일과정에서 문화영역에서 발생할 문제의 해법에 관해 논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문화평의회는 문화 장관이 독일 문화전통을 보존하고 동독과 서독이 문화업무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통합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990년 6월 18일에 서독의 문화평의회와 신설된 동독의 문화평의회는 처음으로 공동회의를 개최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독일통일 과정에 문화예술 분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화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문화가 제대로 반영되어야만 한다.

동독과 서독의 문화 관련 분야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문화정책을 두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논란이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 문서에는 동독과 서독의 문화위원들의 요구사항을 읽을 수 있으며, 1990년 7월 26일 동독 문화평의회 위원장의 성명서도 읽을 수 있다. 이 성명서는 동독의 문화평의회가 1989년 가을 이후 동독에서 새로이 설립된 문화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명시되었다. 동독 문화평의회는 통일조약에 동독과 서독 문화평의회의 입장이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동독지역에서의 문화지원을 위해 적어도 5년 정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동독과 서독의 문화재정과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R 1/19417

문서 번호 23

동서독 간의 이주 움직임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와 그것이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

1990년 8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고용노동청, 독일경제연구소

내용_

이 문서는 연방고용노동청이 동서독 간의 노동이주의 움직임에 관한 통계자료와 관련한 정보전략과 그것이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에 관해서 분석한 것이다.

1990년 6월 30일 이후에는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람의 수에 대한 월별 통계를 더 이상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주자 중에서 실업자로 처리되는 사람에 대한 통계는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노동시장에서 이주자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이제 없다.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이 실업자가 되는 것보다 직접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지와 근무지가 달라서 통근하는 사람의 수는 예상한 것처럼 급증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동서독 간의 경계를 넘어 지역 간의 경제적 연결이 밀접한 곳에서 다시 옛 전통이 부활
- 동서독 간의 임금격차로 인해 서독으로 이주
- 서독의 높은 집세가 서독으로의 완전한 이주를 방해

독일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동서독 간에는 150,000명에서 200,000명의 통근자가 존재한다. 이 수는 1991년까지 250,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베를린에 근무하는 통근자들만 해도 약 50,000명에 달한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수는 잠재적으로 아주 적은 것으로 보인다. 동서독 간의 임금격차로 인해 서독의 근로자가 동독에서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출처_ Sammlung (Dokumentatio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r Entwicklung der Arbeitsverwaltung in Deutschland (HdBA Mannheim): SEAD-BA 8.4 / 646

문서 번호 24

통일조약 31조와 32조-가족, 여성 그리고 사회적 세력에 관한 규정

1990년 8월 31일

담당자 / 기관_ 내무부 장관 쇼이블레, 동독 정무차관 클라우제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조약 중에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다. 31조와 3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조.

1) 양성평등법의 발전

2) 가정과 직장생활을 더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 틀 개발

3) 취학아동의 보호를 위한 시설 도입 및 이를 위한 재정의 일부를 1991년 6월 30일까지 연방정부가 부담

4) 낙태와 관련하여 전 독일적인 규정의 도입

32조.

가입지역에서 청소년 보호와 복지사업을 하는 사립복지단체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1990 Teil II S. 889. zitiert in: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juris GmbH. www.juris.de

문서 번호 25

"지불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독일통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부담과 문제에 대한 연방 노동 장관과의 대담

1990년 9월 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노동사회부 노베르트 블륌 장관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이전인 1990년 9월에 서독 연방정부의 노동사회부 장관 노베르트 블륌이 독일의 주간 매거진 슈피겔지와 인터뷰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 40년 동안 이어진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붕괴하고 난 후에도 즉각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기구의 대부분이 여전히 무능하고 의지가 없는 간부들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통합이 실현된 이후 연금이 약 30% 상승하였고 전쟁 희생자를 위한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으며 임금이 상승한 것 등은 좋은 성과라고 보아야 한다.

지역에서 실업연금과 연금보험의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고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동독지역에서 사회보장보험의 가입금을 납입하는 사람의 수가 예상보다 훨씬 더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독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량실업(361,000명의 실업자, 144만 명의 단기근로자) 문제는 비록 단축근로의 실시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동독의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경제에서 국가조직의 역할을 수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숙련 노동력을 위한 일자리 감소가 앞으로 3년 안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보장 시설의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응급실의 의료보조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보조원에 대한 수요는 이미 아주 높다.

통일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 건강보건 체계이다. 만일 의약품 비용을 55% 감축하려는 계획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동독의 의료보험을 위해 35억 마르크가 아니라 60억 마르크가 지출되어야 한다. 동독지역의 의료보험 재원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현재 서독 의사들과 비교할 때 약 40%의 급여를 받는 이 지역의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서독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출처_ Der Spiegel, 38/1990, S. 24-27

문서 번호 26

탁아시설의 유지-최고인민회의 가족여성상임위원회가 지방기초단체에 전하는 시행수칙

1990년 9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가족여성상임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에서 자유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가족여성상임위원회가 지방의회에 보낸 공문으로 탁아시설의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탁아시설의 유지와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시기 동독의 법률관보에는 이런 법이 통과되었다고 발표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 상임위원회가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탁아시설의 유지를 위해 연방정부가 재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1990년 6월 30일 자의 통일조약 문안에 포함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탁아시설은 가능하면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991년도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탁아시설의 수요와 현황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정책실, 고용안정실, 공익근무실 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운영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A 1/17538

문서 번호 27

시민교육·교육, 문화·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베를린 시의회 회의록

1990년 10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시민교육·교육, 문화·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베를린 시의회, 쥐빌레 폴크홀츠 위원, 학교, 직업교육 및 스포츠 행정처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직후 열린 베를린 시의회의 1차 공동회의 회의록이다. 이 회의에는 동서베를린의 23개 행정구역의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서 통일된 베를린의 교육 체계와 교육행정의 통합에 관해 논의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통합된 학교법이 1991년 8월 1일부터 발효되고, 베를린 전역에 적용되므로, 구동베를린 학교제도의 구조적 전환과정이 최대한 빨리 종결되어야 한다.
- 구동독지역에서 김나지움과 게잠트슐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반면 직업학교와 실업학교에 대한 수요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동독에서 구서독 학교로의 무방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구동독지역에 최대한 빨리 김나지움과 게잠트슐레의 이중기관을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일반 종합기술고등학교의 중등교육 1단계를 김나지움 또는 게잠트슐레로 전환하거나, 상급고등학교를 김나지움으로 그리고 종합기술고등학교를 게잠트슐레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 제안은 구서베를린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의 약 30%가 김나지움의 상급과정에 진학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직업학교 또는 실업학교를 설립하는 것 또한 허용된다.
- 초등교육의 경우 주거지에서 가까운 광범위한 기초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 학교제도의 빠른 전환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늦어도 1991년 3~4월까지 중앙관리본부 및 각 행정구역의 대표들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에서 수립한 계획서를 각 행정구역에 송부할 예정이다. 어떤 학교 형태를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관할구역에서 내린다.
- 관할구역의 결정이 높은 지지도를 얻기 위해 동료, 교사 및 부모 간의 상세하고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하다.
- 구동독지역의 교사 및 학교감독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교육 및 향상교육은 늦어도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사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구서독 교사들이 구동독 교사들에게 수업관찰을 위한 학급방문 또는 워크숍과 같은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출처_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번호 28

연방정부의 1990년도 연금조정보고서-신연방주 관련 발췌

1990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연방 노동사회부, 사회자문위원회 빈프리드 슈맬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발표한 1990년도 연금조정보고서 중에서 신연방지역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부록으로 사회자문위원회의 평가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독의 연금 체계가 설명되어 있다. 동독에서는 연금보험이 사회보험으로 통합되어 있었으며 사회보험 납입금은 오래전부터 고정되어서 근로자는 총수입의 10%를 그리고 고용주는 12.5%를 납입하였다. 자율적인 추가연금보험이 존재하였으며 이 경우 월별 납입금 산정은 600 동독 마르크에서 1,200 동독 마르크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1990년 7월 1일부터 실행된 연금이관법은 동독에서 이미 지급되고 있던 연금의 경우 서독 연금의 순수령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산정을 위한 자세한 표 첨부).

나아가 연금의 재정상황에 관해 보고되었다. 1990년 하반기에 지급될 연금액이 138억 마르크, 납입금으로 들어올 수입이 64억 마르크로 예상되었다.

고용주를 위해 연금 체계, 납입금 징수절차 등이 더 많이 홍보되어야만 한다고 지적되었다. 구동독의 세무서에 160명의 상담사를 근무하게 하여 납입금 징수와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사회보험 납입금의 처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신연방지역에서의 연금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문제는 통일조약에 따라 현재의 기준이 1991년 말까지 적용되고 그 후에 도입되어야 할 과도기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인구변동에 관한 자료는 만들어졌다(표 참조).

연금보험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일단 계속해서 동서지역으로 분리되어서 처리될 것이다. 신연방지역의 연금 순수령액은 45년 근무하였을 경우 마지막 평균 소득의 70%를 확보하는 것이 1991년이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사회자문위원회는 임금의 변동을 고려할 때 연금을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1991년 1월 1일부터 연금상승분을 서독 수준보다 15% 정도 높게 책정할 것을 추천하였다.

구동독지역의 연금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자는 그것이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독의 연금기금이 아니라 연방예산을 통해 충당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것은 동독의 추가연금을 청산하는 과정에도 해당된다. 구동독지역의 경제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납입금 비율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자문위원회는 권고하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504

문서 번호 29

동독 출신의 판사와 검사의 재임용에 대한 브란덴부르크주 결정 기준

1990년 11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법무부, 판사선출위원회, 검사임명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하나인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구동독 출신으로 판사, 검사에 지원할 경우, 지원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연방주의, 사회적, 생태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법치국가를 형성하는 데 적합한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때 채용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채용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이다:

- 국가보위부, 비밀경찰의 비공식요원
- 사회주의통일당의 지구당 이상 기관의 지도위원
- 국가전선조직의 고급간부
- 동독 고등법원의 검사, 지역 법원장, 지역 검사장, 지방법원 또는 다른 상급 법률기관의 간부급 지도자 등과 같은 지위 보유
- 이런 직위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동독의 정치적 자유화를 위해 기여한 것이 분명하면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임명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0

문서 번호 30

소수민족 집단의 보호와 지원-브란덴부르크 주의회 헌법위원회에 청원 및 권고

1990년 12월 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헌법위원회, 도모비나 대표 베른하르트 치데쉐, 연방의회 청원위원회,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총리실

내용_

이 문서는 구동독지역에 원래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소르벤족과 관련된 것이다. 소수민족인 소르벤인 주거지역이 작센과 브란덴부르크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할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주 차원에서의 법적 규정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른 차원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소르벤 민족의 대표 베른하르트 치데쉐(der Domowina Bernhard Ziesch)가 연방의회의 의장인 리타 쥐스무트(Rita Süssmuth)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는 민족적 소수그룹이나 인류학적 소수그룹에 속하는 소수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규정이 기본법에 없다는 것을 알렸다. 이를 통해 그는 이러한 문제를 규정화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자료 9/2.2). 또한 이러한 청원서를 연방의회의 교섭단체들에게 공지하고 작센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로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000 Nr. 612

문서 번호 31

신연방주 연금조정 1차 시행령(1차 연금조정시행령)

1990년 12월 1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회의, 헬무트 콜 수상, 연방 노동사회부 블륌 장관

내용_

1차 연금조정시행령을 통해 통일조약과 연금이관법이 결정한 것처럼 신연방주의 연금을 서독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연금보험, 산재보험 전쟁상해자연금 등을 통해 지급되는 연금 중에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지급되던 연금은 15% 인상된다. 인상분은 사회지원금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1991년 1월 1일부터 1991년 6월 31일 사이에 획득하게 되는 연금포인트는 별도의 인상기준에 따라 연금포인트에 반영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0, Teil I Nr. 71

문서 번호 32

노동력 부족에서 현재의 노동력 과잉으로: 신연방지역의 여성과 경제활동

1991년

담당자 / 기관_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

내용_

이 문서는 노동시장 직업연구소의 게어하르트 엥겔브레히 박사가 신연방지역 여성의 역할에 관해 조사한 것을 발표한 연구자료이다.

현재 신연방지역 여성의 취업은 적어도 1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현저하게 줄어든 고용기회로 인해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기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고용창출 프로그램과 직업 재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완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사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없거나 숙련되지 않는 노동력, 예를 들어 파트타임 근무 여성, 출산과 육아 이후 직업전선에 복귀하려는 여성, 싱글맘과 같은 경우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이 가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할 때 취업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다.

동독과 서독의 상이한 체제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양쪽이 동일하게 성별을 명확히 분류해 왔다.

출처_ Engelbrech, Gerhard (1991):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Vom Arbeitskräftemangel zum gegenwärtigen Arbeitskräfteüberschuß: Frauen und Erwerbsarbei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München.

문서 번호 33

브란덴부르크주 내 정치시민교육 중등교육 1단계 '사회 과목'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청소년·교육·스포츠부

내용_

이 문서는 중등교육 2단계 대상 '사회 교과' 영역 교육과정 임시계획에서 발췌한 것으로 새로이 도입될 교과과목의 과제와 목표가 요약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 국가시민 교과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주어진 '진리'에 맞추어 교육하는 것 대신에 정치적 내용을 비판적이자 성찰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정치시민교육은 자라는 청소년들이 복합적인 사회적 현실 속에서 올바른 방향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모시키는 데 참여하도록 장려받아야 하며 정치적 극단주의에 몰두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본 교과계획에서는 사회 교과에 있어 교수학적 구상 및 다루어질 만한 주제 분야들이 제시되었다.

출처_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 Vorläufiger Rahmenplan Lernbereich „Gesellschaftslehre", Politische Bildung Sekundarstufe I, Potsdam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4-368

문서 번호 34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 사회 과목: 하웁트슐레,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에 대한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교육·학술·문화부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의 사회 과목 개편을 위해 마련한 임시계획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교과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정치이념을 역사적이자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소개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감각을 갖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 과목은 사회적이자 정치적 현상 및 현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정치적 맥락들을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고 정치적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갖도록 장려해야 한다. 여기에 제시된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학년에서 동일한 수업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단지 다양한 학교 형태에 따른 수업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추상화 및 난이도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출처_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 – Sozialkunde – des Landes Mecklenburg Vorpommern, Schwerin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9 f.

문서 번호 35

작센-안할트주 내 사회 과목 교육: 중고등학교와 하웁트슐레 관련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교육·학술·문화부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인 작센-안할트주의 교육부가 발표한 중등학교 사회 과목 교육과 관련하여 발표한 임시계획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교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경제 및 정치적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하웁트슐레에서의 사회 과목 수업은 학생들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연관 지으며 이루어진다. 일상적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배운 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민주적인 행위가 가져오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출처_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des Landes Sachsen-Anhalt.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 Sekundarschule: Bildungsgang Hauptschule - Sozialkunde, Magdeburg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2-374

문서 번호 36

튜링겐주 내 사회 과목: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문화부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 튜링겐주의 문화부가 중고등학교의 사회 과목 교육과정에 관해 발표한 임시계획안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과목의 과제는 급속한 사회 변동을 깨닫게 하며 점차 더 복잡해지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정치적 차원을 인식하게끔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반대로 정치에 대한 이해 역시도 자기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형성해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학생들은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장을 정해 이를 헌법질서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특히 김나지움에서 학생들에 대해 구동독에 대해 또 통일과정의 결과와 체험할 수 있었던 변화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이 전달되어야 한다. 수업은 통상 삶과 동떨어지지 않으며 교수학적으로도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례들에 근거해야 하며, 학생들의 사전 지식과 의견 그리고 경험을 관련지으며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_ Thüringer Kultusministerium. Vorläufige Lehrplanhinweise für Regelschule und Gymnasium Sozialkunde, Erfurt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4-376

문서 번호 37

주택시장 문제에 대한 작센주 주의회 논의

1991년 2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작센주 내무부 차관 알브레히트 부톨로, 작센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주 주의회에서 주택 현황에 관해 논의한 기록이다. 이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원들이 동독 체제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많은 주택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개조, 개량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의 월세수입으로는 일상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유지비도 충당할 수 없다고 한다. 월세를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것은 통일조약에 명기된 것처럼 사회적 차원에서, 또한 급여인상 정도에 맞추어서 주택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선에서만 인상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민당의 반드만 의원에 따르면 주민들의 소득이 통일조약 체결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지만, 소득 격차 또한 훨씬 커졌다고 한다. 주택의 현대화와 주택공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민영화, 주거보조금, 사회적 주택건설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 Plenarprotokoll 1/12, S. 560-568

문서 번호 38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택정책에 관한 주의회의 논의

1991년 4월 10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무 장관 게오르크 디데리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에서 주택경제 현황에 관해 논의한 회의 기록이다. 주정부의 내무 장관은 동독 체제의 파산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주택사정이 악화되었고, 주택경제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은 건설 붐을 통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국가가 주택정책을 추진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민영화도 계속 추진해야만 한다고 했다. 동시에 주거비를 통해 집세 상승률이 사회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 토론에 참가한 주의회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주택정책과 그에 대한 주정부의 입장이 주택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했다. 나아가 민간 주택소유자를 위한 지원, 집세 인상, 주택경제에서 구채무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16, S. 678-690

문서 번호 39

주택경제 상황에 관한 주의회의 질의에 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무 장관의 답변

1991년 5월 6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무 장관 게오르크 디데리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사민당 소속 켈러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사민당의 켈러 의원이 주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한 내무 장관의 답변이다. 켈러 의원은 주정부가 주택건설과 주택정책을 위해 어떤 법안을 마련했는지,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언제 주택건설회사에 제공할 것인지 질의했다. 나아가 주택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다. 그에 대해 내무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주택경제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이미 통일조약을 통해 정해졌다. 그에 따라 인민 소유의 주택을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게 전환해야만 한다. 주택건설과 주택정책을 위한 연방정부의 포괄적인 규정이 이미 세워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개별적인 규정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연방정부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서 주택건설회사를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 주택의 민영화작업은 통일조약에 따라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하게 된다. 주정부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주택의 월세 변동, 주거보조금, 시장경제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Drucksache 1/425

문서 번호 40

주택건설 지원 지침에 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토론

1991년 5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에서 이미 의결된 주택건설 지원 지침에 관해 토론한 것이다.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는 이 문제와 관련해 도시개발 상임위원회와 일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와 관련해 주의회 의원들은 지원치침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비판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그에 대해 동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원 지침은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며, 주택건설, 임대주택의 현대화 및 보수개량, 구도심의 고건물 보수 및 도시건축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볼프 장관은 공적자금만으로는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동독지역의 주택건설을 위해 매년 500억 마르크가 지출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뿐만 아니라 신연방주의 다른 주정부들도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신연방주들은 주택건설과 관련해 동독 체제하에서 발생한 구채무를 상환해야만 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 발언한 의원들은 주택소유자와 임대인들에게 지원 지침을 홍보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해야만 한다는 데 동의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17, S. 1289-1303

문서 번호 41

주택정책과 임대료 규정에 대한 주의회의 질의에 대한 작센주 내무 장관의 답변

1991년 5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작센주 좌파/민사당 원내 대표 클라우스 바텔, 작센주 내무 장관 루돌프 크라우제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주 주의회 좌파/민사당이 제출한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에 내무 장관이 답변한 것이다. 이 질의를 발언한 클라우스 바텔 의원은 주택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내무 장관 크라우제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작센주의 주헌법에 모든 주민들이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만 한다. 먼저 주택은 사회적 요소를 가진 것이지만 동시에 주택은 일종의 경제적 자산이기도 하다. 지금 현재 주택의 상황이 열악한 이유는 40년 동안 동독의 지배 체제에서 찾아야만 한다. 통일조약에는 임대료 인상률의 최대치는 소득발전 수준을 고려해서 허용되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임대료 기본규정과 관리비 세입자 부담에 관한 규정을 이미 도입했다. 통일조약에는 나아가 기초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으로 귀속된 국유주택을 민영화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국유주택의 민영화 작업을 돕기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자문그룹을 구성했다. 주정부는 나아가 1991년에 2,580채의 사회주택의 지원과 6,430채의 개인 소유 주택을 위한 지원을 완료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 Drucksache 1/400

문서 번호 42

연금보험과 산재보험의 법적인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연방회의의 심의

1991년 5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독일의 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회의에서 열린 신연방지역의 연금과 산재보험에 관한 회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센주의 가이슬러 장관은 동독에서 획득한 연금포인트를 전환하는 작업이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절차가 가능하면 신속하게 완료되기를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연방주에도 적용될 연금개혁법을 통해 이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보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작센주 정부는 여성을 위한 독자적인 노후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것은 동시에 유족연금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를린 시의회의 슈타머 의원은 여성을 위한 독자적인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녀는 신연방지역의 연금을 서독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비판하면서, 연금이관 과정에서 이 지역의 여성 연금생활자들의 삶의 수준이 급격하게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70억 마르크의 추가 지원금을 도입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추가 지원금은 1995년에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신연방지역의 여성에게도 육아양육 기간을 연금포인트에 합산시켜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이에른주의 글룩 장관은 연금개혁법과 함께 동독 여성들의 연금 권리를 전환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독의 연방주들에게 주는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개혁을 통해 동독지역의 연금생활자들이 서독지역의 연금생활자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독 체제에서 인도주의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을 침해한 사람들의 연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브란덴부르크의 브로이티감 장관은 동독의 추가보험이 당간부들에게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교사, 의사, 학자 등에게도 혜택을 제공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추가보험 혜택을 원칙적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조약에서 합의한 것처럼 추가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연금의 액수가 아주 높은 경우에만 그 액수를 삭감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비밀경찰 요원들의 연금을 600마르크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연방정부의 블륌 노동사회부 장관은 연금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된 성과를 강조하였다. 1990년 6월 말 동독의 평균 연금은 493마르크였지만 1991년 7월 초는 820마르크였다. 그것은 66% 인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의 목표는 생활수준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독일 전역에서 연금 평균 순수령액이 평균 임금의 70%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연방지역의 연금을 즉각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법을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본다. 더욱이 연금개혁법은 2년 전에 광범위한 합의를 통해 도입된 것이었다.

출처_ Deutscher Bundesrat, Archiv, Plenarprotokolle, 630. Sitzung, S. 187-194

문서 번호 43

사회복지 계획을 위한 기본원칙

1991년 6월

담당자 / 기관_ 신탁관리청

내용_

이 문서는 신탁청과 사무직 근로자 노조가 1991년 4월에 서명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본원칙을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이유: 대량 해고되는 근로자의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고 많은 기업의 안정화를 위해
- 독립 재정으로 운영되는 사회지원 계획에 관한 추가설명:

- 신탁청이 사회보장 계획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더 높은 규모의 사회보장 계획 분담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 사회보장 계획이 공동 성명서에서 명시한 규정에 상응한다고 판단될 경우 신탁청은 그것을 사회법에 의해 제한된 틀 내에서 승인한다.

- 사용 목적이 정해진 보조금의 신청

출처_ Treuhandanstalt (Hrsg.). Dokumentation 1990-1994, Berlin: Treuhandanstalt 1994

문서 번호 44

신연방주의 유치원과 탁아소 그리고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호시설-연방의회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1년 6월 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사민당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유치원과 탁아시설에 대한 사민당의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에서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동독지역에는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전국적으로 충분히 존재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경제활동 하는 것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 동독에서는 여성의 90%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나아가 동독 당국은 아동교육에서 가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에 의해 영향받도록 하고자 노력하였다.

통일로 인해 많은 수의 유치원과 탁아소가 폐쇄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포기해야만 하였고 '가사의무'를 전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의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탁아시설의 일반적인 축소가 아니라 질적인 개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탁아시설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것이라는 사실이 1990년 10월 3일 이후 분명해졌다.

이 문서는 나아가 신연방주의 탁아시설에 관한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61

문서 번호 45

제1차 기본임대료 인상 규정

1991년 6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이름가르트 아담-슈베처 연방 건설부 장관

내용_

주택임대료 인상의 최대 허용치는 1991년 1월 10일에 1스퀘어미터당 매월 최대 1마르크였다. 1990년 10월 2일에 목욕탕과 중앙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택의 경우 또는 1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임대료는 각 0.15마르크 인상하도록 허용되었다. 만일에 화장실이 주택 외부에 있다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인상분은 스퀘어미터당 0.15마르크 내려간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37, S. 1269

문서 번호 46

신연방주를 위한 주택수당 특별법 도입

1991년 6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연방정부

내용_

이 법은 주택수당(주거보조비)의 규모와 형태를 규정한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주거보조비 신청 자격
- 소득 규모에 대한 조사기준(가족수입과 연간수입)
- 거부 근거
- 주거보조비 지급, 증액 그리고 종료(신청서, 정보제공의 의무, 지급기간, 지급방법, 주거보조비 신청자격 상실, 행정법원의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 난방비와 수도세를 위한 보조금
- 주거보조비의 지급
- 주거보조비 통계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37, S. 1250-1267

문서 번호 47

신연방주의 주거비보조법-주거보조금과 다른 복지규정의 개정

1991년 6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 연방 대통령, 콜 수상, 연방 건설부 장관 아담-슈베처, 연방 재무부 장관 바이겔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조약 3조에 따라 신연방주에 도입된 주거비보조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에 의해 주거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보조금의 규모 그리고 신청서의 심사기간 등이 확정되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1, Teil I Nr. 37

문서 번호 48

문화 관련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작센-안할트 주의회의 결정

1991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가 주정부가 예술가들의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정이다. 주의회는 이 결정에서 예술가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은 고용청의 재원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적어도 막데부르크, 데사우, 할레 등 대도시에는 작업, 전시회, 공연, 만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주정부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작센-안할트주의 문화적 발전과 관련된 모든 예산문제를 위한 문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8/502 B

문서 번호 49

브란덴부르크주 주의회가 제출한 주택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도시개발주택건설교통부 장관의 답변

1991년 6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비아테 트람스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주거현황에 관한 주의회의 민사당/좌파 소속 트람스 의원의 질의에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트람스 의원은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포츠담시에만 10,000건이 넘는 주택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지금 현재 주택 현황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저렴한 기본임대료 지원으로 인해 주택의 수요와 공급 간에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임대주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의 필요보다 훨씬 큰 규모의 주택을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택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1991년 10월 1일 자로 기본임대 규정 및 관리비 규정이 도입된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동독 시기에 새로 지은 주택의 개량문제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주택 개량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나아가 주택건설 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22, S. 1611-1612

문서 번호 50

연금 및 산재보험 통합을 위한 법-연금이관법

1991년 7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회의 대표 헤닝 포르쉐라우, 수상 헬무트 콜, 연방 노동사회부 장관 블륌, 연방 법무 장관 클라우스 킹켈, 연방 재무 장관 테오 바이겔, 연방 외무 장관 겐셔

내용_

이 문서는 1992년 1월 1일 자로 신연방지역에 적용되게 된 연금이관법이다. 이 법에 따라 동독에서 획득한 연금포인트가 서독의 연금법 규정으로 이관되었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조. 사회법 개정은 신연방주의 특별규정에 해당

2조. 신연방주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위한 과도기법

3조. 동독의 추가연금과 특별연금 체계에서 획득한 연금포인트의 이관법

4조. 특별연금과 추가연금제도의 정지법

5조-30조 및 32조-39조. 사회법 규정 및 연금개혁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들

31조. 신연방지역의 연금이관법

40조. 신연방주 연금에 대한 사회보조금 추가지급법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1991년 5월 29일 연방회의와 연방정부가 입장을 표명한 문서 참조)

출처_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1, Teil I Nr. 46

문서 번호 51

학력 동등성 인정(대학교, 교회 양성교육기관, 전문대학교 및 공업전문대학교 학위)

1991년 10월

담당자 / 기관_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에서 취득한 대학졸업을 포함한 학력의 동등성 인정을 위한 관할권 규정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주 사이의 협정 그리고 학력의 동등성 인정을 위한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의결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통일조약 제37조 제1항을 바탕으로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는 구동독에서 취득한 학력의 평가를 실행하였다. 여기에서 참작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립 그리고 국가가 공인한 대학에서 직접 수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수학하여 취득한 예술 석사를 포함한 석사 자격
- 대학 범주에 속한 목사 양성 교육기관의 졸업
- 전문대학 및 공업전문대학 졸업

평가는 구동독에서 서독에 흡수·통합되기 전까지 그리고 뒤이어 양성교육 체제 전환 전에 과도기 동안 이수하였거나 또는 1993년 말까지 이수가 진행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동등성 인정을 위한 관할권은 주 협약을 통하여 규정한다.
통일조약 제37조의 맥락에서 본 동등성 인정은 비교 가능한 형식적 자격수준의 인정뿐만 아니라 독일 학력과 더불어 구동독에서 이수한 학력에 있어 교재의 충분한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학력 평가는 구동독과 구서독 간 통합과정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한다.
학력 평가에 있어 통일된 분류가 불가능했던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그룹이 구성되었다.
사례그룹 1
최종 학력이 이미 1990년 10월 3일 이전부터 기본법이 유효했던 구서독지역의 종합대학 또는 그 종합대학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 단과대학에서 이수 되었던 최종 학력과 동등하다.
사례그룹 2
최종 학력이 이미 1990년 10월 3일 이전부터 기본법이 유효했던 구서독지역의 종합대학 또는 그 종합대학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 단과대학에서 이수되었던 최종 학력과 동등하다. 그러나 양성교육은 직접적으로 동독의 경제 및 사회 체제에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학업내용을 고려해 보면 체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사례그룹 3

최종 학력이 전문대학에서 이수하였던 학력과 동등하다.
사례그룹 4
최종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하다. 그러나 양성교육은 직접적으로 동독의 경제 및 사회 체제에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학업내용을 고려해 보면 체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2.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튜링겐주는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1조
담당자는 동독에서 취득한 학력을 대학 졸업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통일조약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학력을 이수한 교육시설이 설립되어 있는(있었던) 조약 체결 주의 대학제도 담당 장관/시정부 의원이다. 이는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된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이수하였던 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도 여전히 이수 중인 학력에 대하여서도 유효하다.
2조
조약체결 주 중 한 곳에서 실행된 동등성 인정은 다른 모든 조약체결 주에서도 유효하다.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에서 조약체결 주의 교육 및 문화/과학부 장관/시정부 의원의 의결을 통해 통일된 평가방식을 보장한다.
3조
본 협약은 조약체결 주 중 마지막 주(州)가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사무총장에게 최종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당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사무총장은 이 시점을 조약체결 주들에게 통지한다.

출처_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문서 번호 52

브란덴부르크주의 학교 개혁: '인생설계-윤리-종교' 과목 시범모델

1991년 10월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청소년·교육·스포츠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해 보기로 한 윤리교과 과목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교육·스포츠부의 프로젝트 그룹의 주도하에 몇 년 동안 실시해 볼 계획으로 구상된 교과모델은 앞으로 브란덴부르크주의 각 행정구역의 학교 중에 한 곳씩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종교단체,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대표 그리고 노조와 정당이 파견한 대표들로 구성된 사회자문단이 함께 활동한다.

이 시범모델 수업의 목표는 앞으로 제정될 브란덴부르크주 학교법에 포함될 종교교육 과목을 위한 기본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동독에서는 학교에서 세계관적, 종교적 혹은 윤리적 내용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모델에 수업영역을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교육 체계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이 시범모델 수업에는 스스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부모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가 비록 학교에서 특정 종교에 정향된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다양한 종교들의 내용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사실도 감안되었다. 특정 종교에 소속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공동수업은 세속주의화가 진행된 사회에서 대화 능력과 상호인정 능력을 함양할 것이며 교육 부문에 있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것이다.

출처_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Gemeinsam leben lernen: Modellversuch des Landes Brandenburg zu einem neuen Lernbereich und Unterrichtsfach „Lebensgestaltung – Ethik – Religion", Potsdam, 15. Oktober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85-287

문서 번호 53

튜링겐주 주택 현황에 대한 주의회에서의 토론

1991년 11월 7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주 내무부 차관 미하엘 리페르트, 튜링겐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주택 현황에 관해 열린 주의회 토론 기록이다. 이 총회의는 좌파-민사당의 제안에 따라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사당의 하네만 의원은 민간주택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사회주택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만 명의 주민이 현재 주택을 구하고 있는 반면, 사회주택은 1,000채, 주택보조를 받은 일반주택은 9,000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1991년 6월 17일에 발효된 제1차 기본임대료 규정에 따라 주택의 임대료가 10월부터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료 동결조치를 내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료 수준을 소득 수준의 변화에 맞추어서 조정하기로 통일조약에 합의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기초자치단체들을 위한 채무탕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기민당의 칼렌바흐 의원은 동독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주택정책 때문에 구도심의 주택들이 폐허가 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야 그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택건설 프로그램을 통해 5,400채의 임대주택과 1,800채의 민간주택이 지원되었고, '구동독 재건' 프로그램의 주택 개량 및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약 1억 4,400만 DM이 지원되었다고 설명했다.

사민당의 그리제 의원은 주택문제는 동독 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현재도 사회주택건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했다. 자신이 보기에는 튜링겐주의 주택공급 현황이 서독지역 연방주의 30년 전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자민당의 그로세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채무탕감과 동시에 민간 임대업자의 채무탕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Plenarprotokoll 1/34, S. 2182-2189

문서 번호 54

1991년 가을 현재 신연방주의 사회 분위기와 문제점

1991년 12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경제부, 알렌스바흐 인구문제연구소

내용_

이 문서는 알렌스바흐 인구문제연구소가 연방경제부의 용역을 받아서 신연방주의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결과이다. 이것은 1,116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노동시장과 시장경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연구이다. 그에 따르면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사회적 분위기는 나빠졌다가, 이제 다시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체제 전환 과정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건설업이 호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_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Probleme und Stimmungslage der Bevölker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e aktuelle Bestandsaufnahme im Herbst 1991.

문서 번호 55

작센-안할트 주의회의 질의: 사회문화센터/예술가의 지원

1992년 1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장 클라우스 카이텔,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원 치헤, 숌부르크, 작센-안할트주 교육학술문화부 장관 베르너 소베츠코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에서 열린 사회문화 관련 질의와 토론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녹색당의 한스 요헨 티쉐 의원이 기초자치단체들이 사회문화센터를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처할 것인지 물었다(사회문화센터는 서독에 1970년대부터 있었던 시설로 다양한 연령대, 사회계층,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주정부의 베르너 소베츠코 교육학술문화부 장관은 작센-안할트에는 약 150여 개의 사회문화적 활동을 하는 기관이 존재하며, 1991년에 주정부가 사회문화 영역에서 150여 개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1,400만 마르크 이상을 지출하였다고 밝혔다. 1991년에 사회문화 영역에서 시작된 보수조치의 대부분은 1992년 이후에도 대부분 주정부의 재정으로 유지될 것이며 곧 사회문화를 위한 지원지침이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지침을 사회문화센터를 위한 재정 지원과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민당의 라이너 숌부르크 의원은 1991년에 주정부가 예술가들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물었고, 소베츠코 장관은 1991년에 교육학술문화부가 예술가 지원을 위한 지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주정부의 재정으로 52개의 예술 프로젝트를 위해 총 60만 마르크 이상 지원되었으며 57명의 예술가들에게 총 275,000마르크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고 하였다. 1991년에는 예술작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되어서, 1991년에 이 항목으로 300,000마르크가 지출되었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27, S. I f., 286 f.

문서 번호 56

주택정책의 구채무를 연방정부에게 인계 제안에 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총회 토론

1992년 2월 6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무 장관 게오르크 디데리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크로이처, 토마스

내용_

이 문서는 주택정책 분야의 구채무를 연방정부에게 인계할 것은 제안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민사당의 제안에 대해 주의회 총회에서 논의한 기록이다. 이 회의에서는 먼저 구채무의 특수한 법적 의미에 관해 먼저 논의되었다. 민사당-좌파리스트 소속 괴츠 의원은 구채무는 동독 체제하에서 임대료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채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구채무는 탕감되거나 또는 연방정부에게 인계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게오르크 디데리히 내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신연방주의 구채무는 1990년 7월 1일자로 약 500억 DM으로 급속히 증가했으며, 1993년 말까지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것이 실질적인 채무가 아니라 가상적인 채무일 뿐이라는 법률자문위원들의 평가서를 인용했다. 그러나 은행과 연방정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민사당의 제안이 궁극적으로는 주정부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43, S. 2153-2157

문서 번호 57

브란덴부르크주 임대인 현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 제안에 관한 주의회 총회

1992년 2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브란덴부르크주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주의회의 모든 정당들이 함께 주정부에게 1992년 8월 1일까지 임대인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트무트 마이어 사민당 의원은 통일조약에 모든 임대료는 소득의 변화에 맞추어서 변경할 수 있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 후 1991년 10월 1일 자로 기본임대료와 관리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높은지 아니면 너무 낮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통계청을 통해 임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통계자료를 통해서만 주택과 임대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도시개발, 주택, 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는 나아가 이 보고를 통해 전달된 데이터를 연방정부와 구채무 문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기민당의 라인펠트 의원은 기만당이 기초자치단체의 주택 민영화 작업과 개인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의 노이만 의원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주민들에게 주택 현황을 알리고 기본 임대료의 인상이 없이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39, S. 2877–2883

문서 번호 58

소련군 군부대 부지를 기초자치단체에 양도해 사회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한 튜링겐 주의회 총회

1992년 2월 26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주 내무부 차관 미하엘 리페르트, 튜링겐 주의회 부의장 페터 박하우스, 튜링겐 주의회 의원 그리제, 푀제, 피들러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 주의회 총회에서 사회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소련군 군부대 부지를 기초자치단체에 양도하는 문제에 관해 토론한 기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민당의 그리제 의원은 75,000명의 튜링겐 주민이 현재 주택을 찾고 있는 반면, 약 9,000개의 주택이 비어 있을 뿐이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비어 있는 9,000개의 주택 중에 많은 수가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했다. 1991년에 3,662채의 주택이 새로 건설되었지만, 그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주택건설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앞으로 오랫동안 튜링겐주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자가소유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좋은 주택정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소유권 반환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도 원활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리제 의원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연방정부가 소련군 군부대 부지를 기초자치단체와 연방주에 양도하도록 주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앞으로 비어 있는 건물은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만 한다고 했다. 민사당-좌파리스트의 푀제 의원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우선 보수 개량해야만 한다고 부언했다.
튜링겐 주정부 내무부의 리페르트 차관은 주정부가 군사시설을 주로 주택건설정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튜링겐 주정부가 주도해서 소련군이 사용하던 주택을 주택시장에 내놓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보고했다. 소련군이 사용했던 주택은 무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양도 될 것이다. 이 작업이 빨리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소련군 측과 독일 측의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튜링겐주에는 총 8,000채의 소련군 주거 주택이 비게 될 것이다.
주의회 부의장으로 자민당 소속인 페터 박하우스는 소련군 주택을 사회주택으로만 전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련군 건물들은 상점, 서비스업, 여가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기민당의 피들러 의원은 자민당 박하우스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 제안은 만장일치로 튜링겐 주의회 내무위원회로 이전되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Plenarprotokoll 1/45, S. 2960-2963

문서 번호 59

주택정책 및 도시건설정책 의결안에 관한 튜링겐 주의회 총회 토론

1992년 2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피들러, 그리제, 코흐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주의회 총회에서 주택정책 및 도시건설정책과 관련해 기민당이 제출한 의결안에 관해 토론한 기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민당의 피들러 의원은 건물주들은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재원이 없어서 수리하지 못하고,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를 위해 약 5억 마르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피들러 의원은 건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정책에서 구채무 문제와 관련해 그는 튜링겐주가 안고 있는 50억 마르크의 구채무를 실질적인 채무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사민당의 그리제 의원은 기민당이 제안한 것은 기민당, 자민당이 이끄는 연방정부의 파산한 주택건설정책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정책은 서독지역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사회주택건설은 뒷전으로 미루고 일방적으로 일반 서민은 꿈도 꿀수 없는 개인주택을 지원한다고 비난했다.

민사당의 코흐 의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사회주택건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두 배로 늘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Plenarprotokoll 1/46, S. 3037-3042

문서 번호 60

주거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정부의 답변

1992년 3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무 장관 게오르크 디데리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토마스

내용_

이 문서는 주거정책, 특히 소유권 반환으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에서 벌어진 토론의 보고서이다. 먼저 사민당의 토마스 의원이 통일 이전부터 거주하면서 주택을 개축한 세입자들이 이제 소유권 반환 요구에 직면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문했다. 나아가 주거공간의 용도변경 규정과 주택개량 지원 계획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게오르크 디데리히 내무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소유권 반환으로 인해 임대관계가 변하지는 않는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이 도입될 필요는 없다. 소유권 반환신청으로 인한 재판이 열릴 경우 세입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이 벌어질 경우 세입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정부는 주거공간의 용도변경 규정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의 임대주택의 80%가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들도 관할영역 내의 주거공간의 용도변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정부는 주택의 수리와 현대화를 위해 1991년과 1992년에 5.4억 DM을 지원할 것이다. 지원금은 소요되는 비용의 60%까지 지급될 수 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Drucksache 1/1577

문서 번호 61

‘우리 주를 위한 헌법’-1992년 6월 14일 브란덴부르크주 주민투표를 위한 홍보자료

1994년 4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센터

내용_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센터가 1992년 펴낸 자료는 1992년 4월 14일, 1년 이상 의회 안팎의 토론을 거친 후 3차 회의에서 압도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기본법초안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홍보용 자료이다. 여기에는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주적 기본법이 나오기까지의 이전 역사, 의회의 의견 차이 속에서 기본법 초안이 논의된 과정, 기본법 전문, 결정법 등의 내용이 자세하고 체계적인 양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000 Nr. 42

문서 번호 62

국가 간부에서 법치국가의 행정 공무원으로

1992년 5월

담당자 / 기관_ 요하임 폴무트 실장 겸 연방내무부 공공 행정 연방아카데미의 독일통일 관련 재교육 교육단 V팀 팀장

내용_

I. 출발상황: 연방행정에는 새로운 직원들이 통합될 수 있었다; 신연방주지역에서는 행정 체계가 완전히 새로 구축되어야 했다.

II. 상이한 교육 방법: 1991년 초까지 교육 조치를 단일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집중되었다.

1. 브란덴부르크주의 모델

- 중간급 공무원에게는 300시간의 재교육이, 고위급 공무원에게는 600시간의 재교육이 실시되었다.
- 근무와 병행해 주당 1일 재교육이 이루어졌다.

2. 재교육의 모듈화 시스템: 1990년 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참여하는 직업교육 및 재교육 담당자 회의(내무부 장관 회의 실무팀 I의 하부 위원회)를 통해 연방아카데미가 이끄는 실무단이 설치되었다.

a) 보파르트 모델을 모범으로 하는 기초 과정: 집중 과정(주 5일, 최대 4주)

b) 전문 분야 및 기능 관련 보충

- 재무 헌법과 예산 분야, 공무 기초에 관한 재교육 수요, 연방공무원 임금 분야
- 연방아카데미는 2주간의 전문 과정인 '행정법과 민법 입문'을 개발하였다.
- 관리 태도에 관한 현장 조사

c) 수습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 조치 지속 실행: 수습 기간 중에는 최소 4주간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재교육 시간문제: 고위 공무원의 경우 120시간의 기초 과정, 60시간의 행정법 전문과정, 60시간의 법적용 실행 방식, 60시간의 관리 및 협력 과정이 제공되었다(총 300시간).

4. 수습기간 중 재교육 조치에 관한 계획

- 재교육은 수습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수습 공무원들의 경우 재교육을 통해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훌륭한 성적을 보였지만, 신청된 법적 사안을 처리할 때는 그렇지 못했다.

III. 학습 및 역량 감독: 동기 부여를 위한 감독: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보충적인 기준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_ Die Öffentliche Verwaltung. Mai 1992. Heft 9. S. 376-385

문서 번호 63

신연방주 여성들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연방의회 논의

1992년 5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여성청소년부 정무 차관 이제르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에서 신연방지역 여성의 경제 상황에 관해 논의한 회의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의회의 모든 정당 소속 의원들이 신연방지역 여성의 실업률이 55%에서 62%로 너무 높으며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임수술율도 높다고 지적하였다. 통일로 인해 가장 큰 불이익을 본 그룹이 동독 가정의 20%를 차지하는 싱글맘이다. 반면 연금을 수령하는 여성의 경우 아주 오랜 근무기간으로 인해 높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통일의 수혜자에 속한다.

기민당의 대표는 많은 문제들이 동독의 계획경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전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연방정부 여성청소년부의 이제르 정무 차관은 나아가 현재 직업재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인원 중에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들은 나중에 필요하게 될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창업자의 40%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 여성이 직면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경제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이것을 특히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Parlamentsprotokoll 12/93

문서 번호 64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1장 브란덴부르크주의 현황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총리실 및 모든 부서

내용_

1990년 10월 14일 선출되어 11월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주의회와 주정부는 큰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연방의 대규모 지원은 첫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구동독-정부가 재건업무에 착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화폐 및 경제통합(die Währungs- und Wirtschaftseinheit)은 그러한 통합이 가져올 상품 및 재화 공급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수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였다. 동독의 서독 체제 편입(Beitritt)과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으로 인해 브란덴부르크주에 단일한 법적 체계와 연방공화국의 기본법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조건이 브란덴부르크주에 하나의 법치주의적 사법기관과 행정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에 착수한다는 것과 남용되어 악화된 국토를 재개발하고 건설하는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총괄적인 상황평가 보고는 주의 개발부진 상황과 장애요소를 26개 분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개발을 통해 만회해야 하는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65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82장 사회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노동·사회·건강·여성부 장관 레기네 힐데브란트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침을 설명한 정부 성명서이다. 이 서문에서 주정부는 고령자, 은퇴자,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돌봄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고령자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조치 및 프로그램을 입안하였다:

a. 고령자정책: 적합한 가격의 주거공간을 창출, 활발한 투자를 통해 고령자 양로원을 신설, 보살핌이 필요한 자와 그들의 가족과 이웃, 친구를 전체 지역이 책임지는 탈중앙적 서비스 제공, 접근성과 이용성이 뛰어난 공공 생활 기관과 의료지원기관 설치

b. 비정주자정책: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공공지원기관 신설

c. 장애인정책: 장애발생 조기 방지, 장애상황 악화 방지, 장애 결과의 최소화; 종합적인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 삶 적극 참여 지원, 독립적 삶의 지원

d. 난민신청자와 난민: 난민에 대한 편견 해소, 난민에 대한 불안감 해소, 난민 신청자와 난민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주거 및 보호의 제공

e. 외국인 정책: 외국인 거주의 경제 및 사회생활 참여를 지원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66

주택 임대료 현황에 대한 작센주 주의회 토론

1992년 7월 9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작센주 내무부 장관 하인츠 에거트, 작센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주 주의회가 주택임대료 현황에 관해 토론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좌파/민사당은 통일조약에 합의된 주택임대료의 수준과 일반적인 소득변화를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신연방지역의 주택임대료를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사민당은 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은 세입자가 아니라 주택 소유권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작센주 주의회가 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토론하게 된 배경은 1992년 6월 27일에 신연방주와 연방정부의 주택건설부 장관들이 임대료 문제에 관해 타협한 것이다.

작센주 내무장관 하인츠 에거트는 작센주 주택의 상태가 서쪽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전체 주택의 10%는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료의 수준이 주택의 유지와 관리가 보장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에거트 장관은 신연방주의 주택들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독이 40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좌파/민사당이 요구하는 임대료 동결 조치는 동독 수준의 임대료만 가지고도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1993년 1월 1일로 계획된 2차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하며, 인상된 임대료는 평당미터당 최대 2.10DM이 될 것이다. 신연방지역의 소득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인상이 통일조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에거트 장관은 사민당의 제안을 비판하며, 주택의 유지 보수는 현재도 세입자가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 Plenarprotokoll 1/49, S. 3312-3322

문서 번호 67

주거 문제에 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토론

1992년 9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민사당의 제안으로 주의회에서 주거문제에 관해 토론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 직후부터 신연방주에서는 소득 수준에 맞는 임대료에 주거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했다.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각 당의 대표들은 열악한 주택의 상태를 고려해서, 주택건설지원법을 통해 주거공간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을 세우며 이에 필요한 예산계획을 세워야만 한다는 데 합의했다. 주택공급도 턱없이 부족했다. 약 100,000에서 200,000채의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단순화하고, 주택의 보수와 현대화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은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측면을 반영한 임대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연방 차원의 임대법 또한 신연방주의 조건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53, S. 3830-3846

문서 번호 68

주택 및 임대료 현황에 관한 작센주 주의회의 토론

1992년 10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작센주 내무부 차관 알브레히트 부톨로, 작센 주의회 다수 의원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주 주의회 민사당의 제안으로 총회에서 주택 개량 및 현대화와 임대료 인상 문제에 관해 토론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사당의 바텔 의원은 주민들이 주택 임대료의 인상을 소득 수준에 맞추어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민발의와 저항운동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2차 기본임대료 인상 조치는 통일조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택개량 및 현대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기 전에 먼저 주택회사들의 구채무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 민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민당의 알브레히트 의원은 바텔 의원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비용은 당연히 임대료를 통해 조달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사민당은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알브레히트 부톨로는 주정부를 대변해서 주택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1억 5천만 마르크의 재원을 작센주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유도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연방지역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2차 임대료 인상조치가 통일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 Plenarprotokoll 1/53, S. 3673-3677

문서 번호 69

주택수당특별법과 주택수당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1992년 11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연방회의

내용_

이 특별법을 통해 주택수당(주거보조비)의 추가금이 1993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199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되게 되었다. 나아가 이 법에 주거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수입의 한도, 주거보조비 지급 동의서의 유효기간 연장 그리고 주거보조비 사전지급과 같은 내용이 첨부되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2, Nr. 36, S. 1380-1385

문서 번호 70

신연방주에서의 실업

1992년 12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경제부, 알렌스바흐 인구문제연구소

내용_

이 문서는 알렌스바흐 인구문제연구소가 연방경제부의 위탁을 받아서 신연방지역의 실업에 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의 실업은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실질적인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실업률보다 훨씬 높으며 신연방지역의 주민들은 실업으로 인해 삶의 안전장치를 상실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신연방지역의 주민들은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경제의 구조조정이 훨씬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대량실업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실업자들의 다수가 오랜 시간 동안 실업자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 이 연구는 641가구의 1,014명과 인터뷰 그리고 19,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주민들의 태도와 실업이 실업자 본인과 그 가족에게 어떤 심리적, 육체적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것이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대상 중에 2/3가 여성이었다.

출처_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Arbeitslosigkei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llensbach am Bodensee 1992.

문서 번호 71

세입자에 의한 주택 개량 및 현대화에 관한 튜링겐 주의회 총회 토론

1992년 12월 11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내무 장관 프란츠 슈스터,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베르너 그리제, 튜링겐 주의회 기민당 의원 한스페터 헤프너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주의회 사민당이 주정부에게 세입자에 의한 주택보수 지원 프로그램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열린 총회의 토론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 소유자를 위한 주택개량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세입자들이 주택을 개량할 때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사민당이 제출한 제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제안은 신연방지역에서 주택개량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보수·수리하기 시작한 세입자들의 이니셔티브와 직접 연관된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임대료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당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주거공간의 질을 서독지역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신연방지역에서 총 4,250억 DM이 필요하다.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주택 수준이 약 25년에서 30년 정도 격차가 난다. 200만 채의 주택에 난방 체계가 수리되어야만 하고, 130만 채의 주택은 목욕탕이나 샤워시설이 없다. 이런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이 주택을 개량하는 것도 지원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 사민당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기민당은 신연방지역의 경험을 보면 세입자에 의한 주택개량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보다는 먼저 주택의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주택을 매입하려는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Plenarprotokoll 1/69, S. 5001-5007

문서 번호 72

작센-안할트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3년 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기민당 및 자민당, 작센-안할트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의 기민당과 자민당이 지역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에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정부는 주민의 문화적 창조성, 자주성, 참여성을 개발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독 체제하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레저, 문화 프로그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중에는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극단적인 정치선전 또는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주 소박한 프로그램이라도 이런 청소년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분야에서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장래에 사회보장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한 목록은 작성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 보고에서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만 조사하였다.

주정부는 청소년 업무와 사회 업무를 위한 기본지침의 틀에서 민간기관이 제출한 약 2,400개의 사업신청서를 평가·지원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기본교육을 보장할 수 있다.

주정부는 1992년에 총 478만 마르크를 아동, 청소년의 여가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을 위해 지원하였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교육업무, 문화활동, 농촌지역에서의 활동, 사회문화 프로젝트, 환경교육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었다. 그 외에 특별지원으로 약 1,100만 마르크가 지출되었다. 그 외에 학교를 통한 문화지원처럼 통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영역에서 지출된 비용은 이보다 훨씬 높다. 특별지원을 통해 지출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박물관과 예술극장: 할레 탈리아극장 청소년 프로젝트를 위해 1992년 420만 마르크, 1993년 200만 마르크 지출
- 음악: 음악학교 지원을 위해 1992년 280만 마르크 지원, 연방재원으로 70만 마르크 추가 지원, 합주단과 합창단 프로젝트를 위해 114,000마르크 지원, 3개의 음악 김나지움을 위해 747만 마르크 지원
- 영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아동,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비영리적인 시설의 적자재정 보조를 위한 지원, 영화 프로젝트 345,000마르크 지원
- 언어, 작문, 독서 지원: 외국어교육을 위한 학교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공공도서관의 장서 개선을 위한 지원 1,940만 마르크.

주정부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충분하다고 평가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아동, 청소년이 실제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들이

수업과 방과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2262

문서 번호 73

독일을 위한 연대협약/ 연방수상과 연방주 총리 정당과 원내 대표들의 연석회의 1993년 3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주정부, 국민정당의 당수, 연방의회 원내 대표

내용_

연대협약은 통일된 독일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위해 연방과 연방주 간에 합의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독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동력의 강화를 이룩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가졌고, 신연방주는 주로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연대협약의 주요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연방-연방주 간에 새로운 재정배분: 558억 마르크 규모의 재정이전을 추가로 도입
- 신탁관리청이 환경오염과 산업핵심시설을 확보, 개선할 수 있도록 융자 틀을 확대
- 철도개혁
- 주택건설 강화
- 재건은행의 자본을 300억에서 600억 마르크로 증액
- 연방의 과제(사회적 규정, 사회, 경제 영역에서 연대정책을 악용하는 것을 척결, 세금보조의 감축 등)
- 연대세의 도입

출처_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Nr. 22/S. 185; Treuhandanstalt (Hrsg.). Dokumentation 1990-1994, Band 11, S. 594-644. Berlin: Treuhandanstalt 1994, 16.03.1993

문서 번호 74

건물·통계 및 주택통계 조사에 관한 법률(주택통계법)

1993년 3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통일독일의 주택공급은 동서 간의 격차가 아주 크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주택정책, 특히 주택산업과 관련해서 신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서 건물과 주택에 대한 통계를 실행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1995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주택 현황을 조사한 것과 1993년 9월 30일 기준으로 독일 전역에서 건물과 주택 1%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표본조사를 통해 주택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용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었다.

이에 반해 1987년에 행해진 건물과 주택에 관한 센서스와 통계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서독 전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괄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졌었다. 이러한 조사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95년에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서 행해진 건물과 주택에 관한 조사의 경우 신연방주의 통계청들과 협의한 연방통계청의 추산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연방주에게 8,000만 마르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였다. 지자체협의회의 추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약 8,600만 마르크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1993년에 독일연방 전역에서 행해진 1% 건물과 주택에 대한 표본조사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3,150만 마르크의 비용이 들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10, S. 337-341

문서 번호 75

작센-안할트주 주거공간 및 도시건설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3년 3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건설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의 주거공간 현황에 대한 주의회의 질문에 대해 주정부가 제출한 자세한 현황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공간의 현황과 관련하여 동독지배 체제 40년 동안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도심지역의 주거공간은 거의 폐허가 되거나 비어 있고, 변두리 지역의 아파트촌은 획일적이며 목욕탕과 주택 내부의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다. 주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주거 분야에서의 시장경제적 전환은 심각한 사회적 충격이 없이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99,011채의 주택 개량을 위해 1991년과 1992년에 3억 4,970만 DM의 지원금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지역의 주택 수준을 서독지역의 기준에 맞추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조약에는 주택 임대료의 상승은 소득변화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합의했을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동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때까지 완공되지 않았던 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정부도 그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Anhalt, Drucksache 1/2435

문서 번호 76

신연방주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전망에 관한 연방의회의 논의

1993년 3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1993년 3월 25일 연방의회에서 열린 '신연방주 농촌지역 여성의 전망'에 대한 질의에 연방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토론을 정리한 것이다. 이 토론에는 질의를 제출한 민사당의 페트라 블래스 의원과 기민당/기사당의 여성청소년정책 담당관 클라우디아 놀테, 연방정부의 가족청소년부 장관 앙겔라 메르켈 그리고 다른 원내정당의 의원들이 참석하였다.

블레스, 바르베, 쉥크 의원은 연방정부의 보고서가 허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점도 있고, 개별 지자체에 관해서는 데이터만 제출한 경우도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 보고서는 농촌지역 여성들이 재교육 프로그램에 별로 관심이 없으며 이동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직능자격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적 잠재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들 세 의원들은 이러한 평가가 잘못된 것이며 많은 농촌 여성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나아가 연방정부의 정책이 가족 중심의 농업생산자를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신연방주 농촌에 존재하는 대규모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신연방주에 대규모 농업협동조합이 많은 이유는 동독의 협동농장에서 일했던 농부들이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창립하여 협동농장을 인수하였기 때문이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Plenarprotokoll 12/149

문서 번호 77

작센-안할트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의회에서의 토론

1993년 4월 1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기민당 의원 우베 슐체, 작센-안할트주 문화 장관 베르너 소베츠코,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에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에 관해 토론한 회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민당 소속 우베 슐체 의원은 지금의 생활 환경이 아동을 위해 항상 최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아동이 필요로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어 준 이상적인 환경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작센-안할트주의 아동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충분히 잘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베르너 소베츠코 문화 장관은 구동독지역에서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가치변동을 고려할 때 아동을 위한 의미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것이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하였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폭력과 마약중독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비용의 사회보장비를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문화 프로그램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모든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들이 자기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학교들이 수업 외에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를 위해 학교들이 추가 인력과 재정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하였다.

민사당의 안체 티츠 의원은 주정부의 답변이 자화자찬 일색이라고 비난했다. 조금도 자기비판적인 것을 찾을 수 없고, 아주 거만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용관계의 문제로 인해 관청에 제출할 다양한 문서들과 씨름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졌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여가시설과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이 폐기되었다고 비난했다. 주정부는 통계숫자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보고하지 말고 잠재력과 전망을 이야기하라고 주문했다.

사민당의 로스마리 하예크 의원은 주정부의 청소년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질적인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주정부가 제대로된 자문역할을 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관리국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출처_ Landtag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46, S. 5297-5304

문서 번호 78

국영재산으로 분류되었던 대지와 토지를 주택공사로 양도하는 것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튜링겐 주정부의 답변

1993년 4월 6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내무부 차관 리페르트,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그리제

내용_

이 문서는 주의회의 베르너 그리제 의원이 기초자치단체들이 동독의 국유재산으로 분류되었던 대지와 토지의 소유권을 통일조약에 따라 주택공사로 이전하는 것에 관해 질문한 것이다. 그는 재산권의 이전이 이용권만을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 자체를 이전해 주는 것인지 물었다.

미하엘 리페르트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재산권 전체를 이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용권만 이전한다고 답했다. 이런 방식으로 통일조약의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다른 신연방주와 연방정부의 해석과 부합하는 것이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Drucksache 1/2137

문서 번호 79

연대협약을 통해 주택건설 프로그램의 재원을 충당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정부의 답변

1993년 4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무 장관 루돌프 루디 가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사민당 의원 에버하르트 호페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의 호페 의원이 연대협약을 통해 주정부가 지원받게 될 재원 중에서 얼마가 주택건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질문한 것에 대해 주정부의 루돌프 가일이 답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주정부가 주택건설을 위해 사용할 재원은 2천 7백 553만 마르크이다. 추가의 재원은 민간주택 건설과 3차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사회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특히 중요한 목표이다. 그를 위해 1991년과 1993년 사이에 약 20억 마르크의 재원을 동원해서 33만 채의 주택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Drucksache 1/3037

문서 번호 80

작센-안할트 지역의 주거에 관한 주의회의 토론

1993년 5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교통부 장관 대레,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의 주의회 민사당이 주거 현황에 관해 질문한 것에 대해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이 질문의 주요 골자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 주택개량, 주거보조비 규정 등에 관한 것이었다. 민사당은 작센-안할트 주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주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주택이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이 홈리스가 될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주거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영화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융자금을 얻은 사람들은 융자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서 매입할 수도 없다고 했다.

다른 정당의 대변인들도 민사당의 지적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기존의 주택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기존의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주택정책에 있다고 보았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Anhalt, Plenarprotokoll 1/47, S. 5477-5487

문서 번호 81

동독 주택건축의 사회규정 및 주택 관련 구채무 탕감 신청에 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토론

1993년 5월 27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민사당이 주택과 관련해 장부에 기록된 구채무를 탕감하고, 동독의 국가예산으로 건축한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주의회에서 토론한 보고서이다. 민사당이 이런 제안을 발의한 배경은 1993년 3월 13일에 체결된 연방정부와 연방주들 간의 연대협약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대협약에 따라 평당 150마르크가 넘는 구채무는 구채무청산기금으로 넘겨지게 된다. 삭감된 구채무는 주택회사들이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여당인 사민당은 연대협약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처럼 구채무 전액을 탕감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고 답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71, S. 5617-5624

문서 번호 82

신연방지역의 여성 현황에 대한 연방의회의 논의

1993년 6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1993년 6월 17일 연방의회에서 열린 '신연방주 여성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이 논의에는 민사당의 페트라 블레스 의원, 연방정부에 질의를 제출한 기민당의 여성청소년정책 대변인 클라우디아 놀테 그리고 연방정부 여성청소년부의 정무 차관 코넬리아 이제르 외에 다수의 의원이 참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놀테와 이제르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방어하는 입장이었으며 여성지원정책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조치를 설명하였다. 그들은 60%에서 73%가 될 정도로 높은 여성 실업률 문제를 경제질서의 전환과 직접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독에도 이미 잠재적인 실업률이 높았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자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의 의원들은 연방정부와 여성부의 정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구동독지역의 여성들이 현재 처한 상황으로 인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 즉 가사노동만 담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직업재교육과 여성할당제의 도입을 통한 양성평등정책이 관철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양성평등 조항은 추천에 그쳤기 때문에 동독 출신의 '최고급 여성인력'이 서독 출신의 '이등품 남성'에 의해 대체되었고 여성은 그들의 '출산능력' 때문에 체계적으로 차별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Plenarprotokoll 12/163

문서 번호 83

주택구입 보조금 프로그램

1993년 6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내용_

구채무보조법은 통일조약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통일조약의 체결 당사자들은 동독의 주택회사의 채무를 부분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구채무 중에서 주거공간 1스퀘어미터당 150마르크를 면제하는 것)에 합의하였었다. 구채무를 면제해 주는 조건은 주택 또는 주거공간의 15%를 세입자와 조합가입자에게 매도한다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S. 2407-2412

문서 번호 84

주택소유권에 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토론

1993년 9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하르트무트 마이어,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자민당의 제안으로 주택소유권에 관해 주의회에서 토론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민당은 주택회사, 기초자치단체 및 주정부가 주택의 민영화작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브란덴부르크주 내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주택을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기민당, 자민당, 사민당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민사당은 민영화보다 사회주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사당도 주택을 구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민영화를 강제 조항으로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동시에 브란덴부르크주의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구채무지원법이며, 그를 통해 주택기업들이 구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구채무 청산을 위한 지원금은 부분탕감, 이자지원 등이 포함되며,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경영 또는 민영화 계획을 제출해야만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채무탕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민영화를 강제규정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어떤 주택과 건물이 민영화하기에 적절한 건물인지 결정해야만 한다고 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현재 주택 상황을 고려하면 주정부가 가능하면 신속하게 세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택건설정책을 도입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영화과정에서도 세입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어야만 한다고 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76, S. 6077-6092

문서 번호 85

브란덴부르크주의 치안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주정부의 첫 번째 보고서

1993년 11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사법부, 내무부, 노동·복지·건강·여성부, 교육·청소년·체육부, 도시개발·주택·교통부, 학술·연구·문화부

내용_

이 보고서는 내부 안전과 평화를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는 주정부의 정치 분야의 조치들에 대해 묘사한다:

노동/복지/건강/여성부(MASGF): 사회보장시스템(Sozialer Leistungssysteme)의 보장, 청년실업 문제 해결, 외국인 및 이민정책의 배타성 철폐.

교육/청소년/체육부(MBJS): 법의식 및 사회발전을 위한 조치들. 추가적인 종일학교의 설립. 왜 전일제학교의 수가 증가했는가? 자기지원이니셔티브(Selbsthilfinitiative) 강화, 청소년 여가 기관의 강화, 학교체육과 작업공동체, 스포츠그룹, 청소년 폭력

도시개발/주택/교통부(MSWV): 인간이 생활할 만한 주거 공간

내무부(MI): 경찰의 범죄와의 전쟁(Polizei Kriminalitäsbekäpfung) 확대, 기술적 의사소통 가능성의 개선, 확실한 난민 및 이주정책을 위한 헌법 보호의 확대

사법부(MdJ), 도시개발/주택/교통부(MSWV): 교통안전의 증가.

출처_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Drucksache 1/ 2476

문서 번호 86

신연방주의 문화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3년 12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사민당,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사민당의 의원들이 신연방주의 문화, 예술과 관련하여 제출한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에서 사민당 의원들은 연방정부가 통일조약 35조에 따라 과도기 동안에 신연방주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중을 위한 문화영역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로 인해 특히 청소년 문화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 이후 청소년센터와 클럽은 1,766개에서 1,062개로 줄어들었고, 공공도서관은 2,397개에서 1,794개로, 극장은 424개에서 216개로 줄었다고 지적하였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사회문화 활동도 상황이 아주 열악하다고 하였다. 더욱이 1994년에 재원이 더욱 감축될 것이고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분야에서 근무하던 인력도 감축될 것이라고 하였다. 사민당은 이런 문제에 직면한 연방정부에게 신연방주의 문화, 예술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 및 연방정부가 말하는 문화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문화와 예술은 분단기에 독일이 하나의 민족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중요한 기제라고 밝혔다. 변혁기에 문화와 예술은 국민에게 정체성을 느끼게 해 주고 귀속감을 주는 것이다. 나아가 문화는 경제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생산단지 조성과 관광진흥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1991~1993년 사이에 문화 영역에서 과도기 재정지원의 틀에서 신연방주와 기초단체의 문화시설 유지를 위해 33억 마르크를 제공하였다. 신연방지역의 문화시설의 기본적인 조건은 현재 서독지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기 재정지원의 틀에서 시행된 문화인프라 프로그램은 특히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청소년지원을 위해 중요한 문화시설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시민들이 수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반면 기본적인 문화 틀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이 전통적인 문화시설을 위해 쓰여졌다. 이 두 프로그램의 재정 비율은 1:2이었다(7억 3,000만 마르크: 14억 6,900만 마르크). 나아가 1억 8,650만 마르크가 문화재 보호 프로그램을 위해 지원되었다.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문화정책은 각 연방주정부와 기초단체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해당 행정 단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바이마르 고전재단'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국가 전체를 위해 의미가 있는 중요한 시설은 예외로 한다.

1994년의 경우 신연방주와 기초단체들이 주관하는 문화시설을 위해 2억 5,000만 마르크가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의 재산을 통해 지원될 것이다.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방주간의 균형재정법의 새로운 규정을 통해 연방주의 재정을 강화하고, 연방정부에 의한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신연방주와 기초단체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예술극장과 오케스트라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야만 할 것이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385

문서 번호 87

주택수당특별법과 주택수당법에 관한 제2차 개정법률

1993년 12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연방회의

내용_

1992년에는 신연방지역에서 개인 소득 수준의 개선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졌다. 그리고 1993년 2월 1일까지 신연방주와 서독지역의 수입 격차를 좁히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로 인해 주택수당(주거보조비)에 대한 법률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신연방지역의 소득 수준이 개선될 여지가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1992년도에 지역경제가 붕괴되면서 이 지역의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임대법 3조에 따라 현대화 공사를 한 주택의 소유자가 공사에 따른 비용을 임대료에 반영시켜서 임대료를 11%까지 인상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에서 새로이 개정된 이 법은 신연방지역에서 주거보조비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거비로 인한 부담이 너무 과도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주택수당특별법은 나아가 가족에 적절한 주택과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수당법 21조에 따라 개별난방, 중앙난방 또는 도시가스난방 등 다양한 형태의 난방을 위한 추가보조금의 지급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Nr. 74, S. 2438-2439

문서 번호 88

구동독지역의 주택정책의 변화: 총괄상황진단보고서

1994년

담당자 / 기관_ 연방 건설부

내용_

- 주택 현황에 대한 서술, 주로 주택의 민영화, 개보수, 건설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 1989년 구동독에 있던 700만 호의 주거공간(주택) 가운데 50만 호 이상은 거주하기 곤란한 상태의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매우 낡았다. 대략 55%가 1948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다. 1989년 개인이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41%이다.

주택임대료의 수준은 1936년의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보수, 투자가 필요했다.

- 주택 관련 이전 부채의 상당한 부분이 연방으로 넘어갔다. 이것을 통해 상당한 투자 장애가 제거되었다. 즉, 보수를 통해 주택상태를 개선하여 투자를 촉진하였다.
- 보고서는 실제적인 비용,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소유권 문제 등이 존재했던 초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보고서의 중요한 점은 주택시장 경제 체제의 도입, 새로운 소유 형태, 임대료 개혁, 토지 등기부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_ Bundesministerium für Raumordnung, Bauwesen und Städtebau (Hrsg.), Bonn 1994; (auf Basis einer Studie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문서 번호 89

동독 슈타지를 위한 활동에 대한 근무법적 판단을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초안

1994년 1월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내무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내무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주정부의 내무부가 동독 비밀경찰로 활동한 사람의 채용문제에 관해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작성해서 주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먼저 주의회가 브란덴부르크주의 내적 평화와 안전을 위해 슈타지 활동에 대한 검증과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고, 주정부가 그에 답변하기 위해 작성한 초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조약에 따라 모든 공직자들은 민주적 행정기구에서 활동하기 위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결격사유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은 투명하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검토를 요한다.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1

문서 번호 90

주거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튜링겐 주정부의 답변

1994년 2월 3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내무부 차관 리페르트, 튜링겐 주의회 기민당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주의회가 주택건설정책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주정부 건설부에서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부는 답변에서 주택건설은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했다. 특히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후유증으로 인해 주택건설 분야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아주 많다. 주택의 상태는 서독지역과 비교해서 열악하며, 자가주택 소유의 비율도 33%로, 서독지역의 39%보다 훨씬 낮다. 주택 내에 화장실과 목욕탕 등 위생시설과 난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도 많다. 동독 당국이 도시 변두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도심에 있는 역사적인 구건물은 폐허화 되거나 비어 있다. 1990년 말 튜링겐주에 주택의 총 수는 110만 채이며, 현재 10만 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에 주택의 개량과 현대화를 위해 900억 마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나아가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 문제, 설계와 허가 절차 등을 설명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Drucksache 1/3065

문서 번호 91

브란덴부르크주 1994 유아-청소년보고서

1994년 2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교육·청소년·체육부

내용_

브란덴부르크주의 첫 번째 유아-청소년 보고서의 다음 부분은 지난 3년간(1990-1993)의 청소년지원시스템(Jugendhilfesystem)의 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그때까지 이루어진 청소년 지원 관련 재건상황(Aufbaustand)에 대해 기술되어 있고 차기 연도를 위한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도입부에 묘사되어 있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Drucksache 1/2788

문서 번호 92

주택건설정책에 관한 질의에 대한 튜링겐 주의회의 토론

1994년 3월 4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내무 장관 프란츠 슈스터, 튜링겐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 주의회에서 주정부의 주택건설정책에 관해 토론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민당 소속 슈스터 주정부 내무 장관이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에는 전체 주택의 20%만이 양호한 상태에 있었고, 구도심지역의 건물들은 대부분 개보수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으며, 이들 건물을 현대화하기 위해 적어도 900억 마르크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1990년에 구성된 주정부는 구도심의 폐허화를 막고 건물의 현대화와 보수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1994년 현재까지 443,000채를 부분적으로 현대화했고, 50,000채는 전체적인 현대화 공사를 완료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재건은행으로부터 27억 마르크를 지원받았다고 보고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구채무지원금을 제공받음으로써 기초자치단체들도 다시 자체적인 주택건설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15%를 민영화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올해 10,000채의 새로운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앞으로 매년 20,000채의 주택이 새로 건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대해 그리제 의원은 주정부가 1992년이 되어서 주택건설정책을 세웠다고 비난했다. 많은 경우 소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의 현대화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통일조약의 규정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의 수가 너무 적으며, 특히 사회주택이 많이 건설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많은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이 새로운 주택건설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동독 체제하에서 건설된 아파트 주택의 경우 현대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택의 현대화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뮐러 의원은 독일 전국에 3백만 명이 주택을 구하고 있으며, 그것은 연방정부가 비사회적인 분배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튜링겐주의 주택정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현재 100,000명이 주택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존의 투자완화 규정이나 택지법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주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 분열을 강화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한 주택의 15%를 민영화해야만 한다는 강제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디틀 의원은 그리제와 뮐러 의원의 주장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튜링겐주에 건축 붐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민간주택의 건설 붐이며, 그로 인해 아주 소수의 주민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의 변화도 비사회적인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Plenarprotokoll 1/108, S. 8491-8510

문서 번호 93

연방정부의 1993년도 사회보고서-발췌

1994년 3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내용_

연방정부가 1993년에 작성한 사회보고서에는 신연방주의 발전에 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다. 이 문서는 신연방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은 독일의 사회연합에 관해 설명한다.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독일 전역에 단일한 사회적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 신연방주의 경제 구조의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완화시키는 문제, 독일 전역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하는 문제, 사회통합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 및 사회적 안전망의 재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장에서는 노동과 직업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신연방주의 경제발전과 노동시장과의 상관관계, 노동시장의 움직임 및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고용창출 프로그램 및 단축노동에 관한 설명도 여기에 포함된다. 나아가 구동독지역에서의 생산적인 노동지원의 성과도 언급되었다.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의 비용 및 재원조달 문제도 다룬다.

4장에서는 동독의 연금 체계를 설명하고 그것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연금 체계로 이관하는 것을 설명한다. 여기에는 연금이전법과 그 결과, 특히 특별연금과 추가연금을 통해 지급되던 혜택을 이관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5장에서는 건강보건 문제와 신연방주에서의 건강보험법의 이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10장에서는 주택 및 도시정책 그리고 동서독지역의 주거정책 현황이 다루어진다.

11장의 주제는 국민 전체가 연대해서 독일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함께 나누는 문제이다.

사회법의 파트 B에서는 1993년의 사회예산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여기에는 경제와 인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와 사회예산의 규모와 혜택제공 양식, 주민 1인당 사회보장비, 사회보장기구의 설립 및 그를 위한 재정 문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국민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이 갖는 의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7130

문서 번호 94

신탁관리청에 의한 주택민영화 문제에 관한 작센-안할트주 주의회의 토론

1994년 3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작센-안할트주 교통부 장관 대레,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원 펠케, 폰다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에서 신탁관리청이 진행하는 주택민영화 작업에 관해 토론한 보고서이다. 토마스 펠케 의원은 동독 시절 화학기업이 보유했던 사택의 민영화에 관해 질문하면서, 신탁관리청이 지금까지 민영화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기업에 매각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사민당은 민영화작업이 사회적 성격을 유지한 채 진행되기를 원하며, 특히 사회주택의 건설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롤프 폰다 의원은 신탁관리청이 계획 없이 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탁관리청이 민영화를 위해 매각하려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자신들의 입장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칼 하인프 대에 의원은 이미 15%의 주택이 신탁관리청에 의해 민영화되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민영화된 주택을 매입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표시라고 응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Anhalt, Plenarprotokoll 1/60, S. 7146-7149

문서 번호 95

사회주택 건설에 관한 튜링겐 주의회의 토론

1994년 5월 4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주 내무 장관 프란츠 슈스터, 튜링겐 주의회 의원 헤프너, 그리제, 디틀, 묄러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 주의회에서 주택건설 지원 정책에 관해 토론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스 페터 헤프너 의원이 먼저 튜링겐지역의 주거조건을 서독지역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7,500억 마르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재원을 모두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동원하고 세입자들이 자발적으로 주택개량 작업을 진행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베르너 그리제 의원은 사민당이 요구한 것들이 몇 가지는 주택정책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주택건설과 관련해 소득 수준을 배려해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로 연방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주정부의 슈스터 내무 장관은 임대료 조정은 주택 개량을 위해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금은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세입자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택 주거기간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 수준에 따른 주택건축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일시적으로는 주택건축 지원 모델을 다른 모델과 함께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Plenarprotokoll 1/114, S. 8826-8832

문서 번호 96

연방정부의 5차 가족보고서-통일독일의 가족과 가족정책-인적자원의 장래

1994년 6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가족에 관한 5차 보고서이다. 총서에 수록된 부분은 총 376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특히 신연방주의 가족 현황에 관한 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가족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그 현황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독립적 전문가위원회의 의견과 연방정부의 소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문에서는 이 보고서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5차 가족보고서는 통일 이후 최초로 작성된 가족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통일된 독일의 가족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문에 쓰여 있다. 그를 위해 구동독과 서독지역의 주민구조와 가구구조 그리고 가족구조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 보고서는 나아가 동독과 서독의 가족법 변천사를 정리하였고, 동독의 가족법이 폐지되면서 신연방주의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와 관련된 법적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신연방주의 개별적인 세대 간의 삶의 조건을 분석하였다.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가 주로 조사한 것은 부모의 양육의무, 상속법, 혼외 자녀의 친권과 부부 간의 재산에 관한 문제이다.

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신연방주에 새로운 가족법이 도입되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가족의 기능이 확대된 것이다. 부모가 전적으로 자녀교육을 책임지며, 아동을 위한 국가의 행위는 부모의 교육의무를 지원해 주는 것에 한정되게 되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7560

문서 번호 97

주택수당특별법과 주택수당법에 관한 제2차 개정 법률

1994년 10월 7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작센-안할트주, 튜링겐주

내용_

이 법의 도입 목적은 1995년도 또한 과도기로 규정하여 주택수당 수령자들에게 개선된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택개량을 통해 인상된 임대료로 인해 이들이 지게 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을 통해 신연방주에서는 현재의 주택수당법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게 되었다. 나아가 1996년부터 독일 전역에서 주거보조금의 개정이 필요하였다. 이 개정을 통해 그때까지 변화된 임대료를 주거보조금에 반영하고 가족친화적인 주거를 보장한다는 주택수당의 원래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4, Nr. 69, S. 2644-2645

문서 번호 98

주택정책 전문가 위원회: 신연방주의 주택정책(연방정부의뢰평가보고서)

1994년 10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건설은행, 은행 관련 기관, 관련위원회 위원

내용_

- 특별평가서의 요약본으로 출판되었다.
- 주택경제의 빠른 발달에도 불구 신연방에는 막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주안점은 민영화에 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안되었다:

- 임대료 수준에 관한 더 많은 유연성(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특별주택임대료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신연방 주택의 시장가치, 임대료 수준의 조사 절차 개선
-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반환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에 대한 지원 실시
- 반환절차, 주택신축허가 절차의 신속처리
- 세법의 개정

출처_ Gutachten der Expertenkommission Wohnungspolitik vom 15. Oktober 1994. Keine Ortsangabe. Erstellt im Auftrag der Bundesregierung.

문서 번호 99

구동독지역의 주택정책(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평가보고서)

1994년 12월

담당자 / 기관_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울리히 파이퍼, 미하엘 아만

내용_

- 보고서는 구동독 주택문제에 관한 3년의 경험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필요(주거공간, 투자, 소유와 임대 사이의 긴장관계)

– 전략(새로운 건설, 유지, 임대료 상승을 위한 여지)

- 새로운 건설, 리모델링의 필요가 매우 커서, 재정지원과 공급조건의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장기적 전략, 높은 투자, 서독과 같은 부동산 재산 집중화 문제의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
- 즉시 취해야 할 조치 이외에 개보수, 소유자층 확대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것들은 미래 가능성을 갖고 있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원정책은 구동독에서의 재산소득이 낮게 머무는 동안, 한편으로 구서독의 소유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 이에 따라 주들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고 지원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 기본 투자들은 기본적으로 세재혜택을 통해 지원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임대료 상승과 관련하여 개인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출처_ Friedrich-Ebert-Stiftung (Hrsg), Bonn 1994.

문서 번호 100

동독 출신 인력의 검증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의 고등교육기관의 조치

1995월 2월 22일

담당자 / 기관_ 포츠담대학의 인사위원회

내용_

상기 조사의 목적은 개인의 정치적 의견(politische Einstellungen)이 아닌 개인이 슈타지를 위해 활동한 적이 있는지 혹은 학교의 다른 직원 혹은 학생에게 개인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데 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고등교육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단계의 절차를 시행하였다: 포츠담 교육대학에 설치되어 있던 마르크시즘-레닌주의의 분과를 폐지하였고, 교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나머지 인력에 대한 통합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출처_ Rektorat der Universität Potsdam (Hrsg.). Dokumentation zur personellen Erneuerung der Universität Potsdam. Potsdam 1995

문서 번호 101

신연방주의 임대료 이양법

1995년 6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내용_

연방정부와 연방주들 간의 오랜 심의를 거쳐서 임대료 이양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였다.

1. 적용범위: 이양법은 그때까지 기본 임대료 규정이 적용되던 동독 시절에 건축된 주택에 적용된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새로이 건설되었거나 완전개량을 통해 다시 주거가 가능해진 주택에 대해서는 전 연방지역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임대료 조정법을 적용한다(임대료 조정법은 민법 558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임대료의 인상률은 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시설과 크기 그리고 유사한 주변환경에 있는 주택임대료가 최근 4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전체적으로 총 460만 호의 주택에 대해 임대료 이양법이 적용되었다.

2. 1995년 8월 1일 자 임대료 인상: 임대료는 1997년 말까지 기존의 수준보다 약 20%까지 인상될 수 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5, Nr. 28, S. 748-751

문서 번호 102

세입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구채무지원법

1995년 6월 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원내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내용_

이 법을 통해 1995년 7월 1일 자로 종료되는 주택회사의 구채무에 대한 이자보조금과 그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투자기회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주택수당특별법을 통해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5, Nr. 28, S. 748-751

문서 번호 103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결의안에 따른 증명확인-1993년 5월 6-7일 '그라이프스발트 결의안', 제2항

1996년 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교육부, 막데부르크, 할레 및 데사우 지역행정청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에서 1993년 5월 7일에 체결된 그라이프스발트 결의안 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 증명확인 절차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교사자격의 증명확인 절차는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교사 교환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평가를 담당한 사람의 소견서 작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문서에는 '교육인력의 자격 증명확인에 관한 평가인의 소견서'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었다.

출처_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번호 104

경직성과 적응 유연성 사이-체제 붕괴와 이익조정 상황에서 1991-1994 작센-안할트와 작센의 주택정책 지원 프로그램 실행

1997년

담당자 / 기관_ 작가 딕 마이젤,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 지자체

내용_

- 주거문제는 해결을 필요로 하는 가장 긴급한 과제에 속한다. 할레와 같은 몇몇의 도시들은 건축자재가 너무 낡아 긴급한 국가지원 프로그램을 필요로 했다. 이 문건에서는 서두에 이어 '결과에 대한 고찰 그리고 설명 가능성'이라는 책의 장에서 2개의 균형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할레와 드레스덴의 주택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다룬다. 체제, 실행상의 문제들 그리고 행위자들(Akteure)에 대해 기술되어 있고 행위자와 결정자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졌다.

출처_ Dirk Meisel: Zwischen Restriktion und Anpassungsflexibilität. Die kommunale Implementation wohnungspolitischer Förderprogramme 1991-1994 in Sachsen-Anhalt und Sachsen im Kontext von Umbruch und Interessenvermittlung. Opladen: Leske + Budrich, 1997, Seiten 11-13 und 273-301.

문서 번호 105

통일 후 5년 시점의 구동독지역 청소년

1997년

담당자 / 기관_ 케어스틴 자이링, 연방정치교육원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치교육원이 발간하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으로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청소년이 통일된 독일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의 초점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얼마만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근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청소년들의 삶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조건, 예를 들어 직업교육과 실제 직장생활 간의 연결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질문이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도표를 통해 정리되었다:

- 1990년도와 1993년도 사이에 직업희망 및 노동시장에서 성공할 기회에 대한 주관적 추측에 있어 동·서 지역 간의 대비
- 구동독의 경우 1990년도에서 1994년도까지, 서독지역의 경우 1989년도에서 1993년도까지 각각 동서지역 청소년들의 취업 추이
- 1989-1990년도에서 1993-1994년도까지 청소년들 중 실업자 수와 실업 기간

출처_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0, S. 52-55.

문서 번호 106

첫 직장을 갖기 직전에: 동-서지역 직업교육생 청소년의 경험 사례 및 관점들

1997년

담당자 / 기관_ 다그마 베어, 베른하르트 드레스바흐, 모나 그라나토, 클라우스 쉬바이케르트, 연방직업교육원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직업교육원이 청소년의 직업교육 현황에 대한 수년간의 패널분석을 통해 작성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의 목표는 직업교육 문제 및 관련 경험에 대한 분석이다. 그 외 청소년의 정서와 규범적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가 시작된 1992-1993년에는 구동독지역 내 2,007명의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비교를 위한 통제집단으로 서독지역의 777명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조사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과거 직업선택에 대한 의견,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및 기대, 사업체 내 학교 및 직업학교 수업의 평가, 직업적 견해와 전망, 양친의 집과 가족의 의미.

출처_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5/97

문서 번호 107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 학교의 개혁-브란덴부르크 및 기타 지역의 경험

1998년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교육·청소년·스포츠부 전 장관(1990-1992) 마리안느 비어틀러

내용_

이 문서는 교육 및 문화 관련 주 장관 회의 사무국이 이 기구의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발행한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책자에 수록된 마리안느 비어틀러 전 브란덴부르크 교육부장관(1990-1992)의 경험에 관한 보고이다. 이 글에서 마리안느 비어틀러는 구동독지역과 브란덴부르크지역에서 이루어진 학교개혁 과정을 광범위하고 생생하게 설명하였다.

1. 출발조건

- 1990년 말 구동독지역에서 신설될 예정이었던 각 정부부처들은 통일조약에 따라 교육제도의 개정안을 1991년 중반까지 도입해야 할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교사들 사이의 불안감, 아비투어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 급증, 직업교육의 구조 개정 또는 과거와의 대면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1989년과 1990년에 동독에서 시작된 개혁의 바람이 불어 동독체제뿐만 아니라 서독의 체제와도 다른 새로운 사회로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사회의 변혁은 궁극적으로 통일로 귀결되었고, 통일조약이 체결된 후에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인해 교육 분야의 개혁을 위한 행동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구동독 사회의 민주화 및 연방국가로의 발전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다.

2. 두 번째 변화

학교제도의 개혁과 관련해 구서독의 기준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평 없이 수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개혁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여론의 화두는 내적인 학교개혁에서 학교구조의 개혁으로 급격하게 바뀌었다. 학교구조를 결정하는 데 시간을 더 들이자는 제안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은 불만과 불안감을 표출했다. 그 결과 동독에 있었던 통일된 종합학교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초등학교, 김나지움, 실업학교 그리고 게잠트슐레로 분화, 전환되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동독 체제하에 존재하던 학교의 교육적, 교훈적 전통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의 자유와 자유공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동독 체제에서 학교들은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의 요새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시작된 후 동독의 독재 체제와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교육정책의 문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과거 당 간부, 슈타지 정보원 및 비밀경찰과 연루되었던 교사들을 해고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3. 행정조직의 구성

통일 초기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내에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시기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재건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었다. 2년 후에는 구동독과 구서독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 구서독지역에서 온 동료들은 대부분 높은 의욕을 갖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해줄 수 있는 것에 기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책임감과 모험심도 갖고 있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전문지식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구동독지역의 공무원들이 일종의 도제와 같은 입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게다가 동서지역의 상이한 급여 체계와 많은 수의 구서독지역 교사들이 관리자급의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다.

4.브란덴부르크의 길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학교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 학생 및 학부모 3주체의 의견이 동등하게 학교회의에도 반영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교육제도의 기본설계는 구동독과 구서독지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진이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변화를 일종의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동독 체제에서 교사가 담당했던 정치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통일 후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학교에서 연수와 워크숍 등을 통해 그런 역사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권장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런 장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예산문제로 인해 인력을 20% 감축해야만 하게 되었을 때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노동조합과의 협의하에 노동시간과 임금을 80% 삭감하는 대신 교사를 해고하지 않고 모든 교육 인력을 수용할 수 있었다. 브란덴부르크의 특별한 길로 불리는 이런 정책은 아주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교사의 해고가 인사위원회에서 합헌적 절차에 따라 개별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추진된 학교 구조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6년제 초등학교제도는 도입하고 하웁트슐레는 도입하지 않기로 내린 결정이 바로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학교개혁법을 통해 처음으로 의무교육이 장애아동에게도 확대되었으며 이들을 일반학교로 편입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의무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 및 청소년의 10% 정도만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이 주에서는 삶-윤리-종교 과목(Lebensgestaltung, Ethik und Religionskunde, LER)이 새롭게 실험모델로 도입되었다.

5. 구서독지역과 상이한 구동독지역의 상황

구동독지역에서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KMK)에서 지정한 틀에서 구서독지역의 경우와 상이한 학교개혁이 실천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신연방주들은 이원적 학급제도를 도입하고 계속해서 동독 학교 및 12년제 대학입학자격시험 원칙을 고수하였다. 행정상의 도움은 각 자매주 차원에서 제공되었지만 자매주 측에서 구서독지역에서 구동독지역으로 '강요'하는 식의 '통제'는 없었다. 오히려 구동독의 교육개혁과 관련된 결정이 구서독의 논쟁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6.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는 형식적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통일과정으로 인해 상당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오히려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의 역사적 과제를 구동독과 구서독 간의 토론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통합기관에서 담당했으면 더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_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rsg.). 1998. Einheit in der Vielfalt: 50 Jahre Kultusministerkonferenz 1948–1998. Neuwied/Kriftel/Berlin.

문서 번호 108

'체제변환-구동독지역 내 주간 탁아시설(Kindertagesstätte, Kita) 체험'/엘케 헬러(Elke Heller)

날짜 미상-1998년경 추정

담당자 / 기관_ 그로스-글리니케 유치원장 겸 포츠담군 유치원 전문위원회장 엘케 헬러 박사

내용_

이 문서는 엘케 헬러 박사가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이다. 이 글은 통일 이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자신의 관점 및 신연방주의 보육시설 업무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교육자

1990년 10월 1일에 이미 신연방주에서 발효된 아동·청소년복지법과 더불어 법적 토대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전에 유효하였던 교육 프로그램, 기본지침, 명령과 같은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수의 교육자는 본인의 직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여, 이른바 자격취득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많은 교육자가 주간 탁아시설 업무의 법적 토대를 다룬 교육자 양성교육 일부가 중요한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모든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앞으로의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 교육개념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

경제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토대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에서 주간 탁아시설의 보육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제는 신연방주의 교육자들에게 있어 예기치 못한 상당한 부담이었다. 동독에서 아동 보육 및 교육은 사회주의적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민 양성을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모든 것을 당이 사전에 계획하고 규정하였던 반면, 민주적으로 구성된 통일된 독일의 사회 체제 내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동의 자기결정력, 자기책임, 자주성, 개성을 존중하고 또한 이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일부 교육자는 새로운 방식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개념을 익히고 실행해야 하는 요구에 부응하였다.

또 다른 일부 교육자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명확하고 체계화된 목표 방향과 확신, 안정감을 주었던 전문적인 업무기반이 붕괴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계획 없는 교육 업무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으며, 몇몇 교육자들에게는 지금까지도 그러하다. 그들은 홀로 방치되어 과중한 요구에 직면하여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교육자는 연수를 통한 집중 및 성찰의 과정에 있어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젝트 모델을 통하여 지원받고 있다.

헬러 박사는 오늘날 주간 탁아시설 여건이 더욱 다채롭고 다양해졌다는 점을 환영한다. 부모는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염두에 두고 있는 시설 수준에 적합한 주간 탁아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헬러 박사는 나아가 구동독지역에서도 구서독지역과 마찬가지로 교육자로 하여금 업무에 필요한 공인 및 가치평가를 받도록 그들에게 동기 부여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구동독지역 전문가들이 나서서 역량과 기량을 결집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출처_ Heller, Elke. Vortrag an der Internationalen Akademie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문서 번호 109

1997년 고용전략 연간보고서

1998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노동·사회·건강·가족부, 브란덴부르크주 기술과학부

내용_

1996년 시작된 일자리 전략이 1997년에도 3개 분야에서 계속 진행되었다:

- 부서감독

콘셉트와 프로그램의 입안(예를 들어 여행업, 환경정책), 제안들의 설명, 주택단지 계획이나 건설허가 등을 결정 단계에서 신속하게 처리, 여성이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에 이르기까지 주정부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을 통해 우선적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조건들이 창출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 사례가 될 만한 프로젝트들을 갖고 있는 중점 분야들

우선 14개의 중점 분야가 선정되었다. 그것들은 개별적 모델 프로젝트들의 실행, 고용효과의 최적화를 기대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한 행동 분야들은 '성장동력으로서 지식과 기술이전', '미디어 경제 분야 및 원격 통신 업무(Telearbeit)', '불법고용근절'이다.

- 일자리 전략의 지역화

일자리 전략의 실행을 위해 지역들은 각종 조치/프로젝트의 결정과정에서 고용의 확대와 연계하여야 한다. 지역적 특성, 지역적 필요성, 지역적 잠재력에 대한 지식이 프로젝트를 명확히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혹은 주정부와의 대화에서 접착력 상실을 피하기 위해 판단 및 결정과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2. Wahlperiode, Drucksache 2/5322

문서 번호 110

1998 유아-청소년 보고서: 1권, 1장(Band 1, Teil I)

1998년 9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교육·청소년·체육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주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유아청소년정책을 다루며, 다양한 관할 부서를 포괄하는 행위영역(Handlungsfelder)과 프로그램, 조치들에서 주정부의 청소년정책의 중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브란덴부르크주의 농촌지역 젊은이들의 생활환경과 전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 폭력과 외국인 혐오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소녀와 젊은 여성들의 차별 해소 및 기회균등 지원 조치, 농촌개발의 지원, 가족정책, 학교정책, 문화정책, 교통정책, 스포츠지원, 건강정책.

출처_ Landtag Brandenburg, 2. Wahlperiode, Drucksache 2/5664

문서 번호 111

DGB: 조합원 현황 및 조직도

1950–1999년

담당자 / 기관_ 독일노동조합

내용_

이 표를 통해 1950년에서 1999년까지 DGB의 조직과 노조원 수의 변동을 볼 수 있다.
1950년 이후 1990년까지 서독 노조의 회원수는 55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1998년까지 65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구동독지역의 경우 1991년에 400만 명이었던 노조원의 수가 1998년에 18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독일 전체로 보면 1991년에 1,180만 명이었던 노조원이 1999년에 80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출처_ Müller-Jentsch / Ittermann, Industrielle Beziehungen, S. 91.

문서 번호 112

브란덴부르크주 복지정책 개관

1999년 3월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노동·사회·건강·여성부, 브란덴부르크주 사회복지청 내 건강청

내용_

이 보고서는 사회보고의 범위에서 브란덴부르크주의 사회적 상태에 대한 핵심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시민사회적 발달에 대한 내용과 함께 복지정책적 콘셉트를 제시하는데 이는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잠재성과 사회적 경제성의 잠재성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어려운 생활상황에 있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_ Ministerium für Arbeit, Soziales, Gesundheit und Frauen des Landes Brandenburg, Abt. Öffentlichkeitsarbeit (Hrsg.) Potsdam, 1999

문서 번호 113

동독의 국내총생산(GDP), 소비 및 직업활동

1970–2000년

담당자 / 기관_ 게어하르트 헤스케

내용_

도표: GDP 사용, 백만 유로 단위, 95
도표: GDP 사용, 1970 = 100
도표: GDP 사용, 1989 = 100
도표: GDP 사용, 국내 사용에 대한 % 비율

출처_ Heske, Gerhard. 2005. Bruttoinlandsprodukt, Verbrauch und Erwerbstätigkeit in Ostdeutschland 1970–2000. Köln: Zentrum für Historische Sozialforschung. S. 259

문서 번호 114

누가 독일에서 '부자'에 속하는가? 200% 선 이상 소득자의 사회경제적 특징

2000년 7월

담당자 / 기관_ 설문 방법론 및 분석 센터, 평균 소득 200% 초과 소득자

내용_

- 구서독지역 주민을 보면 저소득 가계(50% 이하)와 그리고 상위 소득 범위(200% 이상)에 속하는 비율은 약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이래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 구동독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소득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소득이 낮은 수준에 있으며 소득분배의 양쪽 끝 주변그룹에 속하는 비율도 구서독지역에 있어서 보다 낮다.
- 신연방주의 최근 전개를 보면 이전의 양극화 경향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처_ Zentrum für Umfragen, Methoden und
Analysen (ZUMA) e.V.
Abteilung Soziale Indikatoren (Hrsg.). Informationsdienst Soziale Indikatoren (ISI), Ausgabe 24. Mannheim, 2000. S. 11-15.

문서 번호 115

브랜드를 통한 통일? 전체 독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2001년

담당자 / 기관_ 라이프치히 시장연구소

내용_

이 연구의 대상은 일상생활의 브랜드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의 관념, 생각 그리고 소비행태였다. 주요 목적은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의 소비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구동독지역의 제품이 전체 독일 제품의 스펙트럼에 위치하는지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결과

- 일상생활의 브랜드 제품은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이 거의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그 '후광'은 구동독지역이 조금 더 강하다. 전통과 질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다.
- 일상생활의 브랜드 제품의 동의어는 무엇보다도 가족 및 가사 관련 제품들로서 '고전적 독일(klassische deutsche)'의 이름을 가장 많이 가진다. 전 국가적으로 볼 때는: 페르질(Persil), 니베아(Nivea), 구동독지역에서는 스페(Spee), 플로레나(Florena)가 잘 알려진 상표이다.
- 브랜드 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 유형에 있어서는 동일하나-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이하다.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구서독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상표회의론자와 무관심한 소비자, 구동독지역에서는 가격에 따르는 소비자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 구서독지역인들 중 하나는 동독의 브랜드 제품을 안다고 생각한다. 구동독지역으로부터의 국가적 '텔레비전 브랜드', 예를 들면 '로트켑헨(Rotkäppchen)', '라데베르거(Radeberger)', '스페(Spee)' 혹은 '노르트호이저 돕펠케른(Nordhäuser Doppelkern)'은 최소한 더 많이 알려졌다. 이 브랜드는 구서독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더 이상 절대적 동독 브랜드라고 여기지 않거나 혹은 구동독지역의 상표로 여기지 않는다.
- 구동독지역에서는 강력한 구동독지역 브랜드의 존재가 정선된 제품 그룹에 있어 일반적인 시장의 향방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구동독지역에서는, 구서독지역에서보다도 독일 와인, 세제, 겨자 그리고 식기세척 제품의 제품 그룹에서 사용되고 있는 브랜드를 현저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출처_ Institut für Marktforschung GmbH (Hrsg), Leipzig 2001

문서 번호 116

신용재건기금의 주택현대화 프로그램

2001년 3월

담당자 / 기관_ 재건은행, 신연방주

내용_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동독지역의(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포함한) 주거공간의 개량과 현대화를 위한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저금리 융자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융자는 개인, 주택회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융자기간은 30년까지이며 융자 초기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도록 하였다.

출처_ KfW-Wohnraum-Modernisierungsprogramm II, 03.2001

문서 번호 117

연방정부 프로그램 '구동독-도시정비'

2001년 8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빈집의 수를 줄이고, 주택사업의 환경을 개선하며,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개별적인 조치를 보면

1) 과잉공급된 분량의 제거(철거)
2) 철거 대상 지역의 가치개선
3) 시내 고건축물에 주택투자 집중

이러한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 신연방주를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약 20억 마르크(2002-2009년)
2) 연방정부는 도시개선콘셉트 공모를 통해 2002년 말까지 3,100만 마르크를 약 100개의 기초단체에 지원하였다.
3) 연방정부와 연방주들이 재건은행을 통해 저렴한 금리로 융자해 주었다.
4) 도시 중심부 고건축을 위한 투자지원금의 증액
5) 도시 중심부 고건축 지역의 주택 개선을 위한 투자 지원

출처_ Bundesregierung (Hrsg): Initiative der Bundesregierung zur Verbesserung der Stadt- und Wohnungsmarktentwicklung in den neuen Ländern. Programm „Stadtumbau Ost". Beschlussvorlage für das Bundeskabinett, August 2001.

문서 번호 118

생활/윤리/종교 과목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2001년 12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헌법재판소, 브란덴부르크주, 개신교 교회, 가톨릭 교회, 연방의회 의원 279명

내용_

연방헌법재판소는 브란덴부르크의 종교수업을 정규 시간표에 통합시키고 그와 함께 의무과목(Pflichtfach)으로서 생활/윤리/종교(LER) 수업 이외의 것으로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최소한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면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종교수업은 진행될 수 있다.

출처_ Evangelischer Pressedienst, epd-Dokumentation Nr. 52 (17. Dezember 2001)

문서 번호 119

10년간의 논쟁에 대한 연대기

2001년 12월 10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개신교 교회, 개신교 공보, 가톨릭 교회

내용_

다음은 정치, 교회, 학교의 긴장관계에서 브란덴부르크식 모델에 관한 내용이다. 생활/윤리/종교과목(LER)에 관한 논쟁에서 교회와 브란덴부르크주는 서로 대치 상황에 있다. 이는 논쟁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의 패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시험을 거친 이 브란덴부르크 모델의 적용 시도는 브란덴부르크주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종교 및 세계관공동체의 과목으로 나타났다. 브란덴부르크의 이러한 교과목(LER)은 결국 학교개혁을 위한 지속적 자극을 주었으며 무엇보다도 독일과 유럽 문화 사이의 대화를 열었다.

출처_ Evangelischer Pressedienst, epd-Dokumentation Nr. 52 (17. Dezember 2001)

문서 번호 120

1995-2001 경제발전결산/작센-안할트

2002년 3월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수상실 보고서

내용_

- 여기서는 작센-안할트의 발전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 중요한 분야를 통해 서술된다. 경제성장, 인구 1인당 소득, 노동생산성, 취업, 실업률 등이 그것이다.
- 이 보고서는 연방주 작센-안할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일반적인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 "과거 수년간 구동독에서의 경제성장은 후퇴했다. 1997년 이래로 1인당 경제생산력은 계속 지체되어 구서독인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간가계, 기업 혹은 국가에서 지출되는 예산의 30%는 구서독으로부터 들어온 재정이전을 통해 충당되어야 한다. 실업률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p.1).
- 성공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발전은 무엇보다 얼마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제조업 분야의 혁신력이 강화되는가에 달려 있다.

출처_ Staatskanzlei Sachsen-Anhalt. Magdeburg, 2002.

문서 번호 121

'인구 통계적 발전':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가 각 개인과 정치에 주는 과제- 앙케이트위원회의 최종보고서

2002년 3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앙케이트위원회

내용_

위원회에 대하여: 1992년 10월 16일 앙케이트위원회(연방의회 조사위원회: 역주)가 정치와 경제 간의 집중적인 대화에서 다룬 국민 발전의 분석과 2030년까지의 그에 대한 예상을 보고서로 정리하는 임무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일자리 제공 분야의 권고 방안:

- 고용의 증가와 실직의 축소
- 청소년 고용 기회의 개선
- 고령층의 고용 기회의 증진
- 교육, 직업교육의 개선; 평생 교육
- 여성의 생업활동에서의 평등
- 직업, 어린이 보호 그리고 부양
- 이민자의 교육과 고용 체계에 있어 통합의 개선

이민과 통합 분야의 권고 방안:

- 사회의 장래성 보전을 위한 이민 조정의 필요성.
- 국내인의 교육과 재교육이 그 밖의 이민보다 우선한다.
- 비판적인 의사표시는 바로 예민한 사회구조를 가진 분야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며 성급히 인종차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 공동생활에 대한 준비로서 관용은 어려서부터 알도록 하고 사회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 이민자 자치단체의 조성과 조직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담당 부서 제도의 확장이 바람직하다.
- 독일로의 이주와 독일 체류는 자유 법치 질서의 헌법의 원칙을 존중하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와 규범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
- 사회적, 구조적 통합: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평화로운 공동생활에 기여한다.
- 고용시장: 적법한 체류 외국인 중 생업 종사가 가능한 연령층은 모두 노동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육: 통합을 이루기 위한 열쇠는 교육과 직업교육 전 체제에 있다.
- 문화의 동질성, 사회적, 정치적 참여: 이민자 단체는 통합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모국어로 된 교육과 이슬람에 대한 지도 등은 독일에서 양성된 교사들이 제공해야 한다.
- 건강과 보호: 이민자의 특별한 요구가 고려되는 특수 민족적-의학 센터의 확장과 그

전국적인 확산은 바람직하다.

- 사회업무: 현재 청소년과 고령자를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 자문과 외국인 사회업무가 조직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적 요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유럽 차원의 조화: 탈주민정책과 이민정책은 유럽의 차원에서 조화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 제도적 실현: 외국인문제 담당부서는 통합문제의 특임자로서의 기능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적 그리고 직장상의 노후보장: 자산 마련과 같은 방법을 통한 보다 더 확실한 개인적 및 직장별 노후 보장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을 가지고 있는 체제에 있어서는 국가연금 수준뿐만 아니라 전체의 수준도 중요하다. 노후 보장은 미래에 두 가지, 즉 기여금으로 충당되는 직장 퇴직연금과 자산의 보장 형식으로 구성될 것이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14. Wahlperiode, Drucksache 14/8800

문서 번호 122

신연방주에서의 양성조약, 양성조화

2003년 1일

담당자 / 기관_ 포츠담대학 여성학자 이레네 될링 교수

내용_

이 문서는 포츠담대학의 여성학자인 될링 교수가 독일통일 10년을 기념하여 구동독지역 여성의 현황, 특히 양성 간의 조화와 관계가 사회주의 동독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될링 교수는 이 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현상이 체제 전환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지역의 여성들이 동독시기에 만들어진 가정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모델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았다. 구동독지역 여성들의 자화상과 그들의 삶의 궤적을 보면 통일 이후에도 동독 시절에 만들어진 부부의 경제활동 모델에 근거한 '양성 간의 계약'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될링 교수는 그 이유를 구동독지역에서는 체제 전환이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출처_ Kulturnation 1/2003 – Online Journal für Kultur, Wissenschaft und Politik (http://www.kulturation.de/ki_1_text.php?id=13 (29.07.2013))

문서 번호 123

초등학교 단계부터 니더라우지츠(Niederlausitz) 지역에서 소르벤어와 벤드(족)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 조직적 체계 및 학교에서의 전달방식에 관한 콘셉트

2003년

담당자 / 기관_ 마들레나 노르베르크, 소르벤어 센터, 소르벤족 재단

내용_

소르벤어/벤드(족)어는 집에서의 교육을 통해 더 이상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한다. 언어 보존을 위한 하나의 가능성은 기관을 통한 언어습득이다. 이때 학교에서의 언어 중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소르벤어, 벤드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수업은 남부 소르벤어(Niedersorbisch)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언어전달을 위한 방법이 있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숙고된 학교 체계적으로 이행 가능한 언어습득 개념(Spracherwerbskonzept)이 필요하다.

출처_ Madlena Norberg: Konzeption zur pädagogisch-organisatorischen Struktur und zu schulischen Vermittlungsformen der Arbeitssprache Sorbisch/Wendisch in der Niederlausitz ab der Primarstufe. Bautzen 2003 (Download: https://www.witaj-sprachzentrum.de/wp-content/uploads/sites/3/2016/05/Koncepcija_Norbergowa.pdf (Stand: 9.4.2018))

문서 번호 124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주의회에 제출한 1994-1999년의 유럽연합지원회기 기간에 실시한 주의 프로그램 '브란덴부르크의 전문성 신장 및 노동(Qualifizierung und Arbeit für Brandenburg)'에 대한 보고서

2003년 1월 8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노동·사회·건강·가족부

내용_

제시된 보고서는 해당 보고 기간의 브란덴부르크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장에서는 이와 연관하여 요구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진 지원의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 내용은 1996년 이후 이뤄지고 있는 주의 프로그램 '브란덴부르크의 전문성 신장 및 노동(Qualifizierung und Arbeit für Brandenburg)'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주 프로그램은 실업자의 직업전문성 신장, 직업의 수용 등에 대한 내용과 그 외의 지원에 대한 것을 주된 중점내용으로 한다. 이것을 넘어서 유럽연합의 다양한 공동체 주도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추구하였던 내용의 주된 결과에 대해 보고한다. 1994-1995년의 지원 결과는 당해 연도의 LAPRO-Struktur(전문성 신장, 창업, 대상집단 지원, 보조재정 지원)에서 서술되지 않고 1996년 이후의 LAPRO 실행내용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3. Wahlperiode, Drucksache 3/5293

문서 번호 125

제2차 발전 보고서: 구동독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경제연구소 보고

2003년 11월

담당자 / 기관_ 독일 경제연구소, 키일대학교 부속 세계경제연구소,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 경제문제연구소, 유럽 경제연구센터

내용_

2.2. 동서독 간의 1인당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비교 연구

본 보고서에서는 동독의 인구발전 상황에 관한 분석이 실려 있다. 공공 예산 분야에 있어서의 전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구발전 상황에 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인구발전 상황이 단순히 지역적 경제성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단순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지자체 간의 재정 균형을 조율하기 위한 재정 수요에 있어서나, 각 주정부 재정 조정 제도에 근거를 둔 재정 지원금 수입 및 연방에 의한 재정의 수직적 재분배 문제 등은 모두 거주 주민 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출 측면에 있어서도 인구발전 상황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독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민의 수가 약 130만 명 정도 더 늘어나게 되어 총 6,300만 명의 인구를 확보하게 되었다. 반면 동독지역에서는 1,420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주민 수가 1,370만 명 수준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동독의 총수입 및 지출 증가율은 부분적으로 주민 일인당 수입지출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매년 58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주민 1인당 약 415유로의 금액이 특별수요를 위한 보충양여금의 명목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동독 전역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2002년도부터는 동독 구축을 위한 투자지원법에 의거하여 약 23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 지원금이 해당 목적을 위한 지출 자금으로 편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중한 지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서독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재정 적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재정 적자는 명백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동서독 간의 격차 또한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이미 1998년도만 해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이 서독지역의 경우 4,043 유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동독 지역에서는 주민 1인당 채무액이 4,525 유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독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도 1999년 서독 기준 주민 1인당 채무액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출처_ Forschungs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문서 번호 126

2004년 독일의 가족과 생활형식

2004년 3월

담당자 / 기관_ 독일 통계청

내용_

1. 도표. 2004년 3월 가족당 평균 아동 수: 모든 신연방주는 1.55명, 베를린과 자를란트 1.55명에서 1.62명 이하 그리고 모든 다른 구연방주는 1.62명과 그 이상.
2. 도표. 2004년 3월 아이가 있는 부부에 있어서의 1자녀 부부 비율: 작센이 도표에서 58% 이상으로 이끌어 가고 있고, 그 뒤를 모든 구연방주와 자를란트(44%에서 47% 이하까지)가 따른다. 이 단계의 반대편에는 구연방주의 반이 있다: 44% 이하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바덴-뷔르템베르크 그리고 바이에른.
3. 2004년 3월 비결혼 생활공동체의 무자녀 비율: 뚜렷이 둘로 나누어진다. 신연방주와 베를린이 무자녀 비결혼 생활공동체의 비율이 가장 적고, 구연방주에는 집중적으로 68% 혹은 이상이 된다.
4. 2004년 3월 한부모 비율: 독일의 한부모의 대부분이 베를린에 살고, 다음으로 브레멘과 함부르크에 그리고 전체 신연방주가 그 뒤를 따른다. 구연방지역은 이에 상반되는 수치를 보여 준다.
5. 2004년 3월 1인 가구 비율: 독일 대부분의 1인 가구는 도시주인 베를린, 브레멘 그리고 함부르크에 있다. 그다음은 북부 독일에 비율이 균일하게 분배되어 있다. 남부 구연방주인 헤센, 라인란트-팔츠. 바덴-뷔르템베르크 그리고 바이에른에는 독일의 1인 가구가 제일 적다.

출처_ Statistisches Bundesamt. Sonderheft 1: Familien und Lebensformen, Ergebnisse des Mikrozensus 1996-2004. Wiesbaden, 2006.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Bevoelkerung/HaushalteMikrozensus/LebenArbeitenSonderheft1_1023101049004.pdf?__blob=publicationFile (Stand: 17.04.2018))

문서 번호 127

동독시기와 과도기 이후의 파트너-부모자녀 관계

2004년 5월 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치교육원

내용_

이 문서는 독일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프로젝트 '개인화의 동력이 된 변혁'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논문이다. 이 연구는 직접 인터뷰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에서는 통일 이후 파트너 관계와 가족 관계가 감정적 만족도를 주는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신연방주의 주민의 많은 수가 통일 이후 사적 영역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동시에 직장에서의 탈연대화와 합리화가 강화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 결과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십, 부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구동독지역 여성들에게서는 그들이 동독에서 완전고용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을 통해 보장받았던 독립성과 자율성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통적인 가족적 사회관계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출처_ Scheller, Gitta: Partner- und Eltern-Kind-Beziehungen in der DDR und nach der Wende.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9/2004: S. 33-39.

문서 번호 128

2050년까지의 연방주의 인구 변동

2004년 8월

담당자 / 기관_ 독일 국민, 독일 통계청, 베티나 조머

내용_

- 출생률: 구서독지역의 출생률은 지난 30년 이래 낮은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구동독지역은 약간 상승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사망률/기대 수명: 독일의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기대 수명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중반의 신연방주지역 신생아들의 기대 수명은 전반적으로 구연방주보다 낮았다.
- 국내 이주: 앞으로도 신연방주에서 구연방주로 이주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2003년부터 2020년까지 이주를 통한 5개 신연방주의 주민 손실: 90만 명(추정)).
- 연령구조: 향후 수십 년 후에는 독일과 그 연방주들의 연령구조는 상당히 변할 것이고, 불과 몇 년 안에 20세 미만이 인구의 5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중간 연령층은 우선 증가할 것이다. 세 번째 연령그룹인 60세 이상의 노령층은 계속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30년에는 거의 모든 연방주에서 최소한 3분의 1의 국민이 이 연령층에 속할 것이며, 여기에서 구동독지역의 주가 가장 강력하게 증가할 것이다.
- 전체적 경향: 전체적으로 볼 때 전 독일에서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될 것이다. 연방주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시기와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대책 필요성: 위의 변화에 대한 적응은 지금까지는 연방 차원에서 무엇보다 사회보장체계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이제는 모든 연방주 차원에서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출처_ Sommer, Bettina: Bevölkerungsentwicklung in den Bundesländern bis 2050 – Annahmen und Ergebnisse der 10. koordinierten Bevölkerungsvorausberechnung. in: Statistisches Bundesamt (Hrsg.). Wirtschaft und Statistik 8/2004. Wiesbaden 2004, S. 834–844

문서 번호 129

브란덴부르크 주개발회사 적자 해명에 관한 주의회 조사위원회 3/2의 결정권고 및 보고서

2004년 8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조사위원회 3/2 디터 헬름 의원, 도시건설·주택·교통을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개발회사(LEG)

내용_

987페이지 분량의 상기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장: 주의회 조사위원회의 설치, 과제, 배경, 절차, B장: 조사된 사건의 상황, C장: 환경관리법(UAG) 28조 3항에 의거한 다른 의견들.

A장은 조사절차의 순서에 대해 설명한다. B장은 조사위원회 3/2의 조사결과를 다시 제시한다. 조사위원회는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과 증거인들이 언급한 내용에서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었다. 2001년 9월 20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조사위원회 설치 결정이 있은 후 조사위원회 2/3는 주개발회사(LEG)의 발전과 LEG-기업집단의 발전을 위해 일반적인 주제 이외에 16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89개의 개별 질문을 작성하였다. 질문들은 거의 대부분 경제평가연구소의 평가기준인 '예산원칙법(HGrG) 53조에 따라 사업 및 경제 상태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질문목록(Fragenkatalog zur Prüfung der Ordnungsgemäßigkeit der Geschäftsführung und der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 nach §53 HGrG)'에서 발췌한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첫 단계에서 광범위한 조사자료를 주정부와 LEG-그룹으로부터 입수하여 평가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LEG-그룹, LEG-감독위원회, 주정부의 40여 명의 증인에 대한 집중적인 심문이 이루어졌다.

발견된 상황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발견된 결과의 신뢰성은 위원회 내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다수가 동의하는 상황평가 결과와 결과 신뢰성에 대한 전체 입장은 제시되지 못했다. 조사위원회 2/3의 활동은 1998-1999년 LEG의 평가와 연관되어 검찰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고서의 A장과 B장의 내용에는 평가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보고서의 C장은 소수자 의견을 수록하고 있다.

출처_ Land Brandenburg, 3. Wahlperiode, Drucksache 3/7777

문서 번호 130

생산자본을 고려한 민간 가구 재산의 형성과 배분

2005년 1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유럽경제연구소, 베스터하이데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보건사회복지부의 의뢰를 받아서 유럽경제연구소가 진행한 구동독과 서독의 재산분포에 관한 조사이다. 이 조사에서는 현금, 부동산, 소비재와 기업의 재산으로 분류하여 진행되었다. 그리고 사회재산으로 규정된 법적 연금과 기업연금의 액수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교육을 통해 받는 혜택 등은 인력자본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출처_ Westerheide e. a. (2005): Die Entwicklung und Verteilung des Vermögens privater Haushalt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Produktivvermögen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문서 번호 131

가족과 자녀를 원하는 소망-BuG 연구조사

2005년 12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인구조사연구소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인구조사연구소가 구동독지역과 서독지역에서 자녀를 갖기 원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를 위해 국가로부터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지에 관해서 조사한 결과물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여성들은 다른 유럽 국가의 여성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국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구동독지역의 여성과 서독지역 여성의 응답이 비교적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구동독지역의 여성들의 경우 23%만 한 명의 자녀가 있는 엄마가 전일제로 근무하게 되면 아이가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서독지역의 여성은 43%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에 상응하게 구동독지역의 여성들이 충분한 탁아시설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훨씬 강했다.

가장 중요한 조사 결과는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면 재산이 점점 더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체 국민 중에 상위 20%가 총 재산의 2/3를 소유한 반면, 전체 국민의 가난한 반쪽이 갖고 있는 재산은 총재산의 4%에 달할 뿐이다. 구동독지역과 서독지역 간에도 심각한 격차가 있다. 예를 들어 구동독지역의 가구당 보유 재산은 60,000유로로 현금과 부동산 재산이 평균 149,000유로인 서독지역 가구의 재산의 40% 수준에 달했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격차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격차가 크다.

출처_ Höhn e. a. (2005): Kinderwünsche in Deutschland. Konsequenzen für eine nachhaltige Familienpolitik; Robert-Bosch-Stiftung, S. 46-70.

문서 번호 132

'새로운' 고령 지역: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신연방주 고령 주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현실과 입장-군나르 빈클러(Gunnar Winkler)

2006년

담당자 / 기관_ 신연방주 고령 주민, 라이프니츠-조찌에탯, 동독 학술 아카데미 소속 사회학 및 사회정치학 연구소 전 디렉터 군나르 빈클러

내용_

- 출발과 변혁-연령 특정 및 해당 연령: 신연방주 주민은 1990년 시작된 상황 전개를 여전히 타당하다고 여기며, 그럼에도 1990년 이전뿐만 아니라 1990년 이후 통일과정의 유형, 방법 및 그 달성 성과를 논쟁하고 있다. 구·신연방주의 연금수령자에 대한 비교가 향후 독일에서 지속적으로 두 그룹의 '독일 연령층'이 존재할 것이라는 진술의 근거가 된다.
- 인구 통계적 변화 - 연령과 연령 구조: 동독은 독일통일로 인해 '젊은' 주민들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은 그사이 출생률의 감소와 이주의 증가로 인하여 구서독지역에 비해 더 고령 인구가 많다.
- 경제통합: 독일의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통합의 문제는 상이한 정체성과 사고방식에서 우선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경제문제의 결과이다.
- 문화통합: 전체적으로 볼 때 신연방주의 문화의 발전은 그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문화의 쇠퇴와도 연결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재정 부족으로 신연방주의 문화 기반시설은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상태임이 증명되었다.
- 새로운 구시대의 가치: 특히 구동독지역의 고령자는 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지난 수십 년간의 사회화 영향을 받은 가치구조가 남아 있다. 사회 안전, 정의 그리고 자유를 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연대와 평등은 그 다음 순위로 인정한다.
- 사회적·정치적 통합: 현재까지도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간의 공동성장과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새롭고 다른 사회보장입법, 사회제도 및 급부체계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았고 배우거나 활용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 동질성: 생활 수준을 동등화하려는 의심의 여지없이 정당한 요청은 구동독지역의 측면에서 보면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다.
- 신연방주에서의 삶: 전반적으로 신연방주의 고령 주민은 다수가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아주 좋거나 좋다고 평가하고 비교적 적은 주민들이 나쁘거나 아주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다.
- 노년기의 경제활동: 신연방주의 고령 주민들에게는 대략 900,000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며, 조기 은퇴가 확실한 해결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 주거: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는 1990년 이래 계속 높아지고 있다.
- 건강: 1990년 이후 신연방주의 고령 주민들은 먼저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과정을 극복해야 했다.

출처_ Winkler, Gunnar: Die Region der ‚neuen' Alten – Fakten und Positionen zur sozialen Situation älterer Bürg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990 bis 2005. (Pressematerial). Berlin 2006

문서 번호 133

자료보고서 2006: 독일의 물가, 소득 그리고 노동비용

2006년

담당자 / 기관_ 서독 주민

내용_

1. 건축용 토지의 구매가: 2004년에 바이에른의 건축용 토지는 1제곱미터당 218.48유로로 가장 높고, 튜링겐이 36.69유로로 가장 낮은 평균가를 보였다. 독일의 평균가는 103.47유로로 신연방주는(베를린을 제외하고) 그 어디도 50유로에 미치지 못했다.
2. 소득: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은 2005년 총 평균 소득이 2,263유로로 구연방지역보다 27.4% 정도 적다. 동-서 소득격차는 1996년에서 2005년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출처_ Statistisches Bundesamt (Hrsg.). Datenreport 2006 – Zahlen und Fakten üb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2006;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konferenzen/2006/Datenreport/Datenreport_pdf.pdf?__blob=publicationFile

문서 번호 134

세대 간 관계와 연대협약: 인구 통계적 발전 맥락에서 본 세대 간 조화

2006년

담당자 / 기관_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회학 연구센터

내용_

- 세대 간 협약: 어느 누구도 세대 간 협약에 서명하거나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에서나 사회에서나 공동생활을 가능한 한 모두의 필요에 맞도록 조직하기 위해 상호 간 도움과 원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견이 일치한다. 이러한 공동생활은 도덕적인 협의라는 의미에서 광범위한 의미에 있어서 세대 간 협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세대 간에 있어서 나이의 개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란 물리적인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의 제한으로 특징지어지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기회'도 가지고 있으며, 단조로움과 고립에 의해 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많은 의견을 같이한다. 사람들은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간의 관계가 공동생활로 형성되고, 형성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나이에 대한 개념이 비슷하다는 이러한 사실이 나이의 실질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성은 세대 간에 있어 '세대 간 충돌'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 연금에 있어서의 정의와 연금에 대한 기대: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는 세대 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넘어서, 현재와 장래의 사회의 안전이라는 사회정책상의 주요 문제이다. 모든 사회 체제 안에서의 분담금 충당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람들에게 이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는 정책만이 재정조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가족-서로 같이-서로를 위해-서로 반하는 사회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대 간 협약은 가족 관계의 본질적 요소가 되었으며 사회화의 기능과 같은 전통적인 기능을 보충한다. 가족과 그리고 또한 사회적 조합은 나이에 따라 변하는 욕구와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
- 원조와 지원: 전반적으로 가족은 노년기에 들었을 때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된다. 가족 구성원이 부양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모든 연령층이 똑같이 제약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 재정 이동: 재정 이동은 다양한 종류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고액의 금전적 보조로서의 일회적인 원조로 증여나 '신용', 혹은 다소 규칙적인 재정적 상호 원조를 들 수 있다.
- 사회봉사: 우리 사회의 현실은 무엇보다도 나이가 든 사람이 사회적 이익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양상은 옳지 않으며 젊은 사람들도 나이든 사람들과 똑같이 사회적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출처_ Hanf, Thomas / Liebscher Reinhard. Generationenbeziehungen und Solidarvertrag (Pressematerial). Sozialwissenschaftliches Forschungszentrum Berlin-Brandenburg (Hrsg.), Berlin 2006

문서 번호 135

자료보고서 2006: 민주주의와 사회 복지 국가

2006년

담당자 / 기관_ 독일 전 국민, 설문 방법론 및 분석 센터, 독일 통계청

내용_

1. 독일 국가 형식의 수용: 2000년에만 해도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구동독지역에서 독일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명백히 구서독지역에 있어서보다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2005년에는 더 첨예화되었다. 현재 구동독지역에서 심지어 상대적 다수에 해당하는 41%가 지금 독일의 민주주의보다 다른 국가의 형태를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2. 독일의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한 만족: 독일의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1991년에서 2004년까지 전 기간을 통하여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 간의 차이가 거의 그대로 지속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구서독지역 주민은 현저히 구동독지역 주민들에 비해 더 만족하고 있었다.
3. 사회주의에 대한 입장: 신연방주의 주민들의 독일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의 원인 중 하나는 대다수가 독일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과 다른 민주주의 모델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선호하는 모델은 사회적 민주주의라 볼 수 있다.
4. 다양한 주민 집단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 구서독지역에는 다양한 주민집단 간에 독일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입장과 원칙적으로 민주주의를 단지 조금만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의 차이가 있다. 구동독지역에서는 더 명확한 차이를 보여 준다. 젊은 연령 집단이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의 입장에 있고 이 체제에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것이라 대다수가 예상했었다. 특이하게도 이러한 사회화 효과는 통일 15년이 지나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5. 사회정책에서의 국가의 역할: 국민 그룹으로 볼 때 서독과 동독에 있어 자영업자들은 사회국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6. 사회급부의 감축 혹은 확대: 2004년 사회급부가 미래에 그대로 있어야 할지, 감축되어야 할지, 혹은 확대되어야 할지 질문했을 때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다수가 현 상태 유지에 찬성했다. 이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차이점은 사회급부의 확대 혹은 감축의 양자택일에 있어 나타났다. 구동독지역에서는 42%가 확대에 그리고 단지 10%가 감축에 찬성했고, 반면에 구서독지역에서 이 관계는 거꾸로 26%의 응답자가 사회급부의 감축에 그리고 단지 17%가 확대에 찬성했다.
7. 사회 정책적 성과에 대한 평가: 2004년에는 구서독지역의 58%가 그러나 구동독지역에서는 단지 48%가 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지난 몇 년간 이 차이는 현저히 더 커졌다. 양쪽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은 구서독지역이 2004년 지난 몇 년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실에 기인한다.

출처_ Statistisches Bundesamt (Hrsg.). Datenreport 2006 –

Zahlen und Fakten üb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2006;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konferenzen/2006/Datenreport/Datenreport_pdf.pdf?__blob=publicationFile

문서 번호 136

브란덴부르크주의 인구 통계상의 변동에 대한 감정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위탁 감정서

2007년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베를린 인구발전연구소

내용_

이 감정서에 있어서는 브란덴부르크의 인구 통계적 상황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관찰하고 있다. 즉 주요 문제를 이끌어 내고, 정부와 행정의 반응을 평가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성장 대신 축소 과정: 인구 통계적 발전에 있어 브란덴부르크주는 앞으로 몇십 년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도전을 겪을 것이다. 아동 숫자의 감소, 이전의 1990년대의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의 결과, 계속되는 노령화 그리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농촌지역을 떠나는 높은 이주율은 거의 모든 곳에서 인구 감소를 초래하여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끈다. 학교는 닫게 되고, 마을은 공동화가 되며, 단지는 비어 있고 쇠퇴하며, 하수 체계와 비상 의료시설도 와해될 것이며 공공 예산의 빚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해결방안: 다른 연방주와 다른 나라의 경험

1. 스웨덴 학교교육의 자치행정
2. 라플란드의 다양한 외래 진료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병원
3. 디트로이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휴간지 농업
4. 남아프리카의 민간 자연공원
5. 브라질의 친환경적 기여에 상응하는 예산의 분배
6. 멕시코의 소단위 자치 지역
7. 오스트리아 인근 교통의 사법적인 조직
8. 에스틀란트의 종합통신망의 사용 가능성
9. 노르웨이의 전자정부와 전반적인 행정 포탈
10. 브라질의 자치 재정계획에의 참여
11. 스위스의 미래부
12. 작센의 자치 조성기금의 통합
13. 독일 재단을 통한 자유학교의 지원

브란덴부르크의 미래전환을 위한 권고

1. 교육에 대한 대단위 지원
2. 서비스행정의 재구성과 전자행정 시설
3. 미래부 설치
4. 현존하는 조성 프로그램을 주 대상자에게 알리고 상호 간에 협력

5. 권리와 의무로서 중앙 집중이 아닌 분산된 시민행정의 도입
6. 소단위 지역 스스로 자신의 장점 모색
7. 조성에 있어서 증거책임의 전환
8. 조성에 있어서 철저한 경쟁을 통한 교부
9. 노동에 대한 새로운 자극의 도입
10. 지역 화폐의 확장
11. 지속적인 에너지의 체제의 도입
12. 지역 식량 체제의 선호
13. 환경 체계에의 기여에 대한 고려
14. 토지 이용권의 매입제 도입
15.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통합
16. 재단 설립의 동기 조성
17. 모델 지역의 제안의 적극적인 적용

요약: 경제와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한 기준으로써 통합적인 지속 방안을 도입한다. 새로운 방안은 각 지역의 당사자가 찾도록 해야 한다.

지역별 제안: 많은 지역이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용한 사례를 여기에서 미리 소개할 수 있다.
1. 가치 높은 문화영역의 관광여행(보수한 역사적인 장소, 음악 페스티벌과 접목한 인근 휴양)
2. 자연-서비스(자연 관광여행)
3. 전통적인 그리고 재생 에너지-기술
4. 연구와 대학과 직접적인 협력을 하는 혁신적인 중산층
5. 자연 친화적인 농업과 혁신적인 생활 형식
6. 행정 기능에 있어서 그리고/혹은 대학에 있어서 시민 중심
7. 새로 설립할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행정 수도(포츠담)
8. 역사 관광여행을 위한 야외 박물관과 흥미 있는 장소로서 역사적인 특별 장소
많은 제안들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던 관행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령 지역적인 행정 관할 같은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 갑자기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관들을 기존 행정 위원회에 부수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러한 지역적 자치행정은 행정행위를 통해서라기보다는 행정 외에 시민, 기업인, 학교, 조합, 생산자, 토지소유자 등 당사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뤄진다.

출처_ Berlin-Instiut für Bevölkerung und Entwicklung (Hrsg.). Berlin, 2007 (https://www.berlin-institut.org/fileadmin/user_upload/Studien/Brandenburg_Webversion.pdf (Stand: 17.4.2018))

문서 번호 137

보건제도에 있어서 시스템 변경을 위한 도전과제 및 경험적 지식

2007년 기준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 제1 위원장 베른트 그리거

내용_

브란덴부르크에서의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 구축과 발전 상황에 관한 고찰

- 초기에는 브란덴부르크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에서 서독의 다원적 의료보험 시스템을 동독으로 도입하는 문제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 1991년 4월 브란덴부르크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소속된 직원은 1,800여 명으로 이들은 41개의 사업사무소와 50개의 행정사무소에서 약 120만 명에 달하는 보험 가입자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동독 사회보험공단으로부터 편입되어 온 인력이었다.
- 서독 출신 직원들의 경우 '공단 구축 지원 담당'의 직책으로서 동독에서의 보험공단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 교육센터를 설치하였다.
- 아울러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에서는 전산 데이터 처리작업을 위해 포츠담에 이를 담당할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신 및 데이터 서비스 인프라 시설이 너무도 열악했으므로 해당 자료 업무는 초기 상당한 지장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 시스템 변환과정은 특히 구축 및 정착 단계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매년 '동독 구축 프로젝트'의 진료비용에 대한 투자 보조 지원금에 참여했다.
- 브란덴부르크는 연방주 차원에서 보건제도 시스템 변환과정에 있어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브란덴부르크 방침).
- 초기 제약업계에서는 통일조약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 독일 연방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2004년 보건제도 개혁안을 통해 원래 동독에서 운용되던 시스템 제도의 일부가 도입될 수 있었다.

출처_ Archiv der AOK Berlin

문서 번호 138

인구변동의 조건하에서 튜링겐주 농촌지역의 기초단체 게마인데-모니터링 체제의 최종 보고서

2007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건설교통부(제2국: 도시건설, 주택건설, 공간질서와 지역계획)

내용_

2004년에 조사된 30개의 기초단체 게마인데 중에서 18개 지역에서는 1인당 주거공간이 튜링겐주의 평균 크기 38평방미터를 훨씬 넘었다. 일반적으로 주거공간은 도시에서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튜링겐 전 지역에서 1인당 주거공간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인구감소와 동시에 전체적인 주택의 크기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거의 모든 게마인데에서 사용 가능한 1인당 주거공간이 증가하였다. 건축 허가 건수를 검토하면 대부분의 건축활동이 1990년대에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건축허가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조사대상이었던 튜링겐의 게마인데에서는 빈 주택을 줄이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을 철거하는 정책이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출처_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au, Landesentwicklung und Verkehr: http://www.thueringen.de/imperia/md/content/tmbv/monitoring_abschlussbericht.pdf

문서 번호 139

사통당 독재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구상

2007년 11월 8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교육·청소년·체육부, 학술·연구·문화부, 법무부, 내무부, 포츠담 현대사연구소

내용_

2007년 3월 7일 결정을 통해 주의회는 주정부에게 '사통당 독재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주정부의 콘셉트'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내용으로 '모든 브란덴부르크주 학교에서 사통당 독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의무적으로 전달할 것'이 요청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를 구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치교육을 위한 조치'가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고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주정부는 '억압과 저항과 관련된 실제 장소'가 강조되고 기념 장소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주의회는 '기존의 기념 장소를 네트워크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사통당 독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사회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4. Wahlperiode, Drucksache 4/ 5325

문서 번호 140

자료보고서 2008: 주관적인 만족도와 가치 지향

2008년

담당자 / 기관_ 독일 전 국민, 설문 방법론 및 분석 센터, 독일 통계청

내용_

삶의 분야에서의 만족:

1. 개인적인 소득과 가족의 소득 이외에도 현 상태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민주주의에 대해 만족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물질적 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에 있어서 더 낮다.
2. 통일이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양쪽 독일의 만족도에 있어서 그 차이는 계속 존속된다.
3. 구동독지역 주민의 부유한 집단이 부분적으로 더 많이 만족을 할 수 있었던 반면, 낮은 소득의 응답자의 만족도는 지금까지 조사된 어느 분야에서도 초기 1990년의 출발 시점 수준조차 다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가치지향, 요구 그리고 기대:

1. 구동독지역에서는 점점 더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적인 목적이 우선순위를 가지는 반면, 구서독지역의 대다수는, 특히 젊은 세대가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으로 둔다.
2. 이러한 관찰은 무엇보다도 구서독지역에서 인지되고 있는 부의 손실을 보여 준다. 일반적인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기대에서 보면 약간의 분위기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단지 개인적인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지난해의 부정적 경향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개인들에 있어 부의 획득이라는 형식의 경제 회복은 아직 감지되지 못하고 있다. 후기 물질적인 가치로의 가치 변화의 지속은 이러한 배경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확실하지 않다.

출처_ Statistisches Bundesamt und Gesellschaft Sozialwissenschaftlicher Infrastruktureinrichtungen (Hrsg.). Mannheim, 2008. (https://www.gesis.org/fileadmin/upload/forschung/publikationen/datenreport/2008/15-Wohlbefinden.pdf (Stand: 17.4.20018))

문서 번호 141

브란덴부르크의 정부 엘리트

2008년 3월 15일

담당자 / 기관_ 포츠담대학 경제사회학부 디르크 아르네 하이옌

내용_

실제로 항상 동독 출신이 정부의 회의 테이블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그렇기 때문에 식민지화라는 말은 언급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각료회의에서 거의 절반의 장관이 서독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었다. 위에서 언급된, 1990년 신연방주의 정부에서 평균 1/3 수준이 구서독 출신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구서독 출신의 비율을 보인다. 브란덴부르크에서는 법무부, 경제부, 재정부가 서독인 장관으로 채워졌다. 환경, 농업 같은 기술 관련 부는 동독 출신에 의해 채워졌다. 수입된 행정전문가와 관련하여, 업무 효율성의 관점에서 서독 출신이 동독 출신보다 앞선다는 점이 언급될 수 있다.

출처_ Heyen, Dirk Arne: Regierungseliten in Brandenburg im Zeitverlauf –Zu der Frage der Ost-West-Herkunft und dem sozioprofessionellen Hintergrund der Kabinettsmitglieder (von 1990 bis heute). Universität Potsdam, 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liche Fakultät, 2007/08

문서 번호 142

2007년 각 주별 건축용 토지의 구매가

2009년

담당자 / 기관_ 구·신연방주, 독일 통계청

내용_

건축용 토지의 구매가: 2007년 함부르크의 건축용 토지가 1제곱미터당 658.76유로로 구매가가 가장 높았고, 250.77유로의 바이에른이 그 뒤를 따른다. 가장 낮은 가격은 작센-안할트의 34.45유로이고, 튜링겐이 34.75유로로 그 위에 있다. 이외의 신연방주는 50유로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 이외의 구연방주는 두 군데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현저히 100유로를 넘어선다.

출처_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2009. S. 517

문서 번호 143

획득한 시간: 독일의 고령화에 대한 제안-아카데미 그룹

2009년

담당자 / 기관_ 독일 전 국민

내용_

이 제안은 인구 통계적 발전의 기회와 도전을 다루고 있다. 이는 아카데미 그룹 '독일에서 나이 들기', 즉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와 실무자 그룹이 작성했다.

개인에 대한 제안:

1. 오랫동안 형성된 경력과 나이에 대한 관념의 변화
2. 전체 직업 활동 시기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짧은 교육 시기를 가짐으로써 직업 활동에 들어가기 이전의 교육시기를 보충한다.
3. 장기화되는 직업 활동 동안 다양한 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
4. 점점 길어지는 인생을 위하여 그리고 그동안의 자신의 건강, 노후 대책 그리고 사회적 시민 참여에 대한 개인의 공동 책임 강화

기업에 대한 제안:

1. 모든 피고용인들의 자격 요건과 능력 개발에의 지속적인 투자
2. 업무 조직에서의 다양한 연령집단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고려
3. 고령자의 고용
4. 지위의 상승이나 하강과는 별개의 직무 변화 가능성

사회에 대한 제안:

1. 나이에 대한 전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의 극복
2. 3단계 인구 구조의 완화
3. 상반되는 규율을 철폐하고 전해 오는 행동 방식의 변화에 대한 자극을 잠정적으로 주어 개인과 기업이 인생 단계의 새로운 구조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한다.
4. 세대 간의 협약을 그의 성과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새로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따른 노동, 고용 그리고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5. 직업 활동 외에 무엇보다도 시민사회, 자치단체, 가족 안에서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제도적 마련

출처_ NOVA ACTA LEOPOLDINA, Abhandlungen der Deutschen Akademie der Naturforscher Leopoldina. Neue Folge, Nummer 371, Band 107. Halle (Saale), 2009 https://www.leopoldina.org/uploads/tx_leopublication/2009_NatEmpf_Altern_in_D-DE.pdf (Stand: 17.4.2018)

문서 번호 144

제13차 아동·청소년 보고서: 청소년의 생활 환경과 독일 아동·청소년 지원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

2009년

담당자 / 기관_ 독일의 젊은 연령 집단

내용_

제13차 아동·청소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는 연방정부에 그 작업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요한 목표를 설정했다.

1. 아동의 발전을 위한 초기 지원: 자치단체 전 영역을 포괄하고, 널리 계획된 광범위한 기간시설의 설치와 확장. 목표: 아동의 발전을 위한 초기 지원과 유기 사례의 감축
2. 영양과 운동: 운동의 촉진을 위한 제안과 아동 보호시설에서의 무상의 건강한 음식. 목표: 성장기에 있는 이들의 과체중이 증가하지 않는다.
3. 언어/대화: 초기 언어지원, 특히 불리한 생활 여건에 있거나 이주민의 배경을 가진 아동의 언어 능력의 상승. 목표: 모든 아동의 95%가 입학 시 적정한 언어능력을 가진다.
4. 학교 관련 건강 촉진: 건강 관련 예방의 정립과 확장
5.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사회 심리적 발전: 사회 심리적 발전의 보다 광범위한 지원. 목표: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이상이 5년 안에 10% 감소한다.

보고서는 이외의 지침과 권고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16. Wahlperiode, Drucksache 16/12860

문서 번호 145

동독지역 성공의 비밀: 최상품의 생존 전략-경영자가 배울 수 있는 점

2009년

담당자 / 기관_ 아른트 찌쉐, 올리버 에리히엘로

내용_

1989년 이전에는 동독에서 서독 제품이 40년간 우월한 질과 신용도에 대한 보증으로 여겨져 왔다면, 그 이후는 구동독지역 제품이 신연방주에서 이 지위를 차지했다. 2002년의 설문에서 신연방주의 103명의 응답자 중 101명이 구서독지역 제품보다 구동독지역 제품을 더 살 것이라고 답했다. 대부분 거론한 이유는 제품의 특별한 질이었다. 게다가 구동독지역 제품은 솔직함과 같은 개념하에 분리되었다.

- 친 동쪽(Ost Pro): 친 동쪽은 1991년 이래로 시행되는 박람회이다. 이는 직접적인 변혁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었다. 즉 구동독지역에는 상점의 판매대 위에 구서독지역 상품만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서독지역 상품이 자신들의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또 자신들의 상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거의 20년 이래로 이 박람회의 커다란 성과는 이것이 향수로 인한 잠깐의 성과가 아니라 사회적인 기본적 욕구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방문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은 연령에 있어 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
- 노스탈기-동독상점: 노스탈기-동독상점은 몇몇 도시에서 열렸고, 이들은 그곳의 특별한 구동독지역 제품을 팔았다. 점점 성공함에 따라 이러한 제품이 모든 슈퍼마켓에 있게 되면 고객들이 그 때문에 특별상점에 더 이상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점은 다시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는 친 동쪽-박람회와 같이 어떻게든 제품을 팔고자 하는 첫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초기 시작의 지원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출처/지역의 노력: 많은 구동독지역 브랜드들이 그들의 고향 지역을 이용해 광고한다. 출처는 모든 브랜드에 있어서 강력하고 일회적인 특수화의 가능성이다. 의도적으로 고유의 혹은 고향의 브랜드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있어 많은 구동독지역 사람들은 친근함 외에도 경제적인 이유를 가진다. 즉 일자리의 유지 그리고 이를 통한 구동독지역의 강화가 그것이다.
- 브랜드가 국가를 대체한다면: 동독의 해체 시 동일한 시기에 광범위한 브랜드 제품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정치적인 권력 관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과 사람들의 양식과 문화는 이로써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구동독지역 성과의 여섯 가지 요소:

1. 정보에 주력하는 행태 : 솔직한 태도를 이상적인 것으로 삼고 많은 구동독지역 브랜드들은 그 포장과 광고에서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브랜드에 대한 정보에 주력하는 행태로 나섰다.

2. 고향 관련성: 구동독지역 브랜드는 고향에 대한 고백이며 자존심의 표현이다. 고향에 대한 고백으로써 구매는 계속 경제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연합과 지원의 현실적인 형식일 수도 있는 것이다.
3. 다비드-대-골리앗 원칙: 구동독지역 브랜드의 구매는 독재주의 국가 체제의 동독에 대한 진지한 귀환 행위가 아니라, 사회 심리적으로 생산자의 면에서나 소비자의 면에서 자신들의 가치가 집단적으로 상실되는 데 대해 맞서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현명하게 이에 맞서고 '서쪽의 형제들'에게 혹은 대기업에 한방 먹인다는 감정인 것이다.
4. 자기유사성 지속: 자신의 과거의 형태를 완전히 삭제한 그 어떤 구동독지역 브랜드도 살아남지 못했으며, 이는 구서독지역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동독-경제의 붕괴 이후 구동독지역 브랜드는 그들에게 남겨진 요소들을 생각해내려 해야 했다.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구동독지역 브랜드도 살아남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제품의 성공 프로필은 자신의 고유한 유전적 요소를 시간에 맞게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다.
5. 솔직함: 동독의 소비 철학은 구동독지역 성공 브랜드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서독과의 구분에 있어서야 비로소 자신 고유의 정체성을 경험함으로써 집단적 동류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6. 가격: 대부분의 구동독지역 브랜드는 같은 등급의 구서독지역 브랜드에 비교해 볼 때 더 저렴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의 차이는 원료의 품질이 저급하다거나 단순한 제품이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구동독지역 브랜드는 구서독지역의 경쟁 브랜드보다 더 작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구동독지역 기업들은 술수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악한 조건을 인용해야만 했다.
결론: 오늘날 많은 구동독지역 브랜드가 적절한 가격을 형성하여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최대 경쟁자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하지만 구동독지역 기업들이 구서독지역 경쟁자의 가격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결국 유리한 가격이 성공을 확보하는 요소이고 이는 적절히 운용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출처_ Zschische, Arnd / Errichiello, Oliver: Erfolgsgeheimnis Ost, Survival-Strategien der besten Marken - und was Manager daraus lernen können. Wiesbaden 2009

문서 번호 146

2009 연방주 순위: 작센주의 강점/약점의 특성(새로운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

2009년

담당자 / 기관_ 이니셔티브 '새로운 사회시장경제', 쾰른 독일경제자문, 경제전문지 '경제주간'

내용_

- 역동성 순위(2005-2009년 까지의 발전), 현 상황 순위(경제와 사회복지 수준의 절대적 수준)에 대한 서술을 통해 작센과 작센의 강점과 약점을 다른 연방주들과 비교하면서 서술한다.

작센-안할트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다른 연방주에 비하여 뒤져 있다.

- 연구 결과가 갖고 있는 장점은 연구 분야는 매우 좁지만 매우 중요한 분야에 대해 연방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출처_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Consult GmbH (https://www.iwconsul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public/pdfs/sachsen.pdf (Stand: 07.05.2018))

문서 번호 147

2009 연방주 순위: 작센-안할트주의 강점/약점의 특성(새로운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

2009년

담당자 / 기관_ 이니셔티브 '새로운 사회시장경제' , 쾰른 독일경제자문, 경제전문지 '경제주간'

내용_

- 역동성 순위(2005-2009년 까지의 발전), 현 상황 순위(경제와 사회복지 수준의 절대적 수준)에 대한 서술을 통해 작센과 작센-안할트의 강점과 약점을 다른 연방주들과 비교하면서 서술한다.

작센-안할트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다른 연방주에 비하여 뒤져 있다.

- 연구 결과가 갖고 있는 장점은 연구 분야는 매우 좁지만 매우 중요한 분야에 대해 연방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출처_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Consult GmbH (https://www.iwconsul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public/pdfs/sachsen-anhalt.pdf(Stand: 07.05.2018))

문서 번호 148

2009/2010 연방주의 입지경쟁력: 수입-고용-안전

2009–2010년

담당자 / 기관_ 베르텔스만 재단

내용_

- 광범위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본 연구는 작센, 작센-안할트주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텍스트 이외에 국민총소득, 경제성장, 고용, 실업, 사회적 안정 등에 관련된 그래픽, 표 등을 통해 변화 상황을 설명하였다.

작센은 예산정책 덕분에 가장 안정적인 신연방주로 평가되었지만 전 독일 복지 수준에 비춰볼 때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 작센은 낮은 수준의 부채, 낮은 인건비 지출 비율, 높은 투자지출 비율을 갖고 있지만 반면에 일부 영역은 시장경기에 매우 종속되어 있다.

"높은 수준의 실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낮은 생활 수준, 대규모 인구 유출이 작센주가 계속 갖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미래의 기회도 여전히 있다."(p.262)

- 통일 이후 작센-안할트는 실업, 인구유출, 노령화문제를 갖고 있다. 정부의 재정긴축정책은 2007년 이후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성공적 성과는 대개 지역적으로 달랐고 체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에 이어 작센-안할트는 두 번째로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에너지 산업 관련 작센-안할트는 가장 좋은 조건의 주이다. 공공인프라 구축, 연구, 개발, 기업참여 활성화 부문에서 여전히 연방의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3차 사회연대기금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연방의 일부 지역의 상황은 구연방의 체제취약지역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다."(p.277)

출처_ Bertelsmann-Stiftung (Hrsg.): Die Bundesländer im Standortwettbewerb 2009/2010, Einkommen – Beschäftigung – Sicherheit; 2010;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de/publikationen/publikation/did/die-bundeslaender-im-standortwettbewerb-20092010/

문서 번호 149

인구 통계적 변화: 신연방주를 고려한 정책 제안

2009년 6월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통·건설·도시개발부, 베를린 인구발전연구소

내용_

연방주와 연방 교통건설과 도시개발부의 프로젝트 "지역이 미래를 만든다"의 인구 통계적 정책이 그 주제이다: 가능한 한 인구 통계상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동시에 계속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도록 하는 한편, 인구 통계적 추세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적절한 기본적인 생활 배려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 '대응' 전략: 인구 통계적 변화는 국가 발전에 대한 하나의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목적은 인구의 감소를 저지하고 그리고 고령화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과거의 문제를 겨냥한 것이고, 현대적인 기본 생활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 프로젝트를 위한 것은 아니다.
- '적응'의 전략: 적응 전략은 인구 통계상 발전의 결과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인식한다. 목적은 공동체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그리고 주어진 여건하에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기본 생활보장을 충족시키는 사회급부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적응 전략에 기초한다. 현 적응 전략에서 기본 생활배려와 관련된 사고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

신연방주에서 선택된 프로젝트를 보면 많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는 또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구 통계적인 발전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인구 통계적 발전의 성공은 새로운 출발점과 전면적인 정책을 전제로 한다. 목적은 양질의 성장과 고용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적 통계의 성공적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배려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중심사상: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활 배려를 보장한다.
- 전격적인 현대화의 미래 해결책을 통한 활성화와 역동화 프로젝트. 중심사상: 고유한 가치 체제와 고유한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흠결로부터 장점을 만들어 낸다.

부록: 25쪽짜리의 평가를 포함한 연방주의 현행 인구 통계적 프로젝트를 기술하는 표1, 연방주 인구 통계 부서의 개선 제안의 표2(조치).

출처_ Berlin-Instiut für Bevölkerung und Entwicklung (Hrsg.). Berlin, 2009. (https://www.berlin-institut.org/fileadmin/user_upload/Studien/Demografischer_Wandel.pdf (Stand: 17.04.2018))

문서 번호 150

1989년부터 2009년까지 평화적 혁명 이후 20년: 신연방주 주민들의 견해

2009년 7월 20일

담당자 / 기관_ 국민연대, 신연방주

내용_

1989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회적 발전을 되돌아보면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이한 4단계를 볼 수 있다:

1. 사회적 만족의 강력한 증가-이는 상승하는 희망과 일반적인 삶의 만족, 개인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증가를 의미한다. 1989년에서 1995년까지 일상의 변화가 체감되는데 기인한다(동화단계).

2.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상대적인 사회 발전의 안정화와 1995년까지 달성한 수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평가에 따른 빠른 동화에 대한 희망의 하강(안정화 단계).

3. 홍-녹 연정에 의해 시작된 '개혁'(어젠다 2010, 건강, 연금, 고용시장의 개혁) 및 유로화로의 전환으로 2000년에서 2003년 사이 미래에 대한 우려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만족이 빠르게 감소했다(감퇴시기).

4. 2004년 이래 사회발전이 유동적이어서 각각 조금씩 상승 또는 하강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정체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불균형에 있어 점진적으로 동화해 가는 과정이다(정체기).

출처_ Volkssolidarität Bundesverband e.V. : 20 Jahre friedliche Revolution 1989 bis 2009. Die Sicht der Bürger der neuen Bundesländer. Ergebnisse einer Erhebung im Auftrag der Volkssolidarität. 08/2009

문서 번호 151

사회보고서 2009: 신연방주 50세 이상 주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자료와 현실

2009년 11월

담당자 / 기관_ 신연방주 50세 이상 주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회학 연구센터, 국민연대

내용_

1. 만족도: 신연방주의 50세 이상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 준다.
2. 희망-염려: 희망은 특히 자격요건의 달성이나 생업수단의 지위와 관련된 소득에 따른다. 염려는 무엇보다도 실직자, 자녀가 있는 가정 및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가진다.
3. 고용-실직: 고용은 항상 그렇듯이 신연방주 주민의 가치 구조에 있어서 높은 의미를 가지며, 50세에서 60세 사이 전체 주민들의 84%가 그들 삶에 있어서 고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경제상황-소득: 전체적으로 신연방주의 50세 이상의 주민들 중 2%가 그들의 경제상황이 아주 좋다, 32%가 좋다, 46%가 부분적으로 좋고/부분적으로 나쁘다, 14%가 나쁘다 그리고 6%가 아주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민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는 명백하게 개인적인 소득과 가족의 소득의 상승에 따라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5. 빈곤-상태: 2009년 신연방주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간계층의 가계 순소득은 1,063유로이다. 50세 이상의 주민을 보면 5%가 절대 빈곤, 8%가 빈곤, 14%가 빈곤위험 단계에 있다.
6. 주거: 주거는 가장 만족도를 보이는 생활 분야이다. 2009년 50세 이상 중 79%가 그들의 주거상태에 만족하고, 10%는 부분적으로 만족하며, 4%가 만족하지 않는다(7%는 답하지 않고 있음).
7. 기본가치: 신연방주의 주민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안전을, 하지만 자유와 정의도 그들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본다. 연대와 평등은 그보다 하위의 의미를 지닌다.
8. 독일통일-동질화: 전체적으로 신연방주의 50세 이상의 주민은 독일통일 현황에 대해 긍정적이기보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낸다: 단지 3%만이 통일이 실현되었고, 10%는 통일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52%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11%는 점점 더 그 차이가 커지며, 17%는 향후 50년 후에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본다.
9. 외국인: 외국인과의 지속적인 공동생활의 경험이 없음에도, 신연방주에서도 외국인이 사회문제의 '원인'이라고 본다.
10. 민주주의-주민의 참여: 신연방주의 50세 이상의 다수 주민들은 민주주의에 동의한다.

출처_ Sozialwissenschaftliches Forschungszentrum Berlin-Brandenburg e.V. (https://www.sfz-ev.de/index_htm_files/Sozialreport_50plus_2007.pdf (Stand 08.05.2018))

문서 번호 152

일곱 번째 연방주 순위: 연방주 비교-누가 가장 최고로 경영했는가?

2009년 12월

담당자 / 기관_ 이니셔티브 '새로운 사회시장경제', 쾰른 독일경제자문, 경제전문지 '경제주간'

내용_

- 본 연구에서 다뤄진 내용은 자료 12, 13과 동일하지만, 본 연구는 100개의 경제 및 체제 관련 지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방주의 경제적 역동성을 평가하는 매우 광범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 2009년 작센-안할트는 강력한 역동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이 그 뒤를 따랐다. 상대적인 성장이 있었으나 여전히 더 많은 성과를 필요로 한다. 구동독 주의 성공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p.6).
- 2008년의 재정위기는 독일 연방에 각기 다른 크기의 영향을 미쳤는데 작센-안할트와 작센은 평균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

평균 이상의 경제 비율과 높은 수출 비용을 갖고 있는 주들이(예를 들어 바이에른, 튜링겐, 바덴-뷔르템베르크)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출처_ IW Consult GmbH Köln, http:77www.iwconsult.de; www.bundeslaenderranking.de

문서 번호 153

제11차 의원법 개정법(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브란덴부르크주

2010년 1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내용_

이 법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법 33조(의원 검증 규정)를 보충한다.
의원들은 슈타지 활동에 연루되었는지 그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특히 정직원 신분이었는지, 비공식 협력자였는지 여부를 포함).
검증을 위해 슈타지 문서관리국 특임관(BStU)의 협조가 요청된다.
주의회에는 검증 대상인 해당 의원의 슈타지 협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독립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21. Jahrgang, Nummer 3

문서 번호 154

‘브란덴부르크주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의 극복 및 역사 청산과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앙케이트위원회 설치

2010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기민당, 자민당, 연합 90/녹색당 원내 교섭단체

내용_

기민당(CDU)과 자민당(FDP) 그리고 연합90/녹색당(Bündnis 90/Grünen)의 원내 교섭단체는 2010년 초 공동으로 ‘브란덴부르크주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의 극복 및 역사 청산과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앙케이트위원회의 설치를 신청하였다. 위원회 설치를 위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브란덴부르크에서 사통당 독재가 종식되고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진 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과정이 다른 신연방주와 비교하여 볼 때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되지만 혹시 지체된 것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자료 15, 앙케이트위원회 5/1). 이와 관련하여 사민당과 좌파당은 공동으로 이러한 역사청산 작업을 보충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앙케이트위원회는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브란덴부르크주 체제 전환 과정의 경과와 지금까지 수행된 결과를 평가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 앙케이트위원회는 독재 이후 시대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브란덴부르크주 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브란덴부르크 주의회는 양 교섭단체의 신청을 수용하였고 2010년 3월 24일 앙케이트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5. Wahlperiode, Drucksache 5/554

문서 번호 155

구동독의 아동·청소년 지원의 전환-브루노 힐덴브란트(Bruno Hildenbrand)

2010년 7월

담당자 / 기관_ 예나대학 사회학연구소 교수 브루노 힐덴브란트

내용_

- 1990년 이후 통일의 과정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다. 제도들의 전환으로는 현대화를 보충해가는 데 있어 충분하지 않다.
-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아동국, 즉 행정자치구역 차원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통괄하는 중앙조직이다. 2001년에서 2008년까지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숫자는 연구 대상 지역에서 현저히 감소했으나, 아동·청소년 지원의 사례는 증가했다.
- 1990년 당사자의 참여를 고려하는 새로운 아동·청소년 지원법(KJHG 및 SGB VIII)이 도입되었으며 그들은 이제 지원의 선택에 있어서 의사결정 참여권이 있다. 이러한 법률도 이전 1970년대에 시작하고 서방에 널리 보급되었던 사회사업의 전문화 과정의 결과이다. 이러한 발전은 동독에서는 실행되지 않았었고, 따라서 신연방주는 이 법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실행하게 되었다.

동독에서 청소년을 지원하게 되는 원인은 사회주의가 계속 확장되면 자동 소멸될 수 있는 단순히 '사회주의의 외관상 흠결'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동독에서 청소년 지원은 전문적인 능력 면에서는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고 명예직이었다. 1990년에 제정된 새로운 법률은 대학 졸업을 통해 얻은 자격을 요구한다.

- 예를 들면 업무자의 전문 자격요건과 재교육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찌감치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는 자주 실행되지 않았거나 혹은 무시되어 왔다. 이전의 보수적인 인력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교육과정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한다.
-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 본질적인 측면은 지도자급이 젊은 세대로 교체되는 것이다. 구세대는 변화의 주체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교체가 중요하다.

중요한 점은 해당 당사자가 손쉽게 새로운 제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습득할 수 있어야(혹은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를 변경하고 '신연방주'를 보다 현대화함으로써 독일통일이 실현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간과했던 점은 당사자가 행동하는 곳에는 가능성이 생기고 또 그 가능성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출처_ Hildenbrand, Bruno /Institut für Soziologie, 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 Jena, 2010

문서 번호 156

소득과 재산-빈부격차의 증가. 동서비교

2011년 1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치교육원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치교육원이 동서 간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연구결과이다. 그에 따르면 서독에서 경제적으로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 동서 간의 소득격차가 존재하였다. 동독은 급격히 성장하는 서독의 소득 수준을 따라갈 수 없었다. 그것은 통일과 함께 신연방지역에는 소득과 재산에서 가난한 독일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통일 이후 동서 간의 소득격차가 감소되었고 구동독 사회 내에서도 사회적 분화가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동서지역 간의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지난 몇 년간 보유재산의 격차는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고 한다. 동시에 양쪽 지역에서 모두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였고 빈곤율은 증가하였다.

출처_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1

문서 번호 157

사회주의통일당 평가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앙케이트위원회(EK 5/1)-인물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의견서(뤼디거/카텐후센)

2011년 6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기셀라 뤼디거, 한스-크리스티안 카텐후센

내용_

'역사 극복 및 사회주의통일당 독재 결과 청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주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앙케이트위원회(EK 5/1)의 위임을 받은 의견서.

주행정부에는 1990년 이후 중앙에서 규정한 동독 슈타지 평가 절차가 없었다. 평가는 관할 소관이었다. 예를 들어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MBJS)가 세부규정을 마련한 반면, 총리청과 내무부에서는 어떤 발의도 없었다. 새롭게 입수할 수 있었던 동독 슈타지 문서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주행정부 안에서 평가받은 인물들 가운데 6.6%가 혐의가 있었고, 이들 중 34.1%가 해고되었다. 의견서는 법적, 조직적인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수 있을 때 새롭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회주의통일당 간부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했는지 혹은 계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는 신빙성 있는 공식 통계가 없다. 주행정부에는 구연방주 공무원들이 고위직을 주로 차지하는 '엘리트 혼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정부와 주의회 구성원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 동독 슈타지 협력과 관련된 해고를 의아하게 생각한다(다수의 개별 케이스 제시). 1990-1991년 첫 번째 판결에서 동독 슈타지 문서 해명은 아직 불완전했다(문서집 제시). 특히 '중앙관청 성명(HVA)' 부분의 많은 색인카드가 폐기되거나 조작되었다. 관재인들은 동독 슈타지 혐의가 있는 자들과 개별면담을 하고, 많은 경우 문서집 내용에 반하는 의심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냈다. 의회 내 공식성명 혹은 담화는 없었다.

제 1차 회기에 대한(1990-1994) 평가를 위해 '명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의원 100명 가운데 14명의 동독 슈타지 협력 사실을 밝혀냈으나, 결산 보고서상에서는 2명(주지사 만프레드 슈톨페 건 포함)을 싣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5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제2차 회기부터 제4차 회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활동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 담당자들은 제2차부터 제4차까지의 회기 동안 각각 12건, 8건 및 10건의 동독 슈타지 협력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제5차 회기인 2009년부터는 정기적 검증 절차가 정식으로 도입되었다(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음).

모든 신연방주에서는 주의회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결과는 부분적으로 익명화되었다. 제1차 회기 이후 평가 연기는 브란덴부르크주에서만 발생했다.

출처_ Parlamentsdokumentationssystem Brandenburg (https://www.parlamentsdokumentation.brandenburg.de/parladoku/w5/drs/ab_8500/8500_13.pdf (abgerufen: 26.07.2011))

문서 번호 158

브란덴부르크 정당의 인사 관리 영속성과 엘리트 이동–앙케이트위원회 의견서

2011년 8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에어하르트 노이베르트, 마리오 니만, 크리스토프 부니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사회주의통일당 독재 청산 관련 앙케이트위원회 5/1

내용_

노이베르트, 니만, 부니케는 각 정당 및 해당 정당이 과거사 청산과 슈타지와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 의견서를 앙케이트위원회에 전달했다.

모든 입법 회기 동안 사회주의통일당 간부 출신 또는 동독 슈타지 과거를 가진 민주사회당/좌파 의원들이 재직했고, 이들 중 일부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당은 해당 주제를 상당히 개방적으로 다루는 편이다. 동독 슈타지 협력 여부에 대한 검증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개별 조사 사안의 형태로 진행된다. 민주사회당/좌파는 변혁기에 어떤 서독 정당과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통일당으로부터의 분리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낮았다.

기민당과 자민당은 구동독 연합정당의 후신으로 나섰다. 변혁 이후에 두 정당은 정치적 일상사에서 '브란덴부르크 노선'을 지지했고, 많은 간부급 정치인들이 사회주의통일당과의 과거 공조에도 불구하고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제2차 회기부터 비로소 브란덴부르크 기민당은 그와 거리를 두고, 2009년 신연방주에서는 최초로 연합정당 과거가 있는 당원이 한 명도 없는 정당이 되었다. 정당 지도부는 대부분 서독 정치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구동독에서 1989년 10월 7일 비로소 사민당으로 창당됐다. 야당운동 또는 교회모임(만프레드 슈톨페 포함)의 많은 사람들과 저명한 사회주의통일당 당원들이 가입했다. 1990년 9월 26일 사회주의통일당과 거리를 두고, 서쪽의 사회민주주의와 연계하기 위해 사민당으로 통합했다. 동독 슈타지 문제는 특히 슈톨페 케이스로 말미암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이는 사민당 내부에서도 큰 지지를 받았다. 1994년에는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다. 동독 슈타지 검증은 취소됐다.

'Bündnis 90'은 1990년 다양한 구동독 시민운동으로부터 나왔다. 여기에는 사회주의통일당 희생자뿐만 아니라 사회주의통일당 당원들도 포괄되어 있었다. 1992년에는 서독의 녹색당과 연합했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독 슈타지 연루 여부 검증, 특히 면직에 대한 입장은 상반적이었다. 마리안느 비어틀러나 귄터 노케 같은 저명한 Bündnis 정치가들은 슈톨페의 해고에 반대하면서도 지속적인 검증을 계속 진행했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Parlamentsdokumentation (https://www.parlamentsdokumentation.brandenburg.de/parladoku/w5/drs/ab_8500/8500_15.pdf (Stand: 07.05.2018))

문서 번호 159

‘신연방주 지방자치정책에서의 여성’ 최종 보고서

2013년 4월 1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관, 에른스트 영 유한회사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신연방주 특임관의 의뢰를 받은 경제감사회사 에른스트 영이 50,000명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신연방주의 농촌 기초단체의 정치에 여성 참여를 조사한 최종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구동독지역과 라인란트-팔츠 그리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에서 여성이 지자체의 정치에 참여하는 비율에 대한 양적 조사와 질적 분석을 함께 보여 준다. 질적 분석의 경우 여성의 활동 영역, 활동 동기, 경제활동 경력 그리고 활동을 위한 구조적인 조건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포함되었다.

조사결과는 구동독지역의 지방자치 정치에 여성의 참여 비율이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방자치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의 연령도 비교적 높으며 오랜 경제활동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원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직책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의 전통적인 조직문화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농촌지역의 젊은 여성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보고서는 보여 준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동기도 그 지역의 다른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

출처_ Ernst & Young GmbH (2013): Abschlussbericht. Forschungsprojekt „Frauen in der Kommunalpolitik der neuen Länder“, für Bundesministerium des Innern